



저출산에 대응한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체계 전환과 중장기 적정수준 연구

양미선 외

연구보고 2018-15

저출산에 대응한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체계 전환과 종장기 적정수준 연구

연구책임자 양 미 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동 훈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최 윤 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연구보고 2018-15

저출산에 대응한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체계
전환과 중장기 적정수준 연구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71-8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 리 / 말

보육서비스는 그간 인프라 공급보다는 보육료 지원을 통해 영유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과잉 공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최근 출생아 수 감소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로 민간 중심의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또한 과잉 공급으로 인한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요에 기반한 적절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을 통하여 건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추진 현황과 공급 정책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향후 저출산에 대비한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체계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우선 설치지역을 선정하고 적정 공급 규모를 추정하였다.

본 보고서가 문재인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어린이집 유치원 수급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시·도 및 시·군·구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수급 담당 공무원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8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저출산에 대응한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체계 전환과 증장기 적정수준 연구

목 차

요약	1
<hr/>	
I. 서론	13
<hr/>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16
3. 연구방법	17
4. 선행연구	22
II. 어린이집·유치원 공급과 이용 추이	27
<hr/>	
1. 영유아 인구 변화	29
2. 어린이집·유치원 공급과 이용 현황	38
III. 어린이집·유치원 수급 정책과 현황	55
<hr/>	
1. 보육수급계획	57
2. 유아수용계획	65
3. 시사점	70
IV.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정책 및 진단	73
<hr/>	
1. 중앙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증설) 계획	75
2.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증설) 계획	81
3. 시사점	161

V. 어린이집·유치원 수급 및 국공립 확충 관련 애로 및 요구	163
1.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165
2.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	193
3. 시사점	213
VI. 보육수급 및 유아수요 추정	217
1. 장애 영유아 인구	219
2. 보육·교육 수요 추계	223
3. 소결	241
VII. 정책 제언	245
1.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방향	247
2.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구조 개선	251
3. 맺는 말	254
참고문헌	257
Abstract	265
부록	269
1. 부록 표	271
2. 조사표	283

표 목차

〈표 Ⅰ-3-1〉 조사 내용: 어린이집	18
〈표 Ⅰ-3-2〉 어린이집 특성	19
〈표 Ⅰ-3-3〉 어린이집 조사 응답자 특성	20
〈표 Ⅰ-3-4〉 조사 내용: 유치원	21
〈표 Ⅰ-3-5〉 유치원 특성	21
〈표 Ⅰ-3-6〉 유치원 조사 응답자 특성	22
〈표 Ⅱ-1-1〉 시도별 합계출산율: 2008-2017	30
〈표 Ⅱ-1-2〉 시군구별 합계출산율-상·하위 10개 지역: 2008년, 2017년	31
〈표 Ⅱ-1-3〉 시도별 출생아 수: 2012-2017년	32
〈표 Ⅱ-1-4〉 시군구별 출생아 수: 전년 대비 증감 10개 지역	34
〈표 Ⅱ-1-5〉 읍면동 출생아 수	34
〈표 Ⅱ-1-6〉 시도별 소멸위험지수	35
〈표 Ⅱ-1-7〉 시군구별 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진입단계	35
〈표 Ⅱ-1-8〉 연도 및 연령별 영유아 수: 2008-2017년	36
〈표 Ⅱ-1-9〉 시도별 0~6세 영유아 비율: 2008-2017년	37
〈표 Ⅱ-2-1〉 어린이집 수: 2008-2017년	38
〈표 Ⅱ-2-2〉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2008-2017년	40
〈표 Ⅱ-2-3〉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2008-2017년	41
〈표 Ⅱ-2-4〉 시·도 및 시군구별 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2017년 기준	45
〈표 Ⅱ-2-5〉 시·도 및 시군구 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총족률: 2017년 기준	48
〈표 Ⅱ-2-6〉 유치원 및 학급 수: 2008-2017년	50
〈표 Ⅱ-2-7〉 유치원 취원아 수	51
〈표 Ⅱ-2-8〉 시도별 유치원 및 학급, 유아 수: 2017년 기준	52
〈표 Ⅱ-2-9〉 시·도 및 시군구 전체 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2017년 기준	53
〈표 Ⅲ-1-1〉 연도 및 연령별 보육수요율	60
〈표 Ⅲ-1-2〉 지역규모 및 연도별 보육수요율	61

〈표 Ⅲ-1- 3〉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 현황	63
〈표 Ⅲ-1- 4〉 인가제한 시 주의사항	65
〈표 Ⅲ-2- 1〉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지침	67
〈표 Ⅲ-2- 2〉 시도교육청별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 2018년	69
〈표 Ⅳ-1-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2018~2022년	76
〈표 Ⅳ-1- 2〉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76
〈표 Ⅳ-1- 3〉 연도별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	79
〈표 Ⅳ-1- 4〉 2018년도 지역별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예정 학급 및 유치원 수	79
〈표 Ⅳ-1- 5〉 유치원 신설 시 건축면적(m ²)당 교부기준	80
〈표 Ⅳ-1- 6〉 유치원 전환 및 증설 지원기준	80
〈표 Ⅳ-1- 7〉 유치원 신설비 교부기준	81
〈표 Ⅳ-2- 1〉 영유아 수: 서울	82
〈표 Ⅳ-2- 2〉 어린이집 수: 서울	83
〈표 Ⅳ-2- 3〉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서울	83
〈표 Ⅳ-2- 4〉 어린이집 정원총족률: 서울	84
〈표 Ⅳ-2- 5〉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서울	84
〈표 Ⅳ-2- 6〉 연차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량	86
〈표 Ⅳ-2- 7〉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지원기준 및 조건: 2015-2018년	87
〈표 Ⅳ-2- 8〉 민간·가정 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원기준 및 조건: 2015-2018년	88
〈표 Ⅳ-2- 9〉 민간·가정 어린이집 매입전환 지원기준 및 조건 변화	89
〈표 Ⅳ-2-10〉 공공기관 내, 일반건물 및 공유지 신규설치 지원기준 및 조건: 2015-2018	90
〈표 Ⅳ-2-11〉 민·관 공동연대 설치 지원기준 및 조건: 2015-2018년	91
〈표 Ⅳ-2-12〉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지원기준 및 조건: 2015-2018년	92
〈표 Ⅳ-2-13〉 학교 유희시설 활용 등 지원 기준 및 조건: 2015-2018년	93
〈표 Ⅳ-2-14〉 서울시 공영형유치원 지원기준	95
〈표 Ⅳ-2-15〉 영유아 수: 부산	96
〈표 Ⅳ-2-16〉 어린이집 수: 부산	96
〈표 Ⅳ-2-17〉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부산	97
〈표 Ⅳ-2-18〉 어린이집 정원총족률: 부산	97
〈표 Ⅳ-2-19〉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부산	98

〈표 IV-2-20〉 부산형 공보육 확충목표	99
〈표 IV-2-21〉 부산형 공보육 지원단가 및 재원	99
〈표 IV-2-22〉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목표	100
〈표 IV-2-23〉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지원 기준 및 내용 ..	100
〈표 IV-2-24〉 영유아 수: 대구	102
〈표 IV-2-25〉 어린이집 수: 대구	102
〈표 IV-2-26〉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대구	103
〈표 IV-2-27〉 어린이집 정원총족률: 대구	103
〈표 IV-2-28〉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대구	104
〈표 IV-2-29〉 대구 개방형 사립유치원 선정 지표	105
〈표 IV-2-30〉 대구 개방형 사립유치원 지원 기준	106
〈표 IV-2-31〉 영유아 수: 인천	108
〈표 IV-2-32〉 어린이집 수: 인천	108
〈표 IV-2-33〉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인천	109
〈표 IV-2-34〉 어린이집 정원총족률: 인천	109
〈표 IV-2-35〉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인천	110
〈표 IV-2-36〉 영유아 수: 광주	111
〈표 IV-2-37〉 어린이집 수: 광주	111
〈표 IV-2-38〉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광주	112
〈표 IV-2-39〉 어린이집 정원총족률: 광주	112
〈표 IV-2-40〉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광주	113
〈표 IV-2-41〉 광주광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대상 및 내용	114
〈표 IV-2-42〉 영유아 수: 대전	116
〈표 IV-2-43〉 어린이집 수: 대전	116
〈표 IV-2-44〉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대전	117
〈표 IV-2-45〉 어린이집 정원총족률: 대전	117
〈표 IV-2-46〉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대전	118
〈표 IV-2-47〉 대전광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대상 및 내용	119
〈표 IV-2-48〉 대전광역시 국공립 확충 소요예산	120
〈표 IV-2-49〉 대전광역시 국공립 확충 예산(확충비, 인건비, 순시비) 조달 계획	121
〈표 IV-2-50〉 영유아 수: 울산	122

〈표 IV-2-51〉 어린이집 수: 울산	122
〈표 IV-2-52〉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울산	123
〈표 IV-2-53〉 어린이집 정원총족률: 울산	123
〈표 IV-2-54〉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울산	124
〈표 IV-2-55〉 영유아 수: 세종	125
〈표 IV-2-56〉 어린이집 수: 세종	126
〈표 IV-2-57〉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세종	126
〈표 IV-2-58〉 어린이집 정원총족률: 세종	127
〈표 IV-2-59〉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세종	127
〈표 IV-2-60〉 영유아 수: 경기	129
〈표 IV-2-61〉 어린이집 수: 경기	129
〈표 IV-2-62〉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경기	129
〈표 IV-2-63〉 어린이집 정원총족률: 경기	130
〈표 IV-2-64〉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경기	130
〈표 IV-2-65〉 경기도 2018년 추진현황	132
〈표 IV-2-66〉 경기도 유형별 지원 세부 내용	132
〈표 IV-2-67〉 경기도 국공립 확충 산출내역	133
〈표 IV-2-68〉 경기도 국공립 확충 예산 조달 계획	133
〈표 IV-2-69〉 경기도 국공립 인건비 예산 조달 계획	133
〈표 IV-2-70〉 영유아 수: 강원	134
〈표 IV-2-71〉 어린이집 수: 강원	135
〈표 IV-2-72〉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강원	135
〈표 IV-2-73〉 어린이집 정원총족률: 강원	136
〈표 IV-2-74〉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강원	136
〈표 IV-2-7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137
〈표 IV-2-76〉 영유아 수: 충북	138
〈표 IV-2-77〉 어린이집 수: 충북	138
〈표 IV-2-78〉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충북	139
〈표 IV-2-79〉 어린이집 정원총족률: 충북	139
〈표 IV-2-80〉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충북	140
〈표 IV-2-81〉 영유아 수: 충남	141

〈표 IV-2- 82〉 어린이집 수: 충남	142
〈표 IV-2- 83〉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충남	142
〈표 IV-2- 84〉 어린이집 정원총족률: 충남	143
〈표 IV-2- 85〉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충남	143
〈표 IV-2- 86〉 영유아 수: 전북	145
〈표 IV-2- 87〉 어린이집 수: 전북	145
〈표 IV-2- 88〉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전북	146
〈표 IV-2- 89〉 어린이집 정원총족률: 전북	146
〈표 IV-2- 90〉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전북	147
〈표 IV-2- 91〉 영유아 수: 전남	148
〈표 IV-2- 92〉 어린이집 수: 전남	148
〈표 IV-2- 93〉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전남	149
〈표 IV-2- 94〉 어린이집 정원총족률: 전남	149
〈표 IV-2- 95〉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전남	150
〈표 IV-2- 96〉 영유아 수: 경북	151
〈표 IV-2- 97〉 어린이집 수: 경북	152
〈표 IV-2- 98〉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경북	152
〈표 IV-2- 99〉 어린이집 정원총족률: 경북	153
〈표 IV-2-100〉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경북	154
〈표 IV-2-101〉 영유아 수: 경남	155
〈표 IV-2-102〉 어린이집 수: 경남	155
〈표 IV-2-103〉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경남	156
〈표 IV-2-104〉 어린이집 정원총족률: 경남	156
〈표 IV-2-105〉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경남	157
〈표 IV-2-106〉 영유아 수: 제주	158
〈표 IV-2-107〉 어린이집 수: 제주	159
〈표 IV-2-108〉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제주	159
〈표 IV-2-109〉 어린이집 정원총족률: 제주	159
〈표 IV-2-110〉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제주	160
〈표 V-1- 1〉 최근 원아모집 어려움 경험 여부	166
〈표 V-1- 2〉 원아모집 어려운 이유: 1+2순위	166

〈표 V-1- 3〉 영유아 모집이 어려운 이유: 1순위	167
〈표 V-1- 4〉 원아수 감소 체감 여부	168
〈표 V-1- 5〉 정원충족률 최고 수준 대비 원아 감소 비율: 영아반	170
〈표 V-1- 6〉 정원충족률 최고 수준 대비 원아 감소 비율: 유아반	170
〈표 V-1- 7〉 정원충족률 하락 시 원아 모집 어려운 연령	171
〈표 V-1- 8〉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로 인한 재정 운영의 어려움 경험 여부 ..	172
〈표 V-1- 9〉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로 인한 재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 ..	173
〈표 V-1-10〉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목표의 적절성	174
〈표 V-1-11〉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적정수준	175
〈표 V-1-12〉 향후 5년 이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의향	176
〈표 V-1-13〉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이유	176
〈표 V-1-14〉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방법	177
〈표 V-1-15〉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계획 시기	178
〈표 V-1-16〉 국공립 전환 의향이 없거나 고민 중인 이유	179
〈표 V-1-17〉 향후 어린이집 운영 전망	180
〈표 V-1-18〉 국공립 전환 여부 및 전환 방법	181
〈표 V-1-19〉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기	182
〈표 V-1-20〉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자원 영유아 수 감소 경험 여부와 규모 ..	182
〈표 V-1-21〉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기준의 적절성: 계약기간 10년	183
〈표 V-1-22〉 제 특성별 적정 계약기간	184
〈표 V-1-23〉 장기임차 전환 시 지원기준의 적절성 개요	185
〈표 V-1-24〉 제 특성별 장기임차 전환 지원기준의 적절성	186
〈표 V-1-25〉 시설개보수비 적정 지원수준	186
〈표 V-1-26〉 기자재비 적정 지원수준	187
〈표 V-1-27〉 장기임차 사전 적격심사 기준의 적절성 개요	188
〈표 V-1-28〉 장기임차 사전 적격심사 시설영역 8개 세부기준 적정수준	190
〈표 V-1-29〉 정원충족률 미달 시 자동 폐쇄에 대한 동의정도	191
〈표 V-1-30〉 어린이집 폐쇄조건: 정원충족률	192
〈표 V-1-31〉 어린이집 폐쇄조건: 정원충족률 기간	192
〈표 V-1-32〉 어린이집 폐쇄조건: 원장 1인 운영 지속기간	193
〈표 V-2- 1〉 원아 모집의 어려움 정도	194

〈표 V-2- 2〉 원아 모집의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 1+2순위	195
〈표 V-2- 3〉 원아 모집의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 1순위	195
〈표 V-2- 4〉 원아 수 감소 체감 정도	196
〈표 V-2- 5〉 원아 최고 수준 대비 원아 감소 비율	197
〈표 V-2- 6〉 원아 수 감소로 인한 유치원 재정 운영의 어려움 경험 여부	197
〈표 V-2- 7〉 유치원 원아 수 감소로 인한 재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	198
〈표 V-2- 8〉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 운영시 참여 의향	199
〈표 V-2- 9〉 공영형 사립유치원 미참여 이유: 1+2순위	199
〈표 V-2-10〉 서울시교육청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 개선사항	200
〈표 V-2-11〉 공영형 사립유치원 예산 지원기준의 적절성	201
〈표 V-2-12〉 공영형 사립유치원 자격 및 선정기준 마련에 관한 의견	202
〈표 V-2-13〉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 효과 개요	202
〈표 V-2-14〉 공영형 사립유치원 효과: 부모	203
〈표 V-2-15〉 공영형 사립유치원 효과: 교직원	204
〈표 V-2-16〉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효과 및 기대: 유치원 1	204
〈표 V-2-17〉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효과 및 기대: 유치원 2	205
〈표 V-2-18〉 매입형 유치원 도입 위한 조건: 1+2순위	205
〈표 V-2-19〉 제 특성별 매입형 유치원 도입 위한 조건: 1순위	206
〈표 V-2-20〉 매입형 유치원 위탁운영체 선정기준의 적절성 개요	207
〈표 V-2-21〉 지역 내 공립유치원 수 적절성	208
〈표 V-2-22〉 단설 및 병설유치원 설립 시 적정 학급규모	209
〈표 V-2-23〉 공립유치원 증설 적정 지역	210
〈표 V-2-24〉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근거로 유아수용계획 수립 관련 의견	210
〈표 V-2-25〉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근거로 유아수용계획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 ..	211
〈표 V-2-26〉 17개 시도교육청 동일 학급편성기준 적용 방안	212
〈표 VI-1- 1〉 장래 합계출산율: 2018~2022년	219
〈표 VI-1- 2〉 시도별 장래 출산율	220
〈표 VI-1- 3〉 0~6세 연령별 장래 영유아 인구 수	222
〈표 VI-2- 1〉 시도별 장래 영유아 인구 수: 2018~2022년	224
〈표 VI-2- 2〉 최근 3년간(2015-2017년) 평균 어린이집 이용률	225
〈표 VI-2- 3〉 장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 2018~2022년	226

〈표 VI-2- 4〉 어린이집 정원	227
〈표 VI-2- 5〉 어린이집 적정 공급 규모: 2018~2022년	228
〈표 VI-2- 6〉 연차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달성 목표	229
〈표 VI-2- 7〉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규모: 시나리오 1(40%)	230
〈표 VI-2- 8〉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규모: 시나리오 2(35%)	231
〈표 VI-2- 9〉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규모: 시나리오 3(30%)	232
〈표 VI-2-10〉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확충 규모	233
〈표 VI-2-11〉 시도별 장래 유아 인구 수: 2018~2022년	234
〈표 VI-2-12〉 장래 유치원 이용 유아 수: 2018~2022년	236
〈표 VI-2-13〉 유치원 적정 공급 규모: 2018~2022년	237
〈표 VI-2-14〉 연차별 공립유치원 이용률 달성 목표	238
〈표 VI-2-15〉 공립유치원 공급 규모: 시나리오 1(40%)	238
〈표 VI-2-16〉 공립유치원 공급 규모: 시나리오 2(50%)	240
〈표 VI-2-17〉 공립유치원 추가 확충 규모	241

그림 목차

[그림 II-1-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2008-2017년	30
[그림 II-1-2] 시군구별 출생아 수 분포: 2017년	33
[그림 II-1-3] 연도별 0~6세 영유아 비중	36
[그림 II-2-1] 전체 어린이집 수 및 유형별 비율: 1991-2017년	39
[그림 II-2-2]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및 유형별 비율: 1991-2017년	41
[그림 II-2-3] 연도 및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2008~2017년	42
[그림 II-2-4] 연도별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2008~2017년	43
[그림 II-2-5]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 2008~2017년	44
[그림 II-2-6] 시도별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2017년 기준	44
[그림 II-2-7]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46
[그림 II-2-8] 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충족률	47
[그림 II-2-9] 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충족률: 2017년 기준	49
[그림 III-1-1] 연도 및 연령별 보육수요율: 2004, 2009, 2012년	61
[그림 III-1-2] 어린이집 이용률과 보육수요: 2012년	62
[그림 IV-2-1]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개요	85
[그림 IV-2-2] 광주 연도별 확충계획	113
[그림 IV-2-3] 대전광역시 연도별 확충계획	118
[그림 IV-2-4] 경기도 연도별 국공립, 공보육 확충 계획	131
[그림 V-1-1] 원아모집 어려운 이유: 1+2순위	167
[그림 V-1-2] 어린이집 유형별 영유아 모집이 어려운 이유: 1순위	168
[그림 V-1-3]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방법 및 향후 전환 시기	178
[그림 V-1-4] 국공립 전환 의향이 없거나 고민 중인 이유	180
[그림 V-1-5] 장기임차 사전 적격심사 기준 적절성 개요	189
[그림 V-2-1] 원아 모집의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 1+2순위	195
[그림 V-2-2] 공영형 사립유치원 미참여 이유: 1+2순위	200
[그림 V-2-3] 매입형 유치원 도입 위한 조건: 1+2순위	206
[그림 V-2-4] 매입형 유치원 위탁운영체 선정기준의 적절성 개요	208

[그림 VI-1-1] 장래 연령별 출산율: 중위가정	221
[그림 VI-1-2] 장래 연령별 출산율: 저위가정	221
[그림 VI-2-1] 장래 시도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중위가정	226
[그림 VI-2-2] 장래 시도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저위가정	227
[그림 VI-2-3] 장래 시도별 유치원 이용 아동 수: 중위가정	235
[그림 VI-2-4] 장래 시도별 유치원 이용 아동 수: 저위가정	236

부록 표 목차

〈부록 표 II-1-1〉 시도별 출생아 수: 2008-2017	271
〈부록 표 II-1-2〉 정원총족률·이용률·시군구별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급률	272
〈부록 표 V-1-1〉 장기임차 사전 적격심사 기준의 적절성 1	276
〈부록 표 V-1-2〉 장기임차 사전 적격심사 기준의 적절성 2	276
〈부록 표 V-1-3〉 장기임차 사전 적격심사 기준의 적절성 3	277
〈부록 표 V-1-4〉 장기임차 사전 적격심사 기준의 적절성 4	277
〈부록 표 V-1-5〉 장기임차 사전 적격심사 기준의 적절성 5	278
〈부록 표 V-2-1〉 제 특성별 공영형 사립유치원 미참여 이유: 1순위	278
〈부록 표 V-2-2〉 공영형 사립유치원 예산 지원기준의 적절성: 교직원	279
〈부록 표 V-2-3〉 공영형 사립유치원 예산 지원기준의 적절성: 운전원	279
〈부록 표 V-2-4〉 공영형 사립유치원 예산 지원기준의 적절성: 학교기본운영비	279
〈부록 표 V-2-5〉 매입형 유치원 위탁운영체 선정기준 적절성 1	280
〈부록 표 V-2-6〉 매입형 유치원 위탁운영체 선정기준 적절성 2	280
〈부록 표 V-2-7〉 매입형 유치원 위탁운영체 선정기준 적절성 3	280
〈부록 표 V-2-8〉 매입형 유치원 위탁운영체 선정기준 적절성 4	281
〈부록 표 V-2-9〉 매입형 유치원 위탁운영체 선정기준 적절성 5	281
〈부록 표 VI-1-1〉 장래 연령별 출산율: 2018~2022년	282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추진 현황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급 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저출산에 대비한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우선 설치지역을 선정하고 적정 공급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관련 법 및 제도, 관련 선행연구 등을 검토함.
- 중앙정부와 시도 및 시군구의 어린이집 수급계획,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수용계획을 검토함.
 - 지방자치단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과 시도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증설 계획 등을 검토 및 진단하여 중앙정부 정책화 가능성을 타진함.
- 어린이집·유치원 수급 현황과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방법의 적절성,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퇴출기준, 공영형 사립유치원 및 매입형 유치원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함.
- 시도 및 시군구별 어린이집·유치원 수급 현황을 살펴보고, 어린이집·유치원의 수요를 예측하여 적정 공급 규모를 추정함.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적정 공급 수준을 추정하고, 운영이 어려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퇴출 구조를 마련하며,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방향을 제안함.

다. 연구방법

-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관련 법 및 제도, 수급(수용)계획, 관련 선행연구 등을 수집하여 정리함.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와 통계청 장래인구통계, 어린이집·유치원 정원과 현원, 보육 수요율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향후 5년 간의 어린이집·유치원 수요와 적정 공급 규모를 추정함.
- 중앙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증설) 계획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증설)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함.
-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 국공립, 민간·가정 어린이집 491개소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공립 및 사립유치원 443개원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연구방향 설정, 조사표 검토 및 설문조사 보완, 정책방안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간담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함.

2. 어린이집·유치원 수급 관련 애로 및 요구

가.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 최근 출생아 수 감소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등으로 어린이집 중 45.8%는 영유아 모집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다, 28.2%는 매우 많다고 답하여 70% 이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려움 정도는 4점 평균 2.9점임.
 -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현원이 적을수록, 중소도시나 대도시에서 영유아 모집의 어려움 정도가 유의하게 더 높음.
- 최근 영유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1,2순위를 합산하면,
 - 출생아 수 감소 85.2%,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51.3%, 인근지역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이주 23.6%, 병설공립유치원 9.2%, 민간어린이집 신설 6.4%, 단설 공립유치원 증설 9.2% 순임.
- 어린이집 원장들의 원아 수 감소 체감 정도는, 42.3%는 어느 정도 체감, 36.7%는 매우 많이 체감한다고 답하여서 80% 가까이가 실제로 체감하고 있고, 체감 정도는 4점 척도로 평균 3.1점임.

- 재원 아동 수가 이전보다 감소하였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한 어린이집들은 정원충족률이 최고 수준일 때보다 영아반은 평균 27.1%, 유아반은 평균 27.9%가 줄었다고 답함.
- 정원충족률 하락 시 원아 모집이 어려운 연령반은,
 - 영아반 중 0세반 47.3%, 2세반 29.4%, 1세반 18.7%이고, 유아반 중 5세반과 3세반 각각 39.0%, 37.2%, 4세반 15.9%임.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로 어린이집 재정 운영 상에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어린이집 중 87.2%가 경험이 있다고 답함.
 - 원아 수 감소로 재정난을 경험한 경우, 어린이집은 운영비 절약이 61.4%로 높고, 업무추진비, 각종 수당 등 축소가 54.5%, 혼합반 편성 49.1%, 차입금 활용 36.8%, 운영반 수 줄임 29.3%, 경력 낮은 인력 채용 23.7%, 보조인력 규모 축소 21.0% 순으로 대처하고 있음.
-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설정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목표의 적절성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은 10.7%이고, 적절성 점수는 5점 평균 2.1점임.
 -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 수준으로 평균 27.3%를 제시함.
-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38.9%가 향후 5년 이내에 매입, 장기임차,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고, 22.9%는 고민 중이며, 10.9%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음.
 - 민간보다는 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 규모가 작을수록,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전환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전환 이유는, 인건비 등 재정지원 69.3%, 영유아 모집 유리 22.8%,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환경개선비 지원, 우수 보육교사 채용 등 3% 내외.
 - 선호하는 전환 방법은, 장기임차 38.6%, 무상임대 35.1%, 매입 24.6%임.
 - 전환 시기는, 2019년 49.1%, 2020년 28.9%, 2018년 10.5%, 2021년 6.1%, 2022년 0.9%, 2023년 이후 4.4% 순으로 과반수 이상이 향후 3년 안에 전환 의향이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의향이 없거나 고민 중 또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이유는,

- 20.7%는 계약기간 종료 후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해야 하는 부담감, 어린이집 운영 상태가 심사기준 미달 17.9%, 계약기간 10년 불만족 15.6%, 지원 단가 불만족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어린이집 만족도 낮음 각각 10.6%, 10.1% 차지함.
- 향후 어린이집 운영 전망을 27.6%는 어려움, 61.8%는 매우 어렵다고 답하여 대부분 부정적으로 평가함. 어려움 정도는 5점 평균 4.5점으로 매우 높음.
- 조사 참여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시설은 21.9%임.
 - 전환 방법은 무상임대 81.0%, 장기임차 11.9%, 민간매입 7.1%임.
 - 전환 시기는 2018년 31.0%,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5%, 2013년 7.1%, 2010년 2.4%임.
- 국공립어린이집 중 32.8%가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로 재원 아동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함.
 -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재원 아동 수 정원 대비 평균 10.2% 감소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 계약기간 10년에 대해 25.8%가 적절, 7.8%가 매우 적절로 33.6%가 적절하다고 답하였고, 적절성 점수는 5점 평균 2.9점임.
 - 적정 계약기간으로 평균 13.6년 제시함.
- 시설개보수비 지원기준(1개소당 1억 1천만원)은 적절 20.0%, 매우 적절 6.2%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26.2%이고, 적절성 점수는 5점 평균 2.8점임.
 - 기자재비 지원기준(1개소당 1천만원)은 적절 15.7%, 매우 적절 6.4%로 22.1%가 적절하다고 하였고, 적절성 점수는 5점 평균 2.7점임.
 - 적정 수준으로 시설개보수비 평균 1,577만원, 기자재비 1,488만원 제시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사전적격심사기준 대부분 적절하다는 응답이 50% 이상, 적절성 점수도 평균 3점 대이지만, 대기아동수, 유아반, 특별활동 부담 등은 20% 대이고, 적정 점수도 평균 2점대임.
- 어린이집 폐쇄기준 마련에 대해 45.6%는 어느 정도 동의, 12.6%는 매우 동의라고 답하여 60% 정도가 동의하였고, 동의 정도는 4점 평균 2.5점임.
 - 어린이집 폐쇄기준으로 정원충족률 평균 25.5%, 정원충족률 폐쇄기준 지속 기간 평균 8.7개월, 원장 1인 운영기간 평균 7.4개월 제안.

나. 유치원 수급 및 전환

- 최근 출생아 수 감소와 공립유치원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유치원 중 40.6%가 원아 모집이 다소 어려움, 30.0%가 매우 어렵다고 답하여 70.6%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려움 정도는 4점 평균 2.9점임.
- 원아 모집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 1,2순위를 합산하면, 출생아 수 감소가 83.2%로 압도적으로 많고, 지역내 단설 공립유치원 증설이 24.5%, 지역 내 단설 공립유치원 증설 22.4% 순임.
- 유치원 운영 시 원아 수 감소를 실제로 체감하는지 질문한 결과, 유치원 중 33.0%는 다소 체감, 38.8%는 매우 체감한다고 답하여 70% 가까이가 체감한다고 답하였고, 체감 정도는 4점 평균 3.0점임.
 - 원아가 많은 시기보다 평균 30.2%가 감소하였다고 답함.
 - 유치원 중 65.1%가 원아 수 감소로 재정 운영 상 어려움 경험한 적 있음.
 - 원아 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중 62.3%는 보조인력 수를 줄이고, 60.9%는 유치원 운영 경비를 줄이며, 26.6%는 전체 학급 수를 줄이거나 14.0%는 혼합반 구성하고 있음.
-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에 대해 서울 이외 유치원 중 20.2%만 참여 의향이 있고, 33.9%는 잘 모르겠다고 답함.
 -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 미참여 이유 1,2순위를 합산하면, 공영형유치원 선정 이후 정기 종합평가 부담감 41.6%, 사학기관 재무회계 준수 및 카드 거래 등 회계 운영의 부담감이 36.4%, 예산 지원기준이 기대에 못 미쳐서 33.8% 순임.
- 공영형 사립유치원 지원수준, 운영기준, 컨설팅 및 장학, 평가 등의 개선사항을 조사한 결과, 운영기준이 71.1%,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예산 지원수준 58.3%, 컨설팅 및 장학 28.4%, 평가 24.8% 순임.
 - 공영형 사립유치원 예산 지원기준 중 교직원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0~50% 정도임.
 - 공공형 사립유치원 선정지표(안)(최은영 외, 2015)에 대해 반대 52.3%, 찬성 47.7%로 반대가 더 많음.

-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 효과를 부모, 교사, 유치원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 부모 측면에서 학부모 유아 학비 부담 경감 효과가 65.6%로 가장 높음.
 - 교직원 측면에서는 교직원 처우 개선이 79.8%로 가장 높음.
 - 유치원 측면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이 64.7%, 교사 고용 및 수급 안정 63.8%, 원아 모집의 수월성 제고 62.0%,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60.1%로 높음.
- 매입형 유치원 도입 위한 조건을 1,2순위로 조사한 결과, 매입 대상 유치원 선정기준 마련이 68.3%, 객관적인 매입 대상 유치원 선정기준 마련 60.6%, 민간위탁 운영의 공공성 확보 위한 운영기준 마련 31.7% 순임.
 - 매입형 유치원 위탁운영체 선정기준의 적절성을 알아본 결과, 원장의 운영관리 능력 및 의지가 71.5%, 운영체의 도덕적 법적 건전성 71.1%로 높고, 유치원 운영 및 관리와 교직원 교육 및 지원계획, 예산 편성, 원장의 유치원 운영 경력, 운영체의 공신력, 유치원 장학 및 평가 계획,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 계획 등이 60%를 상회함.
 - 적절성 점수는 유치원 운영 및 관리와 원장의 운영관리 능력 및 의지, 운영체의 도덕적 법적 건전성 3개 기준이 5점 평균 3.9점으로 높음.
- 지역내 공립유치원 수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24.8%이고, 13.3%는 대체로 충분, 28.4%는 매우 충분이라고 답하였고, 충분성 정도는 5점 평균 3.3점임.
 - 단설 및 병설유치원 설립 시 적정 학급 수로, 공립 단설은 평균 6.4학급, 공립 병설은 평균 2.7학급을 제시함.
 - 공립유치원 증설시 적정지역으로 28.2%는 도시 인구밀집지역, 27.1%는 공립유치원 미설치 지역, 20.1%는 저소득 밀집지역, 13.8%는 농산어촌 지역, 9.5%는 취약지역 순임.
- 해당 교육청이 취학 수요조사를 근거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유치원 중 51.7%가 동의, 12.2%가 매우 동의로 63.9%가 동의하였고, 동의 정도는 4점 평균 2.7점임.
 -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취학수요조사를 근거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신뢰성 확보 실패 42.5%,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의 어려움 26.9%, 예산 부족 15.0% 순임.

-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 학급편성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37.5%는 어느 정도 동의, 18.5%는 매우 동의로 절반 이상이 동의하였고, 동의 정도는 4점 척도로 평균 2.6점임.

3. 보육수급 및 유아수요 추정

가. 장래 합계출산율 및 영유아 인구

-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장래합계출산율과 모의 연령별 장래출산율, 연령별 장래영유아 인구 등을 제시함.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7년 기준 1.05명임. 장래 합계출산율은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9년 1.23명, 2020년 1.24명, 2022년 1.26명이고, 저위가정 기준으로 2019년 1.11명, 2020년 1.10명, 2021년 1.10명, 2022년 1.09명으로 2018년 전망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음.
- 장래 영유아 인구(0~6세) 수는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 3,045,740명에서 2022년 2,859,325명, 저위가정 기준으로는 2018년 3,001,533명에서 2022년 2,630,728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나. 보육·교육 수요 추계

1)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수요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도 및 연령별 장래인구추계 자료와 보건복지부의 2017년 보육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 어린이집 이용률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장래 영유아 수와 어린이집 이용률을 이용하여 장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를 추정함.
 - 장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 1,413,511명에서 2019년 138만명까지 줄고, 2020년에는 135만명, 2022년에는 1,326,997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저위가정 기준으로는 2018년 1,392,995명에서 2020년에는 130만명 이하로 떨어지고, 2022년에는 1,220,906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장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를 고려할 때 적정 어린이집 수는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 34,902개소로 2017년 40,238개소와 비교하여 5,336개소 정도가 과잉 공급되고 있음. 2019년에는 34,160개소, 2020년에는 33,500개소, 2021년에는 33,157개소, 2022년에는 32,765개소가 적정 규모임.
- 저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에는 34,495개소 정도가 적정 규모이나, 2017년 말 기준 40,238개소가 공급되고 있어 5,843개소 정도가 과잉 공급되고 있음. 2022년에는 3만개소 정도가 적정 규모임.
- 국공립어린이집 달성 목표를 40%, 35%, 30% 3가지로 설정하여 추가 확충이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수를 추정하면,
 - 시나리오 1(40%)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 1,192개소, 2019년 972개소, 2020년 941개소, 2021년 969개소, 2022년 935개소, 저위가정 기준으로 각각 1,129개소, 891개소, 819개소, 800개소, 717개소 추가 확충해야 함.
 - 시나리오 2(35%)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은 105개소, 2019년부터는 매년 900~1,000개소씩, 저위가정으로는 2018년 58개소, 2019년 927개소, 2020년 854개소, 2021년 829개소, 2022년 749개소 추가 확충해야 함.
 - 시나리오 3(30%) 2018년, 2019년은 시나리오 2와 동일하고, 2020년은 544개소, 2021년 570개소, 2022년 754개소이고, 저위가정 기준으로는 각각 455개소, 452개소, 586개소를 추가 확충하여야 함.

2) 유치원

- 공립유치원 수요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도 및 연령별 장래인구추계 자료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17년 교육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 장래 유아 인구 수는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9년까지 130만명 선을 유지하다가 2020년 130만명 이하로 떨어지고 2022년에는 1,235,220명임.
 - 저위가정으로는 2018년 1,363,294명에서 2020년 1,287,594명으로 줄어들고, 2022년에는 120명 이하인 1,189,792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유치원 이용률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장래 유아수와 유치원 이용률을 이용하여 유치원 이용 유아 수를 추계함.
 - 장래 유치원 이용 아동 수는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 614,198명에서 2019년 60만명 이하로 떨어지고 2022년에는 555,849명까지 줄고, 저위가정 기준으로는 2018년은 613,482명에서 2019년 60만명 이하로 떨어져 598,429명에 이르고, 2022년에는 535,406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
- 적정 유치원 학급 수는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 30,170학급으로 2017년 36,470학급과 비교하여 6,500학급이 과잉 공급되고 있음.
 - 저위가정 기준으로는 2018년 30,674학급, 2019년 29,921학급, 2020년 28,971학급, 2021년 28,056학급, 2022년 26,770학급 정도가 적정함.
- 공립유치원 이용률 목표를 40%, 50%로 설정하여 증설 학급 수를 추정하면,
 - 시나리오 1(40%)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에는 353학급, 2019년 46학급, 2021년 69학급, 2022년 294학급 증설이 필요하고, 저위가정으로는 현재 과잉 공급 수준임.
 - 시나리오 2(50%)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 353학급, 2019년 1,245학급, 2020년 505학급, 2021년 604학급, 2022년 794학급, 저위가정으로는 2020년까지 중위가정과 큰 차이는 없으나 2021년은 449학급, 2022년 479학급으로 추가 증설 학급 수가 줄어들음.

4. 정책 제언

가.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방향

- 민간 부문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의 질 개선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감.
 - 민간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 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부문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의 질 개선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 확충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음.

-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정책을 추진함.
 -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의 대규모 확충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폐쇄(폐원)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매입 및 무상임대, 장기임차 등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 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해 나감.
 - 장기임차 및 무상임대 등에 의한 전환 시설 보육서비스 질 관리 체계 마련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목표를 설정함.
 - 국공립어린이집 과잉공급으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충족률 하락, 국공립 어린이집 간의 경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확충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감.
 -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 확충 목표는 출생아 수, 유입·유출 인구, 민간 어린이집 폐쇄 및 사립유치원 폐원 추이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매년 조정해 나감.
-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시도 및 시군구의 보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어린이집 인가 여부를 관리·감독함.
 - 일부 지역에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어린이집 인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시도 및 시군구가 보육수급계획 수립하고 있음.
- 보육실태조사 시 보육수요율 산출을 정례화함.
 - 최근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이동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보육 수요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함.
- 유치원 취학 수용조사의 지침을 정교화함.
 - 시도교육청별로 표본추출이나 조사방법, 조사시기 등을 보면 지역에 따라 매우 상이하므로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시도 간의 편차를 최소화함.
- 보육수급계획 및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시도 및 시군구와 시도교육청이 상호 조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함.
 - 부처 간의 이해관계로 정보제공이나 협력이 원활하지 않았다. 시도 및 시군구청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수급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고려함.

나. 저출산에 대응한 어린이집 유치원 적정 공급수준

1) 어린이집 진입 장벽 강화

- 어린이집 설치 시 자기자본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이고, 대표자가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 수를 제한하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대표자 자격을 강화함.

2) 민간·가정 어린이집 퇴출구조 마련

- 어린이집 폐쇄조건으로 정원충족률이 30% 미만인 9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원장 1인이 12개월 이상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 미참여 상태인 경우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안함.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퇴출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함.
 - 폐쇄기준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은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폐쇄 예정신고서를 보내고, 해당 기간 동안 이용 영유아는 인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사후조치 기간을 두도록 함.

3)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 확충 방안

-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 확충 규모는 출산율 및 민간 어린이집 폐쇄 또는 사립유치원 폐원 추이 등을 검토하여 공급 규모를 조정해 나감.
 -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영유아 수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 수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 공급 규모나 지역 등을 매년 검토하여 추가 수요가 발생한 지역에 적정 규모로 확충해 나감.
- 장기임차 선정 시 적용하는 사전적격심사 기준과 재위탁 기준을 개정함.
 - 누리과정 지원 이후 유아의 유치원 이동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유아반 3개반 이상 기준은 2개반으로 하향 조정하고, 특별활동 부담은 시군구 상한선 기준에 준수하는 경우 등으로 조정함.

- 특별활동 운영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후 운영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 외에 장기입차 선정 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결과 점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장기입차는 신규위탁에 해당하므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위탁 심사결과 점수기준을 적용함.

□ 매립형 유치원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함.

- 교육의 질, 교사의 전문성이 높은 유치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상 조건, 선정기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함.

4)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모델 구축

□ 공영형유치원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모델의 기준 구체화

- 서울시교육청에서 2017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유치원 선정기준은 질 높은 유치원을 선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위원회 구성에 따라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성평가가 대부분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이 필요함.
- 선정결과에 이의제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향후 공영형유치원 확대에 대비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출생아 수는 2017년 기준 약 36만 여명으로 베이비붐 세대로 대표되는 1970년 100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현재 국가 존폐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국가통계포털, 2018.10.17. 인출).

보육정책은 사회복지적 시혜 성격에서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출산을 제고 정책으로 그 목적이 더욱 공고화 되면서 저출산 정책의 주요 정책으로 관심이 모아졌고, 지난 10여 년간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었다.

보육서비스는 인프라 공급보다는 보육료 지원을 통해 영유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1991년 9만 여명에서 2017년 145만 여명으로 15배 이상 늘어났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공급도 1991년 3,690개소에서 2017년 40,238개소까지 확대되었다(보건사회부, 1991, 보건복지부, 2018a). 특히 0~2세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이 시행된 2012년을 기점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어린이집 수가 2013년 43,770개소로 보육사업을 시작한 이래 최고 기록을 세웠다(보건복지부, 2014a). 유치원 수도 그간 큰 변동 없이 8천 개원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12년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0년 8,494개원이던 유치원이 2017년에는 9,029개원까지 늘어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00; 2017).

그러나 2013년 양육수당이 전 계층, 전 연령으로 확대되고 이와 맞물려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로 인하

여 폐원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이 속출하고 있다(문화일보, 2018. 7. 25일자 기사). 특히, 생계형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중심으로 폐쇄 또는 폐원이 일어나고 있어 저출산 현상이 현재보다 더 악화될 경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새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국정과제로 설정 및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대한민국정부, 2017), 민간의 우려와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정책을 펴 왔고, 최근에서야 공공성이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부문이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수요자의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요구 증가와 출생아 수 감소 등을 감안할 때, 현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또한 과잉 공급으로 인한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요에 기반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공급하여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추진 현황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급 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저출산에 대비한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우선 설치지역을 선정하고 적정 공급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향후 저출산에 대비한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체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관련 법 및 제도, 관련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정책 동향과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중앙정부와 시도 및 시군구의 어린이집 수급계획,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수용계획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확충 규모 및 방법, 예산 등)과 시도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증설 계획(증설 규모 및 방법, 예산 등) 등을 검토 및 진단하여 중앙정부 정책화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셋째, 어린이집·유치원 수급 현황과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방법의 적절성,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퇴출기준, 공영형 사립유치원 및 매입형 유치원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넷째, 시도 및 시군구별 어린이집·유치원 수급 현황을 살펴보고, 어린이집·유치원 수요를 예측하여 적정 공급 규모를 추정하였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과잉·과소 공급지역을 추출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우선 설치지역을 선정하였다.

다섯째,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어린이집·유치원의 공급체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 개선 방안과 적정 공급 수준을 추정하고, 운영이 어려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퇴출 구조를 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관련 법 및 제도, 각 시도 및 시군구 어린이집 수급계획과 유치원 수용계획,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증설)계획, 보육·교육통계, 인구 통계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어린이집·유치원,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급과 공급 관련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였다.

나. 데이터 분석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청 장래인구통계, 어린이집·유치원 정원과 현원, 이용률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향후 5년 간의 어린이집·유치원 수요와 적정 공급 규모를 추정하였다.

다. 사례 조사

중앙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증설) 계획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증설)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17개 시도청 및 지방교육청을 방문하여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라. 조사 연구

1) 어린이집 조사

가) 조사 개요

국공립과 민간·가정어린이집 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수급에 관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표 I-3-1>과 같다.

▣ 표 I-3-1 ▣ 조사 내용: 어린이집

구분	조사 내용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아모집의 어려움 및 주요 원인, 원아 감소 체감 정도, 2014년 대비 감소율, 정원 구성이 어려운 연령 반, 아동 감소로 인한 재정 운영의 어려움과 노력, 국정과제(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목표의 적절성, 국공립어린이집 적정 공급수준 - 민간가정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의향 및 이유, 전환 방법, 전환 예상 시기, 미전환 이유, 향후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정도 -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여부, 전환 방법, 전환 후 어려운 점, 전환 시기, 지역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아동 수 변동 여부, 변동 규모 - 장기임차 지원기준의 적절성, 장기임차 사전 적격심사 기준의 적절성, 위탁심사기준의 적절성, 부적절시 적정 점수 - 어린이집 퇴출 구조 마련에 대한 동의 정도, 어린이집 폐쇄조건의 적절성
일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특성: 시설 유형, 정원, 현원, 지역규모 등 - 응답자 특성: 연령, 성별, 경력, 최종학력, 원장 및 교사 경력, 재직기간 등

조사내용은 공통 문항과 어린이집 유형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공통 문항은 최근 출생아 수 감소 및 어린이집 공급 확대에 따른 원아 모집 현황 및 애로와 장기임차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 지원 및 심사기준의 적절성, 어린이집 폐쇄기준의 적절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의향과 이유, 전환 방법 및 시기, 미전환 이유 등과 향후 어린이집 운영 전

망 등, 국공립어린이집은 전환 여부와 방법, 시기, 전환 후 애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에 따른 아동 수 변동 등으로 구성하였다.

나) 조사 결과

어린이집 조사는 최종적으로 491개소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들 어린이집의 특성을 살펴보면, 국공립이 39.6%, 민간 18.8%, 가정 41.6%로 민간·가정이 60% 정도를 차지한다. 정원은 20인 이하가 46.6%, 21~39인 11.8%, 40~79인 25.6%, 80~99인 9.9%, 100인 이상 6.2%로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많았다. 현원도 20인 이하가 47.6%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40~79인 24.7%, 21~39인 15.3%, 80~99인과 100인 이상이 각각 8.2%, 4.1% 소수이었다. 지역규모는 대도시가 74.2%로 다수를 차지하고, 중소도시 18.1%, 읍면지역 7.6% 정도이다.

표 I-3-2 어린이집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어린이집 유형		현원	
국공립	39.6(192)	20인 이하	47.6(231)
민간	18.8(91)	21~39인	15.3(74)
가정	41.6(202)	40~79인	24.7(120)
정원		80~99인	8.2(40)
20인 이하	46.6(226)	100인 이상	4.1(20)
21~39인	11.8(57)	지역규모	
40~79인	25.6(124)	대도시	74.2(360)
80~99인	9.9(48)	중소도시	18.1(88)
100인 이상	6.2(30)	읍면지역	7.6(37)
전체	100.0(491)	전체	100.0(491)

〈표 I-3-3〉은 어린이집 조사 응답자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대다수가 여자이고, 남자는 2.5%로 소수이었다. 연령은 50세 이상이 45.6%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40~50세 미만과 45~50세 미만이 각각 21.0%, 23.7%로 40대가 40%가 넘고, 40세 미만은 10% 미만이었다. 학력은 대학 졸 19.2%, 4년제 대학 졸 36.7%, 대학원 졸이 42.1%로 대다수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다. 현

재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재직기간은 3년 미만이 70.3%, 3~5년 10.1%, 6~10년 11.8%, 11년 이상 7.8%로 3년 미만의 단기간 재직자가 과반수 이상이 었다.

▣ 표 I-3-3 ▣ 어린이집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성별		학력	
여자	97.5(473)	고졸	2.1(10)
남자	2.5(12)	대학 졸(3년제 이하)	19.2(93)
연령		4년제 대학졸	36.7(178)
35세 미만	2.7(13)	대학원 졸	42.1(204)
35~40세 미만	7.0(34)	현 재직기간	
40~45세 미만	21.0(102)	3년 미만	70.3(341)
45~50세 미만	23.7(115)	3~5년	10.1(49)
50세 이상	45.6(221)	6~10년	11.8(57)
		11년 이상	7.8(38)
전체	100.0(385)	전체	100.0(385)

2) 유치원 원장

가) 조사 개요

유치원 조사도 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유치원 공급과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공사립유치원 공통 문항과 기관 유형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공통 문항은 원아 모집의 어려움 및 원인, 원아 수 감소 체감 정도 및 감소율, 재정운 영상의 어려움 및 노력, 공영형 유치원 지원 수준 및 선정기준의 적절성 및 효과 성, 매입형 유치원 참여 의향, 선정기준 및 효과, 공립유치원 공급의 충분성, 적정 수준, 적정 규모, 유아수용계획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립유치원 대상으로 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관련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 체적인 조사내용은 <표 I-3-4>에 제시하였다.

표 I-3-4 조사 내용: 유치원

구분	조사 내용
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운영의 어려움 및 원인, 원아 수 감소 체감 정도, 원아 수 감소율, 원아 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과 노력 - 사립유치원: 공영형유치원 참여 여부, 향후 참여 의향 및 시기, 미참여 이유 - 공영형 사립유치원 지원수준 및 운영기준의 적절성 및 개선사항, 컨설팅 및 장학 평가 개선사항과 효과성 - 매립형 유치원 조건, 선정기준의 적절성, 참여 의향, 효과 등 - 공립유치원의 충분성, 적정 수준, 증설 적정지역, 유아수용계획 수립 여부, 미수립 이유, 학급편성기준 관련 의견 등
일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특성: 기관 유형, 연령별 학급 수 및 원아 수, 지역규모 등 - 응답자 특성: 연령, 성별, 경력, 최종학력, 원장 및 교사 경력, 재직기간 등

나) 조사 결과

유치원 조사는 최종적으로 443개원이 참여하였다. 이중 공립유치원이 50.8%, 사립유치원이 49.2%로 비등하고, 학급수는 2학급 이하 유치원이 35.0%, 3학급 20.5%, 4학급 9.5%, 5학급 이상 35.0%이다. 채용 유아 수는 50명 이하가 41.8%로 다수를 차지하고, 51~100명 이하와 101명 이상이 각각 27.3%, 30.9% 정도이다. 지역규모는 대도시 40.0%, 중소도시 32.1%, 읍면지역 28.0% 순이다 (표 I-3-5 참조).

표 I-3-5 유치원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기관 유형		현원	
공립	50.8(225)	50명 이하	41.8(185)
사립	49.2(218)	51~100명 이하	27.3(121)
학급 수		101명 이상	30.9(137)
2학급 이하	35.0(155)	지역규모	
3학급	20.5(91)	대도시	40.0(177)
4학급	9.5(42)	중소도시	32.1(142)
5학급 이상	35.0(155)	읍면지역	28.0(124)
전체	100.0(443)	전체	100.0(443)

유치원 조사 응답자 특성을 보면, 여자가 97.3%로 다수이고, 연령은 50세 이상이 38.6%로 많고, 나머지 연령은 각각 10%대로 비슷한 수준이다. 학력은 모두 3년제 이상이지만 53.3%는 대학원 졸업이다. 직급은 원장이 31.6%로 많고, 원감

20.1%, 부장교사 17.6% 순이다. 재직기간은 3년 미만 40.9%로 많고, 3~5년 22.6%, 11년 이상 20.5%, 6~10년 16.0% 순이다(표 I-3-6 참조).

표 I-3-6 유치원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성별		학력	
여자	97.3(431)	대학 졸(3년제 이하)	8.6(38)
남자	2.7(12)	4년제 대학졸	38.1(169)
연령		대학원 졸	53.3(236)
35세 미만	15.8(70)	현 재직기간	
35~40세 미만	14.9(66)	3년 미만	40.9(181)
40~45세 미만	13.5(60)	3~5년	22.6(100)
45~50세 미만	17.2(76)	6~10년	16.0(71)
50세 이상	38.6(171)	11년 이상	20.5(91)
직급			
부장 교사	17.6(78)		
원감	20.1(89)		
원장	31.6(140)		
기타	30.7(136)		
전체	100.0(443)	전체	100.0(443)

마. 간담회 및 자문회의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담당관, 시도 및 시군구 보육공무원, 시도교육청 전문직 공무원, 관련 학계 및 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방향 설정, 조사표 검토 및 설문조사 보완, 정책방안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다.

4 선행연구

가. 어린이집·유치원 수급 분석과 예측

보육과 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의 확대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수가 증가하면서 어린이집·유치원 수요와 공급에 관심을 두는 연구가 점차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및 지역별 격차를 분석하거나 수요

예측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보육수요와 공급을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서울시는 여성가족재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보육수요를 추계하였다. 김송이 외(2014)는 양육수당제도 도입 이후 보육인프라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서울시의 권역별 보육수요를 추계하였고, 경기도(김미정 외, 2014)에서도 보육 수요와 공급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31개 시군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영유아 인구 추계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 수를 예측하고, 수급 불균형 지역을 추출하였다. 양미선 외(2017)는 서울시 자치구 중 어린이집 이용률 및 공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꼽히는 서초구의 영유아 인구통계와 보육교육 통계를 활용하여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장래 영유아 수 및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2016년 기준) 등을 고려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동별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확충 규모를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사회서비스 또는 복지서비스 범주에 보육을 포함시켜 복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박세경 외(2013)는 지리정보체계(GIS)의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기반한 사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여 접근성 측면에서의 소외지역을 추출하였고, 정홍원·강지원·김보영·이민경(2015)는 지역단위 복지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분석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보육, 노인, 장애인, 빈곤층의 4개 하위 분야로 구성하여 하위 분야에 따른 복지 수요자와 공급자 수를 산출하여 복지수요와 공급의 분포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학계에서도 보육수요와 공급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송희정(1996)은 서울시 공공 보육시설의 수요·공급 분포와 구별 수요 격차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투자 수요를 추정하였고, 한지원(2005)은 설문조사와 입지 유형을 검토하여 서울시 보육시설의 수요와 공급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김현철(2009)은 만5세 보육료·교육비 지원 계획이 발표된 당시, 정책 변화를 수요 예측에 반영하여 보육 수요자를 자기비용 수요자와 비용지원 사업에 의해 발생한 수요로 분리하여 각각의 수요 규모를 예측한 후 통합하여 2013년까지의 5년간 연령별 수요 규모를 예측하였다. 유재언(2014)은 시군구별 어린이집, 유치원, 문화기반시설의 공급 정도와 양육수당 예산, 어린이집의 특성이 어린이집 충족률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모형으

로 분석하여 부모의 어린이집 선호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나.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관련 연구는 공급 부족 원인을 파악하고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과 우선 설치지역을 선정하는 연구가 중점적으로 수행되었다.

김현숙(2006)은 국공립보육시설¹⁾ 확충 방안으로 현재와 같이 정부가 운영비 대부분을 지원하기보다 국공립이 민간과 경쟁하는 시스템 설계, 보육시설 기준이나 교육교사 수준, 인건비 등을 직접 관리 및 감독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서문희·신나리·유은영(2007)는 여성가족부 의뢰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자는 총괄 거점형 보육시설 지역 규모별 설치, 중앙정부 지원방식의 신축 등을 제안하였다. 확충 방안으로 신축비 및 기존 시설 매입 시 중앙정부 지원 확대, 공동주택 의무설치, 무상 및 유상 임대, 국공립보육시설 전환, 증축 및 확대 이전, 공공건물, 학교, 관사, 공원 등의 부지 및 건물 확보 등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상설화된 조직 결성, 특별법 제정 등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농림부 지원으로 서문희 외(2006)는 보육시설 접근성과 공급 우선지역 등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보육시설 미설치 읍면 지역에서 인근지역 보육시설로의 접근성을 파악하고, 인구 수 고려한 우선 공급지역을 선정하였다. 이 외에 김진(2007), 신나리 외(2009), 백선희(2011)도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설치지역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양미선·임지희(2012)는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 담보가 어려우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30%와 40~50% 수준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목표로 할 경우 시설수와 예산을 추계하였으며,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별 균형배치와 우선 설치지역 조정, 중앙과

1) 본 절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명칭 변경 전에 수행된 연구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명칭을 그대로 사용함.

지방정부의 설치비 분담 비율 조정, 신축비 지원단가 인상, 어린이집 설치 관련법 개정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설치비 지원제도 개선에 대부분 반영되었다.

이 외에 학계에서는 지리정보체계(GIS)를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적정 설치 지역을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노수래, 2004; 김진영, 2014).

나정·장명림·이은주(1994)의 공립유치원 모형 개발 연구 이후 정책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2011년 교육부 의뢰로 한국교육개발원(박성철, 2011)은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육아정책연구소(최은영·황성온·황우상, 2012)는 공립유치원 설립·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양미선 외(2016)는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을 공보육·교육 범주에 포함시켜 그간 정부가 추진하여 온 공급 정책을 적절성, 보편성,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II

어린이집·유치원 공급과 이용 추이

1. 영유아 인구 변화
2. 어린이집·유치원 공급과 이용 현황



II. 어린이집·유치원 공급과 이용 추이

제2장은 2008년부터 최근 10년 간의 영유아 인구 변화와 어린이집·유치원 공급과 이용 추이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시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영유아 수 분포, 어린이집·유치원과 이용 아동 수, 공급률과 이용률, 정원충족률 등을 알아보았다.

1 영유아 인구 변화

1절은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와 0~6세 영유아 인구 규모와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시도별 차이를 정리하였다.

가.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1)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²⁾은 2017년 기준 1.05명이다. 1983년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 2.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1.2명 선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6년 1.1명 이하로 떨어졌고, 2017년에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국가통계포털, 2018.6.20. 인출³⁾)(표 II-1-1, 그림 II-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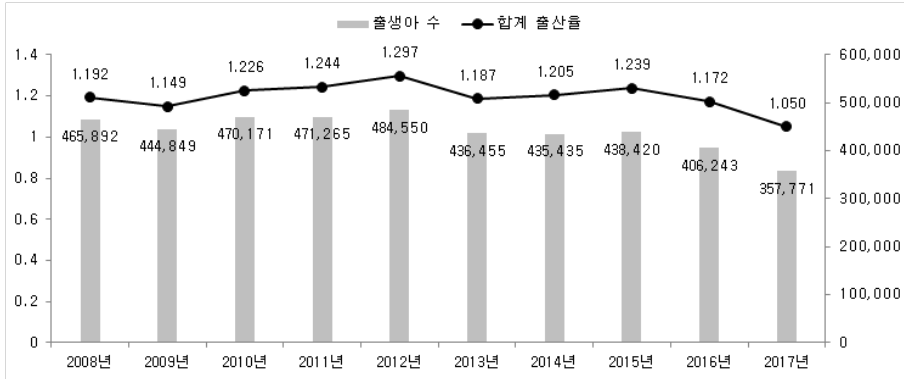
이를 시도별로 보면, 2017년 기준 세종이 1.668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전남, 제주가 1.3명 대이며,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이 1.2명 선, 강원, 전북이 1.1명 선이다. 서울과 부산은 각각 0.836명, 0.976명으로 전국

2)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을 의미함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2018.6.20. 인출).

3)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자료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do>) 2018.6.20. 인출 자료임.

에서 가장 낮다(국가통계포털, 2018.6.20. 인출)(표 II-1-1 참조).

그림 II-1-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2008-2017년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연도별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2018.6.20. 인출).

표 II-1-1 시도별 합계출산율: 2008-2017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1.192	1.149	1.226	1.244	1.297	1.187	1.205	1.239	1.172	1.052
서울	1.010	0.962	1.015	1.014	1.059	0.968	0.983	1.001	0.940	0.836
부산	0.980	0.940	1.045	1.078	1.135	1.049	1.090	1.139	1.095	0.976
대구	1.072	1.029	1.109	1.146	1.217	1.127	1.169	1.216	1.186	1.067
인천	1.186	1.143	1.214	1.232	1.301	1.195	1.212	1.216	1.144	1.007
광주	1.198	1.137	1.223	1.234	1.295	1.170	1.199	1.207	1.168	1.053
대전	1.215	1.156	1.205	1.261	1.315	1.234	1.250	1.277	1.192	1.075
울산	1.338	1.308	1.369	1.393	1.481	1.391	1.437	1.486	1.418	1.261
세종	-	-	-	-	1.597	1.435	1.354	1.893	1.821	1.668
경기	1.285	1.226	1.309	1.314	1.355	1.226	1.241	1.272	1.194	1.069
강원	1.253	1.248	1.313	1.338	1.374	1.249	1.248	1.311	1.237	1.123
충북	1.319	1.317	1.402	1.428	1.485	1.365	1.363	1.414	1.358	1.235
충남	1.444	1.408	1.479	1.496	1.571	1.442	1.421	1.480	1.395	1.276
전북	1.305	1.279	1.374	1.405	1.440	1.320	1.329	1.352	1.251	1.151
전남	1.449	1.445	1.537	1.568	1.642	1.518	1.497	1.549	1.466	1.325
경북	1.313	1.274	1.377	1.434	1.489	1.379	1.408	1.464	1.396	1.256
경남	1.368	1.323	1.413	1.446	1.503	1.367	1.409	1.437	1.358	1.227
제주	1.386	1.378	1.463	1.487	1.598	1.427	1.481	1.477	1.432	1.305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연도별 합계출산율(2018.6.20. 인출).

지난 10년간 지역 간 출산율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8년과 2017년 시군구 단위 합계출산율을 산출하여 비교해 보았다. 합계출산율 상위 10개 지역과 하위 10개 지역을 추출하면, 2008년에는 전남 강진군이 2.207로 전국에서 합계출

산율이 가장 높다. 상위 10개 지역에는 전남 3개, 전북 2개, 강원 3개 시군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반해,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 서구로 하위 10개 시군구 중 부산이 5개 지역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서울 강남구와 종로구, 대구 서구와 남구, 광주 동구 등도 이에 해당된다(표 II-1-2 참조).

표 II-1-2 시군구별 합계출산율-상·하위 10개 지역: 2008년, 2017년

단위: 명

2008년				2017년			
상위 10개 지역		하위 10개 지역		상위 10개 지역		하위 10개 지역	
구분	합계출산율	구분	합계출산율	구분	합계출산율	구분	합계출산율
전남 강진군	2.207	대구 남구	0.876	전남 해남군	2.099	부산 동구	0.791
전북 진안군	1.904	부산 동구	0.866	강원 인제군	1.833	부산 서구	0.758
전남 영암군	1.898	서울 종로구	0.857	부산 강서구	1.829	대구 남구	0.753
전북 임실군	1.876	부산 금정구	0.856	전북 순창군	1.795	부산 영도구	0.750
강원 인제군	1.836	부산 중구	0.843	전남 영암군	1.777	서울 광진구	0.749
강원 화천군	1.823	부산 영도구	0.839	충북 증평군	1.669	경북 울릉군	0.745
경기 화성시	1.792	대구 서구	0.827	세종시	1.668	서울 강남구	0.706
경남 거제시	1.777	서울 강남구	0.823	충남 당진시	1.654	부산 중구	0.687
울산 북구	1.763	광주 동구	0.804	전남 장성군	1.641	서울 관악구	0.662
전남 광양시	1.697	부산 서구	0.790	대구 달성군	1.634	서울 종로구	0.646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합계출산율(2018.6.20. 인출).

한편, 2017년에는 전남 해남군의 합계출산율이 2.09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국가통계포털, 2018.6.20. 인출)(표 II-1-2 참조). 해남군은 그간 임신부 초음파 등 12개 항목 검진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 양육비 지원, 출산 축하물품, 공공산후조리원 등 임신에서 출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덕분에 5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세계일보, 2018.6.10 기사)⁴⁾.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정부의 출산정책에 의한 출산율 상승보다는 기업 및 공공기관 이전, 택지개발 등 인구유입에 의한 출산율 상승으로 볼 수 있다. 세종시, 충북 증평군, 충남 당진시 등이 대표적인 지역들이다.

4) 세계일보(2018.6.10.).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해남군 출산율 쑥~ (<http://www.segye.com/newsView/20180610003470> 2018.6.20. 인출).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종로구 0.646명으로 여성 2명 중 자녀 1명을 낳은 꼴이다. 전국 하위 10개 지역에 서울과 부산 각각 4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대구 남구,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중구, 서울 강남구와 종로구 등 7개 지역은 10년 전과 동일하게 전국 하위 10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표 II-1-2 참조).

2) 출생아 수

출생아 수는 2017년 기준 35만 7,771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이다(국가통계포털, 2018.6.20. 인출)(그림 II-1-1 참조).

표 II-1-3 시도별 출생아 수: 2012-2017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465,892	444,849	470,171	471,265	484,550	436,455	435,435	438,420	406,243	357,771
서울	94,736	89,594	93,266	91,526	93,914	84,066	83,711	83,005	75,536	65,389
부산	26,670	25,110	27,415	27,759	28,673	25,831	26,190	26,645	24,906	21,480
대구	20,562	19,399	20,557	20,758	21,472	19,340	19,361	19,438	18,298	15,946
인천	25,365	24,379	25,752	26,118	27,781	25,560	25,786	25,491	23,609	20,445
광주	13,890	13,101	13,979	13,916	14,392	12,729	12,729	12,441	11,580	10,120
대전	14,856	13,915	14,314	14,808	15,279	14,099	13,962	13,774	12,436	10,851
울산	11,365	11,033	11,432	11,542	12,160	11,330	11,556	11,732	10,910	9,381
세종	-	-	-	-	1,054	1,111	1,344	2,708	3,297	3,504
경기	119,397	113,692	121,753	122,027	124,746	112,129	112,169	113,495	105,643	94,088
강원	12,373	12,112	12,477	12,408	12,426	10,980	10,662	10,929	10,058	8,958
충북	14,064	13,903	14,670	14,804	15,139	13,658	13,366	13,563	12,742	11,394
충남	19,749	19,257	20,242	20,398	20,448	18,628	18,200	18,604	17,302	15,670
전북	15,878	15,233	16,100	16,175	16,238	14,555	14,231	14,087	12,698	11,348
전남	16,363	15,995	16,654	16,612	16,990	15,401	14,817	15,061	13,980	12,354
경북	23,538	22,373	23,700	24,250	24,635	22,206	22,062	22,310	20,616	17,957
경남	31,493	30,320	32,203	32,536	33,211	29,504	29,763	29,537	27,138	23,849
제주	5,593	5,433	5,657	5,628	5,992	5,328	5,526	5,600	5,494	5,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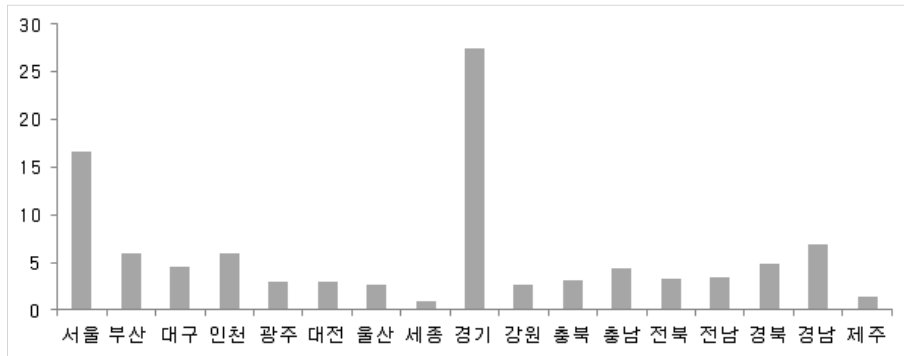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출생아 수(2018.6.20. 인출).

2008년 465,892명에서 2013년 436,455명까지 줄어든 이후 43만 명 선을 유지하여 오다가 2016년 40만명 선까지 줄었다(국가통계포털, 2018.6.20. 인출). 2017년에는 출생아 수가 357,771명까지 하락하여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2년에는 20만명

선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다(헤럴드경제, 2018.2.28 기사)⁵⁾.

시도별로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모두 출생아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인다. 세종시는 2012년 1,054명에서 2017년 3,50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에 영유아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는 2008년 119,397명에서 2013년 112,128명으로 줄어든 이후 소폭이지만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에는 94,088명으로 10만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서울도 2008년 94,736명에서 2013년 84,066명까지 줄어든 후 83만명 선을 유지하였으나 2018년 65,389명으로 7만명 이하로 떨어졌다(국가통계포털, 2018.6.20. 인출)(표 II-1-3 참조).

■ 그림 II-1-2 ■ 시군구별 출생아 수 분포: 2017년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출생아 수(2018.6.20. 인출).

〈표 II-1-4〉는 시군구별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또는 전년보다 감소한 지역 중 상위 10개 지역을 각각 추출하여 정리한 것이다.

출생아 수가 전년도 보다 증가한 지역으로는 충북 영동군이 전년 대비 31.1%로 증가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북 영덕군이 27.6%, 경기 하남시 15.6%, 대구 달성군 14.3% 등 17개 지역에서 전년도보다 출생아가 1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통계포털, 2018.7.16. 인출).

반면에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경남 합천군으로 -29.3%를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강원 영양군 28.6%, 속초시 25.9%, 부산 영도구 24.2%, 충북 옥천군 23.7% 순이다(국가통계포털, 2018.7.16. 인출).

5) 헤럴드경제(2018.2.28.). 지난해 출생아수 35만명, 심리적 마지노선 무너져...역대 최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228000571> 2018.6.20. 인출)

표 II-1-4 시군구별 출생아 수: 전년 대비 증감 10개 지역

단위: %

상위 10개 지역	증가 비율	하위 10개 지역	감소 비율
충북 영동군	31.1	경남 합천군	-29.3
경북 영덕군	27.6	강원 양양군	-28.6
경기 하남시	15.6	강원 속초시	-25.9
대구 달성군	14.3	부산 영도구	-24.2
전북 임실군	9.9	충북 옥천군	-23.7
경북 청송군	8.5	경기 과천시	-23.4
전남 부안군	8.2	경기 의왕시	-22.7
부산 강서구	8.1	충남 태안군	-22.7
경북 영양군	8.1	대구 서구	-22.4
경남 의령군	7.3	전북 장수군	-22.2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출생아 수(2018.7.16. 인출).

한편, 전국 3,494개 읍면동 중 2017년에 신생아가 1명도 태어나지 않은 지역은 강원 가곡면, 근북면, 김삿갓면, 북산면, 경북 녹전면, 우곡면, 증산면, 평은면, 경남 개천면, 사랑면, 전북 용동면, 전남 한천면, 충남 마산면, 충북 한수면, 경기 장단면, 진동면, 인천 서도면 등 17개 곳이다. 이 외에도 신생아 수가 50명 이하인 읍면동이 1,605곳, 51~100명 이하도 551곳으로 전체 읍면동 중 절반 이상이 100명도 채 태어나지 않았다(국가통계포털, 2018.7.16. 인출).

표 II-1-5 읍면동 출생아 수

단위: %(명)

구분	읍면동
출생아 수 0명	강원 가곡면, 근북면, 김삿갓면, 북산면 경북 녹전면, 우곡면, 증산면, 평은면, 경남 개천면, 사랑면 전북 용동면, 전남 한천면, 충남 마산면, 충북 한수면 경기 장단면, 진동면, 인천 서도면 등 (17개 지역)
50명 이하	경북 가음면, 고로면 등 (1,605개 지역)
51~100명 이하	전북 남중동, 대구 두류3동 등 (551개 지역)
101~150명 이하	광주 봉선1동, 서울 삼성동 등 (447개 지역)
151~200명 이하	강원 교1동, 경기 대월면 등 (319개 지역)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출생아 수(2018.7.16. 인출).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 대비 20~39세 여성 인구 수 비율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한 이상호(2018)의 연구⁶⁾를 참고하여 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하였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보면, 전남, 전북, 충남, 강원, 경북 5개 시도가 소멸위험 보통,

나머지 지역은 소멸 위험이 매우 낮은 지역들로 나타났다.

표 II-1-6 시도별 소멸위험지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소멸위험지수	2.15	1.55	1.81	2.36	2.20	2.28	2.64	3.16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멸위험지수	2.41	1.25	1.57	1.45	1.20	1.00	1.18	1.62	1.77

자료: 행정안전부(2018). 주민등록인구통계(2018년 9월 말 기준) (<http://27.101.213.4/> 2018.7.16. 인출).

시군구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소멸 고위험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경북 의성군 등 19개 지역이 소멸위험 진입단계, 경남 함양군 등 65개 지역은 주의단계, 부산 중구 등 38개 지역은 소멸위험 보통 단계, 나머지 지역은 소멸위험 지수가 매우 낮은 단계이다(표 II-1-7 참조).

표 II-1-7 시군구별 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진입단계

구분	지역
소멸위험지역	소멸위험진입단계 (0.2~0.5 미만) 경북 의성군,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경남 합천군, 경남 남해군, 경북 영양군, 경북 청도군, 경북 봉화군, 전남 보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송군, 경남 의령군, 경남 산청군, 전남 함평군, 충남 서천군, 전남 곡성군, 전북 진안군, 전남 신안군, 충북 괴산군.

주: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 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자료: 행정안전부(2018). 주민등록인구통계(2018년 9월 말 기준) (<http://27.101.213.4/> 2018.7.16. 인출).

나. 영유아 수

2017년 말 기준 0~6세 영유아는 총 3,044,577명으로 2014년까지 320만명 선을 유지해 오다가 2015년 310만 명 선으로 감소하였고, 2017년에는 300만명 선까지 줄었다. 전체 인구 대비 영유아 비율은 2008년 6.6%에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서 2017년 5.9%까지 하락하였다(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018.6.20. 인출).

아동연령별로 보면, 2017년 기준 5세가 총 489,401명으로 0~6세 영유아 중 16.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6세가 476,061명으로 15.6%, 2세와 3세, 4세가

6) 이상호(2018)는 젊은 여성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지방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마스다 히로야(2014)의 저서 지방소멸의 핵심내용에 착안하여 이상호(2015)에서 처음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 산출기준을 개발하였고,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 인구 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로 산출함.
 소멸위험 매우 낮음(1.5 이상), 소멸위험 보통(1.0~1.5 미만), 주의단계(0.5~1.0 미만),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 진입단계(0.2~0.5 미만), 소멸위험지역-소멸고위험 지역(0.2 미만)으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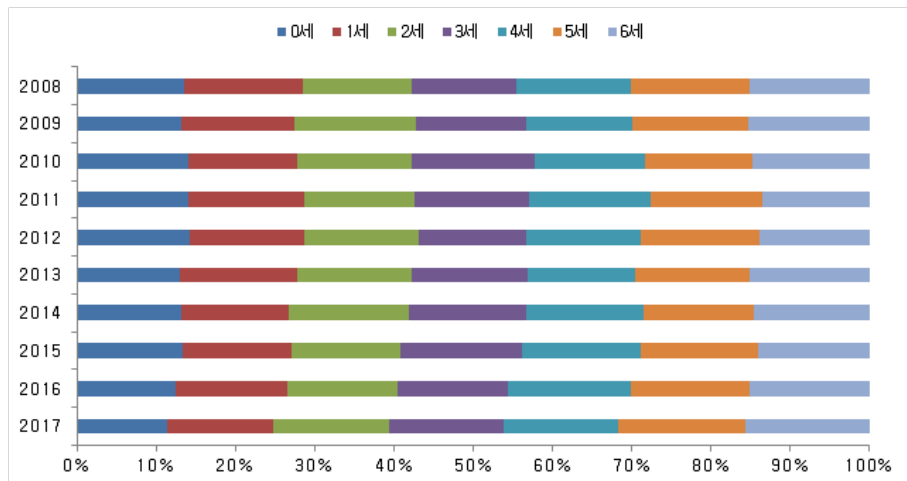
각각 44만명 내외로 14%대이며, 0세가 345,786명 11.4%로 가장 적다(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018.6.20. 인출).

표 II-1-8 연도 및 연령별 영유아 수: 2008-2017년

구분	단위: 명(%)								총인구대비 비율
	0~6세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08	3,277,632	444,421	491,498	446,884	434,320	472,935	492,914	494,660	(6.6)
2009	3,229,577	42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473,112	493,040	(6.5)
2010	3,208,694	448,516	443,963	465,564	493,452	448,200	435,281	473,718	(6.4)
2011	3,212,933	451,579	470,224	445,437	466,807	494,388	448,774	435,724	(6.3)
2012	3,265,160	464,374	472,275	470,956	446,256	467,432	494,810	449,057	(6.4)
2013	3,264,476	421,465	486,655	474,098	472,047	447,055	467,935	495,221	(6.4)
2014	3,210,156	419,833	438,778	488,030	474,932	472,731	447,531	468,321	(6.3)
2015	3,187,718	424,563	437,994	439,989	488,716	475,519	473,120	447,817	(6.2)
2016	3,153,489	393,674	441,720	439,207	440,530	489,140	475,817	473,401	(6.1)
2017	3,044,577	345,786	409,814	442,943	439,700	440,872	489,401	476,061	(5.9)
(비율)	(100.0)	(11.4)	(13.5)	(14.5)	(14.4)	(14.5)	(16.1)	(15.6)	

자료: 행정안전부(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27.101.213.4/#> 2018.6.20. 인출).

그림 II-1-3 연도별 0~6세 영유아 비중



자료: 행정안전부(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27.101.213.4/#> 2018.6.20. 인출).

〈표 II-1-9〉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0~6세 영유아 대비 시도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2017년 기준, 0~6세 영유아 중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7.5%

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서울이 16.6%, 경남 6.9%, 부산과 인천 각각 5.9%, 나머지는 5% 미만이고, 제주가 1.3%로 가장 낮다(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018.6.20. 인출).

▮ 표 II-1-9 ▮ 시도별 0~6세 영유아 비율: 2008-2017년

단위: %,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서울	18.7	18.6	18.3	18.0	17.8	17.6	17.4	17.2	16.8	16.6
부산	5.7	5.6	5.6	5.6	5.7	5.7	5.8	5.9	5.9	5.9
대구	4.6	4.6	4.5	4.5	4.5	4.5	4.5	4.5	4.5	4.5
인천	5.5	5.6	5.6	5.7	5.8	5.9	5.9	5.9	5.9	5.9
광주	3.2	3.2	3.2	3.2	3.1	3.1	3.1	3.1	3.0	3.0
대전	3.2	3.2	3.2	3.2	3.2	3.2	3.2	3.1	3.1	3.0
울산	2.4	2.4	2.4	2.4	2.5	2.5	2.5	2.6	2.6	2.6
세종	-	-	-	-	0.3	0.3	0.4	0.7	0.8	0.9
경기	26.3	26.5	26.9	26.9	27.0	27.0	27.0	27.0	27.3	27.5
강원	2.9	2.8	2.8	2.8	2.7	2.7	2.6	2.6	2.6	2.6
충북	3.1	3.1	3.1	3.1	3.1	3.1	3.1	3.1	3.1	3.1
충남	4.2	4.3	4.4	4.4	4.3	4.3	4.3	4.3	4.3	4.4
전북	3.6	3.6	3.5	3.5	3.5	3.5	3.5	3.4	3.4	3.3
전남	3.6	3.5	3.5	3.5	3.5	3.4	3.4	3.4	3.4	3.4
경북	5.0	4.9	4.9	4.9	4.9	4.9	4.9	4.9	4.9	4.9
경남	6.8	6.8	6.9	6.9	6.9	6.9	6.9	6.9	6.9	6.9
제주	1.3	1.3	1.3	1.3	1.3	1.3	1.3	1.4	1.4	1.4
(수)	(3,277,632)	(3,229,577)	(3,208,694)	(3,212,933)	(3,265,160)	(3,264,476)	(3,210,156)	(3,187,718)	(3,153,489)	(3,044,577)

자료: 행정안전부(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27.101.213.4/#> 2018.6.20. 인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경기와 인천, 울산, 인천, 세종, 제주 등 일부 지역은 영유아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반면에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전북, 전남 등은 감소하였다. 예를 들어, 가장 비중이 높은 경기는 2008년 26.3%에서 2012년 27.0%, 2017년에는 27.5%까지 상승하였다. 반면에 서울은 2008년 18.7%에서 2012년 17%대로 떨어지고, 2016년에는 16% 선까지 하락하였다(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018.6.20. 인출).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영유아 가구가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주하면서 서울 지역은 영유아 비중이 감소하는 데 반해 경기, 인천 지역은 증가하고 있다.

2 어린이집·유치원 공급과 이용 현황

2절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 간 어린이집·유치원 공급과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지역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군구별 어린이집 공급률 및 이용률과 정원충족률, 유치원 이용률 등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가.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

1) 어린이집 수

어린이집 수는 2017년 말 기준 40,238개소이다. 2012년 0~2세 무상보육과 5세 누리과정 도입, 2013년 누리과정의 3~4세 확대 등으로 2013년에는 어린이집이 43,770개소까지 늘어났다(보건복지부, 2018a). 그러나 양육수당이 0~5세 전체층으로 확대되면서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크게 줄었고, 이로 인해 어린이집 폐쇄도 확산되기 시작하였다(표 II-2-1 참조).

표 II-2-1 어린이집 수: 2008-2017년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단위: 개소(%)	
							직장	협동
2008	33,499	1,826	1,458	969	13,306	15,525	350	65
2009	35,550	1,917	1,470	935	13,433	17,359	370	66
2010	38,021	2,034	1,468	888	13,789	19,367	401	74
2011	39,842	2,116	1,462	870	14,134	20,722	449	89
2012	42,527	2,203	1,444	869	14,440	22,935	523	113
2013	43,770	2,332	1,439	868	14,751	23,632	619	129
2014	43,742	2,489	1,420	852	14,882	23,381	692	149
2015	42,517	2,629	1,414	834	14,626	22,074	785	155
2016	41,084	2,859	1,402	804	14,316	20,598	948	157
2017	40,238	3,157	1,392	771	14,045	19,656	1,053	164
(비율)	(100.0)	(7.8)	(3.5)	(1.9)	(34.9)	(48.8)	(0.4)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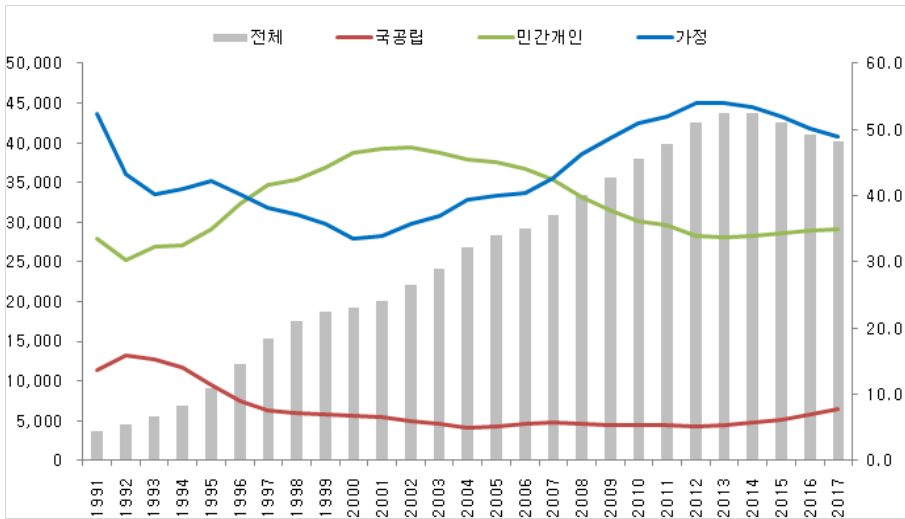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18a). 2017년 보육통계. p.2.

이에 더하여 2015년 1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⁸⁾, 출생아 수 감

7) 뉴스(2013.2.21). [새 정부 국정목표]@맞춤형 고용 복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9191875 2018.6.20. 인출)

소) 등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더 줄면서 가정어린이집 중심으로 어린이집 감소가 가속화 되었다.

■ 그림 II-2-1 ■ 전체 어린이집 수 및 유형별 비율: 1991-2017년



주: 법인단체, 민간개인 어린이집 미분류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0년 보육통계. p.2.
 보건복지부(2018a). 2017 보육통계. p.2.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이 각각 19,656개소, 14,045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7.8%,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3.5%, 나머지는 3% 내외 정도이다(보건복지부, 2018a). 국공립어린이집은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2012년 2,203개소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5% 대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2015년 6% 대, 2016년에는 7% 대에 진입하였다(보건복지부, 2018a). 직장어린이집도 이행 사업장에게는 설치비와 운영비 등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이행 사업장에게는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가 강화되면서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¹⁰⁾.

8) 동아일보(2015.1.17.). 아동학대 어린이집 폐쇄 5년 전 재탕
 (<http://news.donga.com/3/all/20150117/69132893/1>. 2018.6.20. 인출).
 9) 연합뉴스(2017.2.27.). 어린이집 1천400곳↓ 요양시설 1천개↑...너무 빠른 교령사회
 (<https://www.yna.co.kr/view/AKR20170225067151064?input=1195m> 2018.6.20. 인출)
 10) SBSCNBC(2016.1.21.) 202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 2.5배 늘린다...직장어린이집 430곳 추가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79033> 2018.6.20. 인출)

반면에 가정어린이집은 2012년 0~2세 무상보육으로 2013년 23,632개소까지 늘어나는 등의 보육사업 이래 최대 호황기를 누렸으나, 이후 전계층 양육수당 지원과 출생아 수 감소 등으로 매년 10% 정도씩 줄어들고 있다. 민간어린이집도 가정어린이집 수준에는 못 미치나 2014년 14,882개소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매년 300개소씩 감소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a).

2) 이용 아동 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17년 말 기준 1,450,243명이다. 앞서 살펴본 어린이집 현황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도 2014년 1,496,671명까지 늘어났으나 0~5세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 2015년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 출생아 수 감소 등으로 1년 사이에 1,452,813명까지 줄었고, 이후 매년 1,000~1,500여명 정도씩 줄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a).

표 II-2-2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2008-2017년

구분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08	1,135,502	123,405	113,894	53,818	615,647	210,438	16,809	1,491
2009	1,175,049	129,656	112,338	52,718	623,045	236,843	18,794	1,655
2010	1,279,9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21,901	1,898
2011	1,348,729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4,987	2,286
2012	1,487,361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881	2,913
2013	1,486,980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4,479	3,226
2014	1,496,671	159,241	104,552	49,175	775,414	365,250	39,265	3,774
2015	1,452,813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4,765	4,127
2016	1,451,215	175,929	99,113	45,374	745,663	328,594	52,302	4,240
2017	1,450,243	186,916	96,794	43,404	738,559	321,608	58,454	4,508
(비율)	(100.0)	(12.9)	(6.7)	(3.0)	(50.9)	(22.2)	(4.0)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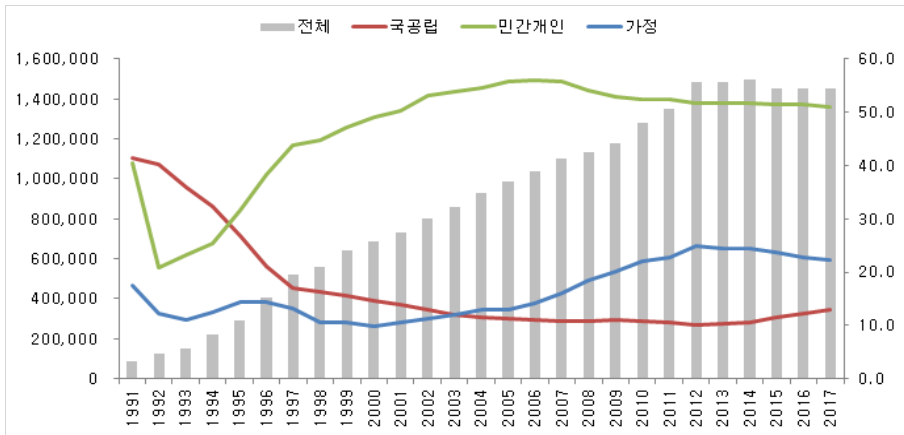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18a), 2017년 보육통계, p.3.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민간·가정이 각각 738,559명, 321,608명으로 전체 이용 아동의 70%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186,916명 12.9%,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96,794명 6.7%이다(보건복지부, 2018a).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17년 186,916명으로 국공립 확충과 함께 매년 증가하여 2008년보다 6만 명 이상 늘어났다(보건복지부, 2018a). 그러나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 이용 아동 비중은 여전히 크지 않다. 민간은

2013년 77만 명까지 늘어났으나 2015년 747,598명까지 줄었다. 이후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이러한 감소 추이는 계속 되고 있다. 가정은 2012년 0~2세 무상보육으로 37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5년 36만명, 2015년에는 34만명, 2016년에는 32만명 선까지 줄었다(보건복지부, 2018a)(표 II-2-2 참조).

■ 그림 II-2-2 ■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및 유형별 비율: 1991-2017년



주: 법인단체, 민간개인 어린이집 미분류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0년 보육통계. p.3.
 보건복지부(2018a). 2017년 보육통계. p.3.

■ 표 II-2-3 ■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2008-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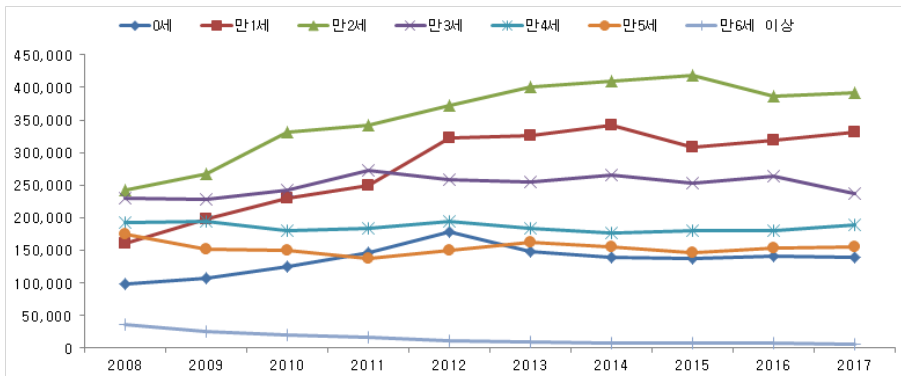
구분	단위: 명(%)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세 이상
2008	99,245	160,320	242,324	229,424	192,668	175,323	36,198
2009	107,525	198,831	268,038	227,966	193,934	152,380	26,375
2010	125,133	229,486	331,637	243,264	180,542	149,278	20,570
2011	146,666	249,787	342,879	272,034	182,999	137,349	17,015
2012	177,757	321,716	372,811	259,112	194,413	149,522	12,030
2013	148,273	325,921	400,781	255,786	184,513	161,877	9,829
2014	138,563	342,056	409,954	265,338	177,014	155,510	8,236
2015	137,117	308,227	419,252	253,294	180,249	147,278	7,396
2016	141,013	318,245	386,726	263,652	180,255	153,893	7,431
2017	139,654	330,868	391,715	236,665	188,540	156,093	6,708
(비율)	(9.6)	(22.8)	(27.0)	(16.3)	(13.0)	(10.8)	(0.5)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건복지부(2010, 2011, 2012, 2013a, 2014a, 2015a, 2016a, 2017a). 보육통계.
 보육통계(한국보육진흥원 <https://www.kcpi.or.kr/2018.6.20> 인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7년 기준 만 2세와 만1세가 각각 391,715명, 330,868명으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절반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만 3세가 236,665명, 만4세 188,540명, 만5세 156,093명으로 각각 10% 대, 0세가 139,654명 9.6%로 비중이 가장 적다(보건복지부, 2018a).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I-2-3]과 같다. 만0세는 2012년 0~2세 무상보육으로 18만명 정도까지 늘어났으나, 2013년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으로 15만명 정도까지 줄었고, 이후 14만명 선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만1세는 2012년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늘고 있다. 만2세는 2015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6년 크게 감소하였고 이후 다시 늘고 있다. 만3세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2011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고, 2013년 누리과정 지원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다. 만4세와 만5세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그 폭은 크지 않다(보건복지부, 2012, 2013a, 2014a, 2016a, 2017a).

■ 그림 II-2-3 ■ 연도 및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2008~2017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건복지부(2010, 2011, 2012, 2013a, 2014a, 2015a, 2016a, 2017a). 보육통계.

보육통계(한국보육진흥원 <https://www.kcpi.or.kr/2018.6.2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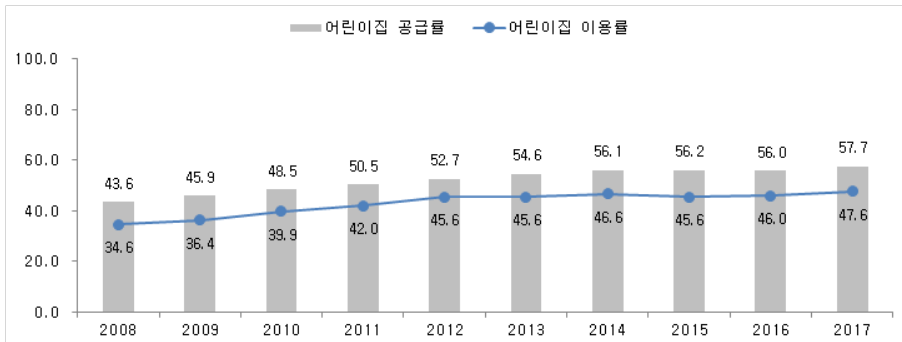
3) 공급과 이용

[그림 II-2-4]는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을 산출한 것이다. 어린이집 공급률은 0~6세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정원 비율, 어린이집 이용률은 0~6세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현원 비율로 산출한 것이다.

2017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의 공급률은 평균 57.7%이다. 보육료 지원 확대로 어린이집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린이집 공급률도 함께 상승하였다. 어린이집 공급률은 2008년 43.6%에서 2015년 56.2%, 2017년 57.7%까지 증가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와 어린이집 수도 동반 감소하였기 때문에 공급률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다(그림 II-2-4 참조).

한편, 어린이집 이용률은 평균 47.6%으로, 2008년 34.6%에서 점차적으로 상승하여 2011년에는 40%대에 진입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5% 선을 유지하였고, 2016년에는 46.0%, 2017년에는 47.6%까지 상승하였다. 출생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크게 줄고 있지만 어린이집 폐쇄가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어린이집 이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그림 II-2-4 ■ 연도별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2008~2017년



자료: 행정안전부(2008, 2009,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27.101.213.4/> 2018.7.18. 인출).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육통계(한국보육진흥원 <https://www.kcpi.or.kr/>2018.6.20. 인출). 보건복지부(2010, 2011, 2012, 2013a, 2014, 2015a, 2016a, 2017a). 보육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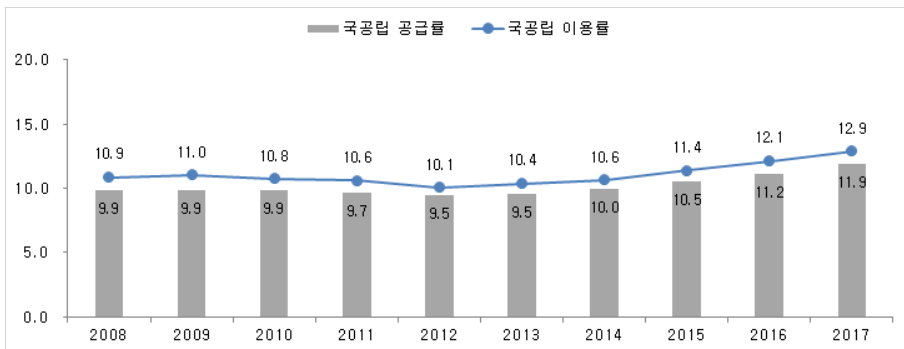
한편,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 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을 살펴보면 [그림 II-2-5]와 같다.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은 전체 어린이집 정원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이용률은 전체 어린이집 현원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현원을 의미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급률이 2017년 기준 평균 11.9%이다. 그간 9%대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추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힘입어 2014년 10%대에 진입하였고, 2016년에는 11.2%까지 상승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12.9%로, 2014년까지 10%대를 유지해 왔다. 2015

년 11.4%까지 상승하였고 2016년에는 12%대에 진입,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간 국공립어린이집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률과 이용률 상승 폭은 매우 미미하다(그림 II-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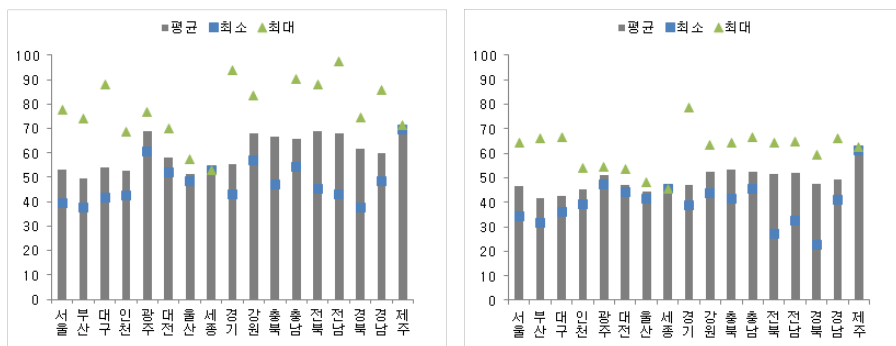
■ 그림 II-2-5 ■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 2008~2017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육통계(한국보육진흥원 <https://www.kcpi.or.kr/2018.6.20>. 인출).
보건복지부(2010, 2011, 2012, 2013a, 2014a, 2015a, 2016a, 2017a). 보육통계.

〈표 II-2-4〉는 시도 및 시군구별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을 산출한 것이다. 어린이집 공급률은 0~6세 영유아 대비 어린이집 정원 비율, 어린이집 이용률은 0~6세 영유아 대비 어린이집 현원 비율을 의미한다.

■ 그림 II-2-6 ■ 시도별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2017년 기준



〈어린이집 공급률〉

〈어린이집 이용률〉

자료: 〈표 II-2-4〉을 그림으로 재구성함.

어린이집 공급률은 제주가 2017년 기준 평균 70.0%로 가장 높고, 부산이 평균 49.4%로 가장 낮다.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곳은 60%, 나머지는 50% 대이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시도 단위는 영유아 수 감소, 서울을 비롯한 특광역시와 경기 등은 영유아 밀집 거주지역으로 공급률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시군구별로는 충북 단양군으로 103.1%로 어린이집 공급률이 가장 높고, 부산 강서구로 37.5% 가장 낮다. 지역 간에 어린이집 공급률이 65%p 정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충북과 전남은 동일 시도 내에서는 최대 50%p 까지 편차가 나지만, 세종과 제주에 어린이집이 지역 간에 균등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부록 표 II-2-1 참조).

표 II-2-4 시·도 및 시군구별 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2017년 기준

단위: %

구분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이용률			공급률			이용률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전체	57.7	37.5	103.1	47.6	22.7	78.5	11.9	0.0	72.0	12.9	0.0	97.3
서울	53.1	39.6	77.5	46.5	34.4	64.1	30.4	15.6	50.6	31.5	16.8	51.8
부산	49.4	37.5	74.0	41.6	31.8	66.0	13.9	5.4	36.2	14.7	6.3	37.5
대구	54.2	41.5	88.2	42.5	36.2	66.6	5.3	3.1	9.6	6.0	3.4	9.7
인천	52.6	42.4	68.5	45.3	39.3	54.0	10.6	6.8	54.9	11.2	8.1	56.9
광주	69.1	60.5	76.7	51.0	47.3	54.5	4.4	2.5	8.1	4.9	2.5	9.4
대전	57.9	52.2	70.0	47.2	44.3	53.6	4.0	2.8	8.8	4.4	3.0	9.9
울산	51.5	48.4	57.2	44.3	41.6	48.0	6.3	3.7	8.5	6.9	4.3	8.5
세종	52.7	52.7	52.7	45.3	45.3	45.3	9.2	9.2	9.2	10.1	10.1	10.1
경기	55.6	43.1	93.7	47.1	38.7	78.5	10.2	2.1	26.6	10.8	2.6	27.7
강원	68.1	57.0	83.6	52.3	43.8	63.3	12.6	3.6	57.8	13.6	3.9	60.8
충북	66.6	46.9	103.1	53.1	41.5	64.2	7.2	3.7	27.8	7.7	4.1	38.5
충남	65.7	54.1	90.3	52.4	45.3	66.6	5.6	1.3	18.5	5.9	1.6	20.6
전북	68.7	45.2	87.9	51.4	27.1	64.5	5.4	0.0	35.2	6.0	0.0	37.8
전남	67.9	42.9	97.6	52.0	32.3	64.6	8.6	0.0	36.2	9.5	0.0	41.4
경북	61.9	37.8	74.7	47.3	22.7	59.3	8.0	3.5	72.0	8.2	3.6	97.3
경남	60.0	48.5	85.9	49.2	40.9	65.9	8.2	3.2	62.9	8.9	3.5	70.1
제주	70.0	69.5	71.5	62.3	61.2	62.7	6.5	4.7	11.9	7.1	5.1	13.4

주: 어린이집 공급률=어린이집 정원/전체 영유아 수*100
 어린이집 이용률=어린이집 현원/전체 영유아 수*100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전체 어린이집 정원*100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국공립어린이집 현원/전체 어린이집 현원*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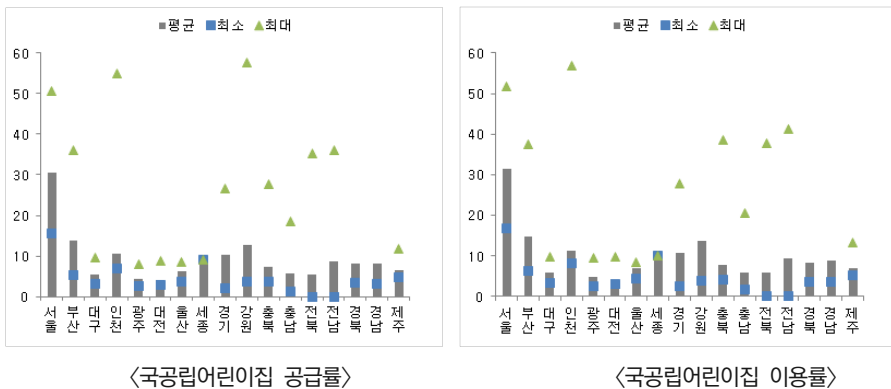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2017).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27.101.213.4/> 2018.7.16. 인출).
 보건복지부(2018a). 2017년 보육통계. pp.18-56.

어린이집 이용률도 앞서 살펴본 공급률과 유사하게 제주가 2017년 기준 62.3%로 가장 높고, 부산이 41.6%로 가장 낮다.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6곳은 50% 대로 영유아 중 절반 이상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40% 대 이다. 시군구 중 어린이집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과천시로 78.5%이고,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울릉군으로 22.7%이다. 즉, 과천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다수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만, 울릉군은 1/4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 시도 내에서 시군구 간의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 경북으로 40%p 정도로 크지만 세종과 제주는 거의 일치한다(부록 표 II-2-1 참조).

한편,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은 전체 어린이집 정원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이용률은 전체 어린이집 현원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현원 비율로 산출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은 서울이 2017년 기준 평균 30.4%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부산이 13.9%, 강원 12.6%, 인천 10.6%, 경기 10.2% 순이다. 나머지는 10% 미만이고 광주와 대전이 각각 평균 4.4%, 4.0%로 가장 낮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울릉군이 72.0%로 가장 높고, 전북 임실군, 전남 강진군과 담양군은 국공립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다. 동일 시도 내 지역 차가 가장 큰 곳은 경북으로 68.5%p 차이가 난다. 대구, 광주, 대전 등도 5~6%p 정도로 차이가 거의 없다(부록 표 II-2-1 참조).

■ 그림 II-2-7 ■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자료: 〈표 II-2-4〉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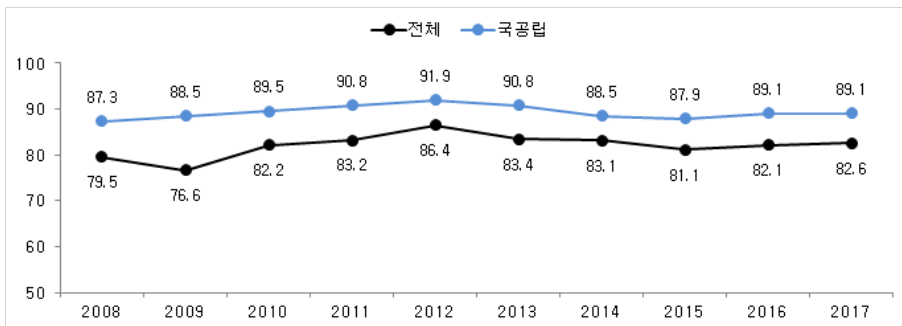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도 앞서 살펴본 공급률과 동일하게 서울이 3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산 14.7%, 강원 13.6%, 인천 11.2%, 경기 10.8%, 세종

10.1% 순이다. 나머지 지역은 10% 미만이고, 광주와 대전이 각각 4.9%, 4.4%로 가장 낮다. 시군구별로 보면, 경북 울릉군은 97.3%로 높고, 전북 임실군과 전남 강진군은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지역으로 이용률이 0%이다. 동일 시도 내 지역차가 가장 큰 곳은 경북으로 93.7%p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경남과 강원도 각각 66.6%p, 56.0%p로 지역 편차가 크다. 반면에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은 차이가 10%p 미만이다(부록 표 II-2-1 참조).

다음으로, 정원충족률은 정원 대비 현원 비율로 산출하였다. [그림 II-2-8]은 지난 10년 간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과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먼저, 어린이집 정원충족률도 2008년 79.5%로 80% 미만이었으나 매년 상승 추세를 보여서 0~2세 무상보육으로 영아의 어린이집이 크게 증가한 2012년 86.4%까지 상승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13년 0~5세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크게 줄면서 2015년 81.1%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17년 82.6%에 이른다. 저출산 현상 악화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보다 문을 닫는 어린이집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정원충족률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82% 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그림 II-2-8 ■ 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0, 2011, 2012, 2013a, 2014a, 2015a, 2016a, 2017a). 보육통계.
 (한국보육진흥원 <https://www.kcpi.or.kr/2018.6.20>. 인출).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2008년 87.3%에서 매년 상승하여 0~2세 무상보육이 시행된 2012년에는 91.9%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어린이집 정원충족률과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지원 확대에 따라 2014년에는 90% 이하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후 출생아 수 감소와 2015년 1월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줄고, 3~5세 누리과정 예산 책임 공방으로 유치원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정원충족률이 2015년에는 87.9%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소폭 회복되었지만 2013년 수준에는 못 미친다(그림 II-2-8 참조).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을 시도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II-2-5>와 같다.

▣ 표 II-2-5 ▣ 시·도 및 시군구 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충족률: 2017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정원	현원	평균	최소	최대	정원	현원	평균	최소	최대
전체	1,756,603	1,450,243	82.6	54.4	92.8	209,727	186,916	89.1	42.6	100.0
서울	268,100	234,867	87.6	80.5	91.8	81,612	74,098	90.8	84.2	95.3
부산	89,040	74,971	84.2	75.5	89.2	12,405	10,986	88.6	82.5	94.4
대구	74,696	58,591	78.4	73.8	87.1	3,984	3,498	87.8	80.7	99.4
인천	93,938	80,895	86.1	68.9	92.8	9,991	9,037	90.5	71.3	94.7
광주	63,161	46,650	73.9	71.0	78.3	2,792	2,305	82.6	71.5	86.0
대전	53,688	43,761	81.5	76.1	84.8	2,148	1,911	89.0	85.6	93.8
울산	40,305	34,657	86.0	77.9	92.2	2,538	2,376	93.6	90.6	98.7
세종	14,658	12,580	85.8	85.8	85.8	1,344	1,272	94.6	94.6	94.6
경기	466,020	394,882	84.7	71.5	92.2	47,383	42,710	90.1	79.7	89.3
강원	53,468	41,020	76.7	61.2	89.4	6,720	5,599	83.3	78.4	86.4
충북	62,582	49,896	79.7	62.3	88.8	4,479	3,855	86.1	86.1	97.1
충남	87,488	69,787	79.8	65.6	83.8	4,868	4,109	84.4	51.3	100.0
전북	69,650	52,105	74.8	59.9	79.6	3,728	3,118	83.6	42.6	96.4
전남	70,248	53,772	76.5	54.4	84.1	6,051	5,113	84.5	49.0	100.0
경북	92,669	70,901	76.5	60.0	85.2	7,403	5,803	78.4	64.6	92.9
경남	126,361	103,717	82.1	72.7	90.5	10,303	9,204	89.3	69.1	99.2
제주	30,531	27,191	89.1	85.6	90.2	1,978	1,922	97.2	96.0	98.2

주: 정원충족률=현원/정원*100

전북과 전남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지역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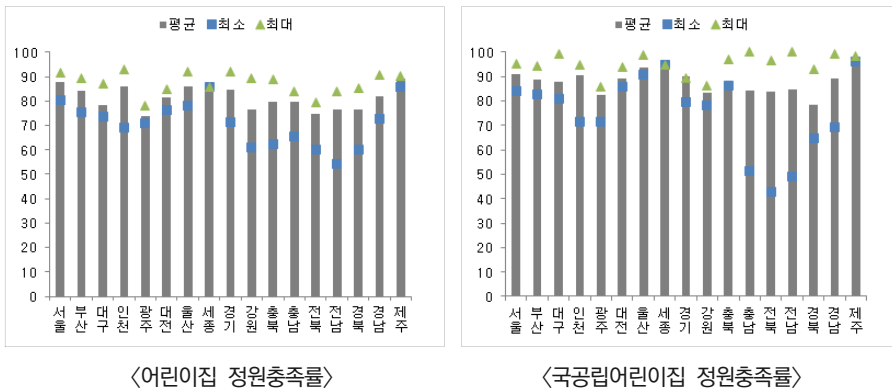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7년 보육통계. pp.20-56.

제주가 89.1%로 가장 높고 광주가 73.9%로 가장 낮다. 지역 간에 15%p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광주, 전북, 전남, 경북, 강원, 대구, 충북, 충남, 대전 등 9개 시도에는 전국 평균보다 낮아 어린이집이 과잉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군구 별로는 인천 연수구는 평균 92.8%로 가장 높고, 전남 신안군은 평균 54.4%로 가

장 낮다. 시군구 간에 40%p 이상 차이가 난다. 동일 시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커서 전남 29.7%p, 강원 29.7%p 차이가 나지만 광주, 대전, 제주 등은 10%p 미만으로 차이가 난다(부록 표 II-2-1 참조).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17개 시도 중 제주가 97.2%로 가장 높고, 경북이 78.4%로 가장 낮다. 경북을 제외하면 대부분 80%를 상회한다. 경기, 인천, 서울, 울산, 세종, 제주 등은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90%를 상회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 계룡시로 100.0%이고, 가장 낮은 곳은 전북 남원시로 42.6%로 정원의 절반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지역과 최대 지역 간에 50%p 이상 차이가 난다. 동일 시도 내에서는 전북과 전남이 각각 50%p 넘게 지역 간에 차이가 난다. 반면에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제주 등은 10%p 미만이다(부록 표 II-2-1 참조).

■ 그림 II-2-9 ■ 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충족률: 2017년 기준



자료: 〈표 II-2-5〉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나. 유치원 공급과 이용

1) 유치원 수

유치원 수는 2017년 기준 9,029개원으로, 국공립유치원이 52.5%, 사립유치원 47.4%로 기관 수로는 국공립이 사립보다 다소 많다. 누리과정이 3~5세로 확대된 2013년 이후 사립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2016년 4,291개원까지 늘어났으나

이후 감소 추세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6, 2017).

한편, 유치원 학급 수는 2017년 기준 총 36,470개 학급으로 2013년보다 6,000개 학급 정도가 늘어났다. 공립 10,395개, 사립 26,075개로 학급 수도 사립이 더 많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2017). 공립유치원은 단설보다 3학급 미만의 병설이 많아서 학급 수로는 사립이 공립유치원보다 더 많다.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수는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으나 학급 수는 늘었다. 학급 편성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이유로 학급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2-6 유치원 및 학급 수: 2008-2017년

단위: 개원, 학급(%)

구분	유치원 수						학급 수			
	전체	국립	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소계	단설	병설			국립	공립	
2008	8,344	3	4,480	101	4,379	3,861	24,567	14	6,775	17,778
2009	8,373	3	4,490	116	4,374	3,880	24,908	14	6,873	18,021
2010	8,388	3	4,498	131	4,367	3,887	25,670	14	7,115	18,541
2011	8,424	3	4,499	146	4,353	3,922	26,990	15	7,264	19,711
2012	8,538	3	4,522	167	4,355	4,013	28,386	14	7,521	20,851
2013	8,678	3	4,574	184	4,390	4,101	30,597	15	8,205	22,377
2014	8,826	3	4,616	228	4,388	4,207	33,041	15	8,678	24,348
2015	8,930	3	4,675	272	4,403	4,252	34,075	15	9,268	24,792
2016	8,987	3	4,693	305	4,388	4,291	35,790	15	9,795	25,980
2017	9,029	3	4,744	351	4,393	4,282	36,470	15	10,380	26,075
(비율)	(100.0)	(0.03)	(52.5)	(3.9)	(48.7)	(47.4)	(100.0)	(0.04)	(28.5)	(71.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018.7.16. 인출).

이를 시도별로 보면,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 모두 경기도가 가장 많다. 국공립 1,158개원, 사립 1,100개원으로 총 2,258개원이다. 그 다음으로는 공립유치원은 경북이 462개원, 전남 436개원, 경남 418개원으로 많지만, 사립유치원은 서울이 671개원, 부산 318개원, 경남 272개원, 대구와 인천이 각각 266개원, 265개원 순으로 공립과 사립 유치원 분포가 다소 상이하다(표 II-2-8 참조).

학급 수도 경기도가 국공립 2,831개, 사립 7,846개, 그 다음으로 서울이 각각 788개, 3572개로 많다. 이 외에 국공립은 경남과 경북, 전남과 전북, 충남과 충북 등 시도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사립유치원은 경남이 1,771개, 부산 1,744개,

대구 1,624개, 인천 1,626개, 경북 1,401개 순이다(표 II-2-8 참조).

2) 취원아 수

유치원 총 원아수는 2017년 기준 694,631명으로 국공립 172,521명, 사립 522,110명으로 사립유치원 이용 원아가 공립보다 3배 정도 더 많다(표 II-2-7 참조). 2014년부터 시작된 정부 부처와 시도교육청 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전액 국고(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공립유치원은 2008년 118,879명에서 2009년 125,305명으로 증가한 이후 2012년까지 12만 5천명 선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13년 14만명 선까지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16만명, 2016년에는 17만 명까지 늘어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08, 2009, 2012, 2013, 2015, 2016). 최근 5년간 유치원 유아 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13년에 시행된 누리과정 지원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2014년부터 시작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누리과정 예산 책임 논란으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지원을 중단하면서 어린이집 이용 유아가 유치원으로 이동한 것도 유치원 유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2-7 유치원 취원아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국공립			사립
		소계	국립	공립	
2008	537,822	119,128	249	118,879	418,694
2009	537,361	125,536	231	125,305	411,825
2010	538,351	126,577	236	126,341	412,010
2011	564,594	126,095	240	125,855	438,739
2012	613,523	127,347	226	127,121	486,402
2013	657,963	142,052	225	141,827	516,136
2014	657,963	148,269	258	148,011	504,277
2015	682,553	161,339	256	161,083	521,214
2016	704,138	170,349	258	170,091	533,789
2017	694,631	172,521	249	172,272	522,110
(비율)	(100.0)	(24.8)	(0.04)	(24.8)	(75.2)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018.7.16. 인출).

시도별 학생 수도 경기도 국공립 46,146명, 사립 148,153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서울로 국공립 15,003명, 사립 73,984명이다. 이 외에 국공립은 경남, 경북, 전남, 충남, 인천이 1만명이 넘고, 사립은 경남, 부산, 대구, 인천 등이 3만명을 상회한다(표 II-2-8 참조).

▮ 표 II-2-8 ▮ 시도별 유치원 및 학급, 유아 수: 2017년 기준

단위: 개원, 개, 명

구분	유치원			학급			학생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전체	4,747	4,282	9,029	10,395	26,075	36,470	172,521	522,110	694,631
서울	209	671	880	788	3,572	4,360	15,003	73,984	88,987
부산	99	318	417	341	1,744	2,085	6,924	38,929	45,853
대구	104	266	370	311	1,624	1,935	6,415	32,521	38,936
인천	165	265	430	491	1,626	2,117	10,078	33,931	44,009
광주	127	191	318	239	1,040	1,279	4,379	20,275	24,654
대전	97	172	269	256	1,019	1,275	4,766	20,301	25,067
울산	110	120	230	196	683	879	3,897	15,674	19,571
세종	50	3	53	321	13	334	5,117	253	5,370
경기	1,158	1,100	2,258	2,831	7,846	10,677	46,146	148,153	194,299
강원	262	113	375	448	540	988	6,634	10,804	17,438
충북	249	96	345	546	513	1,059	8,491	9,860	18,351
충남	371	137	508	646	924	1,570	10,122	18,120	28,242
전북	365	171	536	602	1,020	1,622	8,407	17,361	25,768
전남	436	117	553	788	623	1,411	10,675	10,035	20,710
경북	462	248	710	712	1,401	2,113	10,962	28,874	39,836
경남	418	272	690	737	1,771	2,508	11,694	39,953	51,647
제주	96	22	118	142	116	258	2,811	3,082	5,89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7).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018.7.16. 인출).

3) 공급과 이용

유아 수와 유치원 이용 유아수를 이용하여 시군구별 교육 이용률을 산출하고, 이를 각 시도별 평균과 최대, 최저치를 살펴보았다(표 II-2-9 참조).

유치원 이용률은 2017년 평균 45.0%로 시군구 중 최소 지역은 21.0%, 최대 지역은 74.4%이다. 시군구에 따라 50%p 이상 차이가 난다. 시군구 중 유치원 이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예천군이고,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오산이다(부록

표 II-2-1 참조).

한편, 국공립 이용률은 전국 평균 13.6%이고 시군구 중 최소 지역은 2.4%, 최대 지역은 60.2%이다(표 II-2-9 참조). 시군구 간에 58%p 가까이 차이가 난다. 시군구 중 최소 지역은 서울 도봉구이고, 최대 지역은 청송군이다(부록 표 II-2-1 참조).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은 전국 평균 32.3%이다. 시군구 중 최소 지역은 5.6%, 최대는 100%으로(표 II-2-9 참조), 최소지역은 부산 사상구이고, 최대는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 전북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과 전남 강진군, 신안군, 곡성군, 경북 울진군과 군위군, 청송군, 경남 하동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등이다. 주로 유아 수가 적고 사립유치원이 진입을 꺼리는 군지역이 대부분이다(부록 표 II-2-1 참조).

표 II-2-9 시·도 및 시군구 전체 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2017년 기준

단위: %

구분	이용률			국공립 이용률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전체	45.0	21.0	74.4	13.6	2.4	60.2	32.3	5.6	100.0
서울	39.4	24.6	55.0	6.6	2.4	10.9	16.9	6.0	26.7
부산	55.7	32.4	67.8	8.4	3.7	21.8	15.1	5.6	38.7
대구	61.0	42.8	65.4	10.0	6.0	21.1	16.5	10.1	33.3
인천	53.1	39.4	60.5	12.2	4.9	31.9	22.9	10.1	60.5
광주	56.6	42.8	65.7	10.0	8.0	14.8	17.8	14.1	24.6
대전	58.4	46.5	63.7	11.1	9.4	13.4	19.0	15.0	22.7
울산	55.1	49.6	63.6	11.0	7.8	14.4	19.9	12.2	28.1
세종	42.8	42.8	42.8	40.7	40.7	40.7	95.3	95.3	95.3
경기	34.3	24.6	74.4	8.2	6.0	21.1	23.8	13.6	71.9
강원	46.9	24.3	57.8	17.9	9.5	48.1	38.0	20.2	100.0
충북	26.4	23.0	57.5	12.2	13.8	39.3	46.3	37.6	100.0
충남	34.2	25.8	60.5	12.2	9.7	34.7	35.8	18.7	97.4
전북	38.3	31.7	58.6	12.5	11.3	48.6	32.6	19.3	100.0
전남	43.0	23.8	57.1	22.1	13.9	47.3	51.5	32.3	100.0
경북	50.4	21.0	74.1	13.9	9.3	60.2	27.5	14.2	100.0
경남	40.2	23.6	59.8	9.1	8.5	39.2	22.6	14.1	100.0
제주	28.7	23.5	30.4	13.7	13.1	15.6	47.7	43.1	66.6

주: 이용률= 유치원 이용 유아 수/전체 유아 수(주민등록연령 기준 4-6세)*100
 국공립 이용률=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 수/ 전체 유아 수(4-6세)*100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 수/전체 유치원 이용 유아 수*100
 자료: 행정안전부(2017).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27.101.213.4/> 2018.7.16. 인출).
 한국교육개발원(2017).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018.7.16. 인출).

III

어린이집·유치원 수급 정책과 현황

1. 보육수급계획
2. 유아수용계획
3. 시사점



Ⅲ. 어린이집·유치원 수급 정책과 현황

제3장에서는 보육수급계획과 유치원수용계획 관련 법 및 제도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수급계획과 시도교육청의 유아수용계획 관련 사항을 살펴보았다.

1 보육수급계획

1절은 보육수급계획 수립 배경을 살펴보고 법적근거 및 기준 등을 검토하였다. 이 외에 보육수급계획 수립의 근거로 활용되는 보육수급 분석기준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인가기준 등을 살펴보았다.

가. 개요

보육 수급계획에 관한 내용이 보육사업안내 상에 처음 언급된 것은 2000년부터이다. 1991년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1996)에서 저소득층 자녀 전체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향후 일반 보육대상 아동 전체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지원 시설확충 사업이 추진되었다(보건사회부, 1992). 그 결과로, 보육시설 수는 1991년 3,690개소에서 1996년 12,098개소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8a: 2).

1995년에는 향후 3년(1995~1997년) 간 보육시설 7,590개소를 확충하여 저소득층 자녀 등 요보육대상 아동의 보육기반을 완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보건사회부, 1995). 그러나 이 계획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보다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에 소규모 민간 보육시설 등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보육료를 현실화(장기적으로 자율화)한다는 등 민간의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¹¹⁾이 추진되어 민간어린이집이 우후죽순 식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보건사회부, 1995)¹²⁾. 이에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공급하고, 보육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0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00)를 통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시 보육수요 및 기존 시설설치 현황 등을 감안하여 보육아동 수급계획 등을 사전에 수립하고, 민간 등 보육시설 신고 수리 시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나. 법적 근거¹³⁾

보육수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리 주체 및 방법 등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8)¹⁴⁾.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보육계획에는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보육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

11) 정부는 국민연금기금 용자사업을 실시하여 민간보육시설 확충을 유도함(보건사회부, 1995).

12) 민간보육시설은 1991년 1,237개소에서 1997년 6,388개소, 가정보육시설은 동기간 동안 1,931개소에서 5,887개소 증가함(보건복지부, 2018a).

13) 보건복지부(2018b). 보육사업안내 참고하여 작성.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077&efYd=20181224#0000> 2018.7.15. 인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8)¹⁵⁾.

이 외에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8b: 28)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계획 수립 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영유아보육법 제26조)을 포함하여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이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어린이집 평가인증 목표율을 정하고, 해당 지역 어린이집의 수급 현황을 분석하여 보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이 난립하거나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인가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수급현황 분석 및 이용권역 설정 시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생활권 등 해당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시군구 단위 내에서 인가제한권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보육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b: 29).

다. 어린이집 수급분석

1) 보육수요 산출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보육수요 산출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보건사회부, 1991). 그러나 시기별로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에 따라 산출방법을 달리 적용하였다.

1991년에는 보육 대상을 0~5세 취업모 아동 중 집안에서 양육이 가능한 아동을 제외한 실 보육대상 아동으로 보았고, 이들을 다시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 아동으로 구분하여 보육수요율을 산출하였다. 당시 저소득층 아동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한 빈곤율(평균 가구소비지출의 50% 이하) 12.1%를 적용하고, 저소득층 지역은 국공립보육시설 또는 비영리민간보육시설, 일반지역은 기타 민간보육시설 80%, 가정보육시설 20%를 기준으로 보육시설 수요를 추정하였다¹⁶⁾(보건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596&efYd=20180921#0000> 2018.7.15. 인출).

16) 1995년 인구 및 주택조사 시 약 150만 가구 대상으로 전국 및 지역별로 보육수요를 재 측정할 바 있음(보건사회부, 1995: 9).

사회부, 1991: 8~9). 이후 2000년까지는 취업모의 0~5세 아동¹⁷⁾에 한국행동과 학연구소가 발표한 탁아요구비율(보육요구비율) 56.4%를 적용하여 보육수요를 산출하였다(보건복지부, 2000: 13).

2003년부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육수요율을 산출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도록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산정방법을 안내하기 시작하였다. 보육대상은 0~5세 전체 영유아이며, 보육수요율은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2003년 보육수요율은 200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2006년은 200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2010년은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발표한 보육수요율을 적용한 산출방법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03, 2006, 2010, 2013b, 2014b, 2015b, 2016b).

전국 보육실태조사(서문희 외, 2002, 2005, 2009, 2012)¹⁸⁾는 보육수요율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발표하여 왔다.

먼저 연도 및 연령별 보육수요율을 보면, 조사 시기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보육수요율도 상승하고, 3세를 기점으로 다시 떨어진다(표 III-1-1 참조).

표 III-1-1 연도 및 연령별 보육수요율

구분	단위: %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2004	10.1	25.4	57.7	64.8	48.7	29.5
2009	23.1	43.1	66.0	57.0	44.0	33.2
2012	30.1	74.7	84.7	49.7	39.4	29.9

자료: 서문희 외(2005).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411.

서문희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p.504.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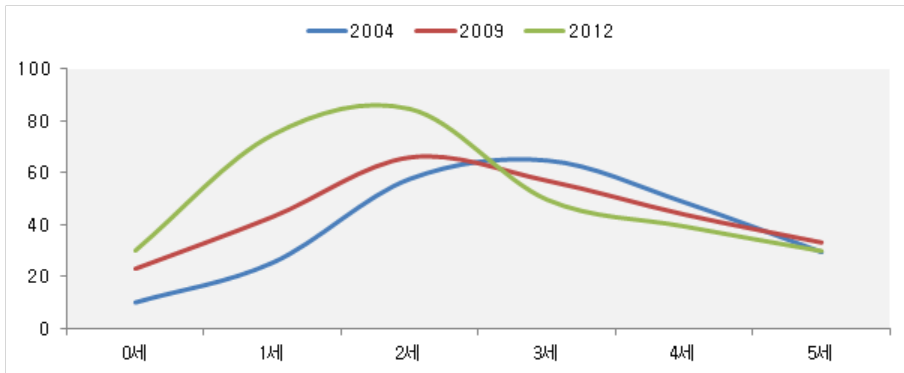
한편, 변곡점이 되는 연령은 2004년에는 3세였으나, 2009년과 2012년은 2세로 빨라져서 어린이집 이용 연령이 하향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세 이상 유아의 보육수요율 감소가 두드러진다. 이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대상이 확

17) 여성경제활동 참가율×모의 적생아 수를 적용함. 2000년에는 25~39세 여성경제활동참가율(1999년 52.8%, 2000년 53.4%, 2001년 53.0%)를 적용함(보건복지부, 2000: 13).

18) 보육실태조사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총 4회 실시됨. 2004년, 2009년, 2012년 보육실태조사는 조사문항과 산출방식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보육수요율 산출하여 음. 반면 2015년 보육실태조사는 2012년과 동일하게 보육수요 관련 문항을 조사표에 수록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 보고서 보육수요율은 미제시함.

대되고, 2012년에 시행된 5세 누리과정 등으로 유치원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수요가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III-1-1 참조).

■ 그림 III-1-1 ■ 연도 및 연령별 보육수요율: 2004, 2009, 2012년



자료: <표 III-1-1>을 그림으로 제시함.

<표 III-1-2>는 지역규모별 보육수요율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영아는 2004년과 2012년 모두 읍면지역일수록 보육 수요가 높지만, 2009년에는 중소도시에서 높은 보육수요율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유아는 2009년까지 읍면지역일수록 보육수요가 높지만, 2012년에는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중소도시보다 높았다.

■ 표 III-1-2 ■ 지역규모 및 연도별 보육수요율

단위: %

구분	2002		2004		2009		2012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전체	25.0	42.7	32.4	45.1	44.1	44.2	63.2	39.7
대도시	-	-	30.2	42.2	41.0	40.3	57.9	41.5
중소도시	-	-	31.6	43.9	46.0	44.6	66.4	35.8
읍면지역	-	-	42.6	63.8	45.6	54.0	68.6	41.2

주: 2004년, 2009년은 중기 보육수요율을 제시함.

중기수요율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는 질문에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이용 시기를 물어 1년 안에 보내겠다는 경우 수요로 간주함.

자료: 보건복지부(2003). 보육사업안내. 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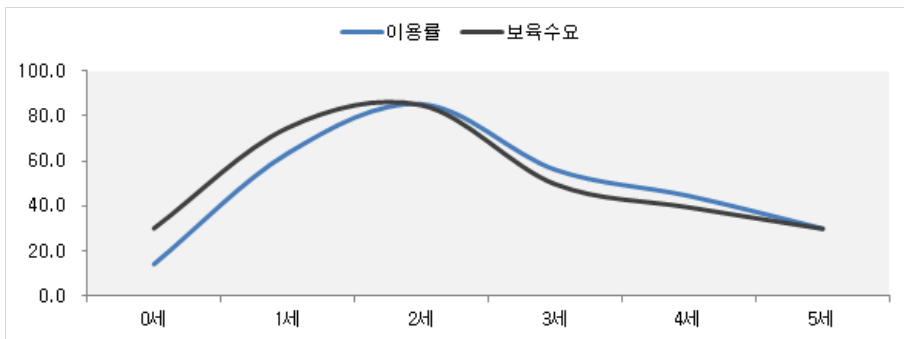
서문희 외(2005).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411.

서문희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p.505.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507.

보육수요는 향후 어린이집 이용 계획에 기반하여 산출된 수치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실제 이용률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림 III-1-2]에 제시한 바와 같이, 0~2세는 실제 이용률보다 수요가 높고 3~5세는 반대로 낮다. 이는 보육수요 조사 시 향후 자녀가 다니기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하도록 문항이 구성되어 있어 응답 시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들이 현실 여건과는 상관없이 미래에 자녀를 보내기를 희망하는 기관, 특히 유치원을 선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그림 III-1-2 ■ 어린이집 이용률과 보육수요: 2012년



자료: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506 재구성.

2) 수급분석

정부는 어린이집 인가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육수급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급분석 시 이용권역 설정, 정원충족률, 이용률 등을 산출하여 활용한 바 있다¹⁹⁾. 어린이집 이용권역은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19) 보건복지부는 2016년까지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다음의 보육수요와 보육수요율 산출방식을 안내하였으나,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김은설 외, 2016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에서 보육수요율 산출하지 않았거나, 조사결과를 누락함에 따라 보육수요율 산출방식을 전면 수정하였음.

보육수요충족률은 보육공급(정원) 대비 보육수요를 의미한다. 여기서 보육수요는 이용권역 내 보육대상 아동 수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향후 이용할 것으로 추계되는 아동의 비율을 말한다. 보육수요와 보육수요율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2016).

- 보육수요 = 이용권역내 보육대상 아동 수 × 보육수요율
 = <주민등록상 영아(0~2세) 수 × 영아의 보육수요율> +
 <주민등록상 유아(3~5세) 수 × 유아의 보육수요율>
- 보육수요율 = 6세미만 취학전 영유아의 수(A) 기준
 현재 어린이집 이용 아동(B)과 향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으로 추계되는 아동(C)의 비율<(B+C)/A>

을 주로 이용하는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며, 읍면동 단위를 세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장이 생활권 등 해당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시군구 단위 내에서 권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b: 34).

인가제한 판단 시 적용 가능한 기준인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이용권역 내 어린이집별 정원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현원)의 비율이며, 어린이집 이용률은 이용권역 내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수(A)를 기준으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B)의 비율(B/A)을 말한다(보건복지부, 2018b: 34).

이 외에 유치원 수용계획에 따른 공·사립유치원 증설 및 폐원 계획, 유치원 취원 아동 수 취원을 등을 고려하고, 중장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주택 재개발, 도시계획 등에 따른 어린이집 공급계획과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정원 및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시설의 정원, 법령(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시설, 지하 또는 4층 이상에 설치된 어린이집, 건물 일부를 사용하면서 어린이집을 2층 이상에 설치한 시설 등)에 따라 변경인가가 제한되는 시설의 정원 등을 반영하여 인가제한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b: 34).

3) 보육수급계획 수립 현황

보육계획 수립 시 보육수급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각 시군구별로 보육수급계획 수립 현황을 조사하였다. 2018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35곳에서 보육수급계획을 수립하였고, 시도별 중에서는 울산 소재 시군구 전체가 수급계획을 수립하였다. 인천, 광주, 대구, 부산도 대부분 계획하고 있고, 강원, 전북, 경남은 수급계획 수립 비율이 저조하다(표 III-1-3 참조).

표 III-1-3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 현황

단위: 개,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25	16	8	10	5	5	5	1	31	18	11	15	14	22	23	18	1
수립	16	13	6	9	4	3	5	-	14	7	6	11	6	13	15	7	-
비율	64.0	81.3	75.0	90.0	80.0	60.0	100.0	0.0	45.2	38.9	54.5	73.3	42.9	59.1	65.2	38.9	0.0

자료: 각 시군구청(2018), 보육사업 시행계획 및 보육수급계획 내부자료.

라. 어린이집 인가

가) 개요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 인가는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평가인증률, 기타 등의 현황 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인가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b).

보육사업 초창기에는 객관적인 인가 판단기준 없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신고·수리하도록 하였으나, 2006년부터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보육수급산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나) 인가 판단기준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8b: 28)는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별 정원이 보육수요보다 많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율이 전국 및 각 시도 평가인증률 미만이거나 자체 수립한 평가인증 목표율 미만인 경우 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육수요 대비 공급이 100%를 초과하고, 정원충족률이 100% 미만인 경우, 또는 평가인증률이 전국 평균이나 목표율보다 낮은 경우이다.

다)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의한 인가(변경인가 포함) 제한 금지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의한 인가를 제한할 수 없다. 또한 인가제한 기준일 이전에 시행규칙 제4조의3에 의해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을 하였고, 상담 시 설정한 유효기간 이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에도 인가를 제한할 수 없다. 재개발, 토지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지 후 동일 지역에서 신규 인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인가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8b: 29).

라) 인가제한 시 주의사항

정부는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다음의 6가지 인가제한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표 III-1-4>에 제시하였다.

▣ 표 III-1-4 ▣ 인가제한 시 주의사항

내용
<p>첫째, 인가제한 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p> <p>둘째, 신규 인가를 제한하면서 어린이집의 종류를 선별하여 신규인가를 허용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인가제한 지역에서 법인어린이집의 인가를 허용하거나,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을 인가하면서 동일 인가권역 내 민간·법인어린이집의 인가를 제한해서는 안된다.</p> <p>셋째, 신규인가 제한 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증가는 불가하나, 어린이집의 폐쇄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어린이집 동일 이용권역 내 동일 대표자가 설치·운영 중인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폐지한 어린이집의 정원 내에서 나머지 어린이집의 증원은 허용한다.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총족률이 전국 또는 시도 정원총족률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등 수요를 고려하여 증원을 허용하도록 한다.</p> <p>넷째, 어린이집 간 거리 제한 또는 공동주택 세대수를 기준으로 인가 제한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입주민 대상으로 6세 미만 보육 대상 아동수를 조사한 후, 이용권역의 보육수요율을 적용하여 보육수요를 산출하고, 의무 어린이집의 정원을 감안하여 신규 인가시설의 정원을 산정하는 등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p> <p>다섯째, 법적 근거 없이 건물의 용도 등을 이유로 인가를 허용하는 사항이다.</p> <p>여섯째, 신규인가가 제한된 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총족률이 전국 평균치(매년도말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허용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향후 보육수요의 증가 전망, 어린이집 평가인증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범위는 어린이집 정원총족률 전국 평균치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p>

자료: 보건복지부(2018b). 보육사업안내. pp.29-30.

2 유아수용계획

2절은 유아수용계획의 법적근거 및 기준을 알아보고,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아수용계획 및 유치원 취학수요조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개요

정부는 공립유치원 증설 및 사립유치원 인가 제한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제17조의2를 개정하여 유아수용

계획 및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실시를 의무화 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8)²⁰⁾.

유아수용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2013년 1차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년에는 2차, 2019년에는 3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인구 이동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3년 마다 실시하는 수요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치원 취학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2015).

나. 법적근거

유치원 설치에 유아교육법 제8조에 법적근거를 둔다. 동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은 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설립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와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타 법 또는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8)²¹⁾.

이는 2012년 3월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의 설립·인가 방식이 이전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전환된 것이며, 예외적 금지 조항에 유아수용계획이 포함되었음을 의미한다.

유치원 설치와 관련하여 유아수용계획 수립은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교육감이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3년마다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학권역은 취학 대상 유아의 거주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취학 대상 유아는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다. 한편 유치원으로 전환, 통폐합의 경우는 수요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8)²²⁾.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유아수용계획수립 시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결

20)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아교육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1641&efYd=20180209#0000> 2018.7.15. 인출).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아교육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1641&efYd=20180209#0000> 2018.7.15. 인출).

22)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아교육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150&efYd=20190101#0000> 2018.7.15. 인출).

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취학 권역내 유치원 취학수요가 전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취학수요에 부합하는 공립유치원의 신·증설, 사립유치원 설립, 변경 인가를 할 수 있다. 또한 취학 권역내 유치원 취학 수요가 전체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나 유치원 설립유형에 따라 수요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다.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유치원 취학수요조사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법적 근거를 둔다. 동법에 의하면, 교육감은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시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와 취학 희망 유치원 유형으로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공립 또는 사립유치원 중 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되는 유치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법정정보센터, 2018)23).

표 III-2-1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지침

구분	내용
조사 시기	- 유아수용계획 수립 전(3년마다 또는 필요시)
조사의 지역적 범위	- 취학권역별 실시 원칙
조사 대상	-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0세~만5세(만0세~만4세 권장) 영유아 보호자
조사 항목	-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 및 취학 희망 유치원의 유형 - 기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조사에 따른 요청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감의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조사 방법	-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하되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일반적인 통계조사의 신뢰수준과 오차 범위 내**에 있어야 함 *취학권역내 취학 수요조사 대상자 수가 표본 수보다 적은 경우(예 : 표본 수가 500명인데 전체 취학 수요조사 대상자 수가 500명 미만인 경우) 등(예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 범위내) - 필요시 전문조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3). 유아수용계획 수립 지침-유치원 취학수요조사 포함-. 내부자료.
양미선 외(2016).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53.

23) 국가법정정보센터 유아교육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150&efYd=20190101#0000> 2018.7.15. 인출).

이 외에도 조사시기와 조사의 지역적 범위, 조사대상, 조사항목, 조사에 따른 요청, 조사방법 등의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지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시기는 유아수용계획 수립 전에 실시해야 하며, 조사의 지역적 범위는 취학권역을 기준으로 하고,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만 0~5세(0~4세 권장) 영유아 보호자를 조사대상으로 해야 한다. 조사항목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유치원 취학희망 여부와 취학희망 유치원의 유형으로 구성하며, 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표 III-2-1 참조).

양미선 외(2016: 54)는, 유치원 취학조사는 강원도교육청에서만 2014년에 실시하였고,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2013년에 실시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에 따라 3년 뒤인 2016년에 실시한 조사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자료 제출 거부로 조사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라. 학급 편성기준

유아교육법 제12조는 유치원의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휴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3조는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에 특히 필요한 경우 원장은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조는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법정정보센터, 2018)²⁴).

앞서 살펴본 법적근거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매년 학급당 원아 수를 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표 III-2-2>는 2018년 기준 시도교육청별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기본과정의 경우, 만3세는 학급당 15~20명으로 지역 간에 5명 정도 차이가 난다.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6개 지역의 학급당 아동수가 15명으로 가장 적다. 경남은 공·사립 간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여 공립 16명, 사립 19명으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아교육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1641&efYd=20180209#0000> 2018.7.15. 인출).
유아교육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150&efYd=20190101#0000> 2018.7.15. 인출).

로 편성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고, 제주가 학급당 20명으로 가장 과밀 학급이다. 경북 3세 학급도 2017년까지 공립과 사립의 학급편성 기준을 달리 제시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만4세는 학급당 19~26명 사이에 분포하며, 전북이 학급당 19명으로 가장 적고, 부산이 26명으로 원아 수가 많아 다른 연령에 비해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다. 만5세는 학급당 23~28명 사이에 분포한다. 전북과 전남이 학급당 23명으로 가장 적고, 부산, 대구, 인천 등은 학급당 28명으로 원아 수가 가장 많다(표 III-2-2 참조).

혼합연령은 단일연령보다 높은 학급당 원아수가 편성되어 있다. 경기도는 단일연령별 학급 편성기준과 혼합연령 학급 편성기준이 동일하고,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은 연령과 상관없이 혼합연령 편성기준이 동일하다. 나머지 지역은 만3~4세, 만3~5세, 만4~5세 순으로 학급 당 유아 수가 많다(표 III-2-2 참조).

표 III-2-2 | 시도교육청별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 2018년

단위: 명

구분	기본과정			방과후과정			혼합연령		
	만3세	만4세	만5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3~4세	만4~5세	만3~5세
서울	16	22	26	20명 내외			22	22	22
부산	18	26	28	18	26	28	22	26	24
대구	18	24	28	18	24	28	20	26	24
인천	18	24	28	20명 내외			22	22	22
광주	18	22	25	18	22	25	22	22	22
대전	15	23	27	15	23	27	23	23	23
울산	18	24	26	18	24	26	24	24	24
세종	15	20	25	15	20	25	22	24	23
경기	16	22	26	16	22	26	16	22	20
강원	16	22	24	20명 내외			16	20	18
충북	15	20	24	15	20	24	20	20	20
충남	15	20	25	15	20	25	25	25	25
전북	15	19	23	15	19	23	16	20	16
전남	15	20	23	15	20	23	17	21	18
경북	16	22	26	16	22	26	24	24	24
경남	공립16	공립22	공립26	공립16	공립22	공립26	공립22	공립22	공립22
	사립19	사립25	사립28	사립19	사립25	사립28	사립24	사립24	사립24
제주	20	22	26	20	22	26	20	22	18

자료: 17개 시도교육청(2018). 유치원 학급 편성기준 내부자료.

3 시사점

보육수급계획과 유치원 수용계획 관련 법 및 제도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수급계획수립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지난 3년간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신설폐원 추이를 살펴본 결과를 근거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 및 시군구가 보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보육수급 분석을 실시하도록 중앙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보육수급계획을 수립한 시군구는 2018년 기준 전국 228개 중 135개 지역으로 59.2%에 해당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수급계획에 기초하여 민간어린이집의 인가 판단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 지역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인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앙 정부가 시도 및 시군구의 보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어린이집을 인가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육실태조사 시 보육수요율 산출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보육수급 산정방식을 안내하여 왔다. 보육수급 산정 시 사용한 보육수요율은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2015년까지는 2004년과 2009년,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반면에 2016년부터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산출방식 자체를 변경하였다. 이는 2015년 보육실태조사에서 보육수요율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5년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의 조사표를 살펴보면, 보육수요 관련 문항이 수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조사는 실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조사 결과 분석 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산출 결과의 신뢰도 문제인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최근 도시개발 등으로 인구 이동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육수요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치원 취학 수용조사의 지침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유치원 취학수용조사 지침에 따르면 조사시기는 3년이며, 지역적 범위는 취학권역별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조사대상은 만 0~5세, 조사항목은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와 취학 희망 유치원 유형 등으로 구성하며, 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로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의 표본추출이나 조사방법, 조사시기 등을 보면 지역에 따라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다. 17개 시도 유치원 취학수요조사의 일관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사 기준의 개정이 시급하다.

넷째, 보육수급계획 및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시도 및 시군구와 시도교육청 간에 상호 조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협의하도록 한다. 일부 시군구는 보육수급계획 수립 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있고, 일부 시도교육청도 시도청에서 어린이집 수와 이용 아동수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관기관 간의 이해관계로 정보제공이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IV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정책 및 진단

1. 중앙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증설) 계획
2.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증설) 계획
3. 시사점



IV.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정책 및 진단

제4장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즉,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증설) 계획을 살펴보고 진단하였다.

1 중앙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증설) 계획

1절은 중앙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 계획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확충 규모 및 연차별 계획, 지원예산 규모 등을 정리하였다.

가. 국공립어린이집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

정부는 국정과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목표 달성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총 2,25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연차별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450개소씩,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간은 250개소씩 확충하게 된다(표 IV-1-1 참조).

이를 확충 방법별로 보면, 신축은 550개소로 전체 사업량의 1/4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환이나 임차 등의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관리동 전환 방식이 총 1,125개소,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장기임차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거나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한 민간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장기 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장기임대 등 575개소이다(표 IV-1-1 참조).

표 IV-1-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2018~2022년

단위: 개소(%)

구분	전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2,250(100.0)	450	450	450	250	250
신축	550(24.4)	102	112	112	112	112
관리동 전환	1,125(50.0)	225	225	225	25	25
장기임대 등	575(25.6)	123	113	113	113	113

자료: 보건복지부(201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내부자료.

2018년도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량, 예산 등을 정리한 것이다.

표 IV-1-2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단위: 개소, 천원

시도	합계		국공립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국공립 장기임차		장애아전문		기자재비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계	740	35,283,453	56	14,856,973	287	14,971,723	27	2,719,950	3	894,633	367	1,840,174
서울	103	6,182,991	15	3,828,991	40	2,114,000	-	-	-	-	48	240,000
부산	46	1,394,022	1	174,625	21	1,008,223	1	105,000	-	-	23	106,174
대구	58	1,980,000	2	250,000	25	1,375,000	2	210,000	-	-	29	145,000
인천	68	2,976,694	5	1,181,694	28	1,520,000	1	105,000	-	-	34	170,000
광주	6	180,000	-	-	3	165,000	-	-	-	-	3	15,000
대전	14	620,000	-	-	3	165,000	4	420,000	-	-	7	35,000
울산	28	940,000	-	-	12	660,000	2	210,000	-	-	14	70,000
세종	20	1,412,020	2	922,020	8	440,000	-	-	-	-	10	50,000
경기	191	6,753,233	4	1,079,700	87	4,494,000	2	210,000	2	475,533	96	494,000
강원	15	1,137,612	4	832,612	3	165,000	1	105,000	-	-	7	35,000
충북	18	1,191,879	2	611,879	4	220,000	3	315,000	-	-	9	45,000
충남	25	1,171,010	1	461,010	13	655,000	-	-	-	-	11	55,000
전북	22	1,221,010	1	461,010	6	285,000	4	420,000	-	-	11	55,000
전남	54	4,406,961	11	3,341,961	14	770,000	2	160,000	-	-	27	135,000
경북	14	1,019,092	2	609,092	3	165,000	2	210,000	-	-	7	35,000
경남	48	1,982,829	6	1,102,379	14	605,500	2	144,950	-	-	26	130,000
제주	10	714,100	-	-	3	165,000	1	105,000	1	419,100	5	25,000

주: 1) 기준보조율: 국비 50%, 지방비 50%

2) 보조구분: 자본

자료: 보건복지부(2018). 국공립어린이집 8차 변경 내시 내부자료.

2018년도 총 사업량은 국공립 신축 56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287개소, 국공립 장기임차 27개소, 장애아전문 3개소로 총 373개소가 설치되고, 367개소에는 기자재비를 지원한다. 시도별로 보면, 국공립 신축은 서울 15개소, 전남 11개소로 많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경기가 87개소로 많다. 국공립 장기임차는 시도별

로 1~4개소로 아직 사업 초기단계로 실적량이 많지 않다(표 IV-1-2 참조).

2) 확충 방법²⁵⁾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법은 신축, 기존 시설의 국공립 전환,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 등이 있으며, 지원대상이나 지원액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공립시설 신축

지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 지역, 공동주택단지(500세대 이상),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산업단지(중소기업 밀집지역), 국방부 군관사지역,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 단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지원단가는 1㎡당 1,397천원이며(국비, 지방비 포함), 개소당 국비최대지원액은 461,010천원, 개소당 561㎡까지 지원한다. 예산범위 내에서 660㎡까지 탄력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국비 최대 지원액은 461,010천원이다(보건복지부, 2018b: 394).

나) 기존 시설의 국공립 전환 등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어린이집 또는 기존건물을 매입·기부채납 받거나 매입·기부채납 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존 시설의 국공립 전환하는 경우에는 건물매입비 및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461,010천원까지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8b: 395).

다)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

장기임차 방식 전환은 공동주택내 의무어린이집(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설치된 의무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자가인 민간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장기임차를 받아서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시설유형별 지원

25) 보건복지부(2018b). 보육사업안내 참고하여 작성함.

범위는 전문가의 공사 견적가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최대 지원액은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개소 당 110,000천원(국비, 지방비 포함)이며,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개소당 210,000천원이다(보건복지부, 2018b: 399).

라)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장애아전문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나 사회복지법인이 부지 및 건물을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추천을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 2018: 396). 시·도에서는 보육수요 및 장애아전문(통합)시설의 운영현황을 감안하여, 전문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천해야 하며, 최근 3년 이내 전문시설 신축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갑작스런 장애아 보육수요 증가, 기존 전문시설 폐원 및 휴지 등의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보건복지부, 2018: 398). 지원대상 후보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점검 후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지원단가는 개소당 673㎡까지이며, 제곱미터 당 지원단가는 1,397,000원, 국비 지원한도액은 470,090천원이다(보건복지부, 2018b: 399).

나. 공립유치원

1) 증설 규모

교육부는 2018년 2월 문재인정부의 핵심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을 위해 2022년까지 2,600개 이상 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8.12.6. 보도자료)²⁶⁾.

2018년에는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 총 497개 학급이 신·증설될 예정이다. 그 다음으로 2019년 500개원, 2020년과 2021년 각각 530개원씩, 2022년 543개원으로 총 2,600개원이 신증설 된다. 학급 수로는 2018년 10,981학급에서 총 13,084학급이 늘어난다(교육부, 2018.2.12. 보도자료). 교육

26) 교육부(2018.12.6)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조기 달성을 위한 국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을 추가 발표함.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과제를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하기 위하여 2019년 확충 학급 수를 1,080학급 수(2019년 3월 692개 학급, 2019년 9월 388개 학급)로 조정함.

부(2018) 계획대로 공립유치원이 신증설 되면, 공립 이용률이 2018년 27.4%에서 2020년 32.0%, 2021년 36.0% 2022년에는 40.0%에 도달할 수 있다.

▣ 표 IV-1-3 ▣ 연도별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

단위: 개, 개원, 명(%)

구분	2017.4월	2018	2019	2020	2021	2022
국공립 학급수	10,484	10,981	11,481	12,011	12,541	13,084
신증설 수	-	497	500	530	530	543
국공립 취학 아동수	172,521	182,461	192,461	203,061	213,661	224,337
(비중)	(24.8)	(27.4)	(29.8)	(32.0)	(36.0)	(40.0)

자료: 교육부(2018.2.12) 보도자료, 5년간 2,600학급 이상 신설로 국공립유치원 40% 달성, p.2.

유아교육법 제9조의2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등 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역의 국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 정원의 25%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공립유치원 의무 설립에 대한 관심이 낮아 설치 비율이 높지 않고, 의무 설립지역 내 국공립유치원의 의무 설립 준수를 강화하며, 시·도 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설 계획 단계에서부터 유아 배치계획을 분석하여, 초등학교와 함께 국공립유치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교육부, 2018).

또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전국 130개 개발지구, 약 127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5~6만명 규모(2,500~3,000학급)의 국공립유치원 정원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교육부, 2018).

〈표 IV-1-4〉는 2018년도 지역별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예정 학급 및 유치원 수를 정리한 것이다.

▣ 표 IV-1-4 ▣ 2018년도 지역별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예정 학급 및 유치원 수

단위: 개원, 학급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학급	497	65	10	33	17	15	6	21	53	162	6	4	32	8	2	31	24	8
유치원																		
전체	86	17	-	2	2	2	1	8	6	25	1	1	5	1	2	6	6	1
단설	31	1	-	2	-	1	1	1	6	9	-	-	2	-	1	3	4	-
병설	55	16	-	-	2	1	-	7	-	16	1	1	3	1	1	3	2	1

자료: 교육부(2018). 공립유치원 신설 건축비 등 관련 내부자료.



2018년 내 신·증설 되는 국공립유치원은 단설 31개원, 병설 55개원 총 86개원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단설 9개원, 병설 16개원 총 25개원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서울이 각각 1개원, 16개원으로 총 17개원이다. 신·증설 학급 수는 총 497학급이다. 경기도 162학급, 서울 65학급, 세종 53학급, 대구 33학급, 충남 32학급, 경북 31학급 순이다(표 IV-1-4 참조).

2) 증설 방법

또한,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을 통해 공립 유치원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립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은 병설 유치원 신·증설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는 초등학교 내 활용이 가능한 교실이나 부지에 여력이 있는 중·고등학교를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신설 유도를 위해 일반적에 대한 관리수당을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설 유치원에는 행정인력 추가 배치 등을 통해 행정 부담 완화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교육부, 2018).

〈표 IV-1-5〉는 유치원 신설 시 건축면적 당 교부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건축공사비, 기본설계비, 감리비, 비품비 등을 합산하면 건축면적 1m² 당 평균 2,059천원을 지원하게 된다.

표 IV-1-5 유치원 신설 시 건축면적(m²)당 교부기준

단위: 천원

건축공사비(A)	기본설계비(B)	감리비(C)	비품비(D)	합계 (E=A+B+C+D)
1,896	85	22	56	2,059

주: 1) (예시) 5학급의 경우 건축비 교부기준: 5학급의 건축면적 1,458m² * 2,059천원=3,057,615천원
 자료: 교육부(2018). 공립유치원 신설 건축비 등 관련 내부자료.

표 IV-1-6 유치원 전환 및 증설 지원기준

단위: m², 천원

구분	*m ² 당 단가(F)	*실당 면적(G)	*실당단가 (H=F*G)	비고
전환	659	92	60,000	백만원 단위 교부
증설	1,520	92	139,000	백만원 단위 교부

자료: 교육부(2018). 공립유치원 신설 건축비 등 관련 내부자료.

유치원 전환 및 증설 시 지원기준은 전환은 1m² 당 659천원, 증설은 1,520천원이며, 실당 단가는 각각 60,000천원, 증설 139,000천원이다.

〈표 IV-1-7〉은 유치원 학급수 및 정원수별 신설비 교부 기준과 건축비 교부단가를 정리한 것이다.

표 IV-1-7 유치원 신설비 교부기준

단위: m², 백만원

학급수 (a)	정원수 (b=*a)	교부기준		건축비 교부단가 (i=h*E/1000)
		부지면적(g=b*J)	건축면적(h=b*k)	
5	150	2,670	1,485	3,058
6	180	3,204	1,782	3,669
7	210	3,738	2,079	4,281
8	240	4,272	2,376	4,892
9	270	4,806	2,673	5,504
10	300	5,340	2,970	6,115
11	330	5,874	3,267	6,727
12	360	6,408	3,564	7,338
13	390	6,942	3,861	7,950
14	420	7,476	4,158	8,561
15	450	8,010	4,455	9,173
16	480	8,544	4,752	9,784
17	510	9,078	5,049	10,396
18	540	9,612	5,346	11,007
19	570	10,146	5,643	11,619

주: 1) 학급당 정원(i): 30명
 2) 1인당 부지면적(J): 17.8m²
 3) 1인당 건축면적(K): 9.9m²
 4) (예시) 7학급의 경우 부지매입비 교부기준(가감정가 12억, 부지면적 3,000m² 인 경우) m²당 시가(=가감정가÷예정 부지면적m²)×7학급 교부기준 부지면적 3,738m²의 범위 내에서 가감정가(12억)와 교부기준에 따른 금액(12억÷3,000m²×3,738m²=1,495,200천원) 중 적은 금액 교부
 자료: 교육부(2018). 공립유치원 신설 건축비 등 관련 내부자료.

2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증설) 계획

2절은 최근 5년 간 시도별 영유아 인구와 어린이집·유치원 공급과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중앙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계획과 별도로 각 시도 청 및 교육청이 수립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또는



공영형유치원 등의 확충 계획을 검토하고 시사점 등을 정리하였다.²⁷⁾

가. 서울

1) 영유아 인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0~6세 영유아 인구는 2017년 말 기준 504,604명이다. 출산율 하락에 따라 영유아 수는 2013년 574,126명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진행 속도도 빠르다. 연령별로는 만 5세가 78,941명으로 전체 영유아 중 15.6%를 차지하고, 1,2,3,4,6세 모두 14% 대로 비슷하며, 0세가 12.1%로 가장 적다(표 IV-2-1 참조).

▣ 표 IV-2-1 ▣ 영유아 수: 서울

단위: 개소(%)

구분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17	504,604	61,253	70,532	74,322	72,482	71,688	78,941	75,386
(비율)	(100.0)	(12.1)	(14.0)	(14.7)	(14.4)	(14.2)	(15.6)	(14.9)
2016	530,484	70,798	76,955	74,874	73,373	80,575	76,864	77,045
2015	546,824	77,668	78,187	76,152	83,046	78,850	78,745	74,176
2014	559,662	78,101	78,973	85,889	80,892	80,514	75,678	79,615
2013	574,126	78,576	88,271	82,972	82,113	76,825	80,786	84,583

자료: 행정안전부(2013, 2014, 2015, 2016, 2017). 주민등록인구통계(<http://27.101.213.4/#> 2018.8.7. 인출).

2) 어린이집·유치원 공급과 이용

가) 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소재 어린이집 수는 2017년 말 기준 6,226개소이다. 2014년 6,787개소까지 늘어났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다. 서울시가 2014년도부터 추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000 사업으로 2013년 750개소이었던 국공립어린이집이 2017년 1,274개소까지 늘어났다. 반면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출산율 하락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증가로 매년 줄고 있다(표 IV-2-2 참조).

2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제출한 시도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그렇지 못한 시도는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참고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함. 시도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증설 계획은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사립유치원 반대 등으로 공립유치원 증설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본 보고서에는 수록하지 못함.

표 IV-2-2 어린이집 수: 서울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6,226	1,274	32	116	1,939	2,592	244	29
(비율)	(100.0)	(20.5)	(0.5)	(1.9)	(31.1)	(41.6)	(3.9)	(0.5)
2016	6,368	1,071	33	131	2,054	2,824	226	29
2015	6,598	922	35	141	2,174	3,105	194	27
2014	6,787	844	36	154	2,273	3,277	176	27
2013	6,742	750	39	167	2,337	3,258	165	26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²⁸⁾

서울특별시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17년 기준 234,867명이다. 2014년 243,432명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중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74,098명으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31.5%를 차지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수와 함께 이용 아동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매년 줄고 있고 그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표 IV-2-3 참조).

표 IV-2-3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서울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234,867	74,098	1,878	5,337	97,215	42,804	12,740	795
(비율)	(100.0)	(31.5)	(0.8)	(2.3)	(41.4)	(18.2)	(5.4)	(0.3)
2016	236,550	67,240	2,005	5,848	102,575	46,284	11,800	798
2015	238,103	62,556	2,088	6,327	105,478	50,061	10,841	752
2014	243,432	59,036	2,214	6,844	111,653	52,890	10,080	715
2013	242,648	56,064	2,371	7,613	114,716	52,102	9,109	673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2017년 기준 정원충족률은 평균 87.6%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었는데도 2013년 89.7%에서 하락 추세를 보인다. 가정이 91.3%로 가장 높고, 국공립 90.8%, 민간 86.5% 이다. 국공립은 2013년 92.9%에서 2015년 88.7%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반등하고 있다. 가정도 2015년 89.5%까지 떨어졌지만 최근에서야 회복세를 보인다. 이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 속도보다 가정어린이집 폐쇄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표 IV-2-4 참조).

28) 보육통계(보건복지부, 2014, 2015, 2016, 2017, 2018) 자료는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cpi.or.kr/2018.10.5>)에서 동일하게 인출하여 4절 2장 표에서는 생략함.

표 IV-2-4 어린이집 정원총족률: 서울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단위: %	
								협동	
2017	87.6	90.8	82.9	83.8	86.5	91.3	72.2	85.7	
2016	87.5	89.8	86.2	83.1	87.0	90.7	72.6	88.4	
2015	86.9	88.7	88.2	84.6	85.9	89.5	76.7	88.3	
2014	88.4	89.3	89.9	84.6	88.3	90.2	77.7	87.0	
2013	89.7	92.9	90.6	86.9	89.5	90.0	77.4	85.6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나) 유치원

서울특별시 소재 유치원은 2017년 기준 총 880개원이고, 이중 공립유치원 209개원, 사립유치원 671개원으로 사립유치원이 3배 정도 많다. 공립유치원은 매년 늘어나지만 사립유치원은 2013년 700개원에서 감소하고 있다.

학급 수는 공립이 788개, 사립이 3,572개로 총 4,360개이다. 공립유치원은 증설로 학급 수가 증가하지만, 사립은 학급 편성 기준이 강화되고 규모가 큰 유치원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어 학급 수가 늘어나고 있다(표 IV-2-5 참조).

표 IV-2-5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서울

구분	유치원				학급			취원아 수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단설	병설							
2017	-	21	188	671	-	788	3,572	-	15,003	73,984
2016	-	21	181	677	-	749	3,570	-	15,480	75,546
2015	-	20	177	691	-	710	3,565	-	15,107	76,287
2014	-	16	169	699	-	633	3,537	-	13,552	77,643
2013	-	13	156	700	-	552	3,277	-	12,027	80,37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2016, 2017).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018.10.16. 인출).

유치원 이용 유아 수는 2017년 기준 공립 15,003명, 사립 73,984명으로 총 88,987명이다. 공립은 2013년 12,027명에서 3천명 가까이 늘어났고, 사립은 80,373명에서 7천명 정도 줄었다(표 IV-2-5 참조).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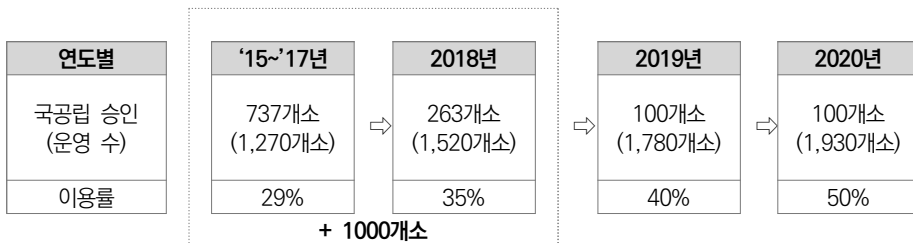
가) 개요

서울시는 중장기 보육계획과 별도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2014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000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보육 인프라 및 공보육 서비스의 개선 기반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서울특별시, 2018).

서울시의 2018년 관리동 등 다각적인 전환으로 1,000개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공감대 형성과 여건 변화를 통한 시비 부담 완화 및 민간 상생 추진, 지역 보육수요 고려하여 지역별 보육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전환 보육시설의 역량을 강화하여 공보육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등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8).

서울시가 그간 추진하여 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과 향후 계획을 보면,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737개소를 확충하였고, 2018년에는 263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총 1,000개소를 달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00개소씩 추가 확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8).

■ 그림 IV-2-1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개요



자료: 서울특별시(2018).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1000, 2018 추진계획, p.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량은 <표 IV-2-6>에 정리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는 2015년 163개소, 2016년 302개소, 2017년 272개소, 2018년 263개소이다. 확충 방법별로는 2016년에는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 전체 사업

29) 서울특별시(2016, 2017, 2018).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1000 참고하여 작성함.

량의 1/3을 차지했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공동주택 전환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비중이 크게 늘었다(서울특별시, 2018).

▣ 표 IV-2-6 ▣ 연차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량

단위: 개소

구분	합계	공동주택		기존시설 전환		기존시설 매입		신규설치		민관 연대	공공 기관
		신규	전환	민간	가정	민간	가정	신축	리모델링		
2018	263	15	130	27	24	21	28	3	6	4	5
2017	272	37	88	10	35	22	36	9	5	5	25
2016	302	42	10	12	107	13	20	23	52	1	19
2015	163	-	-	-	-	-	-	-	-	-	-

자료: 1) 서울특별시(2018).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1000, 2018 추진계획, p.5.
 2) 서울특별시(2017).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1000, 2017 추진계획, p.9.
 3) 서울특별시(2016).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1000, 2016 추진계획, p.2.

나) 확충 유형별 지원 기준³⁰⁾

서울시가 그간 추진하여 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유형별 지원기준 및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공동주택은 세대 밀집으로 보육 수요가 높고, 신축 등에 비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 전환방식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권을 5년 보장해 주었고, 2018년부터는 운영권이 종료된 후 공개경쟁에 의한 재위탁 심사에 준하여 위탁을 받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8)(표 IV-2-7 참조).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조건을 적용하였으나, 2018년에는 기준을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2015년 10년 임대 조건으로 최대 70백만원, 2016년에는 5년 이상 임대 시 최대 30백만원, 2018년에는 이 금액을 최대 90백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였다. 이 외에 2018년에는 지원조건에 계약 후 운영자의 친인척 근무 제한조건을 추가 설정하였다(표 IV-2-7 참조).

30) 서울특별시(2016, 2017, 2018).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1000 참고하여 작성함.

공동이용 시설개선비는 2015년 10년 이상 무상임대 조건으로 최대 70백만원 까지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무상임대 기간을 5년 이상과 10년 이상으로 구분 하여 지원 수준을 각각 30백만원과 70백만원으로 차등하였고, 2018년에는 지원 조건을 5년 장기임차 후 미연장 시 50%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최대 90백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하였다(표 IV-2-7 참조).

표 IV-2-7 |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지원기준 및 조건: 2015-2018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 기준	운영권 보장	-5년, 종료 후 운영권 공개경쟁	-입주자 대표회의, 기존 운영자, 자치구 간 합의하여 위탁체 선정 -5년, 종료후 운영권 공개경쟁	(좌동) -입주자 대표회의, 기존 운영자, 자치구 간 합의하여 위탁체 선정 -5년, 종료 후 재위탁 심사에 준함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최대 150만원	(좌동)	(좌동) -최대 200백만원 (5년 장기임차 후 미연장 시 50% 반납 조건)
	공동이용 시설 개선비	-최대 70백만원 (10년 이상 무상임대 조건)	-10년 이상 무상임대 :최대 70백만원 -5년 이상 무상임대 :최대 30백만원	(좌동) -최대 90백만원 (5년 장기임차 후 미연장 시 50% 반납 조건)
지원조건	-계약 위반 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	(좌동)	(좌동)	-계약 위반 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 -운영자 친·인척 근무제한

자료: 1) 서울특별시(2014).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 p.15
 2) 서울특별시(2016).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6 추진계획, p.25.
 3) 서울특별시(2017).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7 추진계획, p.18.
 4) 서울특별시(2018).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8 추진계획, p.12.

(2) 민간·가정 어린이집 전환

서울시는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 영아보육 편의를 위한 근거리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화에 대한 요구, 가정형 국공립 운영모델 마련 등을 고려하여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4). 전환 방식은 장기임차와 매입 2가지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장기임차

장기임차는 적격심의를 통해서 선정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최초 5년의 운영권을 보장한다. 2017년까지 종료 후 공개경쟁으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였다가



2018년부터는 재위탁 심의에 준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기준 시 가정 최대 50백만원, 민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부터는 시설유형이 아닌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표 IV-2-8 참조).

표 IV-2-8 민간·가정 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원기준 및 조건: 2015-2018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대상	-적격심의 통한 대상 선정	(좌동)	(좌동)	-자가 -사전적격심사 70점 이상 시설	
지원 기준	운영권 보장	-5년: 종료 후 공개경쟁	-5년: 종료 후 공개경쟁	(좌동)	-5년: 종료 후 재위탁 심사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5년 (가정)최대 25백만원 (민간)최대 75백만원 -10년 (가정)최대 50백만원 (민간)최대 150백만원	(좌동)	(좌동)	- 5년: 기준액 50% -10년: 규모에 따라 최대 200백만원 -안전환경 개선비용, 정원 증원위한 확장비용 별도 지원
	부채상환 지원금	-	-	-	- 5년: 미지원 -10년: 전세가 40% 범위
	서울형 어린이집 전환	-자기자본의 30% 무이자 융자	-10년:인센티브(임대보증금의 40%) -기타운영비 감액 상향조정(5%)	-5년 (가정)최대 25백만원 (민간)최대 75백만원 -10년 :인센티브(임대보증금의 40%)	-기타운영비 5% 범위 내 적립 가능 -‘서울시 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 적용 의무화 (일반 민간도 일정 조건 충족 시 동일 지원)
지원 조건	계약 위반	-계약 위반 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	(좌동)	(좌동)	(좌동)
	기간 만료 후	-	-민간 회귀 -재원 허용 범위 매입 추진	-민간 인가 가능 -재원 허용 범위 매입 추진	(좌동)
	친·인척 근무 제한	-	-	-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표자 및 원장 친·인척(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자료: 1) 서울특별시(2014).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 p.18.
 2) 서울특별시(2016).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6 추진계획, pp.20-21.
 3) 서울특별시(2017).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7 추진계획, pp.21-23.
 4) 서울특별시(2018).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8 추진계획, pp.14-16.

부채상환지원금 지원은 2018년부터 지원하고, 서울형어린이집은 전세가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제공한다. 민간은 5년 이상 운영하고 평가인증이 A등급 이상,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3년 이상 이용, 최근 2년간 서울시 평균 정원충족률 이상 등을 충족하면 서울형과 동일하게 지원한다(가정 미적용). 또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계약체결 후 운영자의 친·인척 근무를 제한한다(서울특별시, 2018)(표 IV-2-8 참조).

(나) 매입전환

매입 전환 방식은 운영권을 보장하지 않고, 매입비,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등 최대 25억원을 지원한다. 2016년부터 구비 부담분을 전액 감면하고 있다. 2015년에는 매도 원장이 위탁 공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지만, 2016년부터는 매도 원장도 위탁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였다(표 IV-2-9 참조).

표 IV-2-9 민간·가정 어린이집 매입전환 지원기준 및 조건 변화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 기준	-매입·리모델링비, 기자재비 포함 최대 25억원	-매입·리모델링비, 기자재비 포함 최대 25억원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매입 시 확충비 구비부담분 전액감면	(좌동)	(좌동)
지원 조건	-운영권 미보장 -위탁체 공개경쟁 -매도 원장 위탁공모 미참여	-운영권 미보장 -위탁체 공개경쟁 -매도 원장 공모참여 가능	-운영권 미보장 -위탁체 공개경쟁 -매도 원장공모참여 가능 -인가권 소멸	(좌동)

자료: 1) 서울특별시(2014).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 p.18.
 2) 서울특별시(2016).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6 추진계획, p.20.
 3) 서울특별시(2017).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7 추진계획, p.21.
 4) 서울특별시(2018).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8 추진계획, p.14.

(3) 공공기관 내, 일반건물 및 공유지 신규설치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하는 경우 건축물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였다. 또한 무상임대 및 매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여건에 따라 신규설치를 병행하였다(서울특별시, 2014: 19). 신축 또는 매입, 신규 리모델링 모두 최대 25억원을 지원하며, 연도에 따라 면적 당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2015년에는 단독 어린이집 건물인 경우에만 신축으로 인정하였고, 2016년부터 신축 복합건물



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신축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자재비는 2015년부터 일괄 최대 1억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건축물 1층, 노유자 시설에 설치가 가능하며,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나, 2018년 이후부터는 건축물 5층 이하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표 IV-2-10 참조).

표 IV-2-10 공공기관 내, 일반건물 및 공유지 신규설치 지원기준 및 조건: 2015~2018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 기준	매입	-	-최대 25억원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의 산술평균액	(좌동)	(좌동)
	신축	-단독건물 -최대 25억원 -2,650천원/㎡(500㎡ 미만) -2,550천원/㎡(500~800㎡)	-단독건물, 신축 복합건물 -최대 25억원 -2,750천원/㎡(500㎡ 미만) -2,660천원/㎡(500~800㎡)	(좌동)	-단독건물, 신축 복합건물 -최대 25억원 -2,917천원/㎡(500㎡ 미만, 2,902천원/㎡(500~800㎡) -2,820천원/㎡(800~1,000㎡) -2,732천원/㎡(1,000㎡ 이상)
	리모델링	-복합건물 -최대 25억원 -신규 1,718천원/㎡(500㎡ 이하), 1,640천원/㎡(500~800㎡) -기준: 최대 1억	-최대 25억원 -신규 1,787천원/㎡(500㎡ 이하) 1,729천원/㎡(500~800㎡) -기준: 최대 1억	(좌동)	-신축비의 65%
	기자재비	최대 1억	(좌동)	(좌동)	(좌동)
설치 조건	-건축물 1층 -노유자 시설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거리	(좌동)	(좌동)	-건축물 5층 이하 -노유자 시설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거리	

자료: 1) 서울특별시(2014).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 p.21.
 2) 서울특별시(2016).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6 추진계획, p.25.
 3) 서울특별시(2017).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7 추진계획, p.24.
 4) 서울특별시(2018).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8 추진계획, p.17.

(4) 민·관 공동연대 설치

2015~2016년에는 5년 이상 장기임차를 조건으로 지원금액에 따라 임차기간을 구분하였고, 2017년 이후에는 최소 10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있다. 민·관 공동연대 설치에 대한 비용은 신축과 리모델링 모두 최대 25억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단위면적 당 단가는 그간 인상하여 왔다. 기자재비는 사업 초기부터 일괄되게 최대 1억을 지원하고 있다(표 IV-2-11 참조).

민관연대 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설치 조건을 두고 있다. 2015년 초기에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종교 명칭, 특정 기업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출입구를 별도 설치하며, 종교활동 및 차별의 차단을 위해 표준협약서 내에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하였다. 2016년에는 어린이집 미 운영시간 중 외부인의 어린이집 공간 사용 금지 조건을 추가하였다(표 IV-2-11 참조).

표 IV-2-11 | 민·관 공동연대 설치 지원기준 및 조건: 2015~2018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 기준	운영권	-5년 -종료 후 재위탁 또는 공개경쟁 위탁	-5년 -종료 후 공개경쟁	(좌동)	(좌동)
	신축	-	-최대 25억원 -2,750천원/㎡ (500㎡미만) -2,660천원/㎡ (500~800㎡)	(좌동)	-최대 25억원 -2,917천원/㎡ (500㎡미만) -2,902천원/㎡ (500~800㎡) -2,820천원/㎡ (800~1000㎡) -2,732천원/㎡ (1,000㎡이상)
	리모델링	-1,718천원/㎡	-최대 25억원 1,787천원/㎡ (500㎡이하) 1,729천원/㎡ (500~800㎡)	(좌동)	-신축비의 65%
	기자재비	-최대 1억	(좌동)	(좌동)	(좌동)
설치 조건	공공성 확보	-공공성 훼손 명칭 사용 제한 -출입문 별도 설치 -현판에 국공립어린이집 BI -표준협약서 내 종교 활동, 차별 차단 규정	-공공성 훼손 명칭 사용 제한 -출입문 별도 설치 -현판에 국공립어린이집 BI -표준협약서 내 종교 활동, 차별 차단 규정 -미운영시간 외부인 어린이집 공간 사용금지	(좌동)	(좌동)
	건축물	-	-	-건축물 1층 -노유자 시설	-
	임차 기간	-지원 금액에 따라 임차 기간 구분	(좌동)	-최소10년이상 -지원금액 따라 임차기간 구분	(좌동)

자료: 1) 서울특별시(2014).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 p.22
 2) 서울특별시(2016).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6 추진계획, p.26.
 3) 서울특별시(2017).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7 추진계획, p.26.
 4) 서울특별시(2018).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8 추진계획, p.19.



(5)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설치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의무사업장 이외의 기업은 설치에 소극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근로복지공단 및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업무협약을 맺어 서울시와 자치구가 근로복지공단 지원 외 중소기업 부담분을 전액 지원하고 직장자녀 외 지역아동 입소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4: 23). 또한 2017년부터 지원조건으로 설치 완료 후 자치구로 기부 체납하도록 하고 있다(표 IV-2-12 참조).

표 IV-2-12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지원기준 및 조건: 2015-2018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 기준	-토지매입비 100% -건물매입비 60% -설치비 10~20% -지역아동 입소비용 수준 인건비 지원	(좌동)	(좌동)	(좌동)
지원 조건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가입 의무	(좌동)	-설치 완료 후 자치구로 기부체납	(좌동)

자료: 1) 서울특별시(2014).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 p.24.
 2) 서울특별시(2016).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6 추진계획, pp.27-28.
 3) 서울특별시(2017).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7 추진계획, pp.27-28.
 4) 서울특별시(2018).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8 추진계획, pp.20-21.

(6) 학교 유휴교실 활용 등 설치

학생 및 학급수 감소에 따른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2015년 이래 최대 5.5억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조건으로 5년 운영권을 부여하며, 종료 후 적격심사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2016년부터는 미 운영시간에 보육 아동 이외의 외부인이 어린이집 공간을 사용할 수 없고, 교직원 자녀의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며 공휴일 등 미운영 시간에 보육대상 아동 외 어린이집 공간 사용금지를 조건으로 한다(서울특별시, 2018). 2016년부터 교직원 자녀가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IV-2-13 참조).

표 IV-2-13 | 학교 유휴시설 활용 등 지원 기준 및 조건: 2015-2018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 기준	-최대 5.5억 -리모델링 및 이전 재배치비 3.5억 -환경개선비 1억 -기자재비 1억	(좌동)	-최대 5.5억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4.5억 -환경개선비 1억	(좌동)
지원 조건	-5년 운영권, 종료 후 적격심사 후 재위탁 여부 결정 -계약위반 시 비용환수	-5년 운영권, 종료 후 적격심사 후 재위탁 여부 결정 -계약위반 시 비용환수 -미운영시간 외부인 어린이집 공간 사용금지 -교직원 자녀 우선입소	-미운영시간 외부인 어린이집 공간 사용금지 -교직원 자녀 우선입소	(좌동)

자료: 1) 서울특별시(2014).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 p.26.
 2) 서울특별시(2016).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6 추진계획, p.30.
 3) 서울특별시(2017).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7 추진계획, p.29.
 4) 서울특별시(2018).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8 추진계획, pp.20-21.

4) 시사점

서울시는 그간 중앙정부나 타 시도도 추진하지 못한 대규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하였고,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법으로 신축이나 공동주택리모델링 외에도 민간 연대 차원에서 매입 및 전환, 장기임차 등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도 타 시도에 모델이 될 수 있다. 서울시가 그간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원조건이나 지원기준 등을 세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000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가정어린이집을 대거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대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간의 보육서비스의 질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공영형유치원 확충 계획³¹⁾

가) 개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재정 지원을 통하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 법인에 과반수의 개방이사를 선임하도록 하여 사립유치원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함에 있어, 유치원 운영체계를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정비하여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나) 기본 원칙

공영형유치원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준수해야 한다. 둘째, 교육연한, 학기 및 수업일, 교육 내용,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등 교육과정과 관련한 내용을 유치원 규칙에 포함한다. 셋째 1일 4~5시간 기준으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과정 시간 내 특성화 운영 불가하다. 넷째, 유치원 교육과정 수립 시 서울유아교육지원계획, 서울형유치원교육과정(+) 내용 반영한다. 다섯째,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장학지도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교육감이 실시하는 유치원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곱째,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생활기록부 작성·관리해야 한다. 여덟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받아야 한다. 아홉째,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참여해야 한다.

다) 지원기준

공영형유치원에 대한 예산 지원내역은 <표 IV-2-14>와 같다. 교직원 인건비, 유치원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이며, 총 사업예산(15억원) 범위 내에서 운영 유치원 수와 지원 예산 결정한다. 단, 개별 유치원 유아수, 학급수, 교직원 수 및 경력 등의 운영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 지원한다. 공영형유치원에 대한 지원기간은 총 5년이다.

31) 서울특별시교육청(2018).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학비 부담 경감 및 공공성 증대를 위한 「공영형 유치원」 운영 세부추진 계획 보도자료 참고하여 작성함.

표 IV-2-14 서울시 공영형유치원 지원기준

구분	지원 내역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인건비(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교육공무원 연봉의 80~100% 상당 금액 지원. 최대 40호봉까지 인정 - 초과근무수당: 정액분만 지원 - 행정실: 실장-일반직 7급 10호봉 상당액, 행정직원 및 시설관리 별도 유치원 기준 - 보조교사: 공립유치원 기준 교원 인건비 대비 예산 감안하여 배치 - 조리사: 조리원 기준 - 운전원: 직영-통합차량 운영 시 특별인부 기준 리스-공립 거점버스 기준으로 하되 유치원 여건 따라 조정 - 기타 사항: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초과근무수당, 관련 법규, 지침 규정 따라 지원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기본운영비: 공통경상운영비: (9,724,000원×학급수) + 115,395,000원(유치원계수) - 개별경상운영비: 학습자료구입/현장학습지원 및 특수학교 차량유지비 기준 중형승합 10,000~15,000km 적용) - 예비지원금: 유치원별 총 예산액 대비 20%(이후 약정 기간 동안에는 5%)
교육환경개선비	유치원 시설 정밀 신사진단 후 안전사고 예방 등의 시급성 고려 우선순위 부여
기타	누리과정 유아학비, 교원처우개선비, 유아교육 보조사업비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2018).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학비 부담 경감 및 공공성 증대를 위한 「공영형 유치원」 운영 세부추진 계획 보도자료.

라) 예산 운영

유치원회계 운영을 위한 유치원 명의의 통장 3구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예산은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으로 소요액을 분기별로 재배정해야 한다.

5) 시사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영형 유치원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공형어린이집과 유사한 형태로 사립유치원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유치원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공영형유치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정기준을 현 기준보다 정교화하고, 기준을 강화하며, 본 사업 전환에 대비하여 재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부산

1) 영유아 인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는 2017년 말 기준 180,213명이다. 2016년까지 18만 7천명 선을 유지하였으나 2017년 18만명 선까지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5세와 6세가 각각 15% 대이고, 다음으로 2,3,4세가 14%대, 1세 13.6%, 0세가 11.4%로 가장 적다. 0세를 제외하면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0세는 2013년 187,305명에서 5년 간 4천명 넘게 감소하였다(표 IV-2-15 참조).

표 IV-2-15 영유아 수: 부산

구분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17	180,213	20,494	24,546	26,663	26,164	25,913	28,685	27,748
(비율)	(100.0)	(11.4)	(13.6)	(14.8)	(14.5)	(14.4)	(15.9)	(15.4)
2016	187,409	23,906	26,766	26,409	26,100	28,863	27,971	27,394
2015	187,693	25,731	26,379	26,059	28,866	27,963	27,481	25,214
2014	186,105	25,165	25,811	28,779	27,781	27,278	25,002	26,289
2013	187,305	24,825	28,646	27,636	27,190	24,907	26,261	27,840

자료: 행정안전부(2013, 2014, 2015, 2016, 2017). 주민등록인구통계(<http://27.101.213.4/#> 2018.8.7. 인출).

2) 어린이집·유치원 공급과 이용

가) 어린이집

부산광역시 소재 어린이집 수는 2017년 말 기준 1,920개소이다. 2013년 1,897개소에서 이후 1천 9백 개소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어린이집 중 민간 40.8%, 가정 41.1%를 차지하고, 국공립은 8.6%로 소수이다(표 IV-2-16 참조).

표 IV-2-16 어린이집 수: 부산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1,920	165	82	36	784	789	48	16
(비율)	(100.0)	(8.6)	(4.3)	(1.9)	(40.8)	(41.1)	(2.5)	(0.8)
2016	1,937	163	82	38	804	795	42	13
2015	1,971	161	84	38	824	820	32	12
2014	1,957	155	84	39	827	814	29	9
2013	1,897	152	84	38	814	776	28	5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부산광역시에는 그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별도 추진하지 않았고, 매년 5개 정도씩만 확충하여 왔다. 민간은 2014년, 가정은 2015년에 어린이집 수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출생아 수 감소³²⁾ 등으로 2015년 이후 매년 줄고 있다.

한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17년 말 기준 74,971명이다. 2013년 74,317명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14.7% 정도를 차지한다. 부산광역시는 타 시도와 달리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이 가정어린이집보다 높다(표 IV-2-17 참조).

표 IV-2-17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부산

단위: 명(%)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74,971	10,986	5,770	2,412	39,676	13,532	2,250	345
(비율)	(100.0)	(14.7)	(7.7)	(3.2)	(52.9)	(18.0)	(3.0)	(0.5)
2016	75,006	10,964	5,796	2,532	39,945	13,539	1,952	278
2015	74,003	10,841	5,697	2,477	39,627	13,582	1,548	231
2014	75,407	10,695	5,837	2,560	41,273	13,481	1,400	161
2013	74,317	10,694	5,829	2,524	40,823	13,029	1,307	111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2017년 기준 평균 84.2%이다. 2013년 평균 85.2%에서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88.6%이고 가정은 90.8%로 전체 평균보다 높고 민간은 82.1%로 반대로 낮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하락 추세를 보이지만, 가정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이 상승 추세이다. 민간도 2015년 79.3%로 80% 미만으로 떨어졌으나 전체 어린이집 수가 감소함에 따라 다시 상승하고 있다(표 IV-2-18 참조).

표 IV-2-18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부산

단위: %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84.2	88.6	80.7	83.5	82.1	90.8	75.7	80.6
2016	83.7	88.8	81.1	84.5	81.3	90.4	72.4	84.2
2015	82.2	88.4	80.0	84.5	79.3	88.3	74.6	82.2
2014	84.7	89.4	81.7	85.8	83.0	88.5	76.9	75.6
2013	85.2	90.9	80.7	85.0	83.5	89.7	75.2	79.3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32) 부산광역시 합계출산율은 2013년 1.049명, 2014년 1.090명, 2015년 1.139명, 2016년 1.095명, 2017년 0.976명임(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2018.9.20. 인출).

나) 유치원

부산광역시 소재 유치원은 2017년 기준 총 417개원이다. 공립 99개원, 사립 318개원으로 사립유치원 비중이 크다. 공립유치원은 2013년 70개원에서 매년 10%p 정도씩 증설되고, 사립유치원도 2016년 320개원까지 늘어났다. 학급 수는 공립이 341개, 사립이 1,744개로 총 2,085개이다. 공립유치원은 유치원 증설에 따라 학급 수도 늘어나고 있고, 사립은 매년 증감을 반복한다(표 IV-2-19 참조).

유치원 이용 유아 수는 총 45,853명이다. 공립 6,924명, 사립 38,929명으로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 수가 6배 이상 많다. 공립유치원은 규모가 작은 병설유치원이 많아 취원아 수가 사립유치원에 비해 적다(표 IV-2-19 참조).

표 IV-2-19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부산

단위: 개원, 개, 명

구분	유치원				학급			취원아 수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단설	병설							
2017	-	20	79	318	-	341	1,744	-	6,924	38,929
2016	-	14	78	320	-	304	1,742	-	6,263	40,365
2015	-	11	69	323	-	252	1,734	-	5,272	39,903
2014	-	9	67	319	-	216	1,797	-	4,338	39,571
2013	-	8	62	313	-	190	1,626	-	3,871	40,346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2016, 2017).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018.10.16. 인출).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³³⁾

가) 개요

부산광역시는 2022년까지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을 260개소 확충하고 이용률 40%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신축보다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부산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초등학교 여유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부산광역시, 2018). 이 외에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과 공공형 설치 비율이 10% 미만인 지역을 우선 확충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사업장과 산업단지

33)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2018).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설명회 참고하여 작성함.

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다(부산광역시, 2018). 국공립,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 사업량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260개소, 공공형 100개소, 직장 150개소, 기타 10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사업량의 절반을 차지한다(표 IV-2-20 참조).

▣ 표 IV-2-20 ▣ 부산형 공보육 확충목표

구분	전체	단위: 개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520	84	94	104	114	124
국공립	260	42	47	52	57	62
공공형	100	10	15	20	25	30
직장	150	30	30	30	30	30
기타	10	2	2	2	2	2

자료: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2018).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설명회 자료. p.3.

부산광역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신축·전환 시 최대 9.32억원, 공동주택 리모델링비는 최대 1.2억원,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개소당 월 평균 약 300만원을 지원하며, 조리원 인건비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공동 설치 시 기업부담금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부산광역시, 2018)(표 IV-2-21 참조).

▣ 표 IV-2-21 ▣ 부산형 공보육 지원단가 및 재원

구분	개소당 지원금액	재원
국공립	-신축·전환 최대 9.32억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최대 1.2억원	국비 50%, 시비 25%, 구군비 25%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인센티브 최대 0.5억원	시비 100%
공공형	-교사·반·아동현원 등에 따라 운영비등 차등 지원(개소당 월평균 약 3백만원)	국비 60%, 시비 28%, 구군비 12%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개소당 월300천원)	시비 100%
직장	-중소기업 공동 설치 시 설치비 기업부담금 최대 2억원 지원(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 연계)	시비 100%

자료: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2018).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설명회. p.3.



나) 확충 방법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사업

부산광역시는 접근성, 보육 수요,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공보육 이용률 제고를 위한 민관 상생발전의 방법으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부산광역시, 2018: 7). 2022년까지 전환 목표는 총 100개소이고, 연차별로는 2018년 10개소에서 매년 5개소씩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 표 IV-2-22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목표

단위: 개소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확충 규모	10	15	20	25	30	100

자료: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2018).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설명회. p.7.

전환 대상은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유상임대 중인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이며, 리모델링비 1.2억원과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감정평가 등을 통해 초기 투자 비용을 보상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는 주민공동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표 IV-2-23 참조).

▣ 표 IV-2-23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지원 기준 및 내용

구분	상세 내용	
신청 대상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유상임대 중인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지원 기준	운영권 보장	재위탁 심사기준(80점 이상)에 적합한 어린이집의 경우 초기 운영권 보장
	지원금	-리모델링: 최대 1.2억원 -인센티브: 최대 5000만원 -어린이집운영자 보상액: 감정평가 등을 통해 초기투자 비용 보상액 지원 -주민공동시설개선비 지원(10년 이상 무상임대 시)
	정원별 지원한도액	·정원 40인 미만: 최대 30백만원 ·정원 40 ~ 80인: 최대 40백만원 ·정원 80인 초과: 최대 500백만원

자료: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2018).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설명회. p.7 재구성.

(2) 초등학교 여유교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산광역시에서는 접근성과 비용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청과의 협력하여 학생 수 감소로 비어 있는 초등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유휴교실이 없어, 학교 내 활용도가 낮은 여유교실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부산광역시 2018). 부산광역시는 2018년 현재 총 11개의 초등학교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2018년 3월에는 여유교실을 활용한 첫 어린이집을 개원한 바 있다³⁴⁾.

3) 시사점

부산광역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은 신축보다는 공동주택관리동에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타 시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한편, 부산광역시는 민간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을 포함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목표를 세우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 대구

1) 영유아 인구

대구광역시 영유아 수는 2017년 말 137,711명이다. 2013년 146,696명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5세가 16.1%로 다수이고, 다음으로 6세가 15.8%, 2,3,4세는 각각 14%대, 1세는 13.5%, 0세가 11.2%로 가장 적다(표 IV-2-24 참조).

34) 연합뉴스(2018.3.23.). 초등학교 빈교실 활용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반응 엇갈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323019500038/?did=1825m>, 2018.6.6. 인출.

표 IV-2-24 어린이 수: 대구

단위: 명(%)

구분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17	137,711	15,444	18,625	19,884	19,906	19,915	22,224	21,713
(비율)	(100.0)	(11.2)	(13.5)	(14.4)	(14.5)	(14.5)	(16.1)	(15.8)
2016	142,275	17,761	19,725	19,761	19,796	22,155	21,558	21,519
2015	142,823	18,810	19,590	19,578	21,966	21,383	21,299	20,197
2014	143,732	18,668	19,510	21,782	21,270	21,171	20,008	21,323
2013	146,696	18,708	21,647	21,177	21,018	19,963	21,215	22,968

자료: 행정안전부(2013, 2014, 2015, 2016, 2017). 주민등록인구통계(<http://27.101.213.4/#> 2018.8.7. 인출)

2) 어린이집·유치원 공급과 이용

가) 어린이집

대구광역시 소재 어린이집 수는 1,464개소로 2013년 1,590개소보다 약 150개소 정도 감소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은 4.9%이고, 민간 45.8%, 가정 36.5%로 민간과 가정이 전체 어린이집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국공립은 2013년 39개소에서 2배 가량 증가하였고, 민간과 가정은 매년 줄고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타 시도에 비해 규모가 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비율이 높다(표 IV-2-25 참조).

표 IV-2-25 어린이집 수: 대구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1,464	72	121	31	670	534	31	5
(비율)	(100.0)	(4.9)	(8.3)	(2.1)	(45.8)	(36.5)	(2.1)	(0.3)
2016	1,483	54	121	32	689	558	24	5
2015	1,539	46	121	33	715	599	19	6
2014	1,588	42	121	34	728	639	18	6
2013	1,590	39	123	34	726	646	17	5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58,591명이다. 2013년 63만명에서 2015년 60만명 선 이하로 떨어졌다. 국공립 이용 아동 수는 6.0%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며, 민간이 56.4%로 절반이 넘고, 가정이 14.3%로 타 지역보다 민간이 강세인 지역이다. 그간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꾸준히 늘어 이용 아동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과 가정 비중이 높아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표 IV-2-26 참조).

표 IV-2-26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대구

단위: 명(%)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58,591	3,498	10,377	1,651	33,070	8,380	1,514	101
(비율)	(100.0)	(6.0)	(17.7)	(2.8)	(56.4)	(14.3)	(2.6)	(0.2)
2016	58,706	2,719	10,734	1,734	33,690	8,579	1,149	101
2015	59,449	2,254	10,778	1,803	34,675	8,852	965	122
2014	62,824	2,058	11,220	1,953	36,982	9,635	861	115
2013	63,505	2,077	11,813	1,952	37,185	9,576	793	109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한편,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2017년 기준 78.4%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구광역시 어린이집 공급 과잉으로 2013년부터 70% 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이 87.8%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다. 가정도 85.0%로 전체 평균보다 높고, 민간은 78.4%로 평균 수준이다(표 IV-2-27 참조).

표 IV-2-27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대구

단위: %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78.4	87.8	72.4	77.2	78.4	85.0	71.8	86.3
2016	78.0	88.6	73.1	79.5	77.7	83.6	71.6	86.3
2015	76.7	85.8	72.9	78.8	76.4	80.7	70.7	86.5
2014	79.2	84.8	75.8	80.5	79.4	82.8	66.8	81.6
2013	79.7	87.1	78.2	79.9	79.7	81.4	69.1	87.2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나) 유치원

2017년 기준 유치원 수는 총 370개원으로, 공립 104개원, 사립 266개원이다. 공립유치원 2013년 128개원에서 100개원 정도까지 줄었지만, 규모가 큰 단설유치원은 늘고, 병설유치원은 반대로 1/3 정도가 줄었다. 학급 수는 공립 311개, 사립 1,624개로 총 1,935개이다. 공사립 유치원 모두 증가 추세이다. 유치원 이용 아동 수는 총 38,936명으로, 공립 6,415명, 사립 32,521명이다. 공립유치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표 IV-2-28 참조).

표 IV-2-28 |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대구

단위: 개원, 개, 명

구분	유치원				학급			취원아 수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단설	병설							
2017	-	18	86	266	-	311	1,624	-	6,415	32,521
2016	-	13	94	268	-	269	1,615	-	5,692	33,173
2015	-	5	121	266	-	231	1,603	-	4,897	32,054
2014	-	5	121	249	-	232	1,458	-	4,591	29,963
2013	-	2	126	233	-	225	1,246	-	4,167	30,38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2016, 2017).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018.10.16. 인출).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대구광역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나 재원 마련 계획 등을 별도로 세우고 있지 않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중앙정부의 신축, 공동주택리모델링, 장기임차 등 사업을 배정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목표 달성을 위해 국공립 확충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4) 개방형유치원 추진 계획³⁵⁾

가) 개요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방형 사립유치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정된 사립유치원은 컨설팅과 평가, 피드백을 통해 기간 종료 시까지 유치원 운영이 최적화되도록 한다. 대구교육청은 2018년 법인 사립유치원 1개원을 선정하였고, 2018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 간 개방형 사립유치원으로 운영된다. 개방형 사립유치원으로 선정되면 교육청으로부터 연간 4억원을 지원받는다(대구광역시교육청, 2018).

나) 선정 기준

개방형 사립유치원 선정 조건은 2018년 2월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다. 최근 2개년 간 회계부정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유치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

35) 대구광역시교육청(2018) 대구 개방형 사립유치원 운영 계획을 참고로 작성함.

시 평가내용으로는 법인 운영, 위치의 적절성,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원아 수 및 비율, 원아 충족률 수준, 교원 임금 수준, 학부모 부담 수준, 원비 인상 수준, 운영의 적절성, 사업비 운영계획의 적절성이 있으며 정성 평가로 관리자 평가가 포함된다(대구광역시교육청, 2018). 상세 내용은 <표 IV-2-29>에 제시하였다.

표 IV-2-29 대구 개방형 사립유치원 선정 지표

평가분야	평가지표	중점 평가사항	배점
법인현황	법인 운영	· 이사 구성 · 법인 운영의 투명성 등	20
위치	위치의 적절성	· 인근 지역에 공립유치원 등 대구 개방형 사립유치원 대체할 수 있는 시설 여부 · 인근 유치원과의 거리 · 교육 환경 열악한 지역	10
원아	사회적배려계층 가정 원아수 및 비율	· 재원 원아 중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비율 및 수를 평가	10
	원아 충족률 수준	· 유치원 원아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평가	10
교원	교원 임금 수준	· 유치원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 교원의 전문성 수준(학력, 경력 등)	10
원비 현황	학부모 부담 수준	· 학부모 부담금이 낮은 유치원	5
	원비 인상 수준	· 2017~2018학년 원비인상 정도, 원비인상을 상한제 준수 수준	5
운영 계획	운영의 적절성	·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회계투명성 등 계획 평가	5
	사업비 운영계획의 적절성	· 교사 인건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평가(원장 인건비가 과도한지 확인) ·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에 따라 예산 적정 편성 평가	10
관리자 평가 (정성평가)	· 개방형 사립유치원 선정이 적합한 지에 대해 신청 사유, 유치원 설립자(원장)의 의지 및 책임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위원이 점수 부여		15
합 계			100

자료: 대구광역시교육청(2018). 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구 개방형 사립유치원 운영 계획. p.17.

다) 재정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선정 유치원을 대상으로, 인건비, 유치원 운영비, 교육활동비, 교육환경개선비, 방과후 과정 지원비를 초과하는 간식비 및 통학버스비 등을 지원한다(대구광역시교육청, 2018). 상세 지원내역은 <표 IV-2-30>과 같다.



표 IV-2-30 대구 개방형 사립유치원 지원 기준

구분		내용
인건비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확정된 호봉 따라 교육공무원 보수 체계로 연봉 산정. · 현재 연봉을 교육공무원 보수체계 따라 교육공무원 연봉 80%~100% 상당 금액 산정 · 초과근무수당 정액분만 산정 · 최대 40호봉까지 인정 ·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
	행정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실장: 최초 경력은 일반직 7급 기준, 최고 10호봉까지 인정 · 행정직원 및 시설관리: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
	기타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사: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 · 운전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
유치원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경상운영비: 원당, 급당, 원아수에 따라 지급 · 가산금: 도서구입비,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비 등
교육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교구 교체·구입비: 노후된 교재교구의 교체와 구입 · 체험활동비, 설비비 등 지원
교육활동개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2,000만원 내외에서 필요시 집행 가능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과정 지원비를 초과하는 간식비, 통학버스비 등

자료: 대구광역시교육청(2018). 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구 개방형 사립유치원 운영 계획, pp.8-9.

라) 컨설팅 및 평가

(1) 컨설팅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선정 유치원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컨설팅을 실시하며, 매 학기 시작 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분야별로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포함)분야 컨설팅 및 장학 지도와 재정회계 운영 분야 컨설팅으로 나누어서 운영한다(대구광역시교육청, 2018).

교육과정 분야 컨설팅의 경우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등 학사운영의 전반을 컨설팅하며, 본청 유아교육과와 교육지원청의 초등교육지원과에서 점검한다. 재정회계 운영 분야 컨설팅의 경우 월 2회 이상 실시하며, 예산 및 결산, 예산 집행 상황 등 재정 운영을 대상으로 하며 본청 유아특수교육과 및 교육지원청의 업무 담당자, 컨설팅 요원이 점검한다(대구광역시교육청, 2018).

(2) 평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선정된 개방형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정기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정기평가는 유치원 대상 평가를 주기별 및 수시로 실시하는 것으

로 분기 평가와 연간 평가가 있다. 분기 평가는 5월, 8월, 11월, 2월에 실시하며, 연간 평가는 분기 및 수시평가 결과를 누적 관리하여 매 학년도말(2월)에 평가하며, 1년간 평가 결과, 교육청과 유치원 약정 사항, 관련규정 위반 여부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 약정 미이행 또는 위반 사항이 있거나, 평가결과가 미흡으로 판정될 경우 보완 및 시정(개선) 요구, 운영 약정 해지, 배상 등을 조치한다. 종합평가는 약정기간 중 매년 실시한 평가를 바탕으로 약정 종료 전에 종합적,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그간의 운영 결과 및 지원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여 재약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위원회 위원 및 외부 평가단이 평가한다(대구광역시교육청, 2018).

4) 시사점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현재 사립유치원 1개소를 개방형 사립유치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영형 유치원보다 선정기준이 구체적이며, 컨설팅 및 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영형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3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으로 이후 사업추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또한 컨설팅 및 평가 등을 전담하는 부서가 부재하고 해당 과나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하고 있어 사업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라. 인천

1) 영유아 인구

인천광역시 거주 영유아 수는 2017년 기준 178,698명이다. 2013년 19,2549명에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5세가 16.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세가 15.8%, 2,3,4세는 14%대, 1세는 13.4%, 0세 11.1%로 가장 적다. 0세는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다(표 IV-2-31 참조).

표 IV-2-31 | 영유아 수: 인천

단위: 명(%)

구분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17	178,698	19,907	23,915	26,124	25,940	25,988	28,679	28,145
(비율)	(100.0)	(11.1)	(13.4)	(14.6)	(14.5)	(14.5)	(16.0)	(15.8)
2016	186,583	22,961	26,208	26,160	26,158	28,893	28,318	27,885
2015	189,521	24,940	26,162	26,261	29,099	28,441	27,992	26,626
2014	190,178	25,087	26,074	29,028	28,340	27,897	26,469	27,283
2013	192,549	24,908	28,749	28,279	27,879	26,438	27,277	29,019

자료: 행정안전부(2013, 2014, 2015, 2016, 2017). 주민등록인구통계(<http://27.101.213.4/#> 2018.8.7. 인출)

2) 어린이집·유치원 공급과 이용

가) 어린이집

인천광역시 소재 어린이집 수는 2017년 기준 2,186개소로, 2014년 2,308개소까지 늘어났으나, 이후 감소 추세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7.1% 정도이고, 가정이 51.8%로 전체 어린이집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민간이 36.6%로 많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최근 5년간 30개소가 확충된 반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2014년을 기점으로 매년 줄고 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2015년 대비 100개소가 줄었다(표 IV-2-32 참조).

표 IV-2-32 | 어린이집 수: 인천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2,186	155	11	17	800	1,132	65	6
(비율)	(100.0)	(7.1)	(0.5)	(0.8)	(36.6)	(51.8)	(3.0)	(0.3)
2016	2,231	150	11	19	808	1,181	56	6
2015	2,278	140	11	20	814	1,236	51	6
2014	2,308	132	11	22	815	1,274	47	7
2013	2,263	125	10	22	799	1,255	44	8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14년 84만명 정도까지 늘어났지만 이후 감소 추세로 2017년 80,895명까지 줄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11.2%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민간 59.1%, 가정 23.4%로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다수를 차지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그간 30개소 정도가 확충되어 이용 아동 수가

1,500명 정도 증가하였지만,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2014년을 기점으로 매년 줄고 있다(표 IV-2-33 참조).

표 IV-2-33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인천

단위: 명(%)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80,895	9,037	844	991	47,819	18,913	3,101	190
(비율)	(100.0)	(11.2)	(1.0)	(1.2)	(59.1)	(23.4)	(3.8)	(0.2)
2016	81,096	8,687	900	1,129	48,060	19,270	2,871	179
2015	81,353	8,202	903	1,203	48,400	19,836	2,628	181
2014	83,731	7,812	929	1,334	50,108	20,993	2,390	165
2013	81,796	7,367	955	1,456	49,126	20,685	2,022	185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2017년 기준 86.1%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2015년 85.9%까지 떨어진 후 상승하고 있다. 국공립은 90.5%로 전체 평균보다 높다. 민간은 84.3%로 평균보다 낮고, 가정은 90.5%로 평균보다 높다. 국공립은 89% 대를 머물렀으나, 2017년 90%를 상회한다. 반면에 민간은 매년 하락 추세이며, 가정은 2015년 87.9%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반등하고 있다(표 IV-2-34 참조).

표 IV-2-34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인천

단위: %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86.1	90.5	76.3	81.2	84.3	90.5	82.1	82.6
2016	86.0	89.6	81.4	84.3	84.5	88.9	84.9	77.8
2015	85.9	89.7	80.5	84.2	84.7	87.9	84.0	78.7
2014	88.3	89.9	81.0	83.7	87.7	90.7	83.1	68.2
2013	88.6	89.9	84.8	88.9	88.1	91.0	77.5	70.6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나) 유치원

인천광역시 소재 유치원은 2017년 기준 총 430개원이다. 이중 공립이 165개원, 사립이 265개원으로 사립유치원이 더 많다. 공립유치원은 최근 매년 2~4개원씩 증설되었다. 학급은 공립이 491개, 사립 1,626개로 총 2,117개이다. 공립유치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유치원 이용 아동 수는 2017년 기준 공립 10,078명, 사립 33,931명으로 총 44,009명이다. 앞서 살펴본 학급 수와 마찬가지로 공립유치원 이용 아동은 매년 늘어나고, 사립유치원 이용 아동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표 IV-2-35 참조).

표 IV-2-35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인천

단위: 개원, 개, 명

구분	유치원				학급			취원아 수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단설	병설							
2017	-	13	152	265	-	491	1,626	-	10,078	33,931
2016	-	11	150	266	-	454	1,769	-	9,637	34,988
2015	-	11	145	262	-	428	1,670	-	8,879	33,510
2014	-	9	145	258	-	399	1,596	-	8,375	31,994
2013	-	7	145	259	-	373	1,457	-	8,118	33,476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2016, 2017).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018.10.16. 인출).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인천광역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나 재원 등에 관한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21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20% 달성을 목표로 2018년에는 37개소, 2019년 30개소, 2020년 30개소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인천광역시, 2018).

4) 시사점

인천광역시는 출산율 하락에 따라 영유아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³⁶⁾. 국공립어린이집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비율이 높다. 인천광역시는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계양, 검단, 송도 등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동어린이집 전환 등의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36) 인천광역시 합계출산율은 2013년 1.195명, 2014년 1.212명, 2015년 1.216명, 2016년 1.144명, 2017년 1.007명임(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2018.9.20. 인출).

마. 광주

1) 영유아 인구

광주광역시 영유아 수는 2017년 기준 91,407명으로 2013년 10만명을 상회하였으나, 출산율 하락에 따라 영유아 수도 감소하고 있다³⁷⁾. 연령별로는 5, 6세가 16%가 넘고, 2,3,4세는 14%대, 1세 12.9%, 0세 10.7%이다(표 IV-2-36 참조).

표 IV-2-36 | 영유아 수: 광주

구분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17	91,407	9,793	11,824	12,910	13,298	13,448	15,210	14,924
(비율)	(100.0)	(10.7)	(12.9)	(14.1)	(14.5)	(14.7)	(16.6)	(16.3)
2016	95,232	11,236	12,628	13,096	13,246	15,159	14,690	15,177
2015	97,599	12,045	12,920	13,194	15,104	14,740	15,023	14,573
2014	99,665	12,306	13,024	15,038	14,698	14,994	14,420	15,185
2013	102,130	12,407	14,846	14,564	14,811	14,261	14,939	16,302

자료: 행정안전부(2013, 2014, 2015, 2016, 2017). 주민등록인구통계(<http://27.101.213.4/#> 2018.8.7. 인출)

2)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

가) 어린이집

광주광역시 소재 어린이집 수는 2013년 1,251개소에서 2017년 기준 1,240개소로 11개소가 줄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6%로 소수이며, 가정 48.9%, 민간 34.9%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다수를 차지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 5년간 2개소가 확충된 데 반해 민간어린이집은 32개소가 늘었고, 가정은 52개소가 줄었다(표 IV-2-37 참조).

표 IV-2-37 | 어린이집 수: 광주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1,240	32	107	23	433	606	30	9
(비율)	(100.0)	(2.6)	(8.6)	(1.9)	(34.9)	(48.9)	(2.4)	(0.7)
2016	1,238	33	107	23	419	620	26	10
2015	1,264	32	108	24	422	646	22	10
2014	1,260	30	108	24	408	660	21	9
2013	1,251	31	108	24	401	658	20	9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37) 광주광역시 합계출산율은 2013년 1.170명, 2014년 1.199명, 2015년 1.207명, 2016년 1.168명, 2017년 1.053명임(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2018.9.20. 인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46,650명으로 2014년까지 5만명을 상회하였으나 이후 급감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4.9%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민간과 가정이 각각 51.0%, 19.7%로 민간 부문이 70% 정도를 차지한다. 사회복지법인이 17.7%로 타 시도에 비해 이용 아동 비율이 높다(표 IV-2-38 참조).

■ 표 IV-2-38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광주

단위: 명(%)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46,650	2,305	8,270	1,443	23,773	9,181	1,420	258
(비율)	(100.0)	(4.9)	(17.7)	(3.1)	(51.0)	(19.7)	(3.0)	(0.6)
2016	47,207	2,378	8,416	1,483	24,076	9,239	1,273	342
2015	48,529	2,274	8,519	1,493	25,223	9,572	1,063	385
2014	50,672	2,202	9,022	1,606	26,218	10,155	1,086	383
2013	51,274	2,294	9,335	1,629	26,419	10,203	1,062	332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2017년 기준 73.9%로 2015년 80% 미만으로 떨어진 후 매년 하락하고 있다. 어린이집 유형 중 가정이 84.0%로 높으나 민간은 72.1%로 전체 평균보다 낮다. 국공립은 82.6%로 평균보다 높다. 사회복지법인이 68.3%, 직장이 67.5%로 전체 평균을 낮추고 있다(표 IV-2-39 참조).

■ 표 IV-2-39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광주

단위: %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73.9	82.6	68.3	79.2	72.1	84.0	67.5	62.3
2016	75.5	84.2	69.1	81.9	74.4	83.9	66.7	77.4
2015	76.5	81.0	68.7	76.6	77.0	83.4	64.7	89.3
2014	80.8	82.2	72.5	82.4	81.9	86.8	73.7	93.0
2013	81.9	84.1	75.0	81.5	82.5	87.4	80.3	82.0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나) 유치원

광주광역시 소재 유치원 수는 2917년 기준 총 318개원이다. 공립이 127개원, 사립이 191개원으로 사립유치원이 더 많다. 공립유치원은 단설 10개원, 병설 117개원으로 소규모 공립유치원이 다수를 차지한다. 공립유치원 증설은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학급 수도 공립이 239개, 사립이 1,040개로 총

1,279개로 사립유치원이 더 많다(표 IV-2-40 참조).

표 IV-2-40 |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광주

단위: 개원, 개, 명

구분	유치원				학급			취원아 수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단설	병설							
2017	-	10	117	191	-	239	1,040	-	4,379	20,275
2016	-	10	117	194	-	251	1,051	-	4,575	20,215
2015	-	10	116	189	-	235	997	-	4,484	19,257
2014	-	8	115	185	-	215	1,046	-	3,980	18,308
2013	-	6	114	175	-	200	891	-	3,964	18,712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2016, 2017).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018.10.16. 인출).

취원아 수는 2017년 기준 총 24,654명이고, 공립이 4,379명, 사립 20,275명이다. 공립은 지난 5년간 10%p 정도, 사립은 20%p 정도가 늘어났다(표 IV-2-40 참조).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³⁸⁾

가) 개요

광주광역시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치나 2022년까지 이용률 20.3%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최소 100개소, 매년 20개소 가량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12개소(LH설치 3개소, 사회복지법인 무상임대 전환 4개소, 민간장기임차 5개소) 설치를 진행 및 예정하고 있다(광주광역시, 2018).

그림 IV-2-2 | 광주 연도별 확충계획

연도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확충량 (총시설수)	(32개소)	12개소 (44개소)	22개소 (66개소)	22개소 (88개소)	22개소 (110개소)	22개소 (132개소)
이용아동 (이용률)	2,305명 (4.9%)	3,169명 (6.7%)	4,753명 (10.1%)	6,337명 (13.5%)	7,921명 (16.9%)	9,505명 (20.3%)

자료: 광주광역시(201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내부자료. p.2.

38) 광주광역시(201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참고하여 작성함.

나) 중점 추진 내용 및 지원

광주광역시시는 신축보다는 기존시설 전환 또는 장기임차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어촌 및 국공립 미설치 지역과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단지 및 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광주광역시, 2018).

장기임차 대상은 국공립 전환을 희망하는 민간어린이집 중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선정된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는 최대 1억2천만 원이며, 근저당 설정 비용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계약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이고, 지원조건은 최초 운영권 5년을 보장하고, 종료 후 위탁심사를 통해 재위탁이 가능하다. 향후 5년간 25개소가 확충된다(광주광역시, 2018).

표 IV-2-41 | 광주광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대상 및 내용

구 분	지원 대상	내용
장기임차	- 민간어린이집 중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선정된 어린이집	-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최대 1억 2천 - 근저당 설정 비용: 최대 1억원 - 계약기간: 최소 5년 ~ 최대 10년 - 운영권: 최초 운영권 5년 보장 및 종료 후 재위탁 가능
공동주택 관리동	-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설치 어린이집 중 지자체에 무상임대를 희망하는 어린이집	-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최대 1억 2천만원 - 운영권 보장 - 리모델링 및 기자재 추가지원 없음 - 시설개선비 미지원
사회복지법인 무상임대 전환	- 사회복지법인으로 무상임대를 희망하는 어린이집	-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최대 1억 2천만원 - 운영권 보장, 계약 종료 후 사회복지법인으로 재인가 가능(인건비 재승인 필)

자료: 광주광역시(201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내부자료.

공동주택 관리동 지원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설치 어린이집 중 지자체에 무상임대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으로, 지원조건으로는 초기비용을 투자한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권을 보장한다. 대상 어린이집에는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최대 1억 2천 만원을 지원하고,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적격자심의 및 위탁체 심사기준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추가 지원이 없으며 시설개선비도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LH공사 단지 내 민간 임대 어린이집 계약 만료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며, 신규 조성 단지 내에 의무 어린이집 설치 시 국공립으

로 설치한다.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임대는 5년 간 43개소(기존시설 전환 16개소, 신규단지 의무시설 27개소)가 확충될 계획이다(광주광역시, 2018).

무상임대 국공립 전환 지원대상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무상임대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이다. 운영권을 보장하고, 계약 종료 후 사회복지법인으로 재인가가 가능한 조건이며, 전환 어린이집에는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2천만원을 지원한다(광주광역시, 2018).

4) 시사점

광주광역시는 전체 복지 예산 중 80% 이상을 노인 복지에 투입하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할 재정적 여유가 없고, 지역적 특수성으로 구도심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가능한 부지가 부족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동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는 타 지역에 비해 사회복지법인이 많은 편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장기입차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가능하지만, 정부지원시설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도 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환경개선비 정도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이 소재한 지역 대부분이 영유아 수가 적은 지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 대전

1) 영유아 인구

대전광역시 영유아 수는 2017년 기준 92,647명이다. 2014년까지 10만 명을 상회하다가 2015년 이후 1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5세가 16.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세 15.8%, 2,3,4세는 14%대, 1세 13.4%, 1세 11.3%로 가장 적다.

표 IV-2-42 | 영유아 수: 대전

단위: 명(%)

구분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17	92,647	10,424	12,438	13,507	13,335	13,497	14,812	14,634
(비율)	(100.0)	(11.3)	(13.4)	(14.6)	(14.4)	(14.6)	(16.0)	(15.8)
2016	97,680	12,097	13,752	13,582	13,759	15,022	14,829	14,639
2015	99,724	13,301	13,620	13,840	15,144	14,952	14,763	14,104
2014	103,199	13,389	14,171	15,557	15,288	15,070	14,404	15,320
2013	106,057	13,677	15,606	15,332	15,160	14,508	15,356	16,418

자료: 행정안전부(2013, 2014, 2015, 2016, 2017). 주민등록인구통계(<http://27.101.213.4/#> 2018.8.7. 인출).

2) 어린이집·유치원 공급과 이용

가) 어린이집

대전광역시 소재 어린이집 수는 2017년 기준 1,505개소로 2013년 1,680개소에서 약 10%p 이상 줄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3% 정도이고, 가정이 62.1%, 민간 28.0%로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이 90%를 차지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3년 28개소에서 지난 5년간 7개소 밖에 늘지 않았다. 반면에 민간은 2015년, 가정은 2014년 가장 많았으나 이후 감소하고 있다(표 IV-2-43 참조).

표 IV-2-43 | 어린이집 수: 대전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1,505	35	41	12	422	934	52	9
(비율)	(100.0)	(2.3)	(2.7)	(0.8)	(28.0)	(62.1)	(3.5)	(0.6)
2016	1,584	33	40	13	428	1,013	49	8
2015	1,669	30	41	14	443	1,097	38	6
2014	1,698	29	41	14	438	1,138	33	5
2013	1,680	28	42	17	437	1,121	31	4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17년 기준 43,761명으로 2013년 47,163명에서 10% 가까이 줄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4.4%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민간은 43.7%, 가정은 34.9%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4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상승폭이 크지는 않다(표 IV-2-44 참조).

표 IV-2-44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대전

단위: 명(%)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43,761	1,911	3,043	603	19,123	15,252	3,515	314
(비율)	(100.0)	(4.4)	(7.0)	(1.4)	(43.7)	(34.9)	(8.0)	(0.7)
2016	44,482	1,734	3,010	635	19,710	15,818	3,273	302
2015	44,691	1,547	2,977	677	19,994	16,649	2,599	248
2014	46,859	1,468	3,197	681	21,015	17,970	2,338	190
2013	47,163	1,471	3,398	842	21,299	17,775	2,254	124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표 IV-2-45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대전

단위: %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81.5	89.0	82.0	83.8	78.0	86.4	78.9	65.8
2016	81.6	87.4	81.9	84.4	80.1	83.9	78.3	68.9
2015	80.3	88.1	78.5	81.5	78.9	81.9	80.4	68.5
2014	84.4	86.3	83.8	81.9	84.0	85.3	82.2	65.7
2013	85.6	93.7	87.6	89.9	85.0	85.6	82.9	68.9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2017년 기준 81.5%로 전국 평균 수준이다. 그러나 2013년 85.6%에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89.0%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민간은 78.0%, 가정은 86.4%로 낮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3년 93.7%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표 IV-2-45 참조).

나) 유치원

대전광역시 소재 유치원은 총 269개원이다. 공립이 97개원, 사립이 172개원으로 사립이 2배 정도 많다. 2013년 이후 공립 단·병설유치원이 소폭 증설되고 있고, 사립은 큰 변화가 없다. 학급 수는 공립이 256개, 사립이 1,019개로 공립유치원 학급 수는 2013년 이후 25%p 정도 늘었다.

취원아 수는 2017년 기준 공립 4,766명, 사립 20,301명으로 총 25,067명이다. 공립유치원 증설과 함께 취원아 수도 늘어났으나, 2015년 4,829명을 기점으로 이후 감소 추세이다. 사립은 2013년 이후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표 IV-2-46 참조).

표 IV-2-46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대전

단위: 개원, 개, 명

구분	유치원				학급			취원아 수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단설	병설							
2017	-	9	88	172	-	256	1,019	-	4,766	20,301
2016	-	8	88	173	-	247	1,052	-	4,788	21,133
2015	-	8	87	173	-	242	1,042	-	4,829	20,831
2014	-	7	86	172	-	235	1,078	-	4,413	20,611
2013	-	5	85	170	-	207	994	-	3,913	21,35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2016, 2017).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018.10.16. 인출).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³⁹⁾

가) 개요

대전광역시 2018년부터 5개년 간 국공립어린이집 40% 확충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100개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2개소,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22개소 확충한다. 확충 방법별로는 신축 또는 기존 어린이집 매입전환 2개소, 공동주택내 관리동어린이집 47개소,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은 51개소를 계획하고 있다(대전광역시, 2018). 연도별 확충 계획은 [그림 IV-2-3]과 같다.

그림 IV-2-3 대전광역시 연도별 확충계획

연도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확충량 (총시설수)	2개소 (35개소)	12개소 (47개소)	20개소 (67개소)	20개소 (87개소)	22개소 (109개소)	26개소 (135개소)
이용아동 (이용률)	1,911명 (4.4%)	3,100명 (7.5%)	7,100명 (18%)	9,100명 (25%)	11,400명 (33%)	13,200명 (40%)

자료: 대전광역시(201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내부자료, p.3.

나) 증점 추진 내용 및 지원

(1) 구 재정여건 어려움 해소

대전광역시는 국공립 확충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국

39) 대전광역시(201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내부자료 참고하여 작성함.

공립 전환 설치 시 구비 부담률을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었던 부담률을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로 조정하여 구비 부담액을 16억원 감소하였다. 또한, 차량운행비 연180만원, 교재교구비 연 70만원, 시간연장형어린이집 난방비 연 350만원을 순시비로 지원하여 구비 재정 여건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의 사업비 확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목표 달성 구를 대상으로 100% 달성 시 2억원, 70%이상 달성 시 1억원, 50%이상 달성 시 5,000만원의 인센티브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대전광역시, 2018).

(2) 확충 방법 및 목표

대전광역시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 기존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신축, 민간공동주택 신규 설치 시 국공립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의 경우 자가이며 부채비율이 50% 이하인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최소 5년~최대 10년으로 계약 종료 이후 민간어린이집으로 재인가가 가능하도록 한다(대전광역시, 2018).

표 IV-2-47 대전광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대상 및 내용

구분	지원 대상	내용	설치목표
장기임차	- 자가이며 부채비율 50% 이하의 어린이집	- 계약기간: 최소 5년 ~ 최대 10년(계약종료 후 민간으로 재인가 가능) - 지원기준: 리모델링비: 1억 1천만원 근저당설정비: 1억	51개소
공동주택 관리동	공동주택 내 관리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리모델링비: 1억 1천만원	47개소
신축, 기존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신축, 운영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매입(기부체납)	- 최대 4억 6천 1백만원 지원	2개소

자료: 대전광역시(201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내부자료, p.8.

장기임차 어린이집으로 선정 시 리모델링비 1억 1천만원, 근저당비 설정비 1억 원을 지원하며, 총 51개소 확충을 목표로 한다.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전환은 공동주택 내 관리동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주택 내 관리동에 설치된 의무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으



로 진행한다. 전환 시에는 개소 당 1억 천만원을 지원하며, 목표 개소는 47개소이다. 기존시설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은 운영이 어려운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기부채납)한 후 국공립 전환하는 방식으로 보육수요가 많은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규모에 따라 최대 4억육천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축과 기존시설 매입은 2개소를 목표로 한다(대전광역시, 2018).

(3)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그 외 대전광역시는는 주택정책과와 협조하여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 추진 및 신규 공동주택 인가 시 사업조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를 반영하여 공동주택 신규설치 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를 계획하고 있다(대전광역시, 2018).

다) 소요예산 및 연차별 자원 조달 계획

대전광역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총 312억원이며,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의 비율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신규 및 매입에 1,800백만원,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에 5,640백만원,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에 11,220백만원, 이외 인건비 11,300백만원과 순시비 1,19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대전광역시, 2018). 이에 대한 연도별 세부내역과 국비, 시비, 구비 자원조달 비율 상세내역은 <표 IV-2-48>에 정리하였다.

▣ 표 IV-2-48 ▣ 대전광역시 국공립 확충 소요예산

구 분	단위: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신규 및 매입	-	-	-	900	900	1,800
공동주택	720	1,080	1,200	1,320	1,320	5,640
장기임차	1,320	2,420	2,200	2,200	3,080	11,220
인건비	1,356	2,260	2,260	2,486	2,938	11,300
순시비	140	240	240	260	310	1,190
계	3,536	6,000	5,900	7,166	8,548	31,150

자료: 대전광역시(201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내부자료, p.9.

▣ 표 IV-2-49 ▣ 대전광역시 국공립 확충 예산(확충비, 인건비, 순시비) 조달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국 비	1,800	3,100	3,000	3,700	4,400	15,900
시 비	1,200	2,000	2,000	2,400	2,800	10,500
구 비	500	900	900	1,100	1,300	4,800
계	3,500	6,000	5,900	7,200	8,500	31,200

자료: 대전광역시(201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내부자료, p.9.

4) 시사점

대전광역시는 광역시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 수준이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해 직장어린이집 비율이 높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지역 차가 크기 때문에 구도심 등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매입 및 장기임차 등 민간 협력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전광역시는 서울특별시와 유사하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비와 시군구비 재정분담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재정분담 방안은 시도 차원에서 예산을 마련할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원 부족 시에는 추진하기가 어렵다.

사. 울산

1) 영유아 인구

울산광역시 영유아 인구는 2017년 기준 78,312명으로 2016년까지 8만명 선을 유지하며 증감을 반복하여 왔으나 2017년 그 이하로 떨어졌다. 5세와 6세가 15%대로 많고, 2,3,4세가 14%대, 1세 13.7%, 0세 11.6% 순이다(표 IV-2-50 참조).

표 IV-2-50 어린이집 수: 울산

단위: 명(%)

구분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17	78,312	9,047	10,758	11,527	11,460	11,265	12,398	11,857
(비율)	(100.0)	(11.6)	(13.7)	(14.7)	(14.6)	(14.4)	(15.8)	(15.1)
2016	81,221	10,520	11,646	11,538	11,391	12,472	11,901	11,753
2015	81,922	11,348	11,640	11,449	12,518	11,965	11,789	11,213
2014	81,650	11,213	11,436	12,473	11,977	11,806	11,219	11,526
2013	81,651	10,979	12,347	11,875	11,766	11,184	11,423	12,077

자료: 행정안전부(2013, 2014, 2015, 2016, 2017). 주민등록인구통계(<http://27.101.213.4/#> 2018.8.7. 인출).

2) 어린이집·유치원 공급과 이용

가) 어린이집

울산 시 소재 어린이집 수는 2017년 기준 881개소로 2013년 933개소에서 50개소 정도 줄었다. 국공립이 전체 어린이집 중 4.7%로 전체 평균 이하이고, 민간 52.1%, 가정 36.9%로 90%가 넘어 민간 강세 지역 중 하나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 5년간 9개소 밖에 확충되지 않았다. 민간, 가정도 감소 추세이다(표 IV-2-51 참조).

표 IV-2-51 어린이집 수: 울산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881	41	13	5	459	325	34	4
(비율)	(100.0)	(4.7)	(1.5)	(0.6)	(52.1)	(36.9)	(3.9)	(0.5)
2016	895	36	13	5	460	347	30	4
2015	934	33	13	5	476	377	25	5
2014	946	33	13	5	471	396	23	5
2013	933	32	13	5	459	402	20	2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17년 기준 34,657명으로, 2014년 35,383명까지 늘어났지만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6.9%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민간이 68.3%, 가정 16.1%로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이 80%를 상회한다(표 IV-2-52 참조).

표 IV-2-52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울산

단위: 명(%)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34,657	2,376	819	460	23,673	5,570	1,615	144
(비율)	(100.0)	(6.9)	(2.4)	(1.3)	(68.3)	(16.1)	(4.7)	(0.4)
2016	34,762	2,230	863	454	23,824	5,832	1,417	142
2015	34,676	2,059	859	444	23,786	6,229	1,158	141
2014	35,383	2,055	891	460	24,039	6,776	1,048	114
2013	34,269	2,093	916	461	23,303	6,613	872	11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86.0%로 2016년 84.8%까지 떨어진 후 86%대로 반등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은 93.6%로 대부분 정원이 차 있고, 민간은 84.8%, 가정 92.4%로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3년 96%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표 IV-2-53 참조).

표 IV-2-53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울산

단위: %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86.0	93.6	83.3	89.1	84.8	92.4	75.2	80.9
2016	86.4	93.9	87.8	88.0	85.5	90.9	72.6	88.8
2015	84.8	92.4	88.8	86.0	83.4	89.2	76.3	78.3
2014	86.8	93.6	92.6	89.1	85.3	92.6	73.9	65.1
2013	86.5	96.3	95.2	89.3	85.1	89.0	77.6	32.4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나) 유치원

유치원 수는 2017년 기준 199개원이다. 공립이 79개원, 사립이 120개원으로 공립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다. 공·사립유치원 모두 2013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학급 수로는 공립이 196개, 사립이 683개로 사립이 3배 정도 많다. 규모가 큰 사립유치원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표 IV-2-54 참조).

취원아 수는 공립이 3,897명, 사립 15,674명이며, 이를 합산하면 19,571명이 된다. 공립유치원은 취원아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사립유치원은 2014년 15,000선 이하로 떨어진 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표 IV-2-54 참조).

표 IV-2-54 |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울산

단위: 개원, 개, 명

구분	유치원				학급			취원아 수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단설	병설							
2017	-	6	73	120	-	196	683	-	3,897	15,674
2016	-	6	71	119	-	185	692	-	3,727	15,877
2015	-	5	73	116	-	167	712	-	3,420	15,757
2014	-	5	73	118	-	155	661	-	3,252	15,084
2013	-	5	72	116	-	150	659	-	2,994	16,03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2016, 2017).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018.10.16. 인출).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울산광역시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15개소를 확충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신축은 재정 부담이 커서 장기임차와 관리동 어린이집 위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관리동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전환할 만한 관리동어린이집 발굴이 어려워 향후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를 하였다.

이 외에 울산광역시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근속수당,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기사인건비, 기능보장비, 공기청정기 지원, 보육교사 복지포인트,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등 특수보육 시책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에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부모들의 국공립어린이집 선호가 높지 않고, 민간어린이집의 반발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4) 시사점

울산광역시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비율이 낮고 민간 부문이 강세인 지역 중 하나이다. 따라서 그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보다는 공공형어린이집 등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2017년 기준 93.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유치원도 지난 5년간 단설과 병

설 각각 1개원씩만 증설하였으나 취원아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국공립 확충보다는 신축이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

아. 세종

1) 영유아 인구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수는 2017년 기준 27,793명이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영유아 수도 증가하고 있다. 5,6세가 15%대이고, 2,4세가 14%, 1,3세는 13%대, 0세는 12.3% 이다. 연령별 영유아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표 IV-2-55 참조).

▣ 표 IV-2-55 ▣ 영유아 수: 세종

구분	단위: 명(%)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17	27,793	3,422	3,850	4,115	3,846	3,993	4,338	4,229
(비율)	(100.0)	(12.3)	(13.9)	(14.8)	(13.8)	(14.4)	(15.6)	(15.2)
2016	24,353	3,219	3,448	3,258	3,397	3,722	3,627	3,682
2015	20,941	2,823	2,723	2,903	3,191	3,085	3,163	3,053
2014	13,934	1,672	1,857	2,096	2,084	2,122	1,952	2,151
2013	9,499	1,132	1,339	1,357	1,415	1,354	1,455	1,447

자료: 행정안전부(2013, 2014, 2015, 2016, 2017). 주민등록인구통계(<http://27.101.213.4/#> 2018.8.7. 인출).

2) 어린이집·유치원 공급과 이용

가) 어린이집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어린이집 수는 2017년 기준 289개소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5.5%이고, 가정이 51.9%, 민간이 33.6%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85%가 넘는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3년 5개소에서 3배 이상 늘어났다(표 IV-2-56 참조).

표 IV-2-56 어린이집 수: 세종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289	16	9	4	97	150	13	-
(비율)	(100.0)	(5.5)	(3.1)	(1.4)	(33.6)	(51.9)	(4.5)	(-)
2016	250	14	8	4	89	123	12	-
2015	216	10	8	4	67	115	12	-
2014	160	8	8	4	46	86	8	-
2013	118	5	8	4	36	61	4	-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17년 기준 12,580명으로 2013년 5,158명에서 2배 이상 늘어났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10.1%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민간은 43.6%, 가정 21.7%로 민간 비율이 높다. 국공립어린이집 수 증가와 함께 이용 아동 수도 2013년 대비 3배 정도 늘어났다(표 IV-2-57 참조).

표 IV-2-57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세종

단위: 명(%)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12,580	1,272	665	344	5,480	2,731	2,088	-
(비율)	(100.0)	(10.1)	(5.3)	(2.7)	(43.6)	(21.7)	(16.6)	(-)
2016	10,846	1,077	719	379	4,436	2,153	2,082	-
2015	8,723	835	706	350	3,149	1,998	1,685	-
2014	6,405	674	733	349	2,204	1,384	1,061	-
2013	5,158	484	794	374	1,978	1,012	516	-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2017년 기준 85.8%로 2014년 76.2%에서 상승 추세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94.6%로 전체 평균보다 10%p 정도 높다. 민간은 82.7%, 가정은 92.7%로 국공립뿐만 아니라 영아보육 중심의 가정어린이집도 부족함을 알 수 있다(표 IV-2-58 참조).

표 IV-2-58 어린이집 정원총족률: 세종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85.8	94.6	65.5	86.6	82.7	92.7	89.7	-
2016	86.2	89.4	73.6	95.5	83.4	89.4	91.3	-
2015	79.9	89.1	72.3	88.2	75.8	88.9	76.7	-
2014	76.2	90.2	75.0	87.9	71.3	83.2	69.4	-
2013	81.6	99.2	79.6	94.2	83.1	86.5	58.0	-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나) 유치원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유치원은 공립이 2017년 기준 50개원, 사립이 3개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공립 비율이 가장 높다. 학급 수도 334개 중 공립이 321개, 사립이 13개로 공립이 95% 이상을 차지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설 위주로 공립유치원을 증설해 왔기 때문에 병설과 사립은 2013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취원아 수는 2017년 기준 공립 5,117명, 사립 253명으로 총 5,370명이다. 공립유치원 취원아 수는 2013년 1천명 선이었으나 5년만에 5배 이상이 늘었고, 사립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감소 추세이다.

표 IV-2-59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세종

구분	유치원				학급			취원아 수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단설	병설							
2017	-	31	19	3	-	321	13	-	5,117	253
2016	-	23	19	3	-	243	13	-	4,629	259
2015	-	21	19	3	-	214	12	-	3,894	214
2014	-	8	19	3	-	94	13	-	1,454	245
2013	-	3	19	3	-	57	13	-	1,019	286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2016, 2017).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018.10.16. 인출).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⁴⁰⁾

세종특별자치시는 2017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6개소를 확충하였고, 2018년에는 13개소를 준비 중에 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외에도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40)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제공하지 않아 담당자 면담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공약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50%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복합시설 내에 매년 2~3개소씩 의무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 내에 공동주택단지가 다수 분포하여 관리동어린이집 전환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거주민 특성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에 영아반만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영유아 자녀를 둔 30~40세 대 가구비율이 높아 관리동 전환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반면 구도심은 거주 아동이 신도심으로 이주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이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노후화된 국공립어린이집 중심으로 리모델링비를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4) 시사점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출산율⁴¹⁾도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타 지역과 달리 공동주택단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복합시설이나 관리동어린이집 등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간다.

자. 경기

1) 영유아 인구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유아 수는 2017년 기준 총 838,610명으로 2013년 88만 명에서 매년 줄고 있다. 5세가 16.2%로 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6세 15.8%, 2,3,4세가 각각 14%, 1세 13.3%, 0세 11.0%이다. 0세는 2015년 11만 명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다(표 IV-2-60 참조).

41) 세종특별자치시 합계출산율은 2013년 1.435명, 2014년 1.354명, 2015년 1.893명, 2016년 1.821명, 2017년 1.668명임(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2018.9.20. 인출).

표 IV-2-60 | 영유아 수: 경기

단위: 명(%)

구분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17	838,610	92,366	111,697	122,017	121,953	122,070	135,985	132,522
(비율)	(100.0)	(11.0)	(13.3)	(14.5)	(14.5)	(14.6)	(16.2)	(15.8)
2016	860,224	104,099	119,264	119,772	120,371	134,576	131,257	130,885
2015	862,159	111,355	116,728	118,171	132,736	130,026	129,738	123,405
2014	866,844	109,299	116,253	131,017	128,969	129,204	123,061	129,041
2013	881,883	109,468	129,457	127,915	128,486	122,513	128,738	135,306

자료: 행정안전부(2013, 2014, 2015, 2016, 2017). 주민등록인구통계(<http://27.101.213.4/#> 2018.8.7. 인출).

2) 어린이집·유치원 공급과 이용

가) 어린이집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 수는 2017년 기준 11,825개소로 2013년 13,364개소까지 늘어났으나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5.6%로 소수이고, 민간 32.6%, 가정 57.6%로 가정어린이집 비율이 높다(표 IV-2-61 참조).

표 IV-2-61 | 어린이집 수: 경기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11,825	660	66	128	3,854	6,808	242	67
(비율)	(100.0)	(5.6)	(0.6)	(1.1)	(32.6)	(57.6)	(2.0)	(0.6)
2016	12,120	625	67	132	3,911	7,096	224	65
2015	12,689	595	68	139	4,005	7,646	170	66
2014	13,259	575	70	137	4,076	8,186	151	64
2013	13,364	546	72	134	4,035	8,387	136	54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표 IV-2-62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경기

단위: 명(%)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394,882	42,710	4,633	8,184	209,843	113,683	14,098	1,731
(비율)	(100.0)	(10.8)	(1.2)	(2.1)	(53.1)	(28.8)	(3.6)	(0.4)
2016	390,870	41,245	4,719	8,250	207,684	114,793	12,615	1,564
2015	389,398	39,052	4,724	8,526	205,330	119,663	10,556	1,547
2014	402,945	37,445	5,017	8,766	212,369	128,489	9,407	1,452
2013	397,656	36,142	5,322	8,888	208,046	129,228	8,772	1,258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17년 기준 총 394,882명이다. 2014년 40만 명까지 증가하다가 2015년 38만명 선까지 줄어들었고,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10.8%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민간은 53.1%, 가정 28.8%로 민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표 IV-2-62 참조).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2017년 기준 84.7%로 2015년 82.0%까지 줄었다가 이후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인다. 국공립어린이집은 90.1%로 전체 평균보다 높다. 2013년 93.1%에서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민간은 81.6%로 전체 평균보다 낮고, 가정은 90.7%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표 IV-2-63 참조).

표 IV-2-63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경기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84.7	90.1	80.5	78.7	81.6	90.7	79.2	85.9
2016	83.6	92.2	80.3	77.9	80.4	88.5	77.0	87.7
2015	82.0	91.1	79.8	76.0	78.8	86.2	78.7	87.0
2014	84.1	91.2	82.1	81.0	81.7	87.1	78.8	83.0
2013	84.2	93.1	84.4	83.2	82.0	85.8	80.6	85.7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나) 유치원

경기도 소재 유치원은 2017년 기준 2,258개원이다. 이중 공립유치원이 1,158개원, 사립유치원이 1,100개원으로 공립유치원이 사립보다 다소 많다.

표 IV-2-64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경기

구분	유치원				학급			취원아 수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단설	병설							
2017	-	76	1,082	1,100	-	2,831	7,846	-	46,146	148,153
2016	-	64	1,073	1,097	-	2,615	7,596	-	45,200	151,418
2015	-	58	1,059	1,071	-	2,439	6,896	-	42,447	148,846
2014	-	49	1,040	1,048	-	2,242	6,876	-	39,393	142,419
2013	-	32	1,041	1,014	-	2,055	6,211	-	38,607	143,62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2016, 2017).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018.10.16. 인출).

위례, 동탄 등의 신도시 개발로 공립유치원은 단설유치원 중심으로 확충되고, 사립유치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립 단설유치원은 2013년 32개원에서 2배 이상 증설되었다. 학급 수로는 공립이 2017년 기준 2,831개, 사립 7,846개로 병설유치원 비중이 높아 사립유치원 학급 수가 월등히 많다.

취원아 수는 2017년 기준 공립 46,146명, 사립 148,153명으로 총 194,299명이다. 공립유치원 취원아 수가 지난 5년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표 IV-2-64 참조).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⁴²⁾

가) 확충 개요

경기도에서는 공립, 직장, 공공형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50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경기도, 2018). 이 사업으로, 경기도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총 1,040개소를 확충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27.87%, 공보육 이용률 40.00%를 달성할 수 있다.

2018년에는 총 150개소가 확충되며, 확충방법별로는 신축 10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125개소, 장기임차 15개소이다. 2018년 6월 기준 신축 6개소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인 안산, 택지개발지구인 시흥 장현, 목감, 배공, 농어촌 지역인 하남 미사와 양주에 각각 추진 중 이다(경기도, 2018). 경기도는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강화 및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보육 품질 향상, 취약보육 병행으로 공공성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경기도, 2018).

■ 그림 IV-2-4 ■ 경기도 연도별 국공립, 공보육 확충 계획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확충(개소)	71	150	170	220	250	250	
운영(개소)	660	810	980	1,200	1,450	1,700	
이용률	국공립	10.82%	13.28%	16.07%	19.67%	23.77%	27.87%
	공보육	23.22%	22.95%	26.15%	30.16%	35.03%	40.00%

자료: 경기도(201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내부자료, p.6.

42)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내부자료 참고하여 작성함.

표 IV-2-65 경기도 2018년 추진현황

구분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장기임차	계
기추진(6.30)	6	66	0	72
계획	4	59	15	78
계	10	125	15	150

단위: 개소

자료: 경기도(201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내부자료, p.63.

나) 중점 추진 내용 및 지원

경기도는 인구 밀집지역 중심으로 거점형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0세아, 시간연장,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등 취약보육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을 다양화하여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등을 추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경기도, 2018).

지원단가는, 신축 최대 9억 2천2백만원, 민간 전환 1억1천만 원과 시설개선비 최대 9천만원, 장기임차 1개소 당 2억 천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자재 비용으로 1개소 당 1천만원, 전환 시 1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존시설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을 통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설개선비를 최대 90백만원 지원하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경기도, 2018)(표 IV-2-66 참조).

표 IV-2-66 경기도 유형별 지원 세부 내용

구분	내용	개소
신축	- 최대 922백만원 (국50% 도25% 시군25%)	50개소
전 환	- 개소당 110백만원 - 시설개선비 최대 90백만원 추가지원 정원 ~29명 최대 30백만원 정원 30~49명 최대 50백만원 (53%) 정원 50~79명 최대 70백만원 정원 80명 이상 최대 90백만원 (도50% 시군50%)	915개소
장기임차	- 개소당 210백만원(리모델링비 110백만원, 근저당비 100백만원)	75개소
기자재	- 개소당 10백만원(전환시 10백만원 추가지원(도50% 시군50%))	-

자료: 경기도(201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내부자료, p.3.

다) 소요예산 및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

경기도의 국공립 확충 관련 총 예산은 451,023백만 원으로 국비50%, 도비

25%, 시군비25%, 기타(민관협력) 등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경기도, 2018: 2). 연도별 세부내역은 <표 IV-2-67>에 정리하였다.

▣ 표 IV-2-67 ▣ 경기도 국공립 확충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신축												
민관협력	10	9,320	10	9,320	10	9,320	10	9,320	10	9,320	50	46,600
		7,000		7,000		7,000		-		-		21,000
공동주택 신규	90	10,800	90	10,800	90	10,800	90	10,800	90	10,800	450	54,000
리모델링 전환	35	6,300	55	9,900	105	18,900	135	24,300	135	24,300	465	83,700
장기임차	15	3,300	15	3,300	15	3,300	15	3,300	15	3,300	75	16,500

자료: 경기도(201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내부자료, p.3.

▣ 표 IV-2-68 ▣ 경기도 국공립 확충 예산 조달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국 비	13,810	15,010	18,010	19,810	19,810	86,450
도 비	7,955	9,155	12,155	13,955	13,955	57,175
시군비	7,955	9,155	12,155	13,955	13,955	57,175
기 타	7,000	7,000	7,000			21,000
계	36,720	40,320	49,320	47,720	47,720	221,800

자료: 경기도(201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내부자료, p.2.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인건비도 증액이 필요하다. 인건비는 2022년 까지 총 229,223백만 원이 필요하며, 연도별 예산 조달 계획은 <표 IV-2-69>와 같다.

▣ 표 IV-2-69 ▣ 경기도 국공립 인건비 예산 조달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국 비	9,322	21,387	35,097	48,807	114,613
도 비	4,661	10,693	17,548	24,403	57,305
시군비	4,661	10,693	17,548	24,403	57,305
계	18,644	42,773	70,193	97,613	229,223

자료: 경기도(201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내부자료, p.2.

4) 시사점

경기도는 2012년 산업단지 위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추진되지는 못하였다(양미선·임지희, 2012).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민간, 가정 어린이집 비율이 높아 향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 매입이나 장기임차 등의 확충 방법이 바람직하다. 경기도는 가정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높아 영아반 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 높다. 또한 시군에 따라, 특히 도농복합지역이 많아 동일 시군 내에서도 지역 차가 매우 크므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단지는 직장어린이집 중심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차. 강원

1) 영유아 인구

강원도 거주 영유아 수는 2017년 기준 78,458명이다. 2013년 87,391명에서 매년 감소하여 2017년에는 8만명 선이 무너졌다. 연령별로는 5세와 6세가 각각 16%대로 다수를 차지하고, 2,3,4세는 각각 14%대, 1세 13.2%, 0세 11.2% 순이다(표 IV-2-70 참조).

표 IV-2-70 | 영유아 수: 강원

구분	전체	단위: 명(%)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17	78,458	8,764	10,322	11,138	11,074	11,353	12,963	12,844
(비율)	(100.0)	(11.2)	(13.2)	(14.2)	(14.1)	(14.5)	(16.5)	(16.4)
2016	81,964	9,810	11,100	10,999	11,379	12,931	12,810	12,935
2015	83,855	10,648	10,892	11,356	12,859	12,723	12,914	12,463
2014	84,976	10,420	11,286	12,747	12,679	12,820	12,357	12,667
2013	87,391	10,703	12,612	12,522	12,728	12,281	12,609	13,936

자료: 행정안전부(2013, 2014, 2015, 2016, 2017). 주민등록인구통계(<http://27.101.213.4/#> 2018.8.7. 인출).

2) 어린이집·유치원 공급과 이용

가) 어린이집

강원도 소재 어린이집 수는 2017년 기준 총 1,149개소로, 2013년 1,265개소에서 100개소 이상 줄었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7.8%이고, 민간 34.4%, 가정 40.6%로 가정어린이집 비율이 높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3년 83개소에서 지난 5년간 7개소만 확충되었다. 사회복지법인이 9.5%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다(표 IV-2-71 참조).

표 IV-2-71 어린이집 수: 강원

구분	단위: 개소(%)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1,149	90	109	43	395	466	42	4
(비율)	(100.0)	(7.8)	(9.5)	(3.7)	(34.4)	(40.6)	(3.7)	(0.3)
2016	1,180	87	111	44	401	493	40	4
2015	1,227	87	113	45	402	545	31	4
2014	1,257	85	114	45	415	570	25	3
2013	1,265	83	115	46	412	585	20	4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17년 기준 총 41,020명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13.6%로 전국 평균 수준이고, 민간 43.1%, 가정 18.3% 정도이다. 사회복지법인이 15.2%로 타 시도에 비해 높다(표 IV-2-72 참조).

표 IV-2-72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강원

구분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41,020	5,599	6,224	1,789	17,691	7,505	2,129	83
(비율)	(100.0)	(13.6)	(15.2)	(4.4)	(43.1)	(18.3)	(5.2)	(0.2)
2016	41,743	5,477	6,553	1,946	18,122	7,688	1,871	86
2015	42,238	5,424	6,594	2,050	18,339	8,277	1,473	81
2014	44,280	5,418	7,030	2,200	19,671	8,787	1,108	66
2013	45,113	5,515	7,563	2,358	19,930	8,790	880	77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2017년 기준 평균 76.7%로 지난 5년간 80% 이하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국공립은 83.3%로 전체 평균보다

높지만 2015년 81.2%까지 떨어진 후 다시 회복세를 보인다. 민간은 74.7%로 전체 평균보다 낮고 가정은 86.7%로 전체 평균보다 높다(표 IV-2-73 참조).

표 IV-2-73 어린이집 정원총족률: 강원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단위: %	
								협동	합계
2017	76.7	83.3	71.1	65.4	74.7	86.7	76.2	66.9	
2016	76.7	81.9	71.7	68.3	75.7	84.7	72.0	69.4	
2015	75.8	81.2	69.5	70.7	74.8	82.9	72.8	69.8	
2014	78.4	83.4	73.3	72.5	77.6	84.2	76.5	84.6	
2013	79.4	86.2	77.3	74.3	78.0	82.1	78.5	78.6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나) 유치원

강원도 소재 유치원은 2017년 기준 총 375개원으로 국공립이 총 262개원, 사립이 113개원이다. 공립유치원은 지난 5년간 단설은 9개소가 증설되었고, 병설은 24개원이 줄었다. 사립은 매년 5개원 내외로 증설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학급 수는 2017년 기준 국공립이 448개, 사립이 540개로 총 988개이다. 공립유치원은 단설유치원 확충에도 불구하고 병설유치원이 크게 줄어서 30개정도만 증설된 데 반해 사립이 100개 가까이 늘어났다.

유치원 취원아 수는 2017년 기준 국공립이 6,634명, 사립이 10,804명으로 총 17,379명이다. 공립 단설유치원 증설로 공립유치원 취원아 수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사립유치원은 학급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취원아 수가 2016년 11,480명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이다. 이는 학급편성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표 IV-2-74 참조).

표 IV-2-74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강원

구분	유치원				학급			취원아 수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단설	병설							
2017	1	23	238	113	4	444	540	59	6,575	10,804
2016	1	20	244	114	4	432	531	60	6,609	11,480
2015	1	15	259	111	4	426	512	65	6,533	10,789
2014	1	14	262	108	4	423	470	66	6,053	9,828
2013	1	14	262	102	4	414	443	65	6,175	9,767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2016, 2017).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018.10.16. 인출).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⁴³⁾

강원도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목표로 총 95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확충 방법은 신축(이전, 대체 신축 포함), 기존 어린이집 매입 등 기존 공공시설 리모델링, 민간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 등이다.

2018년에는 신축 1개소, 이전 신축 2개소, 리모델링 2개소, 민간 장기임차 10개소 총 15개소 확충 중에 있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개소가 확충된다(표 IV-2-75 참조).

표 IV-2-7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용 아동수	37,000명	37,000명	37,000명	37,000명	37,000명
국공립 아동수	5,920명	8,140명	10,360명	12,580명	14,800명
확충 수	15개소	20개소	20개소	20개소	20개소
이용률	16%	22%	28%	34%	40%

자료: 강원도청(201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내부자료, p.1.

4) 시사점

강원도는 지역특성 상 농산어촌이 비율이 높고, 영서와 영동 간의 지역 차가 매우 크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원주 등 일부 지역의 인구 유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 추세이다⁴⁴⁾.

강원도는 원주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개발 지역은 신축 또는 관리동어린이집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고, 농산어촌은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중심으로 확충하거나 사회복지법인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등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43) 강원도청(201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내부자료 참고하여 작성함.

44) 강원도 합계출산율은 2013년 1.239명, 2014년 1.248명, 2015년 1.311명, 2016년 1.237명, 2017년 1.123명임(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2018.9.20. 인출).

카. 충북

1) 영유아 인구

충북 거주 영유아 수는 2017년 기준 94,031명이다. 2013년에는 10만명을 상회하였지만 이후 감소 추세이다. 5세가 16.0%로 다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6세 15.7%, 2,3,4세는 각각 14%대, 1세 13.5%, 0세 11.7%이다(표 IV-2-76 참조).

표 IV-2-76 | 영유아 수: 충북

구분	단위: 명(%)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17	94,031	11,022	12,723	13,471	13,387	13,606	15,052	14,770
(비율)	(100.0)	(11.7)	(13.5)	(14.3)	(14.2)	(14.5)	(16.0)	(15.7)
2016	97,656	12,454	13,491	13,393	13,608	15,097	14,818	14,795
2015	98,631	13,156	13,341	13,529	15,105	14,770	14,769	13,961
2014	99,865	12,986	13,545	15,076	14,869	14,834	14,030	14,525
2013	102,064	13,222	15,004	14,859	14,823	14,079	14,605	15,472

자료: 행정안전부(2013, 2014, 2015, 2016, 2017). 주민등록인구통계(<http://27.101.213.4/#> 2018.8.7. 인출).

2) 어린이집·유치원 공급과 이용

가) 어린이집

충북 소재 어린이집 수는 2017년 기준 1,186개소로 2015년 1,230개소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줄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5.1%로 소수이고, 민간 38.2%, 가정 42.0%로 민간과 가정이 비슷한 수준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 5년간 4개소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민간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가정은 2015년 557개소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줄고 있다(표 IV-2-77 참조).

표 IV-2-77 | 어린이집 수: 충북

구분	단위: 개소(%)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1,186	60	106	32	453	498	32	5
(비율)	(100.0)	(5.1)	(8.9)	(2.7)	(38.2)	(42.0)	(2.7)	(0.4)
2016	1,208	59	108	33	448	525	29	6
2015	1,230	58	107	34	445	551	28	7
2014	1,229	56	109	34	440	557	26	7
2013	1,212	56	109	35	434	552	21	5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17년 기준 49,896명으로 2014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7.7%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민간은 52.8%, 가정 16.0%로 민간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가정은 낮다. 타 시도에 비해 사회복지법인 이용 아동수 비율이 15.5%로 높은 편이다(표 IV-2-78 참조).

표 IV-2-78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충북

단위: 명(%)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49,896	3,855	7,722	2,108	26,342	7,975	1,752	142
(비율)	(100.0)	(7.7)	(15.5)	(4.2)	(52.8)	(16.0)	(3.5)	(0.3)
2016	50,014	3,879	7,820	2,186	26,279	8,123	1,574	153
2015	49,787	3,629	7,783	2,267	25,908	8,509	1,497	194
2014	51,491	3,552	8,295	2,427	26,698	8,982	1,363	174
2013	51,476	3,633	8,574	2,552	26,572	8,819	1,180	146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2017년 기준 79.7%로 2014년까지 80% 대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70% 대로 떨어졌다. 국공립어린이집은 86.1%이고, 민간과 가정도 80.0%, 88.4%로 전체 평균보다 높다. 전체 어린이집 중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원충족률이 낮아 전체 평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표 IV-2-79 참조).

표 IV-2-79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충북

단위: %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79.7	86.1	71.2	76.5	80.0	88.4	74.0	87.1
2016	79.3	86.8	70.6	75.2	79.7	86.2	75.2	84.1
2015	78.3	82.7	69.9	76.9	78.5	86.5	74.3	76.7
2014	81.5	83.8	73.4	81.3	81.9	90.4	73.2	64.0
2013	82.0	86.2	75.6	81.8	81.8	89.4	80.2	62.7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나) 유치원

충청북도 소재 유치원 수는 2017년 기준 국공립이 249개원, 사립이 96개원으로 총 345개원이다. 국공립유치원은 공립 단설유치원 증설에도 불구하고 병설유

치원 통폐원 등으로 2013년 254개원에서 줄었다. 학급 수는 2017년 기준 546개, 사립이 513개로 총 1,059개이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모두 지난 5년간 50개 내외가 증설되었다(표 IV-2-80 참조).

취원아 수는 2017년 기준 8,491명, 사립 9,860명으로 총 18,270명이다. 공립유치원은 지난 5년간 150명 정도만 증간한 데 반해 사립은 760명이 늘어났다. 사립유치원이 대규모로 증설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표 IV-2-80 참조).

표 IV-2-80 |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충북

단위: 개원, 개, 명

구분	유치원				학급			취원아 수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단설	병설							
2017	1	23	225	96	5	541	513	81	8,410	9,860
2016	1	21	229	94	5	543	511	81	8,856	9,995
2015	1	19	231	92	5	526	491	83	8,682	9,540
2014	1	18	232	93	5	498	475	83	8,293	9,113
2013	1	15	238	87	5	492	446	79	8,267	9,1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2016, 2017).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018.10.16. 인출).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충청북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지 않다. 강원도와 유사하게 지역 내 농산어촌 지역이 많고, 영유아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⁵⁾.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중앙정부가 배정하는 사업량에 따라 추진 할 계획이다.

4) 시사점

충청북도는 오송, 진천 등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일부 지역은 인구 유입이 일어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 추세이다. 오송, 진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은 단설유치원,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동어린이집 등을 추진하고, 구

45) 충청북도 합계출산율은 2013년 1.365명, 2014년 1.363명, 2015년 1.414명, 2016년 1.358명, 2017년 1.276명임(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2018.9.20. 인출).

도심 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이므로, 민간 매입 및 장기 임차 등, 농산어촌 지역은 민간 진입이 어려운데다가 영유아 인구 수 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간다.

타. 충남

1) 영유아 인구

충청남도 거주 영유아 수는 2017년 기준 133,264명이다. 지난 5년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5세가 16.1%로 다수를 차지하고, 6세 15.7%, 2,3,4세가 각각 14%대, 1세 13.4%, 0세 11.4% 정도이다(표 IV-2-81 참조).

표 IV-2-81 | 영유아 수: 충남

구분	단위: 명(%)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17	133,264	15,253	17,843	19,327	19,078	19,431	21,407	20,925
(비율)	(100.0)	(11.4)	(13.4)	(14.5)	(14.3)	(14.6)	(16.1)	(15.7)
2016	136,336	16,934	18,931	18,770	19,255	21,162	20,767	20,517
2015	136,809	18,138	18,511	18,989	20,961	20,580	20,367	19,263
2014	137,570	17,688	18,814	20,802	20,514	20,329	19,337	20,086
2013	139,918	18,159	20,618	20,441	20,266	19,391	20,063	20,980

자료: 행정안전부(2013, 2014, 2015, 2016, 2017). 주민등록인구통계(<http://27.101.213.4/#> 2018.8.7. 인출).

2) 어린이집·유치원 공급과 이용

가) 어린이집

충청남도 소재 어린이집 수는 2017년 기준 1,955개소이다. 영유아 수 감소와 함께 어린이집 수도 2013년 2,083개소에서 매년 줄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4.3% 정도이고, 가정 51.6%, 민간 32.8%로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이 80%가 넘는다. 가정어린이집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표 IV-2-82 참조).

표 IV-2-82 어린이집 수: 충남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1,955	84	121	52	642	1,009	45	2
(비율)	(100.0)	(4.3)	(6.2)	(2.7)	(32.8)	(51.6)	(2.3)	(0.1)
2016	1,974	77	125	55	647	1,029	40	1
2015	1,988	72	125	58	640	1,059	33	1
2014	2,053	68	126	59	649	1,118	30	3
2013	2,083	65	126	61	660	1,139	28	4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17년 기준 69,787명이다. 2014년 7만 명 선까지 늘어났으나 출생아 수 감소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평균 5.9%로 전국 평균의 절반도 안 되고, 민간 52.9%, 가정 23.3%로 민간 이용 비율이 높다. 이 외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10.6%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다(표 IV-2-83 참조).

표 IV-2-83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충남

단위: 명(%)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69,787	4,109	7,398	2,435	36,921	16,235	2,628	61
(비율)	(100.0)	(5.9)	(10.6)	(3.5)	(52.9)	(23.3)	(3.8)	(0.1)
2016	69,364	3,782	7,659	2,598	36,910	16,003	2,380	32
2015	68,750	3,611	7,856	2,657	36,440	16,256	1,902	28
2014	70,015	3,516	8,294	2,941	36,529	17,010	1,669	56
2013	69,395	3,354	8,579	3,240	35,528	17,140	1,459	95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2017년 기준 79.8%로 전군 평균에 못 미친다. 지난 5년간 79% 내외 선을 유지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평균 84.4%로 전체 평균보다 높고, 민간은 78.4%로 전체 평균보다 낮지만 가정은 89.5%로 높은 편이다.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법인은 평균 70.0%로 전체 평균보다 낮다(표 IV-2-84 참조).

표 IV-2-84 어린이집 정원총족률: 충남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79.8	84.4	70.0	71.3	78.4	89.5	79.0	92.4
2016	79.2	84.1	69.5	71.5	78.3	87.5	78.1	94.1
2015	78.5	84.4	70.5	70.4	77.7	87.2	69.6	82.4
2014	79.6	86.5	73.2	76.5	77.8	87.7	73.4	67.5
2013	78.7	84.8	74.0	79.3	76.2	86.9	71.2	74.2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나) 유치원

충청남도 소재 유치원 수는 2017년 기준 총 508개원이다. 이중 국공립이 371개원이고, 사립이 137개원으로 공립유치원 비율이 높다. 2013년부터 병설유치원을 통합하거나 단설유치원 증설 계획이 추진되었다. 사립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감소 추세이다. 학급 수는 공립이 646개, 사립이 924개로 총 1,570개이다. 공립유치원 증설에 따라 학급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도 학급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취원아 수는 2017년 기준 총 28,133명이다. 이중 국공립이 10,122명이고, 사립이 18,120명으로 사립이 더 많다.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 수는 공립유치원 증설에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립유치원도 증가 추세이었으나 2016년 18,528명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표 IV-2-85 참조).

표 IV-2-85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충남

구분	유치원				학급			취원아 수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단설	병설							
2017	1	21	349	137	6	640	924	109	10,013	18,120
2016	1	18	350	140	6	594	924	117	9,643	18,528
2015	1	18	349	135	6	575	800	108	9,591	17,442
2014	1	17	350	138	6	571	791	109	9,225	16,762
2013	1	16	352	138	6	560	773	81	8,896	17,43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2016, 2017).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018.10.16. 인출).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충청남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본 강원도와 유사하게 지역 내 농어촌 지역이 많고, 영유아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중앙정부가 배정하는 사업량에 따라 추진 할 계획이다.

4) 시사점

충청남도는 당진, 홍성 등 일부 지역의 도시개발로 출산율⁴⁶⁾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영유아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충청남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확충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특성 상 도농복합지역이 많아 지역 편차가 매우 크다. 영유아 밀집 지역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농어촌 지역 등은 소규모로 추진해 나간다.

파. 전북

1) 영유아 인구

전북 거주 영유아 수는 2017년 기준 101,312명으로 2013년 113,709명에서 매년 감소 추세이다. 5세와 6세가 각각 16.5%로 다수를 차지하고, 2,3,4세는 각각 14%대, 1세 12.7%, 0세 11.0% 순이다. 특히 0세는 2013년 1만 4천명에서 매년 500명 정도씩 줄고 있다(표 IV-2-86 참조).

46) 충청남도 합계출산율은 2013년 1.442명, 2014년 1.421명, 2015년 1.480명, 2016년 1.395명, 2017년 1.235명임(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2018.9.20. 인출).

표 IV-2-86 | 영유아 수: 전북

단위: 명(%)

구분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17	101,312	11,096	12,857	14,378	14,545	14,978	16,692	16,766
(비율)	(100.0)	(11.0)	(12.7)	(14.2)	(14.4)	(14.8)	(16.5)	(16.5)
2016	106,734	12,433	14,370	14,538	15,037	16,724	16,821	16,811
2015	108,996	13,771	14,399	14,924	16,627	16,691	16,739	15,845
2014	110,999	13,761	14,838	16,608	16,628	16,690	15,844	16,630
2013	113,709	14,191	16,503	16,499	16,587	15,724	16,502	17,703

자료: 행정안전부(2013, 2014, 2015, 2016, 2017). 주민등록인구통계(<http://27.101.213.4/#> 2018.8.7. 인출).

2) 어린이집·유치원 공급과 이용

가) 어린이집

전북 소재 어린이집 수는 2017년 기준 1,497개소로 지난 5년간 50개소가 줄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3.9%로 소수이고, 가정 45.8%, 민간 32.7%로 75% 이상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이다. 사회복지법인도 9.6%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표 IV-2-87 참조).

표 IV-2-87 | 어린이집 수: 전북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1,497	58	144	94	489	685	26	1
(비율)	(100.0)	(3.9)	(9.6)	(6.3)	(32.7)	(45.8)	(1.7)	(0.1)
2016	1,562	56	144	95	501	743	23	-
2015	1,623	55	144	96	502	807	19	-
2014	1,654	54	144	97	506	838	15	-
2013	1,647	54	147	97	497	841	11	-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52,105명으로 2013년 59,050명에서 7천명 정도 줄었다.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6.0%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에 민간은 46.7%, 가정 19.6%이다. 사회복지법인이 16.3%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다(표 IV-2-88 참조).

표 IV-2-88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전북

단위: 명(%)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52,105	3,118	8,517	4,883	24,326	10,218	1,023	20
(비율)	(100.0)	(6.0)	(16.3)	(9.4)	(46.7)	(19.6)	(2.0)	(-)
2016	53,798	3,017	8,842	5,036	25,201	10,866	836	-
2015	55,226	2,986	9,019	5,303	25,525	11,674	719	-
2014	58,328	3,057	9,649	5,534	27,290	12,296	502	-
2013	59,050	3,070	9,859	5,744	27,716	12,346	315	-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표 IV-2-89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전북

단위: %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74.8	83.6	70.7	69.6	73.5	84.3	63.9	100.0
2016	74.8	83.0	72.6	70.5	72.8	83.3	62.6	0.0
2015	74.9	82.0	72.9	73.5	72.5	82.6	61.1	0.0
2014	77.5	85.5	78.0	75.8	74.8	84.1	56.5	0.0
2013	78.5	86.0	77.8	77.4	76.2	84.3	61.5	0.0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2017년 기준 74.8%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2013년 78.5%에서 2015년 74%대로 떨어진 이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83.6%로 전체 평균보다 높다. 민간은 73.5%로 전체 평균보다 낮지만, 가정 84.3%로 전체 평균보다 높다(표 IV-2-89 참조).

나) 유치원

전라북도 소재 유치원 수는 2017년 기준 공립유치원이 365개원, 사립유치원이 171개원으로 총 536개원이다. 단설유치원은 매년 1~2개원씩 신증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병설유치원은 줄고 있다. 사립유치원도 2013년 162개원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급 수로는 공립이 2017년 기준 602개, 사립이 1,020개로 총 1,622개이다. 공사립 유치원 모두 신증설에 따라 학급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표 IV-2-90 참조).

한편, 취원아 수는 공립유치원이 2017년 기준 8,407명, 사립유치원이 17,361명으로 총 25,768명이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학급 수 증가와 맞물려 유치원

이용 유아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표 IV-2-90 참조).

표 IV-2-90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전북

단위: 개원, 개, 명

구분	유치원				학급			취원아 수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단설	병설							
2017	-	20	345	171	-	602	1,020	-	8,407	17,361
2016	-	19	343	170	-	592	986	-	8,622	17,767
2015	-	18	343	169	-	568	958	-	8,128	16,931
2014	-	16	345	165	-	559	897	-	7,410	15,886
2013	-	14	347	162	-	544	888	-	7,063	16,20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2016, 2017).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018.10.16. 인출).

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전라북도에는 부지 및 설치비, 어린이집 운영비 등의 예산 부담, 민간어린이집의 반발,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불필요 등의 이유로 시도 단위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는 중앙정부가 배정하는 사업량 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4) 시사점

전라북도는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⁴⁷⁾ 출생아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특히 앞서 살펴본 강원, 충청 지역 등과 유사하게 농산어촌 지역이 많아 일부 지역은 인구소멸 위험단계까지 처해 있다. 또한 전라북도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비율이 높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쉽지 않다. 도시지역 등 영유아 인구밀집 지역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고, 농산어촌 등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참여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간다.

47) 전라북도 합계출산율은 2013년 1.320명, 2014년 1.329명, 2015년 1.352명, 2016년 1.251명, 2017년 1.151명임(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2018.9.20. 인출).

하. 전남

1) 영유아 인구

전라남도 거주 영유아 수는 2017년 기준 103,413명으로 2013년 112,187명에서 매년 줄고 있다. 5세가 16.3%로 다수이고, 6세 15.9%, 2,3,4세 각각 14%대, 1세 13.4%, 0세 11.5%이다. 특히 0세는 2016년 이후 감소 폭이 더 커졌다(표 IV-2-91 참조).

▣ 표 IV-2-91 ▣ 영유아 수: 전남

구분	전체	단위: 명(%)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17	103,413	11,940	13,841	14,808	14,607	15,001	16,813	16,403
(비율)	(100.0)	(11.5)	(13.4)	(14.3)	(14.1)	(14.5)	(16.3)	(15.9)
2016	108,200	13,591	15,035	14,702	15,151	16,837	16,594	16,290
2015	109,694	14,711	14,846	15,261	16,774	16,488	16,380	15,234
2014	109,834	14,361	15,258	16,690	16,301	16,239	15,302	15,683
2013	112,187	14,974	16,803	16,331	16,248	15,293	15,807	16,731

자료: 행정안전부(2013, 2014, 2015, 2016, 2017). 주민등록인구통계(<http://27.101.213.4/#> 2018.8.7. 인출).

2) 어린이집·유치원 공급과 이용

가) 어린이집

전남 소재 어린이집 수는 2017년 기준 1,241개소이다. 타 시도와 달리 2016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는 매년 줄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8.1%로 10% 미만이나 민간은 32.6%, 가정 38.4%로 전체 어린이집의 과반이 넘는다. 사회복지법인도 14.1%로 다수를 차지한다(표 IV-2-92 참조).

▣ 표 IV-2-92 ▣ 어린이집 수: 전남

구분	전체	단위: 개소(%)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1,241	101	175	53	404	476	30	2
(비율)	(100.0)	(8.1)	(14.1)	(4.3)	(32.6)	(38.4)	(2.4)	(0.2)
2016	1,251	97	174	55	406	490	27	2
2015	1,238	91	174	54	406	488	23	2
2014	1,242	86	175	54	408	498	20	1
2013	1,222	80	178	54	389	506	14	1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17년 기준 53,772명으로 2013년 56,334명에서 매년 줄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9.5%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민간은 44.9%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가정은 14.0%로 낮으며, 사회복지법인인은 22.2%로 타 시도에 비해 많다(표 IV-2-93 참조).

■ 표 IV-2-93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전남

단위: 명(%)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53,772	5,113	11,943	3,129	24,150	7,549	1,811	77
(비율)	(100.0)	(9.5)	(22.2)	(5.8)	(44.9)	(14.0)	(3.4)	(0.1)
2016	54,708	4,960	12,354	3,305	24,741	7,669	1,599	80
2015	54,647	4,617	12,546	3,361	24,990	7,709	1,338	86
2014	56,105	4,456	13,107	3,460	25,873	8,006	1,135	68
2013	56,334	4,298	13,751	3,684	25,865	7,992	677	67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2017년 기준 76.5%로 2013년 80.7%에서 매년 떨어지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7년 84.5%로 최근 상승 추세를 보이나, 민간은 76.6%, 가정은 87.4%로 매년 내려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정원충족률이 68.5%로 전체 평균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표 IV-2-94 참조).

■ 표 IV-2-94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전남

단위: %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76.5	84.5	68.5	73.5	76.6	87.4	80.9	82.8
2016	77.2	84.9	70.2	75.3	77.2	87.0	77.9	86.0
2015	77.2	81.9	71.2	76.9	77.0	88.3	71.0	92.5
2014	79.2	82.5	73.5	78.9	79.5	90.2	64.2	93.2
2013	80.7	82.7	76.5	83.7	80.7	88.8	62.2	91.8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나) 유치원

전라남도 소재 유치원 수는 2017년 기준 총 553개원이다. 이중 공립이 436개원, 사립이 117개원이다. 공립 단설유치원은 매년 2~3개원씩 신증설되고, 병설은 2013년 420개원에서 통폐합되고 있다. 사립은 2013년 111개원에서 2012년



117개원으로 늘어난 후 변동이 없다. 학급 수로는 공립이 788개, 사립이 623개로 총 1,411개이다. 공립 단설유치원 신증설로 학급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사립은 유치원 수 변동이 없지만 학급 증설이나 학급편성기준 강화 등으로 학급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표 IV-2-95 참조).

표 IV-2-95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전남

단위: 개원, 개, 명

구분	유치원			학급			취원아 수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단설	병설							
2017	-	23	413	117	-	788	623	-	10,675	10,035
2016	-	20	416	117	-	758	626	-	10,477	10,324
2015	-	17	418	117	-	730	617	-	9,869	10,114
2014	-	15	419	117	-	703	544	-	9,400	9,551
2013	-	15	420	111	-	687	503	-	9,040	9,85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2016, 2017).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018.10.16. 인출).

유치원 취원아 수는 2017년 기준 공립 10,675명, 사립 10,035명으로 총 20,710명이다. 앞서 살펴본 공사립 유치원 학급 수 신증설 등에 따라 취원아 수도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다(표 IV-2-95 참조).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⁴⁸⁾

전라남도는 2018년 국비 매칭 사업으로 27개소 확충을 진행 및 계획 중이며, 신축 1개소와 하나은행 매칭 사업 1개소를 포함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과거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 단위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1개소씩 설치 사업한 바 있었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읍면지역에 다수 분포하지만,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운영 상의 어려움으로 휴원하는 어린이집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영유아 수 감소로 2017년 말 대비 30개소 정도가 폐쇄한 데 반해, 나주혁신도시 등 일부 신도시는 보육 수요가 증가하여 지역 편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전라남도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의 국비

48) 전라남도 도청 담당자 면담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부담비율을 높이지 않는 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에 따라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재정여건에 국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4) 시사점

전라남도는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전반적으로 출산율 하락으로 영유아 인구가 감소 추세이다. 해남 등 일부 지자체의 출산양육지원정책 추진으로 출산율이 상승하기도 하지만, 지역 내에 농산어촌이 다수 분포하여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민간·가정이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쉽지 않다. 도시지역은 민관 협력 차원에서 매입 및 장기임차 등의 방법으로 국공립을 확충하고, 농산어촌 지역은 공공형 전환, 사회복지법인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보육의 질을 개선해 나간다.

가. 경북

1) 영유아 인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영유아 수는 2017년 기준 149,782명으로 감소 추세이다. 5세와 6세가 15%대, 2,3,4세는 각각 14%대, 1세 13.7%, 0세 11.6% 순이다 (표 IV-2-96 참조).

표 IV-2-96 영유아 수: 경북

구분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17	149,782	17,336	20,532	22,055	21,477	21,676	23,880	22,826
(비율)	(100.0)	(11.6)	(13.7)	(14.7)	(14.3)	(14.5)	(15.9)	(15.2)
2016	155,467	19,987	22,382	21,724	21,892	24,074	23,020	22,388
2015	156,764	21,798	21,913	22,014	24,184	23,081	22,517	21,257
2014	157,132	21,267	22,174	24,280	23,213	22,602	21,413	22,183
2013	159,692	21,513	24,548	23,368	22,783	21,553	22,391	23,536

단위: 명(%)

자료: 행정안전부(2013, 2014, 2015, 2016, 2017). 주민등록인구통계(<http://27.101.213.4/#> 2018.8.7. 인출).

49) 전라남도 합계출산율은 2013년 1.518명, 2014년 1.497명, 2015년 1.549명, 2016년 1.466명, 2017년 1.325명임(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2018.9.20. 인출).

2) 어린이집·유치원 공급과 이용

가) 어린이집

어린이집 수는 2017년 기준 2,063개소로 2013년 이후 10%p 이상 줄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6.8%로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 5년간 8개소만 확충되었다. 민간은 41.8%, 가정 43.1%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80%를 상회한다(표 IV-2-97 참조).

표 IV-2-97 어린이집 수: 경북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2,063	140	82	39	862	890	49	1
(비율)	(100.0)	(6.8)	(4.0)	(1.9)	(41.8)	(43.1)	(2.4)	(-)
2016	2,102	137	83	39	886	913	43	1
2015	2,130	134	84	39	891	944	38	-
2014	2,212	133	84	39	907	1,017	32	-
2013	2,273	132	85	39	924	1,067	26	-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17년 70,901명으로 2015년 7만명 선으로 떨어진 이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8.2%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대신 민간은 58.0%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3/5이 민간어린이집에 다닌다. 가정은 19.0%로 소수이고 사회복지법인은 7.8%로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많다(표 IV-2-98 참조).

표 IV-2-98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경북

단위: 명(%)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70,901	5,803	5,559	1,997	41,143	13,462	2,863	74
(비율)	(100.0)	(8.2)	(7.8)	(2.8)	(58.0)	(19.0)	(4.0)	(0.1)
2016	71,010	5,862	5,607	2,119	41,544	13,472	2,370	36
2015	70,860	5,662	5,659	2,109	41,717	13,836	1,877	-
2014	73,271	5,705	5,827	2,235	43,449	14,533	1,522	-
2013	73,825	5,704	6,108	2,369	43,495	14,796	1,353	-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표 IV-2-99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경북

구분	단위: %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76.5	78.4	71.4	68.1	75.3	84.7	72.6	98.7
2016	75.6	81.0	70.0	71.6	74.1	83.7	67.8	66.7
2015	75.4	79.8	69.1	70.8	73.7	84.2	69.6	-
2014	76.6	80.6	69.1	74.6	75.7	83.3	66.0	-
2013	75.4	80.8	69.1	79.0	73.8	81.2	71.8	-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2017년 기준 76.5%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2015년 75.4%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반등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78.4%로 전체 평균보다는 높지만, 80~90%대의 타 시도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가정은 84.7%로 최근 정원충족률이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민간은 75.3%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표 IV-2-99 참조).

나) 유치원

경상북도 소재 유치원 수는 2017년 기준 총 710개원으로, 공립이 462개원, 사립이 248개원으로 공립유치원 수가 더 많다. 공립 단설유치원은 2~3년마다 1개원씩 신·증설되고 있고, 병설유치원은 통·폐원되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2014년 250개원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학급 수로는 공립이 2017년 기준 712개, 사립이 1,401개로 총 2,113개이다. 공립유치원은 신증설에 따라 학급 수가 증가하고, 사립유치원도 학급 증설 및 학급편성 기준 강화 등으로 학급 수가 늘어나고 있다(표 IV-2-100 참조).

취원아 수는 2017년 기준 공립 10,962명, 사립 28,872명으로 총 39,836명이다. 공사립유치원 모두 신증설에도 전체 영유아 수 감소로 이용 유아 수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표 IV-2-100 참조).

표 IV-2-100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경북

단위: 개원, 개, 명

구분	유치원				학급			취원아 수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단설	병설							
2017	-	13	449	248	-	712	1,401	-	10,962	28,874
2016	-	13	448	246	-	699	1,417	-	11,183	29,002
2015	-	12	451	248	-	690	1,365	-	10,889	27,774
2014	-	10	456	250	-	685	1,372	-	10,542	26,732
2013	-	10	457	236	-	681	1,235	-	10,032	27,19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2016, 2017).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018.10.16. 인출).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⁵⁰⁾

경상북도는 2018년 신축 2개소, 리모델링 4개소, 장기임차 2개소, 총 8개소 확충이 확정되었으며, 2019년에는 10개소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4) 시사점

경상북도도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⁵¹⁾ 전반적으로 영유아 인구가 감소 추세이다. 그러나 전라지역보다는 인구 감소 속도가 느린 편이다. 앞서 살펴본 전라남북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사회복지법인 및 민간 어린이집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급 및 이용 비율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정원충족률도 낮아서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경상북도는 타 지역에 비해 민간어린이집 비율이 높지만 정원충족률이 낮아서 운영 상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민간협력 차원에서 매입 및 장기임차 등의 수단으로 추진해 나간다.

50) 경상북도 담당자와의 전화면담 내용 정리하여 작성함.

51) 경상북도 합계출산율은 2013년 1.379명, 2014년 1.408명, 2015년 1.464명, 2016년 1.396명, 2017년 1.256명임(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2018.9.20. 인출).

나. 경남

1) 영유아 인구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영유아는 2017년 기준 210,705명이다. 2016년 22만명 선 이하로 떨어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이다. 5세가 16.2%로 다수이고, 6세 15.9%, 2,3,4세 각각 14%대, 1세 13.2%, 0세 11.1% 순이다(표 IV-2-101 참조).

표 IV-2-101 영유아 수: 경남

구분	단위: 명(%)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17	210,705	23,286	27,766	30,553	30,861	30,692	34,149	33,398
(비율)	(100.0)	(11.1)	(13.2)	(14.5)	(14.6)	(14.6)	(16.2)	(15.9)
2016	217,810	26,483	30,104	30,549	30,486	33,965	33,278	32,945
2015	220,697	28,811	30,291	30,444	33,893	33,329	32,962	30,967
2014	222,564	29,023	30,119	33,765	33,226	32,908	30,988	32,535
2013	225,581	28,797	33,468	32,974	32,759	30,917	32,421	34,245

자료: 행정안전부(2013, 2014, 2015, 2016, 2017). 주민등록인구통계(<http://27.101.213.4/#> 2018.8.7. 인출).

2) 어린이집·유치원 공급과 이용

가) 어린이집

어린이집 수는 2017년 3,084개소로 2013년 3,626개소에서 500개소 넘게 줄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4.7%이고, 민간은 36.0%, 가정 52.8%로 가정어린이집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표 IV-2-102 참조).

표 IV-2-102 어린이집 수: 경남

구분	단위: 개소(%)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3,084	145	98	47	1,109	1,627	54	4
(비율)	(100.0)	(4.7)	(3.2)	(1.5)	(36.0)	(52.8)	(1.8)	(0.1)
2016	3,158	140	99	47	1,120	1,706	43	3
2015	3,349	137	101	50	1,140	1,880	38	3
2014	3,533	135	99	51	1,141	2,075	29	3
2013	3,626	133	102	51	1,115	2,197	26	2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17년 기준 103,717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감소 폭이 적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8.9%로 전체 평균보다 낮다. 대신 민간은 53.6%, 가정 25.3%로 높다(표 IV-2-103 참조).

표 IV-2-103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경남

단위: 명(%)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103,717	9,204	6,657	2,793	55,592	26,249	3,049	173
(비율)	(100.0)	(8.9)	(6.4)	(2.7)	(53.6)	(25.3)	(2.9)	(0.2)
2016	103,822	8,865	6,759	2,898	55,834	26,814	2,505	147
2015	105,271	8,571	6,736	3,043	55,749	28,719	2,322	131
2014	108,121	8,590	6,958	3,089	56,507	31,078	1,784	115
2013	106,745	8,839	7,110	3,109	54,871	31,225	1,553	38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표 IV-2-104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경남

단위: %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82.1	89.3	79.3	77.0	79.4	87.7	77.6	97.2
2016	81.5	88.6	78.9	78.6	79.2	86.1	77.0	91.3
2015	80.6	86.3	78.4	77.8	78.7	83.9	76.5	81.4
2014	81.2	88.0	82.6	78.7	79.4	82.8	78.3	86.5
2013	80.3	91.2	83.3	80.5	79.1	79.0	78.9	95.0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2017년 기준 82.1%로 지난 5년간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15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89.3%로 2015년 86.3%까지 떨어진 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은 79.4%로 전체 평균보다 낮다. 그러나 가정은 87.7%로 높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보다 어린이집 수 감소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정원충족률이 상승하는 것이다(표 IV-2-104 참조).

나) 유치원

경상남도 소재 유치원 수는 2017년 기준 총 690개원으로, 이중 공립이 418개원, 사립이 272개원이다. 공립 단설유치원은 2015년 24개원으로 신증설된 이후 변동이 없고, 병설유치원은 통폐합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변동이 크지는 않다. 학급 수로는 공립이 737개, 사립이 1,771개로 총 2,508개이다. 공사립 유치원 모두 신증설 및 학급편성기준 강화 등에 따라 학급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취원아 수는 2017년 기준 공립 11,694명, 사립 39,953명으로 총 51,647명이다. 영유아 인구 수 감소 등으로 공사립유치원 모두 이용 유아수가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표 IV-2-105 참조).

표 IV-2-105 |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경남

단위: 개원, 개, 명

구분	유치원				학급			취원아 수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단설	병설							
2017	-	24	394	272	-	737	1,771	-	11,694	39,953
2016	-	24	391	271	-	716	1,770	-	11,892	40,594
2015	-	24	391	264	-	698	1,703	-	11,646	38,934
2014	-	22	397	263	-	687	1,617	-	11,461	37,550
2013	-	19	404	260	-	693	1,596	-	11,487	38,88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2016, 2017).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018.10.16. 인출).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⁵²⁾

경상남도는 부지 및 설치비, 어린이집 운영비 등의 예산 부담, 민간어린이집의 반발,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불필요 등의 이유로 시도 단위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가 배정해 주는 사업량 범위 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4) 시사점

경상남도도 출산율 하락으로⁵³⁾ 영유아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특히 민간·가정 어린이집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국공립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모두 전국 평균 수준이다. 경상북도 지

52) 경상남도 담당자와의 전화면담 내용 정리하여 작성함.

53) 경상북도 합계출산율은 2013년 1.367명, 2014년 1.409명, 2015년 1.437명, 2016년 1.358명, 2017년 1.227명임(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2018.9.20. 인출).

역과 마찬가지로 농산어촌 비중이 높아 지역 간의 편차가 매우 크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우선 영유아 인구밀집 지역 중심으로 추진하고, 농산어촌 등 영유아 인구지역은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간다.

다. 제주

1) 영유아 인구

제주시 영유아 수는 2017년 기준 43,617명이다. 최근 유입 인구 증가로 영유아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5세와 6세가 각각 16%대, 2,3,4세 각각 14%대, 1세 13.2%, 0세 11.3% 순이다(표 IV-2-106 참조).

표 IV-2-106 영유아 수: 제주

구분	단위: 명(%)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17	43,617	4,939	5,745	6,144	6,287	6,358	7,173	6,971
(비율)	(100.0)	(11.3)	(13.2)	(14.1)	(14.4)	(14.6)	(16.4)	(16.0)
2016	43,861	5,385	5,915	6,082	6,131	6,913	6,694	6,741
2015	43,066	5,509	5,852	5,865	6,643	6,452	6,479	6,266
2014	42,247	5,427	5,635	6,403	6,203	6,253	6,047	6,279
2013	42,038	5,226	6,191	5,997	6,015	5,864	6,087	6,658

자료: 행정안전부(2013, 2014, 2015, 2016, 2017). 주민등록인구통계(<http://27.101.213.4/#> 2018.8.7. 인출).

2) 어린이집·유치원 공급과 이용

가) 어린이집

어린이집 수는 2017년 기준 527개소로 최근 10%p 이상 줄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5.5%, 민간이 44.2%, 가정 25.6%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3년 21개소이었으나, 최근 5년간 8개소 정도만 확충되었다. 타 지역에 비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비율이 14.2%로 높은 편이다(표 IV-2-107 참조).

표 IV-2-107 어린이집 수: 제주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527	29	75	39	233	135	16	-
(비율)	(100.0)	(5.5)	(14.2)	(7.4)	(44.2)	(25.6)	(3.0)	(-)
2016	543	27	76	39	245	142	14	-
2015	574	26	77	40	260	159	12	-
2014	599	24	77	40	274	175	9	-
2013	604	21	78	40	276	181	8	-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표 IV-2-108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제주

단위: 명(%)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27,191	1,922	6,475	2,845	12,722	2,369	858	-
(비율)	(100.0)	(7.1)	(23.8)	(10.5)	(46.8)	(8.7)	(3.2)	(-)
2016	27,231	1,813	6,357	2,842	13,032	2,452	735	-
2015	27,109	1,623	6,271	2,768	13,268	2,585	594	-
2014	27,402	1,502	6,332	2,736	13,536	2,785	511	-
2013	27,256	1,366	6,557	2,889	13,307	2,782	355	-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17년 기준 27,191명으로 이용 아동 수가 줄고 있으나, 감소폭이 크지는 않는다. 영유아 수가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하였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23.8%로 높다(표 IV-2-108 참조).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2017년 기준 89.1%로 2016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국공립은 97.2%, 민간도 91.5%, 가정 93.4%로 공급 부족 현상을 보인다. 사회복지법인이 타 시도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80%대로 높다(표 IV-2-109 참조).

표 IV-2-109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제주

단위: %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2017	89.1	97.2	85.6	86.1	91.5	93.4	69.1	-
2016	87.3	95.5	83.3	85.6	90.1	91.8	62.2	-
2015	82.6	87.8	81.0	81.9	83.4	86.7	61.0	-
2014	83.0	84.6	80.8	80.4	84.3	85.3	75.9	-
2013	82.1	93.7	79.3	84.4	82.4	82.1	72.4	-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보육통계.

나) 유치원

제주도 소재 유치원 수는 2017년 기준 공립이 96개원, 사립 22개원으로 총 118개원이다. 공립 단설유치원은 1개소도 없고 병설유치원만 있다. 병설유치원은 매년 2~3개원 정도씩 늘어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2013년 이후 변동이 없다. 학급 수로는 공립이 142개, 사립이 116개로 총 258개이다. 병설유치원은 신증설에 따라 학급수가 늘지만 사립은 이용 영유아 수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취원아 수는 2017년 기준 공립 2,811명, 사립 3,082명으로 총 5,893명이다. 공립유치원 이용 유아 수는 2016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줄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학급 수와 유사하게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표 IV-2-110 유치원 및 학급, 취원아 수: 제주

단위: 개원, 개, 명

구분	유치원			학급			취원아 수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단설	병설							
2017	-	-	96	22	-	142	116	-	2,811	3,082
2016	-	-	96	22	-	144	115	-	2,818	3,125
2015	-	-	95	22	-	137	115	-	2,516	3,031
2014	-	-	92	22	-	131	120	-	2,279	3,017
2013	-	-	90	22	-	125	119	-	2,187	3,10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2015, 2016, 2017).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018.10.16. 인출).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⁵⁴⁾

제주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사회복지법인,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등 인건비 지원시설의 비율이 높고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40% 확충 목표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여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제주는 교사 수급이 어려우며, 인구 유입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말과 비교하여 2018년 상반기에 영아가 500명 가량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 정원도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도

54) 제주도청 보육담당자와의 면담 내용 정리하여 작성함.

수요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법 중 민간 장기임차로 2018년 상반기 3개소를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임차 전환을 신청하는 어린이집은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법인도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 해산 등으로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제주도는 민간 매입이나 장기임차보다 신축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희망하지만, 현재 정부의 분담비율이 50% 수준이기 때문에 신축비가 현실화되지 않는 한 신축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시사점

제주도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⁵⁵⁾, 영유아 인구 수는 인구 유입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비율이 높은 편이며, 민간어린이집은 다소 낮다. 또한 정원충족률이 90% 정도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도 정원충족률이 97~99% 사이로 어린이집 공급 자체가 시급한 지역이다. 따라서 민간 매입이나 장기임차 등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쉽지 않다. 제주도 자체 재원 마련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3 시사점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즉,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및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증설) 계획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출산율이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지역 특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역별 어린이집 유형 분포와 최근 5년 간의 추이를 검토하여 확충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

55) 제주도 합계출산율은 2013년 1.427명, 2014년 1.481명, 2015년 1.477명, 2016년 1.432명, 2017년 1.305명임(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2018.9.20. 인출).

둘째, 민간 장기입차 확충방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17개 시도 대부분 민간 장기입차를 신청한 어린이집들은 보육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영유아 모집이 안 되는 어린이집이 대부분으로 민간 장기입차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다.

셋째, 공영형 사립유치원이나 개방형유치원은 시범사업 평가 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공영형유치원의 경우 대상 선정기준이 아직 객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성평가에 의해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업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시도교육청에서도 조심스럽게 1~2개소 정도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V

어린이집·유치원 수급 및 국공립 확충 관련 애로 및 요구

1.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2.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
3. 시사점



V. 어린이집·유치원 수급 및 국공립 확충 관련 애로 및 요구

제5장에서는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의 어려움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과 사립유치원의 매입형 또는 공영형유치원 전환 관련 지원기준 및 심사기준, 운영기준 등의 적절성 등을 알아보았다. 이와 함께 민간·가정 어린이집 퇴출구조 마련을 위한 폐쇄조건과 현장 의견 등을 살펴보았다.

1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1절은 저출산 또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관련 의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설의 애로 및 요구 등을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퇴출구조 마련을 위한 조건 등을 제시하였다.

가. 영유아 모집의 어려움

최근 출생아 수 감소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등으로 영유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중 45.8%는 어느 정도 있다, 28.2%는 매우 많다고 답하여 70% 이상이 영유아 모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 정도는 4점 평균 2.9점으로 중간 이상이었다. 어려움 정도는 기관유형과 현원 및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국공립보다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현원이 적을수록, 중소도시나 대도시에서 영유아 모집의 어려움 정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표 V-1-1 참조).

【표 V-1-1】 최근 원아모집 어려움 경험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없음	거의 없음	어느 정도 있음	매우 많음	계(수)	4점 평균
전체	8.7	17.3	45.8	28.2	100.0(485)	2.9
기관 유형						
국공립	14.6	26.6	41.7	17.2	100.0(192)	2.6
민간	2.2	14.3	49.5	34.1	100.0(91)	3.2
가정	5.9	9.9	48.0	36.1	100.0(202)	3.1
X ² (df)/F			45.3(6)***			22.4***
현원규모						
20인 이하	9.1	12.1	44.2	34.6	100.0(231)	3.0
21~39인 이하	4.1	17.6	48.6	29.7	100.0(74)	3.0
40~79인 이하	6.7	22.5	46.7	24.2	100.0(120)	2.9
80~99인 이하	20.0	25.0	45.0	10.0	100.0(40)	2.5
100인 이상	10.0	30.0	50.0	10.0	100.0(20)	2.6
X ² (df)/F			28.6(12)**			5.0**
지역규모						
대도시	9.7	17.8	47.2	25.3	100.0(360)	2.9
중소도시	4.5	12.5	44.3	38.6	100.0(88)	3.2
읍면지역	8.1	24.3	35.1	32.4	100.0(37)	2.9
X ² (df)/F			10.3(6)			3.8*

주: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 정도가 많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최근 영유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 이유를 1,2순위로 조사하였다.

【표 V-1-2】 원아모집 어려운 이유: 1+2순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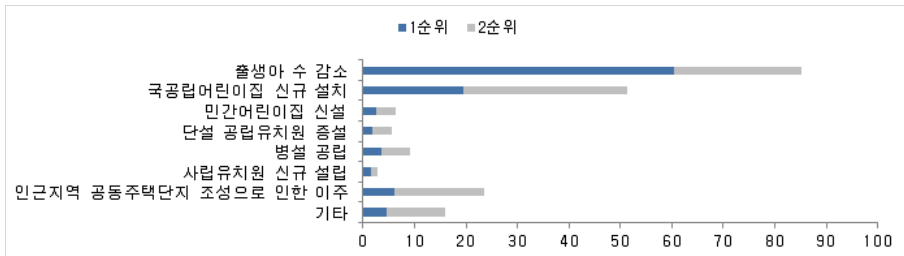
구분	출생아 수 감소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민간어린이집 신설	단설공립유치원 증설	병설공립유치원 증설	사립유치원 신규 설립	인근지역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이주	기타	계(수)
1순위	60.4	19.5	2.5	1.9	3.6	1.4	6.1	4.5	100.0(359)
2순위	24.8	31.8	3.9	3.6	5.6	1.4	17.5	11.4	100.0(359)
1+2순위	85.2	51.3	6.4	5.5	9.2	2.8	23.6	15.9	(35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1순위는 출생아 수 감소가 60.4%로 가장 많고,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19.5%, 인근지역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이주 6.1%, 병설유치원 증설 3.6%, 민간어린이집 신설 2.5% 순이다. 2순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31.8%, 출생아 수 감소 24.8%, 인근지역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이주

17.5%, 병설 공립유치원 증설 5.6%, 민간어린이집 신설 3.9%, 단설 공립유치원 증설 3.6% 순이다. 1,2순위를 합산하면, 출생아 수 감소 85.2%,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51.3%, 인근지역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이주 23.6%, 병설공립유치원 9.2%, 민간어린이집 신설 6.4%, 단설 공립유치원 증설 9.2% 순이었다.

■ 그림 V-1-1 ■ 원아모집 어려운 이유: 1+2순위



자료: <표 V-1-2>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표 V-1-3>은 영유아 모집이 어려운 이유 1순위를 제 특성별로 살펴본 것이다.

■ 표 V-1-3 ■ 영유아 모집이 어려운 이유: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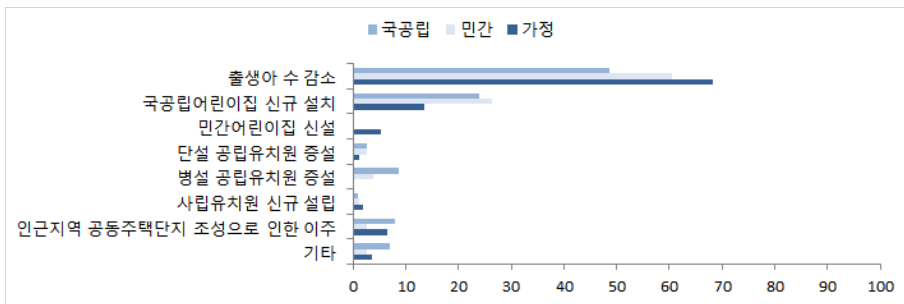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출생아 수 감소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민간어린이집 신설	단설 공립유치원 증설	병설 공립유치원 증설	사립유치원 신규 설립	인근지역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이주	기타	계(수)
전체	60.4	19.5	2.5	1.9	3.6	1.4	6.1	4.5	100.0(359)
기관 유형									
국공립	48.7	23.9	-	2.7	8.8	0.9	8.0	7.1	100.0(113)
민간	60.5	26.3	-	2.6	3.9	1.3	2.6	2.6	100.0(76)
가정	68.2	13.5	5.3	1.2	-	1.8	6.5	3.5	100.0(170)
현원규모									
20인 이하	69.2	13.2	4.9	1.1	-	1.6	6.0	3.8	100.0(182)
21~39인 이하	46.6	29.3	-	-	5.2	3.4	8.6	6.9	100.0(58)
40~79인 이하	57.6	23.5	-	3.5	8.2	-	3.5	3.5	100.0(85)
80~99인 이하	54.5	18.2	-	4.5	4.5	-	9.1	9.1	100.0(22)
100인 이상	25.0	41.7	-	8.3	16.7	-	8.3	-	100.0(12)
지역규모									
대도시	58.2	21.8	3.4	1.5	4.2	0.8	4.2	5.7	100.0(261)
중소도시	63.0	16.4	-	2.7	2.7	1.4	12.3	1.4	100.0(73)
읍면지역	76.0	4.0	-	4.0	-	8.0	8.0	-	100.0(2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영유아 모집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어린이집 유형과 상관없이 출생아 수 감소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가정, 민간, 국공립 어린이집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국공립은 병설 공립유치원 증설에 따른 어려움이 민간·가정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20인 이하 소규모에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고 있고, 100인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나 병설 공립유치원 증설에 따른 어려움 등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일수록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다(표 V-1-3 참조).

■ 그림 V-1-2 ■ 어린이집 유형별 영유아 모집이 어려운 이유: 1순위



자료: <표 V-1-3>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집 원장들은 언론 보도나 지역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쇄로 인하여 영유아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이 실제로 이를 체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응답자 중 42.3%는 어느 정도 체감, 36.7%는 매우 많이 체감한다고 답하여서 80% 가까이가 실제로 영유아 수 감소를 체감하고 있었다. 체감 정도는 4점 척도로 평균 3.1점으로 높은 편이었다(표 V-1-4 참조).

■ 표 V-1-4 ■ 원아수 감소 체감 여부

구분	단위: %(명), 점				계(수)	평균
	전혀 모름	모름	어느 정도 체감	매우 많이 체감		
전체	6.8	14.2	42.3	36.7	100.0(485)	3.1
기관 유형						
국공립	9.4	23.4	39.6	27.6	100.0(192)	2.9
민간	4.4	6.6	42.9	46.2	100.0(91)	3.3
가정	5.4	8.9	44.6	41.1	100.0(202)	3.2
X ² (df)/F			30.6(6)***			12.2***

(표 V-1-4 계속)

구분	전혀 모름	모름	어느 정도 체감	매우 많이 체감	계(수)	평균
현원규모						
20인 이하	7.8	11.3	42.4	38.5	100.0(231)	3.1
21~39인 이하	2.7	13.5	48.6	35.1	100.0(74)	3.2
40~79인 이하	4.2	18.3	38.3	39.2	100.0(120)	3.1
80~99인 이하	17.5	15.0	42.5	25.0	100.0(40)	2.8
100인 이상	5.0	25.0	40.0	30.0	100.0(20)	3.0
$X^2(df)/F$			18.1(12)			1.9
지역규모						
대도시	8.3	14.4	42.8	34.4	100.0(360)	3.0
중소도시	1.1	11.4	42.0	45.5	100.0(88)	3.3
읍면지역	5.4	18.9	37.8	37.8	100.0(37)	3.1
$X^2(df)/F$			9.1(6)			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제 특성별로 보면,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공립보다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대도시나 읍면지역보다 중소도시에서 영유아 수 감소를 체감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표 V-1-4 참조).

〈표 V-1-5〉와 〈표 V-1-6〉은 재원 아동 수가 이전보다 감소하였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원충족률이 최고 수준일 때, 예를 들어 2012년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지원 이후와 비교하여 원아 수가 어느 정도 줄었는지를 추가 질문한 것이다. 영아반과 유아반 각각 살펴보았다.

먼저, 영아반의 정원충족률 변화를 알아보았다.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이 최근 가장 높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평균 27.1%가 줄었다고 답하였다. 구간별로는 1~10%가 26.7%로 다빈도이고, 11~20% 20.2%, 21~30% 14.0%, 41~50% 13.7% 순이다. 나머지는 10% 내외 이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이 각각 28.2%, 29.3%로 국공립어린이집 20.4%보다 유의하게 높고, 현원 규모별로는 20인 이하가 29.5%로 높으며, 100인 이상은 18.1%로 규모에 반비례하였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가 31.4%로 30%를 상회하나 대도시는 25.4%로 5%p 정도 유의하게 낮았다(표 V-1-5 참조).

【표 V-1-5】 정원충족률 최고 수준 대비 원아 감소 비율: 영아반

단위: %(명)

구분	1~10%	11~20%	21~30%	31~40%	41~50%	51% 이상	모름/무응답	계(수)	평균
전체	26.7	20.2	14.0	10.6	13.7	4.5	10.3	100.0(292)	27.1
기관 유형									
국공립	35.7	17.1	10.0	8.6	8.6	-	20.0	100.0(70)	20.4
민간	26.9	20.9	14.9	6.0	20.9	4.5	6.0	100.0(67)	28.2
가정	22.6	21.3	15.5	13.5	12.9	6.5	7.7	100.0(155)	29.3
X ² (df)/F				24.6(12)*					5.7**
현원규모									
20인 이하	23.6	20.0	15.2	12.7	14.5	6.7	7.3	100.0(165)	29.5
21~39인 이하	22.9	20.8	16.7	14.6	12.5	4.2	8.3	100.0(48)	27.8
40~79인 이하	32.7	21.8	7.3	5.5	14.5	-	18.2	100.0(55)	22.4
80~99인 이하	37.5	18.8	18.8	-	6.3	-	18.8	100.0(16)	18.1
100인 이상	50.0	12.5	12.5	-	12.5	-	12.5	100.0(8)	18.1
X ² (df)/F									3.0*
지역규모									
대도시	29.9	20.4	15.4	8.0	12.4	3.5	10.4	100.0(201)	25.4
중소도시	17.6	20.6	14.7	14.7	14.7	7.4	10.3	100.0(68)	31.4
읍면지역	26.1	17.4	-	21.7	21.7	4.3	8.7	100.0(23)	29.6
X ² (df)/F									3.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p < .05$

【표 V-1-6】 정원충족률 최고 수준 대비 원아 감소 비율: 유아반

단위: %(명)

구분	1~10%	11~20%	21~30%	31~40%	41~50%	51% 이상	모름/무응답	계(수)	평균
전체	24.2	19.6	18.0	7.2	8.2	7.2	15.5	100.0(194)	27.9
기관 유형									
국공립	31.3	23.2	15.2	10.1	4.0	2.0	14.1	100.0(99)	21.8
민간	19.6	12.5	28.6	5.4	14.3	12.5	7.1	100.0(56)	34.4
가정	12.8	20.5	10.3	2.6	10.3	12.8	30.8	100.0(39)	34.7
X ² (df)/F									8.0***
현원규모									
20인 이하	12.5	20.0	10.0	2.5	12.5	12.5	30.0	100.0(40)	35.3
21~39인 이하	20.6	20.6	26.5	5.9	5.9	8.8	11.8	100.0(34)	29.6
40~79인 이하	25.6	15.9	22.0	8.5	9.8	6.1	12.2	100.0(82)	27.8
80~99인 이하	44.0	16.0	12.0	12.0	-	4.0	12.0	100.0(25)	21.0
100인 이상	23.1	46.2	7.7	7.7	7.7	-	7.7	100.0(13)	20.3
X ² (df)/F									1.9
지역규모									
대도시	21.5	25.7	20.1	5.6	6.3	6.3	14.6	100.0(144)	26.7
중소도시	32.4	-	11.8	5.9	17.6	11.8	20.6	100.0(34)	32.6
읍면지역	31.3	6.3	12.5	25.0	6.3	6.3	12.5	100.0(16)	29.7
X ² (df)/F									.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p < .001$

한편, 유아반 정원충족률은 가장 높은 시기보다 평균 27.9%가 줄었다. 구간별로는 1~10%가 24.2%, 11~20%가 19.6%, 21~30% 18.0%, 30% 이상 구간은 각각 7~8% 정도이었다. 제 특성별로는 어린이집 유형별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민간과 가정이 각각 34% 대로 국공립 21.8%보다 월등히 높았다. 현원규모 및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현원이 적을수록, 중소도시에서 유아반 감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V-1-6 참조).

〈표 V-1-7〉은 정원충족률 하락 시 원아 모집이 어려운 연령반을 영아반과 유아반 각각 알아본 것이다.

영아반 정원충족률 감소 시 모집이 어려운 연령반은 0세반으로 응답자 중 47.3%가 선택하였다. 그 다음은 2세반으로 29.4%, 1세반은 18.7% 순이다.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은 2세반을 뽑은 비율이 각각 48.2%, 44.4%로 높고, 가정은 0세반이 68.5%로 높았다. 현원규모별로는 0세반은 규모가 작을수록, 1세반은 40~79인 미만, 2세반은 80~90인 미만과 100인 이상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0세반은 중소도시, 1세반은 읍면지역일수록, 2세반은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29% 선이었다(표 V-1-7 참조).

표 V-1-7 | 정원충족률 하락 시 원아 모집 어려운 연령

단위: %(명)

구분	영아반					유아반				
	0세반	1세반	2세반	기타	계(수)	3세반	4세반	5세반	기타	계(수)
전체	47.3	18.7	29.4	4.6	100.0(262)	37.2	15.9	39.0	7.9	100.0(164)
기관 유형										
국공립	19.6	23.2	48.2	8.9	100.0(56)	22.4	17.6	57.6	2.4	100.0(85)
민간	23.8	20.6	44.4	11.1	100.0(63)	51.9	17.3	28.8	1.9	100.0(52)
가정	68.5	16.1	15.4	-	100.0(143)	55.6	7.4	-	37.0	100.0(27)
현원규모										
20인 이하	68.6	15.0	16.3	-	100.0(153)	57.1	7.1	-	35.7	100.0(28)
21~39인 이하	22.7	20.5	52.3	4.5	100.0(44)	66.7	16.7	13.3	3.3	100.0(30)
40~79인 이하	20.0	31.1	33.3	15.6	100.0(45)	27.8	13.9	55.6	2.8	100.0(72)
80~99인 이하	-	23.1	69.2	7.7	100.0(13)	13.6	36.4	50.0	-	100.0(22)
100인 이상	-	-	71.4	28.6	100.0(7)	16.7	8.3	75.0	-	100.0(12)
지역규모										
대도시	47.8	16.7	29.4	6.1	100.0(180)	35.8	17.9	39.0	7.3	100.0(123)
중소도시	50.8	19.7	29.5	-	100.0(61)	40.7	14.8	37.0	7.4	100.0(27)
읍면지역	33.3	33.3	28.6	4.8	100.0(21)	42.9	-	42.9	14.3	100.0(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한편, 유아반은 5세반과 3세반이 각각 39.0%, 37.2%로 높고, 4세반은 15.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3세반은 연령 진급시 유치원이나 규모가 큰 어린이집, 5세반도 유치원이나 영어학원 등의 학습 중심의 교육기관으로 이동하면서 원아 모집이 어려운 것으로 이해된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은 5세반이 57.6%로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가정과 민간은 3세반이 각각 50~55% 사이로 높았다. 현원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을수록 3세반, 규모가 클수록 5세반 모집이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일수록 3세반, 도시지역은 5세반 모집이 어렵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V-1-7 참조).

〈표 V-1-8〉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로 어린이집 재정 운영 상에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조사 참여 어린이집 중 87.2%가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각각 95% 정도가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고, 현원규모에 따라서는 20인 이하가 93.6%, 100인 이상은 92.9%로 소규모이거나 규모가 큰 어린이집에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V-1-8 참조).

▮ 표 V-1-8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로 인한 재정 운영의 어려움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87.2	12.8	100.0(383)	전체			
기관 유형				지역규모			
국공립	70.5	29.5	100.0(129)	대도시	87.1	12.9	100.0(278)
민간	95.1	4.9	100.0(81)	중소도시	89.6	10.4	100.0(77)
가정	96.0	4.0	100.0(173)	읍면지역	82.1	17.9	100.0(28)
현원규모							
20인 이하	93.6	6.4	100.0(187)				
21~39인 이하	80.6	19.4	100.0(62)				
40~79인 이하	78.5	21.5	100.0(93)				
80~99인 이하	85.2	14.8	100.0(27)				
100인 이상	92.9	7.1	100.0(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원아 수 감소로 재정난을 경험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추가 질문하였다. 어린이집 운영비 절약이 61.4%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 업

무추진비, 각종 수당 등 축소가 54.5%, 혼합반 편성 49.1%, 차입금 활용 36.8%, 운영반 수 줄임 29.3%, 경력 낮은 인력 채용 23.7%, 보조인력 규모 축소 21.0% 순이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어린이집 운영비 절약이나 인가 정원 하향 조정, 경력 낮은 인력 채용 등은 국공립이 민간, 가정보다 높지만, 운영반 수를 줄이거나 혼합반 편성, 차입금 활용 등은 가정, 민간, 국공립 순으로 높았다. 현원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지만, 혼합반 편성, 차입금 활용 등은 규모에 반비례 하였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경력 낮은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고, 중소도시는 운영반을 줄이거나 혼합반 편성, 보조인력 규모 축소, 차입금 활용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표 V-1-9 참조).

【표 V-1-9】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로 인한 재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

단위: %(명)

구분	운영 반 수 줄임	혼합반 편성	인가 정원 하향 조정	보조 인력 규모 축소	경력 낮은 인력 채용	어린이 집 운영비 절약	차입금 활용	업무추진 비, 각종 수당 축소	기타	(수)
전체	29.3	49.1	6.0	21.0	23.7	61.4	36.8	54.5	12.3	(334)
기관 유형										
국공립	14.3	40.7	11.0	16.5	39.6	78.0	1.1	56.0	8.8	(91)
민간	33.8	49.4	6.5	33.8	37.7	64.9	51.9	58.4	7.8	(77)
가정	35.5	53.6	3.0	17.5	8.4	50.6	49.4	51.8	16.3	(166)
현원규모										
20인 이하	35.4	52.6	2.9	18.3	9.1	50.9	48.6	50.9	16.6	(175)
21~39인 이하	28.0	50.0	8.0	30.0	40.0	72.0	40.0	60.0	8.0	(50)
40~79인 이하	17.8	45.2	11.0	17.8	38.4	76.7	15.1	61.6	11.0	(73)
80~99인 이하	26.1	47.8	8.7	21.7	39.1	60.9	17.4	47.8	-	(23)
100인 이상	23.1	23.1	7.7	38.5	46.2	76.9	23.1	53.8	-	(13)
지역규모										
대도시	29.8	45.9	5.8	19.8	25.2	62.4	32.2	54.5	13.6	(242)
중소도시	33.3	58.0	7.2	24.6	21.7	56.5	52.2	53.6	10.1	(69)
읍면지역	13.0	56.5	4.3	21.7	13.0	65.2	39.1	56.5	4.3	(23)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의 적절성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설정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목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어린이집 중 적절하다는 의견은 10.7%로 적고,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 60% 정도를 차지하였다. 적정성 점수는 5점 평균 2.1점으로 낮았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의 적절성 점수가 평균 2.5점으로 높고, 민간과 가정이 각각 평균 1.8점, 1.9점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현원 및 지역 규모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읍면지역은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 적절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V-1-10 참조).

▮ 표 V-1-10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목표의 적절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평균
전체	36.3	26.8	26.2	10.1	0.6	100.0(485)	2.1
기관 유형							
국공립	21.4	24.5	37.0	15.6	1.6	100.0(192)	2.5
민간	54.9	20.9	16.5	7.7	-	100.0(91)	1.8
가정	42.1	31.7	20.3	5.9	-	100.0(202)	1.9
X ² (df)/F			54.6(8)***				26.2***
현원규모							
20인 이하	38.1	29.9	23.8	7.8	0.4	100.0(231)	2.0
21~39인 이하	40.5	21.6	25.7	12.2	-	100.0(74)	2.1
40~79인 이하	35.0	25.0	28.3	10.0	1.7	100.0(120)	2.2
80~99인 이하	25.0	20.0	35.0	20.0	-	100.0(40)	2.5
100인 이상	30.0	35.0	25.0	10.0	-	100.0(20)	2.2
X ² (df)/F			15.6(16)				2.0
지역규모							
대도시	36.4	26.9	26.7	9.4	0.6	100.0(360)	2.1
중소도시	43.2	21.6	26.1	8.0	1.1	100.0(88)	2.0
읍면지역	18.9	37.8	21.6	21.6	-	100.0(37)	2.5
X ² (df)/F			13.2(8)				2.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p < .001$

〈표 V-1-11〉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 수준을 추가 질문한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로 평균 27.3%이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구간별로는 21~30%가 36.3%, 11~20% 31.7%, 10% 이하 19.6%, 31% 이상 구간은 10% 미만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국공립은 평균 34.9%, 민간과 가정은 각각 20.5%, 25.9%로 국공립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간에 10~15%p 정도 차이가 났다. 현원 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80인 이상 규모는 35%를 상회하였다. 지역규모별로는 26~28% 사이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V-1-11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적정수준

단위: %(개원)

구분	10% 이하	11~20%	21~30%	31~40%	41~50%	51%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9.6	31.7	36.3	0.7	3.3	8.5	100.0(306)	27.3
기관 유형								
국공립	3.4	15.9	59.1	2.3	5.7	13.6	100.0(88)	34.9
민간	24.6	37.7	36.2	-	-	1.4	100.0(69)	20.5
가정	26.8	38.3	22.8	-	3.4	8.7	100.0(149)	25.9
$X^2(df)/F$			-					11.9***
현원규모								
20인 이하	25.5	36.9	25.5	-	3.2	8.9	100.0(157)	26.3
21~39인 이하	23.9	37.0	30.4	4.3	2.2	2.2	100.0(46)	22.4
40~79인 이하	12.5	18.1	58.3	-	4.2	6.9	100.0(72)	28.5
80~99인 이하	-	27.8	44.4	-	5.6	22.2	100.0(18)	35.8
100인 이상	-	30.8	53.8	-	-	15.4	100.0(13)	37.3
$X^2(df)/F$			-					2.6*
지역규모								
대도시	18.0	32.5	37.3	0.9	3.5	7.9	100.0(228)	27.4
중소도시	22.8	33.3	33.3	-	1.8	8.8	100.0(57)	26.1
읍면지역	28.6	19.0	33.3	-	4.8	14.3	100.0(21)	28.6
$X^2(df)/F$			-					.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계획

〈표 V-1-12〉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대상으로 향후 5년 이내에 매입, 장기임차,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중 38.9%는 전환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고, 22.9%는 고민 중이며, 10.9%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여 어린이집 중 1/3 정도는 유보적이었다. 민간보다는 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 규모가 작을수록,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전환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V-1-12 】 향후 5년 이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의향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고민 중	잘 모르겠음	계(수)	X ² (df)
전체	38.9	27.3	22.9	10.9	100.0(293)	
기관 유형						
민간	31.9	38.5	22.0	7.7	100.0(91)	9.0(3)*
가정	42.1	22.3	23.3	12.4	100.0(202)	
현원규모						
20인 이하	42.7	21.8	23.3	12.1	100.0(206)	
21~39인 이하	32.4	35.1	24.3	8.1	100.0(37)	
40~79인 이하	31.4	40.0	22.9	5.7	100.0(35)	-
80~99인 이하	22.2	55.6	11.1	11.1	100.0(9)	
100인 이상	16.7	50.0	16.7	16.7	100.0(6)	
지역규모						
대도시	35.1	28.8	24.0	12.0	100.0(208)	
중소도시	46.2	21.5	23.1	9.2	100.0(65)	6.6(6)
읍면지역	55.0	30.0	10.0	5.0	100.0(2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p < .05$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추가 질문하였다.

【 표 V-1-13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이유

단위: %(명)

구분	영유아 모집	인건비 등 유리 재정 지원	환경개선 비 지원	보육 서비스 개선	우수한 보육교사 채용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어린이집 이미지 개선	계(수)
전체	22.8	69.3	1.8	0.9	0.9	3.5	0.9	100.0(114)
기관 유형								
민간	20.7	72.4	6.9	-	-	-	-	100.0(29)
가정	23.5	68.2	-	1.2	1.2	4.7	1.2	100.0(85)
현원규모								
20인 이하	22.7	69.3	-	1.1	1.1	4.5	1.1	100.0(88)
21~39인 이하	16.7	75.0	8.3	-	-	-	-	100.0(12)
40~79인 이하	27.3	63.6	9.1	-	-	-	-	100.0(11)
80~99인 이하	50.0	50.0	-	-	-	-	-	100.0(2)
100인 이상	-	100.0	-	-	-	-	-	100.0(1)
지역규모								
대도시	24.7	69.9	2.7	-	1.4	1.4	-	100.0(73)
중소도시	16.7	66.7	-	3.3	-	10.0	3.3	100.0(30)
읍면지역	27.3	72.7	-	-	-	-	-	100.0(1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표 V-1-13〉과 같이, 인건비 등 재정지원이 69.3%로 다수를 차지하고, 영유아 모집에 유리가 22.8%,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환경개선비 지원, 우수한 보육교사 채용 등은 3% 내외로 적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도 전체 응답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가정은 민간보다 영유아 모집에 유리, 민간은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원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지만,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영유아 모집에 유리하거나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은 인건비 등 재정 지원과 영유아 모집에 유리, 중소도시는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의사가 있다고 답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전환 방법을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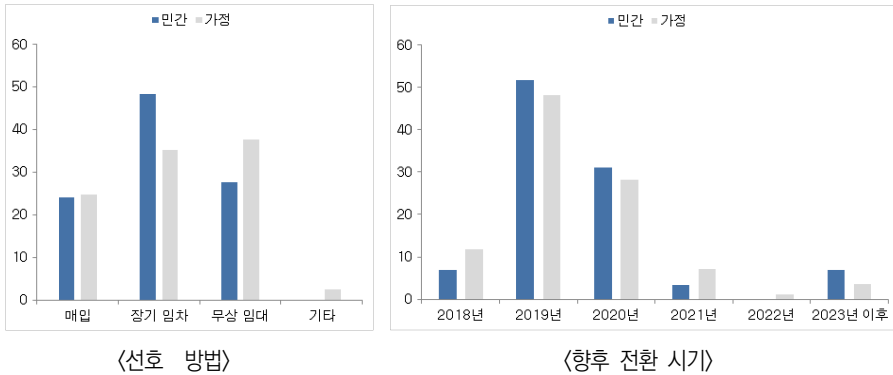
전환 방법 중 장기임차와 무상임대를 선택한 비율이 각각 38.6%, 35.1%로 높고, 매입이 24.6% 정도이었다. 민간, 가정은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방법을 선호하였다. 민간은 장기임차, 가정은 무상임대를 꼽은 비율이 높아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는 매입과 장기임차, 읍면지역은 무상임대를 상대적으로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현원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표 V-1-14 참조).

■ 표 V-1-14 ■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방법

구분	단위: %(명)				계(수)
	매입	장기 임차	무상 임대	기타	
전체	24.6	38.6	35.1	1.8	100.0(114)
기관 유형					
민간	24.1	48.3	27.6	-	100.0(29)
가정	24.7	35.3	37.6	2.4	100.0(85)
현원규모					
20인 이하	25.0	35.2	37.5	2.3	100.0(88)
21~39인 이하	-	58.3	41.7	-	100.0(12)
40~79인 이하	36.4	45.5	18.2	-	100.0(11)
80~99인 이하	100.0	-	-	-	100.0(2)
지역규모					
대도시	-	100.0	-	-	100.0(1)
중소도시	23.3	38.4	35.6	2.7	100.0(73)
읍면지역	33.3	43.3	23.3	-	100.0(3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그림 V-1-3 ■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방법 및 향후 전환 시기



자료: 〈표 V-1-14〉와 〈표 V-1-15〉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경우, 전환 시기를 질문하였다. 2019년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는 어린이집이 49.1%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2020년 28.9%, 2018년 10.5%, 2021년 6.1%, 2022년 0.9%, 2023년 이후 4.4% 순으로 과반수 이상이 향후 3년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었다(표 V-1-15, 그림 V-1-3 참조).

■ 표 V-1-15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계획 시기

단위: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수)
전체	10.5	49.1	28.9	6.1	0.9	4.4	100.0(114)
기관 유형							
민간	6.9	51.7	31.0	3.4	-	6.9	100.0(29)
가정	11.8	48.2	28.2	7.1	1.2	3.5	100.0(85)
현원규모							
20인 이하	11.4	47.7	29.5	6.8	1.1	3.4	100.0(88)
21~39인 이하	16.7	50.0	25.0	8.3	-	-	100.0(12)
40~79인 이하	-	63.6	27.3	-	-	9.1	100.0(11)
80~99인 이하	-	50.0	50.0	-	-	-	100.0(2)
100인 이상	-	-	-	-	-	100.0	100.0(1)
지역규모							
대도시	11.0	50.7	27.4	4.1	1.4	5.5	100.0(73)
중소도시	10.0	43.3	36.7	10.0	-	-	100.0(30)
읍면지역	9.1	54.5	18.2	9.1	-	9.1	100.0(1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모두 2019년에 전환하겠다는 비율이 높지만, 특히 가정은 2018년에 전환 계획이 있다는 비율이 11.8%로 높았다. 현원규모나 지역규모에 따라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표 V-1-15 참조).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 의향이 없거나 고민 중 또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어린이집 중 20.7%는 계약기간 종료 후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해야 하는 부담감을 꼽았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운영 상태가 심사기준 미달이 17.9%, 계약기간 10년 불만족 15.6%, 지원단가 불만족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낮다는 이유도 각각 10.6%, 10.1%를 차지하였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도 전체 응답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가정은 계약기간 불만족이 18.8%,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에 맞춰 운영하기 부담스럽다는 이유도 10.3%로 높았다. 민간은 지원단가 불만족이 14.5%로 전체 응답비율보다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는 어린이집 운영 상태가 심사기준에 미달되거나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에 맞춰 운영하기 부담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V-1-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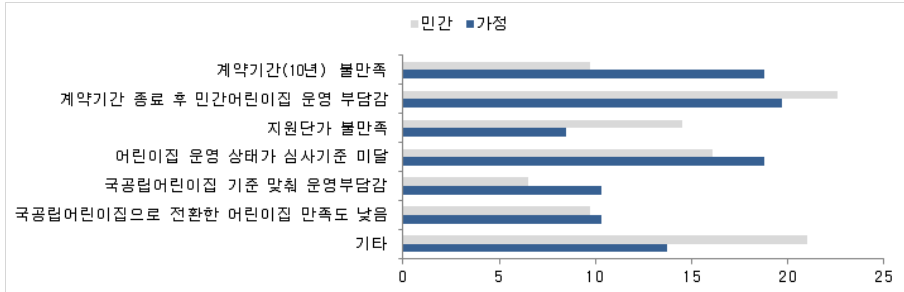
표 V-1-16 국공립 전환 의향이 없거나 고민 중인 이유

단위: %(명)

구분	계약기간 (10년) 불만족	계약기간 종료 후 민간어린이집 운영 부담감	지원 단가 불만족	어린이집 운영 상태가 심사기준 미달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에 맞춰 운영부담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어린이집 만족도 낮음	기타	계(수)
전체	15.6	20.7	10.6	17.9	8.9	10.1	16.2	100.0(179)
기관 유형								
민간	9.7	22.6	14.5	16.1	6.5	9.7	21.0	100.0(62)
가정	18.8	19.7	8.5	18.8	10.3	10.3	13.7	100.0(117)
현원규모								
20인 이하	18.6	20.3	8.5	18.6	10.2	10.2	13.6	100.0(118)
21~39인 이하	12.0	20.0	12.0	24.0	-	8.0	24.0	100.0(25)
40~79인 이하	12.5	20.8	16.7	12.5	8.3	8.3	20.8	100.0(24)
80~99인 이하	-	-	14.3	14.3	28.6	28.6	14.3	100.0(7)
100인 이상	-	60.0	20.0	-	-	-	20.0	100.0(5)
지역규모								
대도시	15.6	25.2	10.4	14.8	6.7	11.1	16.3	100.0(135)
중소도시	17.1	2.9	5.7	34.3	20.0	8.6	11.4	100.0(35)
읍면지역	11.1	22.2	33.3	-	-	-	33.3	100.0(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그림 V-1-4 ■ 국공립 전환 의향이 없거나 고민 중인 이유



자료: <표 V-1-16>을 그림으로 재구성함.

출생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매년 줄고,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경영난으로 해마다 수천 개소씩 문을 닫고 있는 현장 상황을 볼 때, 향후 어린이집 전망이 어떠할지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어린이집 원장 중 27.6%는 어려움, 61.8%는 매우 어렵다고 답하여서 향후 전망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으며, 어려움 정도도 5점 평균 4.5점으로 매우 높았다. 어린이집 유형, 현원 및 지역규모별로 유의한 차이 없이 어려움 정도가 평균 4점을 상회한다(표 V-1-17 참조).

■ 표 V-1-17 ■ 향후 어린이집 운영 전망

구분	단위: %(명), 점				계(수)	평균	F
	어려움 없음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전체	2.0	8.5	27.6	61.8	100.0(293)	4.5	
기관 유형							
민간	2.2	5.5	29.7	62.6	100.0(91)	4.5	.3
가정	2.0	9.9	26.7	61.4	100.0(202)	4.5	
현원규모							
20인 이하	1.9	9.7	26.2	62.1	100.0(206)	4.5	
21~39인 이하	-	2.7	29.7	67.6	100.0(37)	4.6	
40~79인 이하	2.9	2.9	31.4	62.9	100.0(35)	4.5	1.7
80~99인 이하	-	33.3	22.2	44.4	100.0(9)	4.1	
100인 이상	16.7	-	50.0	33.3	100.0(6)	4.0	
지역규모							
대도시	2.9	8.2	29.8	59.1	100.0(208)	4.5	
중소도시	-	7.7	24.6	67.7	100.0(65)	4.6	1.1
읍면지역	-	15.0	15.0	70.0	100.0(20)	4.6	

주: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라.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중 전환 여부와 전환 방법을 알아보았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시설은 조사 참여 국공립어린이집 중 21.9%로 1/5를 차지하였다. 현원 규모가 작을수록, 도시지역일수록 전환한 어린이집 비율이 높았다. 현원규모 20인 이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비율이 72.0%로 높고, 21~39인은 32.4%, 40~79인이 14.1% 순이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는 24.3%로 높고, 중소도시 17.4%, 읍면지역 5.9% 순이었다.

표 V-1-18 | 국공립 전환 여부 및 전환 방법

단위: %(명)

구분	전환 여부			전환 방법			
	미전환	전환	계(수)	민간 매입	장기 임차	무상 임대	계(수)
전체	78.1	21.9	100.0(192)	7.1	11.9	81.0	100.0(42)
현원규모							
20인 이하	28.0	72.0	100.0(25)	11.1	27.8	61.1	100.0(18)
21~39인 이하	67.6	32.4	100.0(37)	-	-	100.0	100.0(12)
40~79인 이하	85.9	14.1	100.0(85)	8.3	-	91.7	100.0(12)
80~99인 이하	100.0	-	100.0(31)				
100인 이상	100.0	-	100.0(14)				
지역규모							
대도시	75.7	24.3	100.0(152)	8.1	13.5	78.4	100.0(37)
중소도시	82.6	17.4	100.0(23)	-	-	100.0	100.0(4)
읍면지역	94.1	5.9	100.0(17)	-	-	100.0	10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방법은 무상임대가 81.0%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장기임차 11.9%, 민간매입 7.1%이었다. 20인 이하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대도시에서 장기임차나 민간 매입으로 전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V-1-18 참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 그 시기를 추가 질문하였다. 2018년이 31.0%로 많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5% 내외, 2013년 7.1%, 2010년 2.4%이었다. 대부분 2014년 이후에 전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은 2016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표 V-1-19 참조).

표 V-1-19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기

단위: %(명)

구분	2010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수)
전체	2.4	7.1	14.3	14.3	14.3	16.7	31.0	100.0(42)
현원규모								
20인 이하	-	-	-	16.7	22.2	33.3	27.8	100.0(18)
21~39인 이하	-	-	25.0	16.7	8.3	8.3	41.7	100.0(12)
40~79인 이하	8.3	25.0	25.0	8.3	8.3	-	25.0	100.0(12)
지역규모								
대도시	-	8.1	16.2	13.5	16.2	18.9	27.0	100.0(37)
중소도시	-	-	-	25.0	-	-	75.0	100.0(4)
읍면지역	100.0	-	-	-	-	-	-	10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어려움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간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대규모로 확충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증가하기보다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중 32.8%가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로 재원 아동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하였다.

표 V-1-20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재원 영유아 수 감소 경험 여부와 규모

단위: %(명)

구분	경험 여부		규모				평균	F
	있음	(수)	5% 이하	6~10%	11~15%	15% 초과		
전체	32.8	(192)	28.6	34.9	17.5	19.0	100.0(63)	10.2
현원규모								
20인 이하	12.0	(25)	-	33.3	-	66.7	100.0(3)	18.3
21~39인 이하	40.5	(37)	33.3	26.7	20.0	20.0	100.0(15)	10.6
40~79인 이하	38.8	(85)	30.3	33.3	21.2	15.2	100.0(33)	9.8
80~99인 이하	22.6	(31)	28.6	28.6	14.3	28.6	100.0(7)	10.1
100인 이상	35.7	(14)	20.0	80.0	-	-	100.0(5)	6.4
지역규모								
대도시	34.9	(152)	30.2	34.0	17.0	18.9	100.0(53)	10.2
중소도시	26.1	(23)	-	50.0	33.3	16.7	100.0(6)	12.6
읍면지역	23.5	(17)	50.0	25.0	-	25.0	100.0(4)	7.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현원 규모별로는 21~39인 이하와 40~79인 이하의 중규모에서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어린이집이 많았다. 도시지역일수록 경험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영유아 수가 많은 도시지역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표 V-1-20 참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재원 영유아 감소를 경험한 경우, 그 규모를 알아보았다. 정원 대비 10.2% 정도가 감소하였고, 구간별로는 6~10%가 34.9%로 많고, 5% 이하가 28.6%, 15% 초과가 19.0%, 11~15%가 17.5%이었다. 현원 및 지역규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20인 이하가 18.3%로 정원의 1/5를 차지하였다(표 V-1-20 참조).

바.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조건, 지원 및 심사 기준의 적절성

1) 전환 조건

장기임차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기준이 적절한지를 알아보았다.

〈표 V-1-21〉과 같이, 조사 참여 어린이집 중 25.8%가 적절, 7.8%가 매우 적절로 33.6%가 적절하다고 답하였고, 적절성 점수는 5점 평균 2.9점이었다. 어린이집 유형이나 현원 규모, 지역규모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국공립이거나 규모가 21~39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중소도시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 표 V-1-21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기준의 적절성: 계약기간 10년

구분	단위: %(명), 점					계(수)	평균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전체	15.5	17.3	33.6	25.8	7.8	100.0(485)	2.9
기관 유형							
국공립	13.0	15.1	35.4	29.2	7.3	100.0(192)	3.0
민간	17.6	18.7	35.2	23.1	5.5	100.0(91)	2.8
가정	16.8	18.8	31.2	23.8	9.4	100.0(202)	2.9
$X^2(df)/F$			5.5(8)				1.3

(표 V-1-21 계속)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평균	
현원규모								
20인 이하	15.2	17.7	32.9	25.5	8.7	100.0(231)	2.9	
21~39인 이하	14.9	6.8	36.5	32.4	9.5	100.0(74)	3.1	
40~79인 이하	18.3	20.8	28.3	25.8	6.7	100.0(120)	2.8	
80~99인 이하	15.0	17.5	42.5	17.5	7.5	100.0(40)	2.9	
100인 이상	5.0	30.0	45.0	20.0	-	100.0(20)	2.8	
X ² (df)/F							17.4(16)	1.1
지역규모								
대도시	15.6	18.9	32.2	26.9	6.4	100.0(360)	2.9	
중소도시	17.0	10.2	34.1	28.4	10.2	100.0(88)	3.0	
읍면지역	10.8	18.9	45.9	8.1	16.2	100.0(37)	3.0	
X ² (df)/F							15.5(8)	.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p < .05$

계약기간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 평균 13.6년이 적절하다고 답하였고, 구간별로는 5~10년과 16~20년이 각각 39.0%, 34.6%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 11~15년 11.3%, 5년 미만과 21년 이상은 각각 7.5%로 소수이었다.

표 V-1-22 제 특성별 적정 계약기간

단위: %(명), 년

구분	5년 미만	5~9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계(수)	평균	F
전체	7.5	39.0	11.3	34.6	7.5	100.0(159)	13.6	
기관 유형								
국공립	13.0	48.1	3.7	31.5	3.7	100.0(54)	10.8	
민간	6.1	21.2	15.2	42.4	15.2	100.0(33)	17.2	3.6*
가정	4.2	40.3	15.3	33.3	6.9	100.0(72)	14.1	
현원규모								
20인 이하	3.9	40.8	14.5	34.2	6.6	100.0(76)	14.0	
21~39인 이하	12.5	31.3	6.3	37.5	12.5	100.0(16)	15.4	
40~79인 이하	14.9	38.3	6.4	36.2	4.3	100.0(47)	11.9	.5
80~99인 이하	-	30.8	23.1	30.8	15.4	100.0(13)	15.5	
100인 이상	-	57.1	-	28.6	14.3	100.0(7)	13.1	
지역규모								
대도시	5.6	40.3	13.7	33.1	7.3	100.0(124)	13.7	
중소도시	4.2	45.8	-	45.8	4.2	100.0(24)	12.9	.05
읍면지역	36.4	9.1	9.1	27.3	18.2	100.0(11)	13.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p < .05$

적정 계약기간은 어린이집 유형별로 차이를 보여서 민간 평균 17.2년, 가정 평균 14.1년, 국공립 평균 10.8년으로 민간·가정은 현행 기준보다 5년 이상 긴 계약기간을 제안하였다(V-1-22 참조).

2) 지원기준

장기임차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 환경개선비 지원기준의 적절성을 알아보았다.

시설개보수비 지원기준(1개소당 1억 1천만원)은 적절 20.0%, 매우 적절 6.2%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26.2%이고, 적절성 점수는 5점 평균 2.8점이었다. 기자재비 지원기준(1개소당 1천만원)은 적절 15.7%, 매우 적절 6.4%로 22.1%가 적절하다고 하였고, 적절성 점수는 5점 평균 2.7점이다.

■ 표 V-1-23 ■ 장기임차 전환 시 지원기준의 적절성 개요

구분						단위: %(명), 점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평균
1. 시설개보수비 1억 1천만원	16.9	18.8	38.1	20.0	6.2	100.0(485)	2.8
2. 기자재비 1천만원	16.5	26.0	35.5	15.7	6.4	100.0(485)	2.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시설개보수비 및 기자재비 지원기준의 적절성을 제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시설개보수비는 가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국공립, 민간보다 많고, 적절성 점수도 유의미하게 높았다. 현원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을수록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고, 적절성 점수도 유의미하게 규모에 반비례하였다. 그러나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표 V-1-24 참조).

기자재비 지원기준도 가정이 국공립, 민간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고, 적절성 점수도 유의하게 높았다. 현원규모별로는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으나 20인 이하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고 적절성 점수도 유의하게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표 V-1-24 참조).

【표 V-1-24】 제 특성별 장기임차 전환 지원기준의 적절성

단위: %(명), 점

구분	시설개보수비(1억 1천만원)				기자재비(1천만원)				(수)
	적절	매우 적절	평균	F	적절	매우 적절	평균	F	
전체	20.0	6.2	2.8		15.7	6.4	2.7		(485)
기관 유형									
국공립	15.1	3.1	2.6		13.0	3.6	2.7		(192)
민간	19.8	3.3	2.6	9.7***	13.2	4.4	2.3	9.1***	(91)
가정	24.8	10.4	3.1		19.3	9.9	2.9		(202)
현원규모									
20인 이하	23.8	10.0	3.1		18.6	9.5	2.9		(231)
21~39인 이하	24.3	5.4	2.9		20.3	5.4	2.7		(74)
40~79인 이하	13.3	2.5	2.5	8.6***	10.0	3.3	2.4	5.5***	(120)
80~99인 이하	10.0	-	2.4		10.0	2.5	2.7		(40)
100인 이상	20.0	-	2.5		10.0	-	2.3		(20)
지역규모									
대도시	20.8	4.4	2.8		15.6	5.0	2.6		(360)
중소도시	21.6	10.2	2.9	1.3	20.5	9.1	2.8	2.5	(88)
읍면지역	8.1	13.5	2.9		5.4	13.5	3.0		(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p < .001$

【표 V-1-25】 시설개보수비 적정 지원수준

단위: %(명), 만원

구분	3천만원 미만	3~5천만원 미만	5천~1억 1천만원 미만	1.1~1.5천만원 미만	1.5~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계(수)	평균	F
전체	10.4	12.1	32.4	0.6	9.8	34.7	100.0(173)	1,577.2	
기관 유형									
국공립	8.9	7.6	44.3	-	10.1	29.1	100.0(79)	1,638.0	
민간	4.9	12.2	7.3	-	17.1	58.5	100.0(41)	2,248.8	2.7
가정	17.0	18.9	34.0	1.9	3.8	24.5	100.0(53)	967.0	
현원규모									
20인 이하	15.5	19.0	34.5	1.7	5.2	24.1	100.0(58)	975.0	
21~39인 이하	8.3	8.3	16.7	-	20.8	45.8	100.0(24)	1,929.2	
40~79인 이하	10.2	3.4	39.0	-	8.5	39.0	100.0(59)	1,455.9	2.4
80~99인 이하	-	14.3	42.9	-	9.5	33.3	100.0(21)	2,995.2	
100인 이상	9.1	27.3	-	-	18.2	45.5	100.0(11)	1,927.3	
지역규모									
대도시	8.2	9.7	32.8	0.7	11.9	36.6	100.0(134)	1,738.8	
중소도시	7.1	21.4	32.1	-	3.6	35.7	100.0(28)	1,142.9	.3
읍면지역	45.5	18.2	27.3	-	-	9.1	100.0(11)	71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표 V-1-25〉는 시설개보수 지원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 지원 수준을 추가적으로 알아본 것이다.

시설개보수비로 1,577만원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현행 기준보다 5천만원 정도 높았다. 응답자 중 44.5%가 현행 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기관 유형이나 현원 및 지역규모별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표 V-1-25 참조).

기자재비는 1,488만원이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응답자 중 87.4%가 현행 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제시하였고, 구간별로는 3~5천만원 미만 28.2%로 다빈도이고, 5천만원~1억원 미만 19.4%, 2~3천만원 미만 17.0%, 1.1~1.5억원 미만 10.7% 순이었다. 제 특성별로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표 V-1-25 참조).

▣ 표 V-1-26 ▣ 기자재비 적정 지원수준

단위: %(명), 만원

구분	1천만원 미만	1~2천만원 미만	2~3천만원 미만	3~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1.1~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계(수)	평균	F
전체	12.6	3.9	17.0	28.2	19.4	10.7	8.3	100.0(206)	1,488.0	
기관 유형										
국공립	17.1	3.7	22.0	24.4	17.1	9.8	6.1	100.0(82)	449.8	
민간	5.5	1.8	10.9	34.5	23.6	18.2	5.5	100.0(55)	603.0	2.1
가정	13.0	5.8	15.9	27.5	18.8	5.8	13.0	100.0(69)	3,427.4	
현원규모										
20인 이하	11.7	5.2	18.2	27.3	18.2	6.5	13.0	100.0(77)	3,125.9	
21~39인 이하	-	3.0	24.2	27.3	24.2	18.2	3.0	100.0(33)	483.3	
40~79인 이하	22.4	1.5	14.9	28.4	17.9	10.4	4.5	100.0(67)	431.6	.9
80~99인 이하	-	6.3	12.5	43.8	18.8	6.3	12.5	100.0(16)	634.4	
100인 이상	15.4	7.7	7.7	15.4	23.1	23.1	7.7	100.0(13)	833.1	
지역규모										
대도시	12.8	4.3	18.9	27.4	17.7	11.6	7.3	100.0(164)	1,113.5	
중소도시	12.1	3.0	12.1	30.3	24.2	6.1	12.1	100.0(33)	3,499.4	.8
읍면지역	11.1	-	-	33.3	33.3	11.1	11.1	100.0(9)	938.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3) 사전 적격심사 기준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장기임차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전 적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사전 적격심사는 시설 환경과 운영, 운영 계

획 3개 영역에 대해 평가한다. 각 항목별 세부기준의 적절성을 알아보았다.

먼저, 시설환경 세부기준 8개 중 적절과 매우 적절 응답 비율을 합산한 적절하는 응답은 설치인가 기준 준수가 64.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급 보육교사 60% 이상이 55.5%로 2개 기준만 절반 이상이 답하였고, 나머지는 50% 미만이었다. 적절성 점수도 설치인가 기준 준수가 5점 평균 3.8점으로 가장 높고, 1급 보육교사 비율이 평균 3.5점, 현 어린이집 장기근속 보육교사 현황과 보육교사 처우, 정원충족률은 각각 평균 3.3점이었다(표 V-1-27 참조).

다음으로 운영 영역의 세부기준 중에서는 집단 민원 여부가 66.8%, 지도점검 결과와 63.7%, 부모 및 주민 만족도 68.7%, 친인척 근무현황 60.2%로 과반수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하였고, 적절성 점수도 평균 3.7~3.8점 사이에 분포하였다.

운영계획 영역의 신청 계획서 내용은 65.5%가 적절하다고 답하였고, 적절성 점수는 평균 3.8점이었다.(표 V-1-27 참조).

▮ 표 V-1-27 ▮ 장기입차 사전 적격심사 기준의 적절성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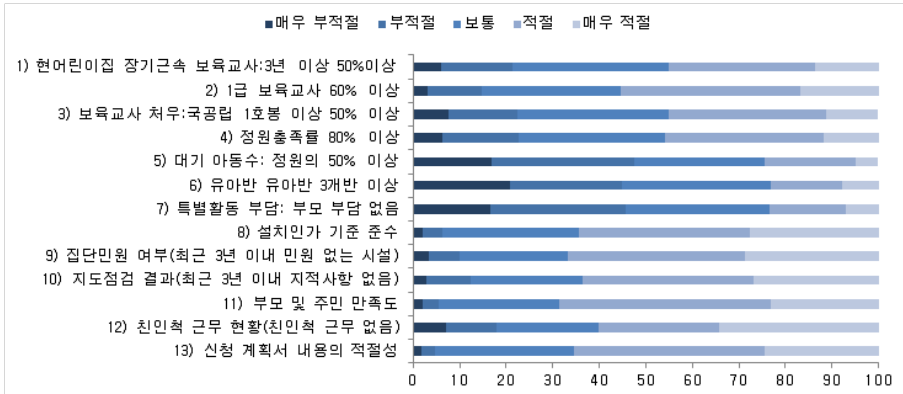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평균
1. 시설 환경							
1) 현어린이집 장기근속 보육교사:3년 이상 50%이상	6.0	15.3	33.6	31.5	13.6	100.0(485)	3.3
2) 1급 보육교사 60% 이상	3.1	11.5	29.9	38.8	16.7	100.0(485)	3.5
3) 보육교사 처우:국공립 1호봉 이상 50% 이상	7.6	14.8	32.4	33.8	11.3	100.0(485)	3.3
4) 정원충족률 80% 이상	6.4	16.3	31.3	34.2	11.8	100.0(485)	3.3
5) 대기 아동수: 정원의 50% 이상	16.9	30.7	27.8	19.6	4.9	100.0(485)	2.6
6) 유아반 3개반 이상	20.8	24.1	32.0	15.3	7.8	100.0(485)	2.7
7) 특별활동 부담: 부모 부담 없음	16.7	28.9	30.9	16.5	7.0	100.0(485)	2.7
8) 설치인가 기준 준수	2.1	4.3	29.1	36.9	27.6	100.0(485)	3.8
2. 운영							
9) 집단민원 여부(최근 3년 이내 민원 없는 시설)	3.3	6.6	23.3	38.1	28.7	100.0(485)	3.8
10) 지도점검 결과(최근 3년 이내 지적사항 없음)	2.9	9.5	23.9	36.9	26.8	100.0(485)	3.8
11) 부모 및 주민 만족도	2.1	3.5	25.8	45.4	23.3	100.0(485)	3.8
12) 친인척 근무 현황(친인척 근무 없음)	7.0	10.9	21.9	26.0	34.2	100.0(485)	3.7
3. 운영계획							
13) 신청 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1.9	2.9	29.7	41.0	24.5	100.0(485)	3.8
4. 가점							
1) 취약보육 운영	3.3	8.9	34.8	32.0	21.0	100.0(485)	3.6
2)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여부	5.8	9.9	30.1	30.9	23.3	100.0(485)	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가점 세부기준인 취약보육 운영과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지역 여부 모두 53.0%, 54.2%로 절반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하였고, 적절성 점수는 각각 평균 3.6점이었다(표 V-1-25 참조).

■ 그림 V-1-5 ■ 장기임차 사전 적격심사 기준 적절성 개요



자료: <표 V-1-25>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장기임차 사전 적격심사 기준의 적절성을 제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부록 표 V-1-1>~<부록 표 V-1-5>에 수록하였다.

장기임차 사전 적격 심사기준 중 시설환경 8개 세부기준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 수준을 추가 질문하였다.

장기근속 보육교사 기준에 대해 2년이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특히 현원규모가 80인 미만은 2년 미만으로 현행 기준보다 짧지만, 80인 이상은 3.5년으로 유의미하게 길었다. 기관유형이나 지역규모별로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보육 3년 장기근속 교사 비율로는 평균 34.1%가 적절하다고 하였고, 제 특성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1급 보육교사 비율은 45.7%로 현행 기준인 60%보다 15%p 정도 낮은 수준을 제시하였고, 국공립 1호봉 이상 비율은 46.8%로 현행 기준보다 5%p 낮았다. 정원충족률은 59.1%로 현행 기준보다 20%p 정도 낮고, 대기 아동 수는 정원의 22.7%로 현행 기준보다 30%p 낮고, 유아반 수는 1.6개 반으로 현행 기준보다 다소 많았다(표 V-1-28 참조).

표 V-1-28 장기임차 사전 적격심사 시설영역 8개 세부기준 적정수준

단위: %(명), 년, 개

구분	장기근속 보육교사		1급	국공립	정원	대기	유아반
	근속기간	3년 비율	보육교사 비율(%)	1호봉 이상 (%)	충족률(%)	아동 수(%)	수(개)
전체	2.0	34.1	45.7	46.8	59.1	22.7	1.6
기관 유형							
국공립	2.3	46.0	46.1	78.8	70.9	35.3	1.7
민간	1.8	34.3	49.5	37.3	57.3	17.2	1.5
가정	1.9	28.1	41.8	41.3	56.8	20.3	1.7
F	.7	.9	1.3	14.5***	5.5**	20.0***	0.9
현원규모							
20인 이하	1.9	27.4	43.1	42.1	58.5	21.9	1.6
21~39인 이하	1.9	60.0	47.1	40.0	55.5	23.2	1.5
40~79인 이하	1.6	26.7	47.6	56.8	60.5	24.4	1.6
80~99인 이하	3.5	50.0	50.0	72.3	67.5	23.6	2.1
100인 이상	3.5	25.0	46.3	30.0	60.0	20.0	1.3
F	3.3*	1.5	0.3	2.7*	0.7	0.2	0.6
지역규모							
대도시	2.0	35.0	44.7	47.4	59.1	23.3	1.6
중소도시	2.2	32.3	47.3	48.8	60.2	20.0	1.8
읍면지역	1.8	35.0	49.3	40.1	55.6	24.2	1.8
F	.2	.03	0.3	0.3	0.3	0.7	0.8
(수)	(81)	(22)	(71)	(109)	(110)	(231)	(2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마. 어린이집 폐쇄기준 관련 의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2항 관련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서 규정하는 시설폐쇄 조건 외에 어린이집 폐쇄는 어린이집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017년 말 기준 원장 혼자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131개소, 영유아 1명만 돌보는 어린이집은 39개소, 1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180개소에 이른다(사회보장정보원, 2017). 모든 영유아가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 일정 규모의 영유아 또는 반 수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 폐쇄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민간, 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참여 어린이집 중 45.6%는 어느 정도 동의, 12.6%는 매우 동의라고 답하

여 60% 정도가 동의하였고, 동의 정도는 4점 평균 2.5점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국공립에서 동의정도가 평균 3.3점으로 민간, 가정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현원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지만, 80인 이상 규모가 큰 어린이집의 동의 정도가 높았다(표 V-1-29 참조).

표 V-1-29 정원충족률 미달 시 자동 폐쇄에 대한 동의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어느 정도 동의	매우 동의	계(수)	평균	F
전체	24.7	17.2	45.6	12.6	100.0(215)	2.5	
기관 유형							
국공립	-	25.0	25.0	50.0	100.0(4)	3.3	
민간	29.4	11.8	35.3	23.5	100.0(34)	2.5	31.7***
가정	24.3	18.1	48.0	9.6	100.0(177)	2.4	
현원규모							
20인 이하	24.6	17.9	48.0	9.5	100.0(179)	2.4	
21~39인 이하	27.3	18.2	36.4	18.2	100.0(11)	2.5	
40~79인 이하	35.7	14.3	21.4	28.6	100.0(14)	2.4	8.4***
80~99인 이하	10.0	10.0	40.0	40.0	100.0(10)	3.1	
100인 이상	-	-	100.0	-	100.0(1)	3.0	
지역규모							
대도시	23.1	19.4	45.0	12.5	100.0(160)	2.5	
중소도시	33.3	9.5	42.9	14.3	100.0(42)	2.4	2.0
읍면지역	15.4	15.4	61.5	7.7	100.0(42)	2.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다음 <표 V-1-30>~<표 V-1-32>은 어린이집 폐쇄조건 적정 수준을 알아본 것이다. 먼저 어린이집 폐쇄조건으로 정원충족률을 적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들은 적정 수준으로 평균 25.5%를 제안하였다. 구간별로는 21~30%가 33.1%로 다빈도이고, 다음으로 10% 이하 30.9%, 11~20% 17.6%, 41~50% 10.3% 순이었다. 제 특성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국공립은 33.3%로 민간과 가정 26.4%, 25.2%보다 높고, 읍면지역일수록 정원충족률이 높았다.

다음은 어린이집 폐쇄기준으로 정원충족률을 적용 시 지속기간을 알아보았다. 정원충족률 폐쇄 기준이 평균 8.7개월 정도 지속되는 경우 폐쇄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구간별로는 6~9개월 미만이 40.4%로 다수이고, 12~15개월 28.1%, 6개월 미만 21.2% 순이다. 국공립은 12~15개월, 민간과 가정은 6~9개월 미만이 다빈

도이다. 현원 및 지역규모별로는 전체 응답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V-1-30】 어린이집 폐쇄조건: 정원충족률

단위: %(명)

구분	10% 이하	11~20%	21~30%	31~40%	41~50%	계(수)	평균	F
전체	30.9	17.6	33.1	8.1	10.3	100.0(136)	25.5	
기관 유형								
국공립	-	33.3	33.3	-	33.3	100.0(3)	33.3	
민간	33.3	19.0	28.6	4.8	14.3	100.0(21)	26.4	19.5***
가정	31.3	17.0	33.9	8.9	8.9	100.0(112)	25.2	
현원규모								
20인 이하	31.0	17.7	33.6	8.8	8.8	100.0(113)	25.1	
21~39인 이하	37.5	25.0	25.0	-	12.5	100.0(8)	21.3	
40~79인 이하	16.7	16.7	50.0	-	16.7	100.0(6)	34.3	1.5
80~99인 이하	25.0	12.5	25.0	12.5	25.0	100.0(8)	30.0	
100인 이상	100.0	-	-	-	-	100.0(1)	10.0	
지역규모								
대도시	30.6	21.4	28.6	9.2	10.2	100.0(98)	25.2	
중소도시	37.9	6.9	37.9	6.9	10.3	100.0(29)	25.9	1.0
읍면지역	11.1	11.1	66.7	-	11.1	100.0(9)	28.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p < .001$

【표 V-1-31】 어린이집 폐쇄조건: 정원충족률 기간

단위: %(명), 개월

구분	6개월 미만	6~9개월 미만	9~12개월 미만	12~15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계(수)	평균	F
전체	21.2	40.4	3.4	28.1	6.8	100.0(146)	8.7	
기관 유형								
국공립	-	33.3	-	66.7	-	100.0(3)	10.0	
민간	27.3	45.5	-	18.2	9.1	100.0(22)	8.4	1.3
가정	20.7	39.7	4.1	28.9	6.6	100.0(121)	8.7	
현원규모								
20인 이하	20.5	39.3	4.1	29.5	6.6	100.0(122)	8.7	
21~39인 이하	25.0	37.5	-	12.5	25.0	100.0(8)	11.3	
40~79인 이하	42.9	28.6	-	28.6	-	100.0(7)	7.1	2.0
80~99인 이하	12.5	62.5	-	25.0	-	100.0(8)	7.0	
100인 이상	-	100.0	-	-	-	100.0(1)	6.0	
지역규모								
대도시	22.9	37.1	1.9	29.5	8.6	100.0(105)	9.0	
중소도시	20.0	46.7	10.0	20.0	3.3	100.0(30)	7.7	.4
읍면지역	9.1	54.5	-	36.4	-	100.0(11)	7.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폐쇄조건으로 원장 1인이 운영하는 기간을 물었다. 평균 7.4개월이라고 답하였고, 구간별로는 6~9개월 42.0%, 6개월 미만과 12~15개월 미만이 각각 33.2%, 19.6% 순이었다. 기관유형과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국공립은 평균 6.2개월이나 민간과 가정은 각각 평균 9.2개월, 8.0개월로 국공립보다 원장 1인 운영기간이 길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각각 6.7개월, 8.3개월인데 반해 읍면지역은 11.3개월로 1년 정도를 제안하였다(표 V-1-32 참조).

【표 V-1-32】 어린이집 폐쇄조건: 원장 1인 운영 지속기간

단위: %(명), 개월

구분	6개월 미만	6~9개월	9~12개월	12~15개월	18개월 이상	계(수)	평균	F
전체	33.2	42.0	1.5	19.6	3.6	100.0(331)	7.4	
기관 유형								
국공립	41.5	40.1	1.4	13.6	3.4	100.0(147)	6.2	
민간	27.1	54.2	-	13.6	5.1	100.0(59)	9.2	3.2*
가정	26.4	38.4	2.4	29.6	3.2	100.0(125)	8.0	
현원규모								
20인 이하	25.4	39.4	2.8	29.6	2.8	100.0(142)	7.9	
21~39인 이하	28.8	50.0	-	15.4	5.8	100.0(52)	9.7	
40~79인 이하	41.4	43.7	-	9.2	5.7	100.0(87)	6.3	1.2
80~99인 이하	48.6	34.3	2.9	14.3	-	100.0(35)	5.3	
100인 이상	40.0	46.7	-	13.3	-	100.0(15)	5.7	
지역규모								
대도시	35.5	43.4	1.2	17.4	2.5	100.0(242)	6.7	
중소도시	23.7	42.4	3.4	23.7	6.8	100.0(59)	8.3	4.4*
읍면지역	33.3	30.0	-	30.0	6.7	100.0(30)	11.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p < .05$

2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

2절은 출생아 수 감소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에 따른 유치원 운영의 어려움을 알아보고, 공영형유치원 등의 전환 의향 및 이유 등과 매립형유치원 조건 및 선정기준의 적절성, 참여의향 및 효과 등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의 충분성과 증설 적정지역, 유아수용계획 수립 등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가. 원아 모집의 어려움

최근 출생아 수 감소와 공립유치원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참여 유치원 중 35.7%가 어느 정도 어려움, 28.9%가 매우 어렵다고 답하여 64.6%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 정도는 4점 평균 2.8점이었다. 공립이 평균 2.4점, 사립이 평균 3.2점으로 사립유치원이 겪는 원아 모집의 어려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원이나 지역규모별로는 차이가 없었다(표 V-2-1 참조).

▮ 표 V-2-1 ▮ 원아 모집의 어려움 정도

단위: %(개원), 점

구분	전혀 없음	거의 없음	어느 정도 있음	매우 많음	계(수)	평균
전체	13.5	21.9	35.7	28.9	100.0(443)	2.8
기관 유형						
공립	21.8	28.4	33.3	16.4	100.0(225)	2.4
사립	5.0	15.1	38.1	41.7	100.0(218)	3.2
$X^2(df)/t$			57.1(3)***			-8.1***
현원규모						
50인 이하	10.8	20.5	38.4	30.3	100.0(185)	2.9
51~100인 미만	15.7	19.0	32.2	33.1	100.0(121)	2.8
100인 이상	15.3	26.3	35.0	23.4	100.0(137)	2.7
$X^2(df)/F$			6.7(6)			1.9
지역규모						
대도시	13.0	18.6	33.9	34.5	100.0(177)	2.9
중소도시	15.5	26.1	35.2	23.2	100.0(142)	2.7
읍면지역	12.1	21.8	38.7	27.4	100.0(124)	2.8
$X^2(df)/F$			6.7(6)			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 $p < .001$

원아 모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1, 2순위로 알아보았다. 1순위로 출생아 수 감소가 64.3%를 차지하고, 지역 내 단설 공립유치원 증설 11.0%, 지역 내 병설공립유치원 증설 7.0% 순이었다. 2순위도 출생아 수 감소가 18.9%로 다빈도이나, 나머지도 10% 대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1,2순위를 합산하면, 출생아 수 감소가 83.2%로 압도적으로 많고, 지역내 단설 공립유치원 증설이 24.5%, 지역 내 단설 공립유치원 증설 22.4% 순이다(표 V-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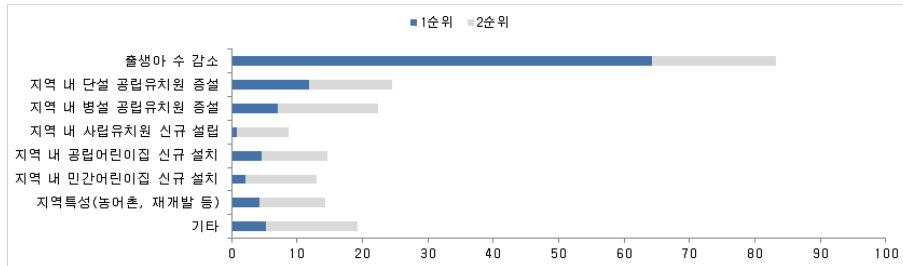
표 V-2-2 원아 모집의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 1+2순위

단위: %(개원)

구분	출생아 수 감소	지역 내 단설 공립유치원 증설	지역 내 병설 공립유치원 증설	지역 내 사립유치원 신규 설립	지역 내 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지역 내 민간어린이집 신규 설치	지역특성 (농어촌, 재개발 등)	기타	계(수)
1순위	64.3	11.9	7.0	0.7	4.5	2.1	4.2	5.2	100.0(286)
2순위	18.9	12.6	15.4	8.0	10.2	10.8	10.1	14.0	100.0(286)
1+2순위	83.2	24.5	22.4	8.7	14.7	12.9	14.3	19.2	(28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그림 V-2-1 원아 모집의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 1+2순위



자료: <표 V-2-2>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표 V-2-3 원아 모집의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 1순위

단위: %(개원)

구분	출생아 수 감소	지역 내 단설 공립유치원 증설	지역 내 병설 공립유치원 증설	지역 내 사립유치원 신규 설립	지역 내 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지역 내 민간어린이집 신규 설치	지역특성 (농어촌, 재개발 등)	기타	계(수)
전체	64.3	11.9	7.0	0.7	4.5	2.1	4.2	5.2	100.0(286)
기관 유형									
공립	68.8	0.9	0.9	0.9	3.6	4.5	9.8	10.7	100.0(112)
사립	61.5	19.0	10.9	0.6	5.2	0.6	0.6	1.7	100.0(174)
현원규모									
50인 이하	65.4	4.7	1.6	1.6	5.5	4.7	7.9	8.7	100.0(127)
51~100인 미만	60.8	19.0	11.4	-	3.8	-	1.3	3.8	100.0(79)
100인 이상	66.3	16.3	11.3	-	3.8	-	1.3	1.3	100.0(80)
지역규모									
대도시	62.8	17.4	9.9	0.8	5.0	1.7	0.8	1.7	100.0(121)
중소도시	54.2	12.0	7.2	-	6.0	1.2	8.4	10.8	100.0(83)
읍면지역	76.8	3.7	2.4	1.2	2.4	3.7	4.9	4.9	100.0(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앞서 살펴본 원아 모집의 어려움 주요 요인 1순위를 제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제 특성별로도 전체 응답 비율과 유사하지만, 사립은 지역 내 단설 또는 병설 공립유치원 증설을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도시일수록 지역 내 단설 공립유치원 증설에 따라 어려움을 느낀다는 비율이 높았다.

〈표 V-2-4〉는 유치원 운영 시 원아 수 감소를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 참여 유치원 중 33.0%는 다소 체감, 38.8%는 매우 체감한다고 답하여 70% 가까이가 체감한다고 답하였고, 체감 정도는 4점 평균 3.0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공립 평균 2.7점, 사립 평균 3.4점으로 사립이 체감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현원 및 지역 규모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표 V-2-4 ■ 원아 수 감소 체감 정도

단위: %(개원), 점

구분	전혀 모름	별로 모름	다소 체감	매우 체감	계(수)	평균
전체	9.3	19.0	33.0	38.8	100.0(443)	3.0
기관 유형						
공립	16.9	23.6	34.7	24.9	100.0(225)	2.7
사립	1.4	14.2	31.2	53.2	100.0(218)	3.4
X ² (df)/t		57.2(3)***				-8.0***
현원규모						
50인 이하	9.7	16.2	34.6	39.5	100.0(185)	3.0
51~100인 미만	9.9	15.7	29.8	44.6	100.0(121)	3.1
100인 이상	8.0	25.5	33.6	32.8	100.0(137)	2.9
X ² (df)/F		7.7(6)				1.2
지역규모						
대도시	6.8	19.2	31.1	42.9	100.0(177)	3.1
중소도시	12.0	17.6	38.0	32.4	100.0(142)	2.9
읍면지역	9.7	20.2	29.8	40.3	100.0(124)	3.0
X ² (df)/F		6.6(6)				1.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 $p < .001$

원아가 이전보다 감소하였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한 유치원 대상으로 원아가 가장 많은 시기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감소하였는지를 알아보았다.

평균 30.2%가 감소하였고, 구간별로는 10~30%가 42.8%로 많고, 30~50%와 50~70%가 각각 21.4%, 21.1%, 나머지는 10% 미만이다. 기관 유형별로는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규모가 작을수록,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감소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표 V-2-5 참조).

표 V-2-5 원아 최고 수준 대비 원아 감소 비율

단위: %(개원)

구분	10% 미만	10-30%	30-50%	50-70%	70% 이상	계(수)	평균
전체	8.8	42.8	21.4	21.1	6.0	100.0(318)	30.2
기관 유형							
공립	13.4	38.8	17.2	25.4	5.2	100.0(134)	29.0
사립	5.4	45.7	24.5	17.9	6.5	100.0(184)	31.1
X ² (df)/t			10.7(4)*				-9
현원규모							
50인 이하	5.8	29.2	20.4	32.8	11.7	100.0(137)	38.0
51~100인 미만	13.3	46.7	21.1	15.6	3.3	100.0(90)	26.6
100인 이상	8.8	59.3	23.1	8.8	-	100.0(91)	22.2
X ² (df)/F			46.5(8)***				21.1***
지역규모							
대도시	9.9	44.3	24.4	16.8	4.6	100.0(131)	29.2
중소도시	13.0	47.0	13.0	21.0	6.0	100.0(100)	27.1
읍면지역	2.3	35.6	26.4	27.6	8.0	100.0(87)	35.5
X ² (df)/F			16.7(8)*				4.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원아 수 감소로 유치원 재정 운영 상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V-2-6 원아 수 감소로 인한 유치원 재정 운영의 어려움 경험 여부

단위: %(개원)

구분	있음	없음	계(수)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65.1	34.9	100.0(318)				
기관 유형				지역규모			
공립	27.6	72.4	100.0(134)	대도시	84.0	16.0	100.0(131)
사립	92.4	7.6	100.0(184)	중소도시	54.0	46.0	100.0(100)
X ² (df)	143.2(1)***			읍면지역	49.4	50.6	100.0(87)
현원규모				X ² (df)	35.4(2)***		
50인 이하	45.3	54.7	100.0(137)				
51~100인 미만	80.0	20.0	100.0(90)				
100인 이상	80.2	19.8	100.0(91)				
X ² (df)	41.7(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 $p < .001$

유치원 중 65.1%가 경험이 있고, 사립이 공립 유치원보다 경험했다는 비율이 높고, 규모가 클수록, 도시지역일수록 경험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원아 수 감소로 재정난을 경험한 경우, 유치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추가 질문하였다. 조사 참여 유치원 중 62.3%는 보조인력 수를 줄이고, 60.9%는 유치원 운영 경비를 줄이며, 26.6%는 전체 학급 수를 줄이거나 14.0%는 혼합반 구성이라고 답하였다(표 V-2-7 참조).

기관유형별로는 사립은 전체 학급수를 줄이거나 보조인력 수를 줄인다는 비율이 공립보다 많고, 규모가 작을수록 혼합반 구성과 보조인력 수를 줄이거나 도시지역일수록 전체 학급 수를 줄이거나 혼합반을 구성한다는 비율이 높았다(표 V-2-7 참조).

표 V-2-7 유치원 원아 수 감소로 인한 재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

단위: %(개원)

구분	전체 학급 수 줄임	혼합반 구성	보조인력 수 줄임	유치원 운영 경비	기타	(수)
전체	26.6	14.0	62.3	60.9	11.6	(207)
기관 유형						
공립	5.4	16.2	32.4	67.6	5.4	(37)
사립	31.2	13.5	68.8	59.4	12.9	(170)
현원규모						
50인 이하	17.7	22.6	41.9	61.3	11.3	(62)
51~100인 미만	33.3	12.5	70.8	58.3	12.5	(72)
100인 이상	27.4	8.2	71.2	63.0	11.0	(73)
지역규모						
대도시	34.5	16.4	63.6	59.1	16.4	(110)
중소도시	22.2	14.8	66.7	61.1	7.4	(54)
읍면지역	11.6	7.0	53.5	65.1	4.7	(43)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나.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

1) 공영형 사립유치원 참여 의향

서울시교육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을 해당 교육청이 추진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서울 이외 지역 유치원에 물었다.

서울 이외 사립유치원 중 20.2%만 참여 의향이 있고, 33.9%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50인 이하 소규모 유치원이거나 읍면지역에서 참여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V-2-8 참조).

【표 V-2-8】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 운영시 참여 의향

단위: %(개원)

구분	참여 의향 있음	참여 의향 없음	잘 모르겠음	계(수)	구분	참여 의향 있음	참여 의향 없음	잘 모르겠음	계(수)
전체	20.2	45.8	33.9	100.0(168)					
현원규모					지역규모				
50인 이하	45.0	25.0	30.0	100.0(20)	대도시	13.6	54.3	32.1	100.0(81)
51~100인 미만	16.7	40.0	43.3	100.0(60)	중소도시	20.3	44.1	35.6	100.0(59)
100인 이상	17.0	54.5	28.4	100.0(88)	읍면지역	39.3	25.0	35.7	100.0(2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서울시교육청의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경우, 그 이유를 1,2순위로 조사하였다(표 V-2-9 참조).

【표 V-2-9】 공영형 사립유치원 미참여 이유: 1+2순위

단위: %(개원)

구분	예산지원수준이 기대에 못 미침	사학기관 재무회계 준수, 카드거래 등 회계 운영 부담	운영기준 준수의 어려움	교육과정 분야 컨설팅, 장학지도, 재정회계 운영 부담감	공영형 유치원 선정 이후 정기, 종합 평가 부담감	유치원 수준이 선정기준에 못 미쳐서	관련 정보 또는 인지도 부족	기타	계(수)
1순위	11.7	23.4	5.2	6.5	14.3	10.4	1.3	27.3	100.0(77)
2순위	22.1	13.0	13.0	10.4	27.3	6.5	1.3	6.5	100.0(77)
1+2순위	33.8	36.4	18.2	16.9	41.6	16.9	2.6	33.8	(7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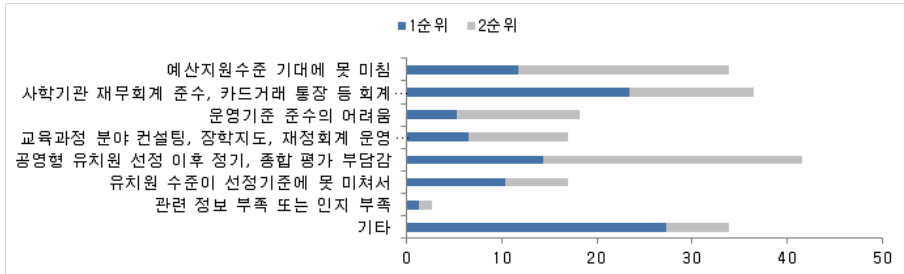
1순위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준수 및 카드거래 등 회계 운영 부담 23.4%, 공영형 유치원 선정 이후 정기, 종합 평가 부담감 14.3%, 예산지원기준이 기대에 못 미쳐서 11.7%, 유치원 수준이 선정기준에 못 미쳐서 10.4%이고, 2순위는 공영형 유치원 선정 이후 정기, 종합 평가 부담감이 27.3%, 예산 지원수준이 기대에 못 미쳐서 22.1%, 운영기준 준수의 어려움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준수 및 카드거래 등 회계운영 부담 각각 13.0%이었다. 1,2순위를 합산하면, 공영형유치원 선정 이후 정기 종합평가 부담감 41.6%, 사학기관 재무회계 준수 및 카드 거래 등 회계



운영의 부담감이 36.4%, 예산 지원기준이 기대에 못 미쳐서 33.8% 순이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 미참여 이유 1순위를 제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부록 표 V-2-1>에 수록하였다.

■ 그림 V-2-2 ■ 공영형 사립유치원 미참여 이유: 1+2순위



자료: <표 V-2-9>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2) 공영형 사립유치원 지원 및 운영기준 개선사항

<표 V-2-10>은 서울시교육청의 공영형유치원 모델의 지원수준, 운영기준, 컨설팅 및 장학, 평가 등의 개선사항을 조사한 것이다.

운영기준이 71.1%로 높고, 그 다음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예산 지원수준 58.3%, 컨설팅 및 장학 28.4%, 평가 24.8% 순이었다. 각 항목 대부분 제 특성별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 표 V-2-10 ■ 서울시교육청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 개선사항

단위: %(개원)

구분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예산 지원수준	운영기준	컨설팅 및 장학	평가	기타	(수)
전체	58.3	71.1	28.4	24.8	14.2	(218)
현원규모						
50인 이하	53.3	73.3	23.3	33.3	16.7	(30)
51~100인 미만	51.9	70.1	22.1	23.4	20.8	(77)
100인 이상	64.0	71.2	34.2	23.4	9.0	(111)
지역규모						
대도시	53.4	74.0	23.7	26.0	15.3	(131)
중소도시	62.7	67.8	33.9	18.6	11.9	(59)
읍면지역	71.4	64.3	39.3	32.1	14.3	(28)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공영형 사립유치원 예산 지원기준의 적절성을 알아보았다. 5개 세부기준 중 리스 버스 운전원 인건비 지원기준이 적절하는 의견이 73.2%로 높고, 그 다음으로 행정실 실장 지원기준과 직영 버스 운전원 인건비 지원기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각각 67.7%이었다. 학교기본운영비 예비지원금 기준이 46.5%로 낮았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교직원 인건비 기준이 40.2%, 학교기본운영비는 각각 40~48% 사이로 높았다(표 V-2-10 참조).

표 V-2-11 | 공영형 사립유치원 예산 지원기준의 적절성

구분	하향 조정	적정	상향조정	단위: %(명)
				계(수)
1. 교직원 인건비: 교육공무원 인건비 80~100%	6.3	53.5	40.2	100.0(127)
2. 초과근무 수당 정액분 지원	7.9	59.8	32.3	100.0(127)
3. 행정실 실장: 일반직 7급 10호봉 상당액	9.4	67.7	22.8	100.0(127)
4. 운전원				
1) 직영: 통학차량 운영시 특별인부 기준	9.4	67.7	22.8	100.0(127)
2) 리스: 공립 거져버스 기준	6.3	73.2	20.5	100.0(127)
5. 학교기본운영비				
1) 공통경상운영비	5.5	54.3	40.2	100.0(127)
2) 개별경상운영비	5.5	53.5	40.9	100.0(127)
3) 예비지원금	5.5	46.5	48.0	100.0(12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공영형 사립유치원 예산 지원기준의 적절성을 제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부록 표 V-2-2>~<부록 표 V-2-4>에 수록하였다.

3) 공영형 사립유치원 선정기준 마련 관련 의견

최은영 외(2015)는 공공형 사립유치원 선정지표(안)⁵⁶⁾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와 같이,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 대상 선정 시 자격이나 선정기준을 별도 마

56) <주석 표 V-2-1> 공공형 사립유치원 선정지표(안)

영역	세부지표
1. 교원자격 및 관리	교원연수 참여 비율, 교원능력개발 평가 참여 여부, 교원 평균 근속연수, 학사학위 이상 소지 교사 비율, 교원 평균 경력
2. 교육과정 운영	누리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교육과정 운영, 방과후특성화 활동 운영 지침 준수
3. 재정운영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여부, 유치원 정보공시 준수, 학부모 부담 비용 수준(시도/시군구 평균 대비), 원비 인상을 상한제 적용
4. 질 관리	교사(보조교사 포함) 대 유아비율, 유치원 평가 참여 여부 및 점수, 직무연수 및 컨설팅 지원 횟수(평균)

자료: 최은영·박창현·송신영(2015).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 도입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련하는 방안에 대해 물었다.

찬성이 47.7%, 반대가 52.3%로 반대가 찬성보다 다소 많았다. 규모가 클수록,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 표 V-2-12 ▣ 공영형 사립유치원 자격 및 선정기준 마련에 관한 의견

단위: %(개원)

구분	찬성	반대	계(수)	구분	찬성	반대	계(수)
전체	47.7	52.3	100.0(218)				
현원규모				지역규모			
50인 이하	30.0	70.0	100.0(30)	대도시	45.0	55.0	100.0(131)
51~100인 미만	49.4	50.6	100.0(77)	중소도시	52.5	47.5	100.0(59)
100인 이상	51.4	48.6	100.0(111)	읍면지역	50.0	50.0	100.0(2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4)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 효과 및 기대

공영형유치원 사업 추진 시 부모, 교사, 유치원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부모 측면에서는 학부모 유아학비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65.6%로 높고, 유치원 이용 만족도 상승과 유치원 신뢰도 개선이 각각 50% 정도이었다(표 V-2-13 참조).

▣ 표 V-2-13 ▣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 효과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효과 없음	효과 없음	보통	어느 정도 효과 있음	매우 효과 있음	계(수)	평균
1. 부모							
1) 학부모 유아학비 부담 경감	5.0	9.6	19.7	46.8	18.8	100.0(218)	3.6
2) 유치원 이용 만족도 상승	5.0	11.9	31.7	39.9	11.5	100.0(218)	3.4
3) 유치원 신뢰도 개선	5.5	11.5	32.6	39.0	11.5	100.0(218)	3.4
2. 교직원							
1) 교직원 처우 개선	1.8	5.0	13.3	48.6	31.2	100.0(218)	4.0
2) 교사 업무 경감	18.3	23.4	33.0	18.3	6.9	100.0(218)	2.7
3) 교사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	7.8	13.3	37.2	33.5	8.3	100.0(218)	3.2
3. 유치원							
1) 원아 모집의 수월성 제고	4.6	7.3	26.1	42.7	19.3	100.0(218)	3.6
2) 유치원 교육서비스 질 개선	5.0	14.7	35.8	32.6	11.9	100.0(218)	3.3
3) 교사 고용 및 수급 안정	3.7	6.0	26.6	46.8	17.0	100.0(218)	3.7
4) 교육환경 개선	4.6	6.4	24.3	46.8	17.9	100.0(218)	3.7
5)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4.1	6.4	29.4	41.3	18.8	100.0(218)	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교직원 측면에서는 교직원 처우 개선이 79.8%로 높고, 교사 업무 경감이나 교사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은 각각 25.2%, 41.8% 정도로 낮았다.

유치원 측면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이 64.7%로 높고, 교사 고용 및 수급 안정 63.8%, 원아 모집의 수월성 제고 62.0%,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60.1%로 높고 유치원 교육서비스 질 개선은 44.5%로 낮았다.

〈표 V-2-14〉는 부모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효과를 제 특성별로 살펴본 것이다. 부모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중 유치원 이용 만족도 상승과 유치원 신뢰도 개선 둘다 규모가 작을수록 효과에 대해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표 V-2-14 ▮ 공영형 사립유치원 효과: 부모

단위: %(명), 점

구분	학부모 유아학비 부담 경감			유치원 이용 만족도 상승			유치원 신뢰도 개선			(수)
	어느 정도 효과 있음	매우 효과 있음	평균	어느 정도 효과 있음	매우 효과 있음	평균	어느 정도 효과 있음	매우 효과 있음	평균	
전체	46.8	18.8	3.6	39.9	11.5	3.4	39.0	11.5	3.4	(218)
현원규모										
50인 이하	43.3	26.7	3.9	36.7	26.7	3.8	40.0	30.0	3.9	(30)
51~100인 미만	50.6	18.2	3.7	46.8	9.1	3.5	41.6	9.1	3.5	(77)
100인 이상	45.0	17.1	3.5	36.0	9.0	3.3	36.9	8.1	3.2	(111)
F			1.2			3.3*			5.1**	
지역규모										
대도시	48.1	20.6	3.7	37.4	11.5	3.4	34.4	13.0	3.3	(131)
중소도시	37.3	18.6	3.5	37.3	13.6	3.4	40.7	11.9	3.4	(59)
읍면지역	60.7	10.7	3.7	57.1	7.1	3.6	57.1	3.6	3.5	(28)
F			.5			1.0			.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교직원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즉 교직원 처우 개선, 교사 업무 경감, 교사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 모두 현원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가지 모두 규모가 작을수록 효과가 유의하게 높았다(표 V-2-15 참조).

유치원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효과를 보면, 원아 모집의 수월성 제고, 유치원 교육서비스 질 개선, 교사 고용 및 수급 안정, 교육환경 개선 4가지만 현원 규모가 작을수록 효과가 유의하게 높았다(표 V-2-16, 표 V-2-17

참조).

■ 표 V-2-15 ■ 공영형 사립유치원 효과: 교직원

단위: %(명), 점

구분	교직원 처우 개선			교사 업무 경감			교사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			(수)
	어느 정도 효과 있음	매우 효과 있음	평균	어느 정도 효과 있음	매우 효과 있음	평균	어느 정도 효과 있음	매우 효과 있음	평균	
전체	48.6	31.2	4.0	18.3	6.9	2.7	33.5	8.3	3.2	(218)
현원규모										
50인 이하	43.3	53.3	4.5	20.0	20.0	3.3	36.7	23.3	3.7	(30)
51~100인 미만	53.2	29.9	4.1	26.0	2.6	2.7	37.7	2.6	3.2	(77)
100인 이상	46.8	26.1	3.9	12.6	6.3	2.6	29.7	8.1	3.1	(111)
F			6.0**			4.4*			3.9*	
지역규모										
대도시	45.8	32.1	4.0	16.8	8.4	2.7	27.5	10.7	3.2	(131)
중소도시	49.2	30.5	4.1	18.6	3.4	2.6	40.7	5.1	3.3	(59)
읍면지역	60.7	28.6	4.1	25.0	7.1	3.0	46.4	3.6	3.4	(28)
F			.4			1.5			.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표 V-2-16 ■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효과 및 기대: 유치원 1

단위: %(명), 점

구분	원아 모집의 수월성 제고			유치원 교육서비스 질 개선			교사 고용 및 수급 안정			(수)
	어느 정도 효과 있음	매우 효과 있음	평균	어느 정도 효과 있음	매우 효과 있음	평균	어느 정도 효과 있음	매우 효과 있음	평균	
전체	42.7	19.3	3.6	32.6	11.9	3.3	46.8	17.0	3.7	(218)
현원규모										
50인 이하	43.3	40.0	4.2	30.0	26.7	3.7	53.3	33.3	4.2	(30)
51~100인 미만	48.1	13.0	3.6	42.9	9.1	3.4	48.1	16.9	3.7	(77)
100인 이상	38.7	18.0	3.6	26.1	9.9	3.2	44.1	12.6	3.5	(111)
F			4.7*			4.2*			6.8**	
지역규모										
대도시	41.2	22.1	3.7	29.8	15.3	3.3	44.3	18.3	3.6	(131)
중소도시	39.0	15.3	3.5	28.8	6.8	3.2	45.8	15.3	3.7	(59)
읍면지역	57.1	14.3	3.8	53.6	7.1	3.6	60.7	14.3	3.9	(28)
F			.7			1.6			.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표 V-2-17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효과 및 기대: 유치원 2

단위: %(명), 점

구분	교육환경 개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수)
	어느 정도 효과 있음	매우 효과 있음	평균	어느 정도 효과 있음	매우 효과 있음	평균	
전체	46.8	17.9	3.7	41.3	18.8	3.6	(218)
현원규모							
50인 이하	50.0	43.3	4.4	40.0	30.0	4.0	(30)
51~100인 미만	46.8	19.5	3.7	50.6	16.9	3.7	(77)
100인 이상	45.9	9.9	3.5	35.1	17.1	3.5	(111)
F			10.8***			2.9	
지역규모							
대도시	44.3	19.8	3.6	39.7	19.1	3.6	(131)
중소도시	44.1	13.6	3.6	39.0	18.6	3.7	(59)
읍면지역	64.3	17.9	4.0	53.6	17.9	3.9	(28)
F			1.5			.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 $p < .001$

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 관련

1) 매입형 유치원 도입 위한 조건

정부는 단설 공립유치원 용지 및 재원 문제해결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고, 민간 경영자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하는 ‘위탁형’ 유치원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매입형 유치원 제도 도입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조건을 1,2순위로 알아보았다(표 V-2-18 참조).

표 V-2-18 매입형 유치원 도입 위한 조건: 1+2순위

단위: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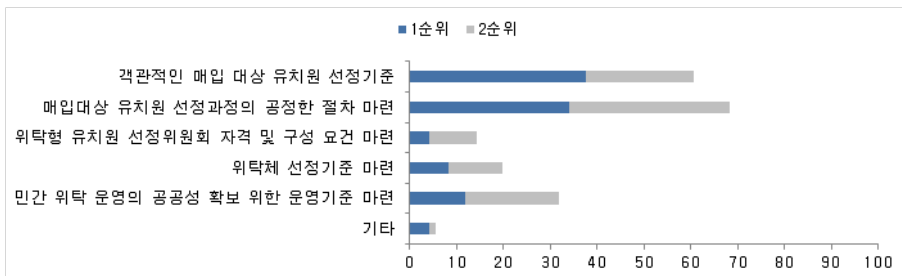
구분	객관적인 매입 대상 유치원 선정기준	매입대상 유치원 선정과정의 공정한 절차 마련	위탁형 유치원 선정위원회 자격 및 구성 요건 마련	위탁체 선정기준 마련	민간 위탁 운영의 공공성 확보 위한 운영기준 마련	기타	계(수)
1순위	37.6	33.9	4.1	8.3	11.9	4.1	100.0(218)
2순위	23.0	34.4	10.1	11.4	19.8	1.4	100.0(218)
1+2순위	60.6	68.3	14.2	19.7	31.7	5.5	(2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1순위로 객관적인 매입 대상 유치원 선정기준 37.6%, 매입 대상 유치원 선정 과정의 공정한 절차 마련이 33.9%, 민간 위탁 운영의 공공성 확보 위한 운영기준 마련 11.9%이고, 2순위는 매입 대상 유치원 선정과정의 공정한 절차 마련이 34.4%, 객관적인 매입 대상 유치원 선정기준 23.0%, 민간위탁 운영의 공공성 확보 위한 운영기준 마련 19.8% 순이다. 1,2순위를 합산하면, 매입 대상 유치원 선정기준 마련이 68.3%, 객관적인 매입 대상 유치원 선정기준 마련 60.6%, 민간위탁 운영의 공공성 확보 위한 운영기준 마련 31.7% 순이다(표 V-2-18 참조).

■ 그림 V-2-3 ■ 매입형 유치원 도입 위한 조건: 1+2순위



자료: <표 V-2-18>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매입형 유치원 도입 위한 조건 1순위를 제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V-2-19>와 같다.

■ 표 V-2-19 ■ 제 특성별 매입형 유치원 도입 위한 조건: 1순위

단위: %(명)

구분	객관적인 매입 대상 유치원 선정기준 마련	매입대상 유치원 선정과정의 공정한 절차 마련	위탁형 유치원 선정위원회 자격 및 구성 요건 마련	위탁체 선정기준 마련	민간 위탁운영 공공성 확보 위한 운영 기준 마련	기타	계(수)
전체	37.6	33.9	4.1	8.3	11.9	4.1	100.0(218)
현원규모							
50인 이하	33.3	43.3	6.7	6.7	10.0	-	100.0(30)
51~100인 미만	33.8	36.4	6.5	9.1	9.1	5.2	100.0(77)
100인 이상	41.4	29.7	1.8	8.1	14.4	4.5	100.0(111)
지역규모							
대도시	39.7	33.6	3.1	9.9	10.7	3.1	100.0(131)
중소도시	32.2	33.9	6.8	8.5	15.3	3.4	100.0(59)
읍면지역	39.3	35.7	3.6	-	10.7	10.7	100.0(2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제 특성별로도 전체 응답비율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특히, 100인 이상은 객관적인 매입 대상 유치원 선정기준 마련, 현원규모가 작을수록 매입대상 유치원 선정과정 공정한 절차 마련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표 V-2-19 참조).

2) 매입형 유치원 위탁운영체 선정기준

〈표 V-2-20〉에 제시한 매입형 유치원 위탁운영체 선정기준의 적절성을 알아보았다.

14개 선정기준 중 적절하다는 비율은 원장의 운영관리 능력 및 의지가 71.5%, 운영체의 도덕적 법적 건전성 71.1%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 유치원 운영 및 관리와 교직원 교육 및 지원계획, 예산 편성, 원장의 유치원 운영 경력, 운영체의 공신력, 유치원 장학 및 평가 계획,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 계획 등이 60%를 상회한다. 적절성 점수는 유치원 운영 및 관리와 원장의 운영관리 능력 및 의지, 운영체의 도덕적 법적 건전성 3개 기준이 5점 평균 3.9점으로 높았다.

▮ 표 V-2-20 ▮ 매입형 유치원 위탁운영체 선정기준의 적절성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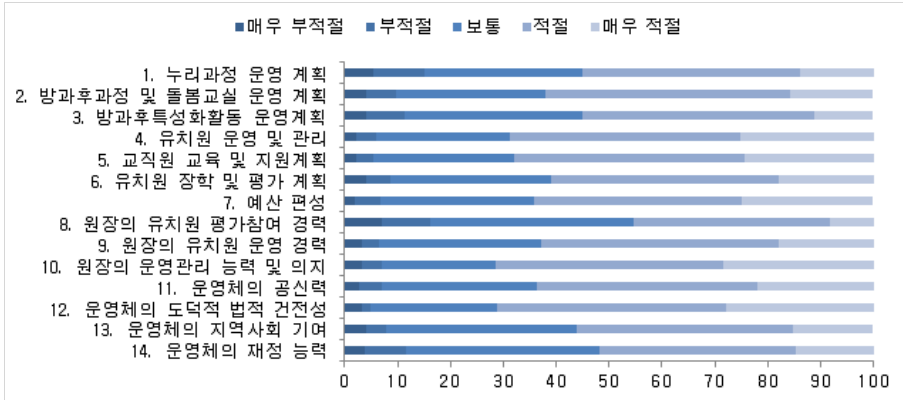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평균
1. 누리과정 운영 계획	5.5	9.6	29.8	41.3	13.8	100.0(218)	3.5
2.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 계획	4.1	5.5	28.4	46.3	15.6	100.0(218)	3.6
3. 방과후특성화활동 운영계획	4.1	7.3	33.5	44.0	11.0	100.0(218)	3.5
4. 유치원 운영 및 관리	2.3	3.7	25.2	43.6	25.2	100.0(218)	3.9
5. 교직원 교육 및 지원계획	2.3	3.2	26.6	43.6	24.3	100.0(218)	3.8
6. 유치원 장학 및 평가 계획	4.1	4.6	30.3	43.1	17.9	100.0(218)	3.7
7. 예산 편성	1.8	5.0	28.9	39.4	24.8	100.0(218)	3.8
8. 원장의 유치원 평가참여 경력	6.9	9.2	38.5	37.2	8.3	100.0(218)	3.3
9. 원장의 유치원 운영 경력	3.2	3.2	30.7	45.0	17.9	100.0(218)	3.7
10. 원장의 운영관리 능력 및 의지	3.2	3.7	21.6	43.1	28.4	100.0(218)	3.9
11. 운영체의 공신력	2.8	4.1	29.4	41.7	22.0	100.0(218)	3.8
12. 운영체의 도덕적 법적 건전성	3.2	1.8	23.9	43.1	28.0	100.0(218)	3.9
13. 운영체의 지역사회 기여	4.1	3.7	36.2	40.8	15.1	100.0(218)	3.6
14. 운영체의 재정 능력	3.7	7.8	36.7	37.2	14.7	100.0(218)	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매입형 유치원 위탁운영체 선정기준의 적절성을 제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부록 표 V-2-5〉~〈부록 표 V-2-9〉에 제시하였다.

■ 그림 V-2-4 ■ 매입형 유치원 위탁운영체 선정기준의 적절성 개요



자료: <표 V-2-20>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다. 공립유치원 증설 계획 관련 의견

지역 특성 또는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지역 내 공립유치원 수가 적당한지를 알아보았다. 공립유치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4.8%이고, 13.3%는 대체로 충분, 28.4%는 매우 충분이라고 답하였고, 충분성 정도는 5점 평균 3.3점이었다.

■ 표 V-2-21 ■ 지역 내 공립유치원 수 적절성

단위: %(개원), 점

구분	매우 부족	대체로 부족	적정	대체로 충분	매우 충분	계(수)	평균
전체	11.5	21.9	24.8	13.3	28.4	100.0(443)	3.3
기관 유형							
공립	21.3	36.0	25.8	11.1	5.8	100.0(225)	2.4
사립	1.4	7.3	23.9	15.6	51.8	100.0(218)	4.1
$X^2(df)/t$			164.3(4)***				-15.6***
현원규모							
50인 이하	12.4	28.1	31.9	15.1	12.4	100.0(185)	2.9
51~100인 미만	14.0	22.3	15.7	8.3	39.7	100.0(121)	3.4
100인 이상	8.0	13.1	23.4	15.3	40.1	100.0(137)	3.7
$X^2(df)/F$			50.0(8)***				14.6***
지역규모							
대도시	10.7	17.5	18.6	11.3	41.8	100.0(177)	3.6
중소도시	13.4	23.2	29.6	14.1	19.7	100.0(142)	3.0
읍면지역	10.5	26.6	28.2	15.3	19.4	100.0(124)	3.1
$X^2(df)/F$			27.7(4)**				7.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충분성 정도는 사립이 5점 평균 4.1점, 공립은 평균 2.4점으로 사립이 유의하게 높고, 현원 규모가 높을수록 충분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으며,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보다 유의하게 높았다(표 V-2-21 참조).

단설 및 병설유치원 설립 시 적정 학급 수를 질문하였다. 공립 단설은 평균 6.4학급, 공립 병설은 2.7학급이 적정하다고 답하였다. 공립유치원은 공립 단설이 8.1학급, 공립 병설이 3.2학급으로 공립 단설이 2배 이상 많고, 사립유치원은 공립 단설이 4.7학급, 공립 병설이 2.6학급으로 차이가 컸다. 제 특성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표 V-2-22 참조).

표 V-2-22 단설 및 병설유치원 설립 시 적정 학급규모

단위: 학급

구분	공립 단설	공립 병설	(수)	구분	공립 단설	공립 병설	(수)
전체	6.4	2.9	(443)	지역규모			
기관 유형				대도시	5.6	3.1	(177)
공립	8.1	3.2	(225)	중소도시	7.4	2.8	(142)
사립	4.7	2.6	(218)	읍면지역	6.5	2.7	(124)
t	11.5***	4.3***		F	10.6***	2.5	
현원규모							
50인 이하	7.2	2.9	(185)				
51~100인 미만	5.9	2.7	(121)				
100인 이상	5.8	3.0	(137)				
F	7.4**	1.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공립유치원은 농산어촌이나 취약지역, 저소득 밀집지역에 우선 증설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유치원 대상으로 공립유치원 증설시 적정지역을 알아보았다. 조사 참여 유치원 중 28.2%는 도시 인구밀집지역, 27.1%는 공립유치원 미설치 지역, 20.1%는 저소득 밀집지역, 13.8%는 농산어촌 지역, 9.5%는 취약지역 순이다. 기관유형별로는 공립은 도시 인구밀집지역과 공립유치원 미설치 지역, 사립은 저소득 밀집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원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농산어촌 지역, 취약지역, 저소득 밀집지역이 높고, 규모가 작을수록 공립유치원 미설치 지역과 도시 인구밀집지역이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저소득 밀집지역, 읍면지역일수록 공립유치원 미설치지역과 도시 인구 밀집지역이 증설지역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표 V-2-23 참조)

표 V-2-23 | 공립유치원 증설 적정 지역

단위: %(개원)

구분	농산어촌 지역	취약지역	저소득 밀집지역	공립유치원 미설치 지역	도시 인구밀집지역	기타	계(수)
전체	13.8	9.5	20.1	27.1	28.2	1.4	100.0(443)
기관 유형							
공립	4.9	1.8	7.1	39.1	46.7	0.4	100.0(225)
사립	22.9	17.4	33.5	14.7	9.2	2.3	100.0(218)
$X^2(df)$			175.5(5)***				
현원규모							
50인 이하	8.6	2.7	9.7	39.5	38.4	1.1	100.0(185)
51~100인 미만	16.5	11.6	24.8	21.5	23.1	2.5	100.0(121)
100인 이상	18.2	16.8	29.9	15.3	19.0	0.7	100.0(137)
$X^2(df)$			73.7(10)***				
지역규모							
대도시	20.9	9.6	26.6	22.6	18.6	1.7	100.0(177)
중소도시	7.0	14.1	18.3	26.8	33.1	0.7	100.0(142)
읍면지역	11.3	4.0	12.9	33.9	36.3	1.6	100.0(124)
$X^2(df)$			39.8(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 $p < .001$

라. 유치원 수급 정책 관련 의견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수용계획은 유치원 취학수요조사를 근거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교육청이 취학 수요조사를 근거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조사 참여 유치원 중 51.7%가 동의 12.2%가 매우 동의한다고 답하여 63.9%가 동의하였고, 동의 정도는 4점 평균 2.7점이었다. 공립이 사립보다, 현원규모가 작을수록, 읍면지역일수록 동의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표 V-2-24 참조).

표 V-2-24 |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근거로 유아수용계획 수립 관련 의견

단위: %(개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려함	매우 그려함	계(수)	평균
전체	9.0	27.1	51.7	12.2	100.0(160)	2.7
기관 유형						
공립	4.0	15.6	60.0	20.4	100.0(225)	3.0
사립	14.2	39.0	43.1	3.7	100.0(218)	2.4
$X^2(df)/t$		66.9(3)***				8.6***

(표 V-2-24 계속)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평균
현원규모						
50인 이하	5.9	18.4	57.8	17.8	100.0(185)	2.9
51~100인 미만	12.4	31.4	47.1	9.1	100.0(121)	2.5
100인 이상	10.2	35.0	47.4	7.3	100.0(137)	2.5
X ² (df)/F		23.7(6) ^{***}				10.8 ^{***}
지역규모						
대도시	12.4	33.9	46.3	7.3	100.0(177)	2.5
중소도시	7.7	26.8	52.8	12.7	100.0(142)	2.7
읍면지역	5.6	17.7	58.1	18.5	100.0(124)	2.9
X ² (df)/F		20.7(6) ^{**}				10.0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표 V-2-25〉는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취학수요조사를 근거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한 것이다.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신뢰성 확보 실패가 42.5%로 다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의 어려움 26.9%, 예산 부족 15.0% 순이었다.

▮ 표 V-2-25 ▮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근거로 유아수용계획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개원)

구분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의 어려움	예산 부족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신뢰성 확보 실패	기타	계(수)	X ² (df)
전체	26.9	15.0	42.5	15.6	100.0(160)	
기관 유형						
공립	34.1	40.9	20.5	4.5	100.0(44)	40.0(3) ^{***}
사립	24.1	5.2	50.9	19.8	100.0(116)	
현원규모						
50인 이하	33.3	22.2	31.1	13.3	100.0(45)	
51~100인 미만	24.5	15.1	45.3	15.1	100.0(53)	6.0(6)
100인 이상	24.2	9.7	48.4	17.7	100.0(62)	
지역규모						
대도시	24.4	9.8	50.0	15.9	100.0(82)	
중소도시	32.7	20.4	36.7	10.2	100.0(49)	8.6(6)
읍면지역	24.1	20.7	31.0	24.1	100.0(2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 $p < .001$



공립은 예산 부족, 사립은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신뢰성 확보 실패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원 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을수록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의 어려움과 예산 부족, 규모가 클수록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신뢰성 확보 실패가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일수록 예산 부족, 도시지역일수록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신뢰성 확보 실패가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V-2-25 참조).

학급 편성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도 교육청 마다 상이하다. <표 V-2-26>은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 학급편성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응답자 중 37.5%는 어느 정도 동의, 18.5%는 매우 동의라고 답하여 절반 이상이 동의하였고, 동의 정도는 4점 척도로 평균 2.6점이었다. 동의 정도는 사립보다 공립유치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표 V-2-26 17개 시도교육청 동일 학급편성기준 적용 방안

단위: %(개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어느 정도 동의	매우 동의	계(수)	평균
전체	15.6	28.4	37.5	18.5	100.0(443)	2.6
기관 유형						
공립	13.3	24.0	36.9	25.8	100.0(225)	2.8
사립	17.9	33.0	38.1	11.0	100.0(218)	2.4
$X^2(df)/t$		17.7(3) ^{***}				3.6 ^{***}
현원규모						
50인 이하	12.4	26.5	40.0	21.1	100.0(185)	2.7
51~100인 미만	18.2	28.9	34.7	18.2	100.0(121)	2.5
100인 이상	17.5	30.7	36.5	15.3	100.0(137)	2.5
$X^2(df)/F$		4.5(6)				2.1
지역규모						
대도시	18.1	29.9	34.5	17.5	100.0(177)	2.5
중소도시	14.1	28.9	34.5	22.5	100.0(142)	2.7
읍면지역	13.7	25.8	45.2	15.3	100.0(124)	2.6
$X^2(df)/F$		6.4(6)				.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 $p < .001$

3 시사점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의 어려움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과 사립유치원의 매입형 또는 공영형유치원 전환 관련 지원기준 및 심사기준, 운영기준 등의 적절성 등을 알아보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퇴출구조 마련을 위한 폐쇄조건과 현장 의견 등을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아 수 감소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으로 민간, 가정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운영 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린이집 중 70% 이상이 영유아 모집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어려움 정도는 4점 평균 2.9점이었다. 특히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 현원이 적을수록, 도시지역일수록 어려움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영유아 모집이 어려운 이유 1,2순위로, 출생아 수 감소 85.2%,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51.3%, 인근지역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이주 23.6%, 병설공립유치원 9.2%, 민간어린이집 신설 6.4%, 단설 공립유치원 증설 9.2% 순이었다.

한편, 유치원은 70.6%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고, 어려움 정도는 4점 평균 2.9점이었다. 사립유치원이 공립보다 어려움 정도가 높았다. 원아 모집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1,2순위로 조사한 결과, 출생아 수 감소가 83.2%로 압도적으로 많고, 지역내 단설 공립유치원 증설이 24.5%, 지역 내 단설 공립유치원 증설 22.4% 순이었다.

둘째, 출생아 수 감소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등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재정 운영 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정원충족률이 최고 수준인 때와 비교하여 어린이집은 영아반 27.1%, 유아반 27.9%, 유치원은 30.2%가 감소하였다. 또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실제로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도 어린이집은 87.2%, 유치원은 65.1%로 높으며,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에서 체감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셋째,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은 출산율 및 민간 부문 어린이집 및 유치원 폐원 추이를 검토하여 확충 규모를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목표의 적절성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 10.7%만 적절하다고 답하였고, 적

정 수준으로 27.3%를 제안하였다.

넷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신축보다는 매입이나 무상 임대 등의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민간은 31.9%, 가정 42.1%가 주로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이나 영유아 모집 등의 혜택을 목적으로 향후 5년 이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어린이집 중 38.6%는 장기임차, 35.1%는 무상임대, 24.6%는 매입을 선호하고, 전환 시기는 2018년 10.5%, 2019년 49.1%, 2020년 28.9%로 과반수 이상이 향후 3년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희망 어린이집 대상으로 전환 준비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거나 고민 중인 이유는 20.7%는 계약기간 종료 후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해야 하는 부담감, 어린이집 운영 상태가 심사기준 미달이 17.9%, 계약기간 10년 불만족 15.6%, 지원단가 불만족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낮다는 이유도 각각 10.6%, 10.1%로 꼽았다.

여섯째,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선정기준 및 심사기준, 계약조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전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임차 계약기간 10년에 대해 33.6%만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적정 계약기간으로 평균 13.6년을 제안하였다. 또한 시설개보수 및 기자재비 지원기준에 대해 각각 26.2%, 22.1%가 적절하다고 답하였고, 적정 수준으로 시설개보수비는 평균 1,577.2만원, 기자재비는 1,488.0만원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장기임차 사전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3개 세부기준 중 대기 아동 수, 유아반 3개반 이상, 특별활동 부담 기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각각 24.5%, 23.1%, 23.5%로 낮았다.

여덟째, 국공립어린이집은 우선 설치지역 기준을 마련하여 확충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중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로 채용 영유아 수 감소를 경험했다는 어린이집은 32.8%이며, 규모는 정원 대비 10.2%이었다.

아홉째, 어린이집 폐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폐쇄기준 마련에 대해 45.6%는 어느 정도 동의, 12.6%는 매우 동의라고 답하여 60% 정도가 동의하였고, 동의 정도는 4점 평균 2.5점이었다. 폐쇄기준으로, 정원충족률 25.5%, 정원충족

를 지속기간은 평균 8.7개월, 원장 1인 운영기간 평균 7.4개월을 제안하였다.

열 번째,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 추진 시 선정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 자격 및 선정기준 마련에 대해 유치원 47.7%가 찬성하였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열 한번째, 매입형 유치원 선정기준 및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매입형 유치원 도입 위한 우선 조건을 1,2순위로 조사한 결과, 매입 대상 유치원 선정기준 마련이 68.3%, 객관적인 매입 대상 유치원 선정기준 마련 60.6%, 민간위탁 운영의 공공성 확보 위한 운영기준 마련 31.7%, 위탁체 선정기준 마련 19.7%, 위탁형 유치원 선정위원회 자격 및 구성 요건 마련 14.2% 순이었다.

열 두번째, 공립유치원 증설 지역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립유치원 증설 적정지역으로 유치원 중 28.2%는 도시 인구밀집지역, 27.1%는 공립유치원 미설치 지역, 20.1%는 저소득 밀집지역, 13.8%는 농산어촌 지역, 9.5%는 취약지역을 꼽았다. 공립유치원은 유아 수가 많은 도심지역이나 사립유치원 밀집 지역 중심으로 증설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열 세번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유치원 중 절반이 넘는 36.1%가 해당 교육청이 취학수요조사를 근거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로 42.5%는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신뢰성 확보 실패, 26.9%는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의 어려움, 15.0%는 예산 부족을 꼽았다.

열 네번째, 학급편성기준은 사립도 의무사항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17개 시도 교육청이 동일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 학급편성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 중 37.5%는 어느 정도 동의, 18.5%는 매우 동의라고 답하여 절반 이상이 동의하였고, 동의 정도는 4점 척도로 평균 2.6점이었다.

VI

보육수급 및 유아수요 추정

1. 장애 영유아 인구
2. 보육·교육 수요 추계
3. 소결



VI. 보육수급 및 유아수요 추정

제6장은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영유아 인구 및 합계출산율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활용하여 향후 5년(2018~2022) 간의 어린이집·유치원 수요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적정 규모 등을 추정하였다.

1 장래 영유아 인구

1절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장래합계출산율과 모의 연령별 장래출산율, 연령별 장래영유아 인구 등을 알아보았다.

가. 장래 합계출산율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7년 기준 1.05명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향후 5년 간의 장래 합계출산율을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래 합계출산율은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9년 1.23명, 2020년 1.24명, 2021년 1.15명, 2022년 1.26명이고, 저위가정 기준으로 2019년 1.11명, 2020년 1.10명, 2021년 1.10명, 2022년 1.09명으로 2018년 합계출산율 전망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표 VI-1-1 참조).⁵⁷⁾

표 VI-1-1 장래 합계출산율: 2018~2022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중위가정	1.22	1.23	1.24	1.25	1.26
저위가정	1.13	1.11	1.10	1.10	1.09

단위: 명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2018.10.12. 인출).

57) 탐사보도 뉴스후+(2018.11.28.). 출산율 1.0명 선 붕괴...인구 유지 빨간불?
(http://www.newshoplu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1265 2018.11.30. 인출).

우리나라 조혼인율이 2014년 6.0에서 2015년 5.9, 2016년 5.5로 감소하고 있고(국가통계포털 2018.10.12. 인출)⁵⁸⁾, 여성의 초혼 연령은 2010년 평균 28.9세에서 2017년 30.2세로 늦어지고 있어 향후 합계출산율이 통계청이 추계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국가통계포털 2018.10.12. 인출)⁵⁹⁾.

〈표 VI-1-2〉는 15세에서 49세 가임기 여성의 시도별 장래 출산율을 시나리오별로 정리한 것이다.

▮ 표 VI-1-2 ▮ 시도별 장래 출산율

단위: 명

구분	중위가정			저위가정		
	2015년	2020년	2025년	2015년	2020년	2025년
전체	1.24	1.24	1.28	1.24	1.10	1.07
서울	1.00	1.02	1.06	1.00	0.91	0.89
부산	1.14	1.08	1.12	1.14	0.96	0.94
대구	1.22	1.18	1.22	1.22	1.04	1.01
인천	1.22	1.23	1.27	1.22	1.10	1.07
광주	1.21	1.23	1.27	1.21	1.10	1.07
대전	1.28	1.26	1.31	1.28	1.12	1.09
울산	1.49	1.44	1.49	1.49	1.28	1.24
세종	1.89	1.65	1.70	1.89	1.47	1.43
경기	1.27	1.30	1.35	1.27	1.16	1.13
강원	1.31	1.32	1.36	1.31	1.18	1.15
충북	1.41	1.41	1.45	1.41	1.26	1.23
충남	1.48	1.49	1.54	1.48	1.34	1.30
전북	1.35	1.37	1.41	1.35	1.23	1.19
전남	1.55	1.55	1.60	1.55	1.39	1.35
경북	1.46	1.42	1.46	1.46	1.26	1.23
경남	1.44	1.43	1.48	1.44	1.28	1.24
제주	1.48	1.49	1.53	1.48	1.34	1.30

주: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8.10.12. 인출).

58)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011&vw_cd=MT_GTITLE01&list_id=1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1 (2018.10.16. 인출).
 조인혼율은 특정 1년간 신고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연도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국가통계포털,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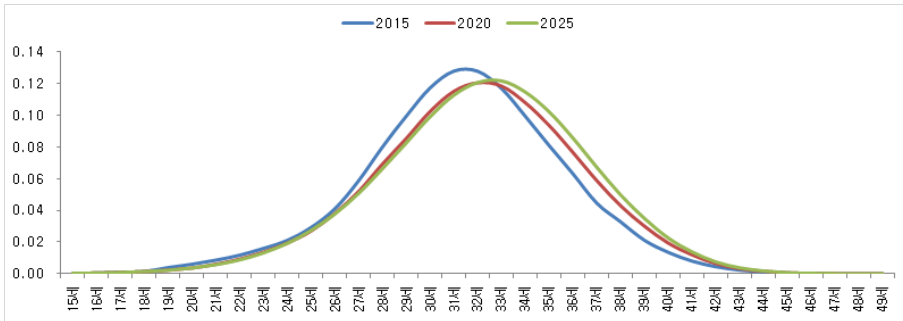
59)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1541&vw_cd=MT_GTITLE01&list_id=1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1 (2018.10.16. 인출).

중위가정 기준으로, 2020년에는 세종이 1.65명으로 가장 높은 출산율을 전망하였고, 다음으로 전남 1.55명, 충남, 제주, 경남, 경북, 울산 등이 1.4명 대로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5년에는 세종이 1.70명으로 17개 시도 중 출산율이 가장 높게 예측되었고, 다음으로 전남 1.59명, 충남 1.54명, 제주 1.53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표 VI-1-2 참조).

저위가정 기준으로 보면, 2020년에는 세종 1.47명, 다음으로 전남 1.39명, 충남 1.34명, 제주 1.34명, 2025년도 세종 1.43명, 전남 1.35명, 충남과 제주가 각각 1.30명을 예측하고 있다(표 VI-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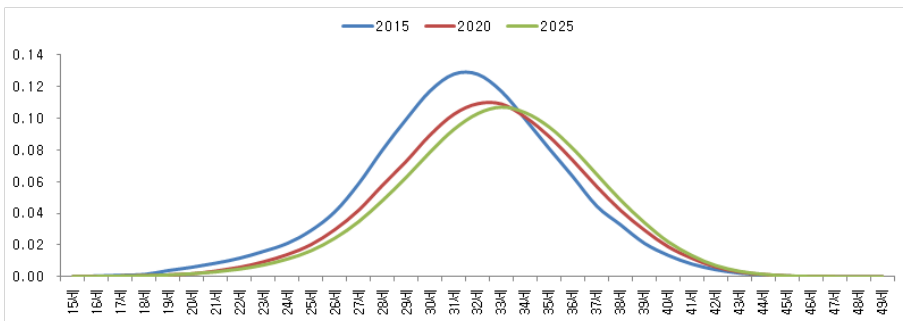
15세에서 49세까지 가임기 여성의 장래 연령별 출산율을 시나리오별로 정리하였다. 시나리오별로 혼인 연령이 늦어지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모의 연령도 점차적으로 고령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림 VI-1-1, 그림 VI-1-2 참조).

■ 그림 VI-1-1 ■ 장래 연령별 출산율: 중위가정



자료: <부록 표 V-1-1> 중 중위가정 자료를 그림으로 제시함.

■ 그림 VI-1-2 ■ 장래 연령별 출산율: 저위가정



자료: <부록 표 V-1-1> 중 저위가정 자료를 그림으로 제시함.



나. 장래 영유아 인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 간 0~6세 연령별 장래 영유아 인구 수를 시나리오(저위가정, 중위가정)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중위가정 기준으로 0~6세 영유아 인구는 2018년 3,045,740명에서 2019년 2,981,060명으로 300만명 선 이하로 떨어지고, 2022년에는 2,859,325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0세는 2018년 410,770명에서 2021년 407,013명까지 감소하다가 2022년 407,440명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세는 40만명 선을 유지하며, 3세는 크게 줄어들다가 2020년 이후 407천명 선을 유지하고, 나머지 연령은 증감을 반복하나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표 VI-1-3 참조).

표 VI-1-3 0~6세 연령별 장래 영유아 인구 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단위: 명					
중위가정					
전체	3,045,740	2,981,060	2,923,396	2,893,467	2,859,325
0세	410,770	409,075	407,623	407,013	407,440
1세	409,221	409,032	407,310	405,833	405,193
2세	422,110	408,623	408,420	406,673	405,172
3세	438,754	421,764	408,285	408,071	406,300
4세	433,776	438,338	421,343	407,876	407,656
5세	461,601	433,188	437,761	420,768	407,319
6세	469,508	461,040	432,654	437,233	420,245
저위가정					
전체	3,001,533	2,900,249	2,799,097	2,719,682	2,630,728
0세	384,512	374,002	365,231	358,114	352,580
1세	394,810	382,334	371,865	363,121	356,022
2세	421,026	393,768	381,329	370,869	362,130
3세	437,891	420,302	393,078	380,661	370,204
4세	433,116	437,197	419,606	392,412	380,021
5세	461,096	432,313	436,408	418,820	391,665
6세	469,082	460,333	431,580	435,685	418,106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2018.10.12. 인출).

저위가정으로 향후 5년간 0~6세 영유아 인구 전망치를 보면, 2018년에는 3,001,533명에서 2019년에는 290만명 선으로 떨어지고, 2020년에는 이보다 낮은 280만명 정도, 2022년에는 260만명 선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

령별로는 0,1세 모두 2018년 38~39만명 선에서 점점 줄어들어 2022년에는 35만명 선까지 감소하고, 2~4세는 같은 기간 동안 42~43만명에서 36~38만명까지 줄어들며, 6세는 2022년까지 40만명 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8년도 출생아 수가 35만명 이하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어⁶⁰⁾ 향후 출생아 수가 저위가정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표 VI-1-3 참조).

2 보육·교육 수요 추계

2절은 장래 영유아 인구 통계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수와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 확충 규모를 시나리오별로 추정하였다.

가. 어린이집 수요

1) 산출기준

어린이집 수요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도 및 연령별 장래 인구추계 자료와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2)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가) 장래 영유아 인구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를 추정하기에 앞서 시도별 장래 영유아 수를 시나리오별로 정리하였다.

장래 영유아(0~6세) 인구 수는 중위가정 기준으로 2022년 2,859,325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2022년에는 영유아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811,618명, 서울 472,086명, 경남 189,258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표 VI-2-1 참조).

60) 베이비뉴스(2018.12.26). '저출생 심각'...올해 출생아 수, 35만명 선도 무너진다.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792> 2018.12.27. 인출)

저위가정으로는, 영유아 수가 2022년에 2,630,728명까지 줄어들 것이며, 경기는 747,337명, 서울 430,956명, 경남 174,840명, 경북 124,368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표 VI-2-1 참조).

▮ 표 VI-2-1 ▮ 시도별 장래 영유아 인구 수: 2018~2022년

단위: 명

구분	중위가정					저위가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3,045,740	2,981,060	2,923,396	2,893,467	2,859,325	3,001,533	2,900,249	2,799,097	2,719,682	2,630,728
서울	503,108	490,559	480,234	476,570	472,086	494,789	475,528	457,403	444,992	430,956
부산	176,526	171,106	165,894	161,989	157,671	174,024	166,551	158,910	152,259	144,914
대구	135,742	131,267	127,192	124,307	121,160	133,840	127,795	121,851	116,838	111,331
인천	180,024	176,191	173,122	172,198	170,803	177,424	171,421	165,765	161,864	157,150
광주	92,043	89,407	87,009	85,907	84,927	90,726	86,992	83,293	80,701	78,063
대전	92,984	90,455	88,576	88,613	88,417	91,576	87,869	84,580	82,972	80,938
울산	78,794	76,886	74,996	73,573	72,109	77,681	74,868	71,919	69,288	66,498
세종	31,533	33,972	35,707	35,497	35,177	31,140	33,193	34,433	33,688	32,771
경기	843,365	831,499	820,376	816,850	811,618	831,319	809,278	785,889	768,282	747,337
강원	77,410	75,375	73,715	72,995	72,222	76,349	73,433	70,718	68,784	66,669
충북	94,650	92,861	91,408	91,063	90,859	93,284	90,354	87,543	85,637	83,687
충남	135,542	134,182	133,119	133,133	133,017	133,632	130,673	127,687	125,494	122,915
전북	100,800	97,698	94,974	93,542	91,959	99,427	95,189	91,119	88,145	84,853
전남	100,957	97,655	94,659	92,403	90,031	99,617	95,238	90,983	87,322	83,409
경북	149,226	145,082	141,037	138,033	134,907	147,100	141,244	135,193	129,947	124,368
경남	209,335	203,479	198,130	193,654	189,258	206,465	198,278	190,190	182,630	174,840
제주	43,701	43,386	43,248	43,140	43,104	43,140	42,345	41,621	40,839	40,029

주: 시도별로 0~6세 영유아 인구를 합산한 결과임.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2018.10.12. 인출).

나) 장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장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를 추정하기에 앞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을 산출하였다. 어린이집 이용률은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대비 0~6세 영유아 수를 비율로 산출한 것이다.

〈표 VI-2-2〉와 같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어린이집 이용률은 46.4%이고, 0세 17.1%, 1세 72.4%, 2세 87.6%, 3세 53.6%, 4세 38.2%, 5세 32.7%이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평균 62.5%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다음으로 충북과 충남, 강원 이 각각 51.6%, 51.2%, 51.2%이고, 전북과 전남이 각각 50.8%, 광주 50.1%로 7개 지역이 50%를 상회하고, 나머지 11개 지역은 40% 대를 나타낸다.

표 VI-2-2 | 최근 3년간(2015-2017년) 평균 어린이집 이용률

단위: %

구분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국	46.4	17.1	72.4	87.6	53.6	38.2	32.7
서울	44.9	14.6	66.4	81.5	53.0	41.1	36.8
부산	40.4	11.6	66.9	85.7	48.3	28.1	24.7
대구	41.8	13.2	72.7	90.7	55.2	23.4	18.8
인천	43.9	15.1	68.8	86.7	52.0	34.3	29.7
광주	50.1	23.0	82.2	93.9	53.4	36.8	32.1
대전	45.9	20.2	80.1	91.8	48.9	30.6	25.4
울산	43.1	12.3	71.9	91.0	53.6	30.2	24.8
세종	43.8	15.3	70.2	81.7	57.4	37.6	26.5
경기	45.9	18.8	71.6	86.4	50.3	37.4	32.4
강원	51.2	19.0	77.3	91.2	60.0	46.7	38.3
충북	51.6	15.5	73.6	90.2	61.9	51.7	46.0
충남	51.2	17.7	75.6	90.4	61.7	47.9	39.9
전북	50.8	23.0	79.3	91.4	50.5	41.9	38.3
전남	50.8	17.0	72.5	86.3	59.9	50.4	45.4
경북	46.1	18.2	75.9	91.1	53.7	32.5	26.4
경남	48.2	18.6	77.1	92.2	55.5	37.3	31.2
제주	62.5	25.0	89.5	93.9	86.4	67.3	40.1

주: 어린이집 이용률=현원/0~6세 영유아 수*100

전체 연령별 어린이집 평균 이용률은 시도 평균과 다소 상이함.

연령은 연령반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2015, 2016, 2017). 주민등록인구통계.(<http://27.101.213.4/#> 2018.10.20. 인출).

보건복지부(2016, 2017, 2018). 보육통계.(한국보육진흥원 <https://www.kcpi.or.kr/2018.10.2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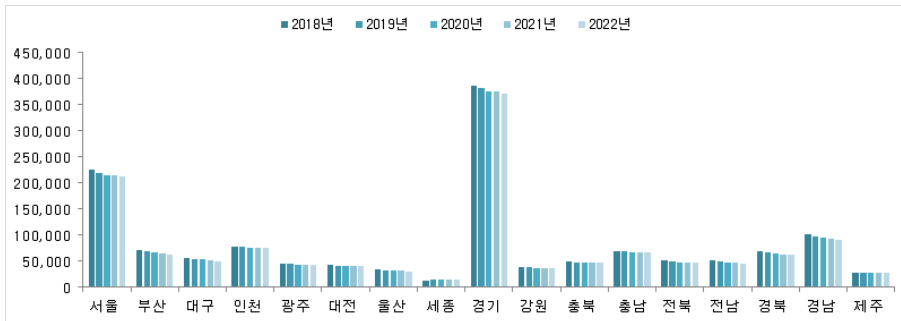
정부의 보육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최근 3년간 평균 어린이집 이용률 자료를 이용하여 장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를 시나리오별로 추정하였다. 장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는 시도 및 연령별 장래 영유아 인구수에 최근 3년간 연령별 평균 어린이집 이용률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먼저 중위가정 기준으로 장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를 추계하면, 전국 기준으로 2018년 1,413,511명에서 2019년에는 138만명까지 줄고, 2020년에는 135만명, 2022년에는 1,326,997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표 VI-2-3 참조).

시도별로 연령별 장래 영유아 인구와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을 이용하여 장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를 추정하면, 영유아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2018년 387,080명에서 2020년 376,529명, 2022년에는 372,509명까지 줄어들고, 서울도 2018년 225,860명에서 2020년 21만명 선으로 떨어져 2022년에는 211,934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부산 등 타 시도들도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서울,

경기보다는 감소세가 다소 완만하다. 세종은 2018년 13,817명에서 2020년에는 15,646명까지 늘어나다가 이후 감소 할 것으로 예측된다(표 VI-2-3 참조).

■ 그림 VI-2-1 ■ 장래 시도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중위가정



자료: <표 VI-2-3>의 중위가정 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냄.

■ 표 VI-2-3 ■ 장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 2018~2022년

단위: 명

구분	중위가정					저위가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국	1,413,511	1,383,493	1,356,732	1,342,842	1,326,997	1,392,995	1,345,989	1,299,045	1,262,189	1,220,906
서울	225,860	220,227	215,592	213,947	211,934	222,126	213,479	205,342	199,770	193,469
부산	71,229	69,042	66,939	65,363	63,621	70,220	67,204	64,121	61,437	58,474
대구	56,755	54,884	53,180	51,974	50,658	55,960	53,432	50,947	48,851	46,549
인천	79,006	77,323	75,977	75,571	74,959	77,865	75,230	72,748	71,036	68,967
광주	46,122	44,802	43,600	43,048	42,557	45,462	43,591	41,738	40,439	39,117
대전	42,645	41,485	40,623	40,640	40,550	41,999	40,299	38,790	38,053	37,120
울산	33,982	33,159	32,344	31,730	31,099	33,502	32,289	31,017	29,882	28,679
세종	13,817	14,886	15,646	15,554	15,414	13,645	14,545	15,088	14,762	14,360
경기	387,080	381,634	376,529	374,910	372,509	381,551	371,435	360,700	352,619	343,006
강원	39,629	38,587	37,738	37,369	36,973	39,086	37,593	36,203	35,213	34,130
충북	48,825	47,903	47,153	46,975	46,870	48,121	46,609	45,159	44,176	43,170
충남	69,351	68,655	68,111	68,119	68,059	68,374	66,860	65,332	64,210	62,890
전북	51,241	49,664	48,279	47,551	46,746	50,543	48,388	46,319	44,808	43,134
전남	51,278	49,601	48,079	46,934	45,729	50,598	48,374	46,212	44,353	42,365
경북	68,750	66,841	64,977	63,593	62,153	67,771	65,073	62,285	59,868	57,298
경남	100,892	98,070	95,492	93,334	91,216	99,509	95,563	91,665	88,021	84,267
제주	27,295	27,098	27,012	26,944	26,922	26,944	26,448	25,995	25,507	25,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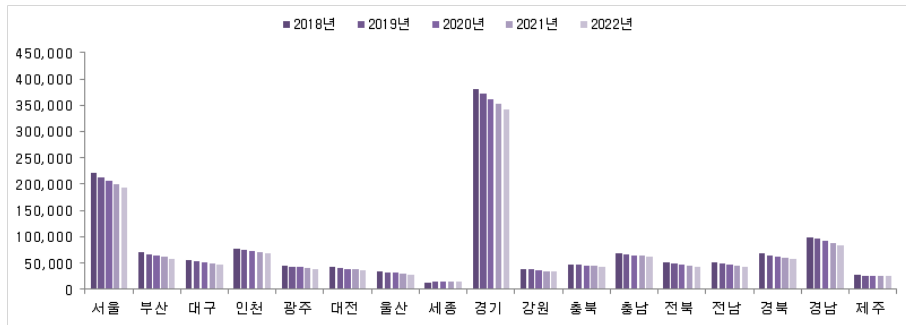
주: 장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장래 영유아 인구 수*최근 3년간 어린이집 이용률/100
 전체 장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시도 합계와 다소 상이함.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2018.10.12. 인출).

저위가정 기준으로 장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를 추정하면, 전국 기준으로 2018년 1,392,995명에서 2020년에는 130만명 이하로 떨어지고, 2022년에는 1,220,906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표 VI-2-3 참조).

시도별로는 [그림 VI-2-2]와 같이, 경기도는 2018년 381,551명에서 2022년에는 343,006명으로 4만명 정도, 서울도 2018년 222,126명에서 2022년에는 193,469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와 서울은 타 시도에 비해 감소 추세가 급격하다. 나머지 시도 중 강원과 제주 등은 감소 추세가 다소 완만해 보인다. 반면에 세종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2018년 13,645명에서 2020년에는 15,088명까지 늘어나지만 이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표 VI-2-3 참조).

그림 VI-2-2 장래 시도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저위가정



자료: <표 VI-2-3>의 저위가정 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냄.

다) 어린이집 적정 규모

적정 어린이집 수를 추정하기에 앞서 어린이집 정원 규모를 알아보았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전국 평균 정원은 44인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 평균 66인, 민간 평균 65인, 가정 평균 18인이다.

표 VI-2-4 어린이집 정원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협동
평균 정원	44	66	95	73	65	18	73	34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8). 어린이집 일람현황 내부자료(2017년 12월 말 기준).

앞서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장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와 어린이집 평균 정원 (2017년 말 기준) 자료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적정 공급 규모를 산출하였다. 2017년 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82.6%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89.1%이지만(그림 II-2-8 참조), 전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90% 정도 충족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어린이집 수를 시나리오별로 추정하였다.

먼저 중위가정 기준으로 보면, 장래 영유아 인구와 어린이집 이용률, 어린이집 평균 정원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어린이집 수는 2018년 34,902개소이다. 2017년 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 수가 40,238개소로 5,336개소 정도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9년에는 34,160개소, 2020년에는 33,500개소, 2021년에는 33,157개소, 2022년에는 32,765개소가 적정 규모이다. 시도별로도 세종과 제주, 충북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린이집이 과잉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VI-2-5 ▣ 어린이집 적정 공급 규모: 2018~2022년

단위: 개소

구분	2017년	중위가정					저위가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국	40,238	34,902	34,160	33,500	33,157	32,765	34,395	33,234	32,075	31,165	30,146
서울	6,226	5,577	5,438	5,323	5,283	5,233	5,485	5,271	5,070	4,933	4,777
부산	1,920	1,759	1,705	1,653	1,614	1,571	1,734	1,659	1,583	1,517	1,444
대구	1,464	1,401	1,355	1,313	1,283	1,251	1,382	1,319	1,258	1,206	1,149
인천	2,186	1,951	1,909	1,876	1,866	1,851	1,923	1,858	1,796	1,754	1,703
광주	1,240	1,139	1,106	1,077	1,063	1,051	1,123	1,076	1,031	998	966
대전	1,505	1,053	1,024	1,003	1,003	1,001	1,037	995	958	940	917
울산	881	839	819	799	783	768	827	797	766	738	708
세종	289	341	368	386	384	381	337	359	373	364	355
경기	11,825	9,558	9,423	9,297	9,257	9,198	9,421	9,171	8,906	8,707	8,469
강원	1,149	978	953	932	923	913	965	928	894	869	843
충북	1,186	1,206	1,183	1,164	1,160	1,157	1,188	1,151	1,115	1,091	1,066
충남	1,955	1,712	1,695	1,682	1,682	1,680	1,688	1,651	1,613	1,585	1,553
전북	1,497	1,265	1,226	1,192	1,174	1,154	1,248	1,195	1,144	1,106	1,065
전남	1,241	1,266	1,225	1,187	1,159	1,129	1,249	1,194	1,141	1,095	1,046
경북	2,063	1,698	1,650	1,604	1,570	1,535	1,673	1,607	1,538	1,478	1,415
경남	3,084	2,491	2,421	2,358	2,305	2,252	2,457	2,360	2,263	2,173	2,081
제주	527	674	669	667	665	665	665	653	642	630	617

주: 장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를 전국 평균 정원 규모(45인)로 나눈 결과임. 단, 정원충족률 90% 적용함.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7 보육통계. p.6.

이를 저위가정 기준으로 보면, 2018년에는 34,395개소 정도가 적정 규모이나, 2017년 말 기준 40,238개소가 공급되고 있어 5,843개소 정도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22년에는 30,146개소가 적정 규모이다.

라)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앞서 산출한 장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자료를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량을 추계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량은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외에도 35%, 30%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2017년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서울이 31.5%이고, 대전이 4.4%으로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나 17개 시도가 연차별 목표를 동일하게 달성한다는 가정 하에 국공립어린이집 규모를 산출하였다. <표 VI-2-6>은 연차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달성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 표 VI-2-6 ▣ 연차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달성 목표

단위: %

구분	기준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나리오 1(40%)	12.9	20	25	30	35	40
시나리오 2(35%)	12.9	15	20	25	30	35
시나리오 3(30%)	12.9	15	20	23	26	30

주: 기준선은 2017년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그림 II-2-5] 참조함.

(1) 시나리오 1(40%)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한다는 가정 하에 연차별 국공립어린이집 규모를 추정하였다. 연차별 국공립어린이집 규모는 장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를 이용하여 장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를 산출하고, 이를 다시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정원(65인)으로 나누어 공급 규모를 추정하였다.

먼저 중위가정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국공립어린이집 수를 산출하면, 2018년에는 4,349개소, 2019년 5,321개소, 2020년 6,262개소, 2021년 7,231개소, 2022년 8,166개소가 공급되어야 한다. 시도별로는 현재 목표를 초과 달성한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도는 2022년까지 2,292

개소, 경남 561개소, 인천 461개소, 충남 419개소, 부산 392개소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표 VI-2-7 참조).

▮ 표 VI-2-7 ▮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규모: 시나리오 1(40%)

단위: 개소, %

구분	기준선 (2017년)		중위가정					저위가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공립 이용률		20%	25%	30%	35%	40%	20%	25%	30%	35%	40%
전국	3,157	12.9	4,349	5,321	6,262	7,231	8,166	4,286	5,177	5,996	6,796	7,513
서울	1,274	31.5	695	847	995	1,152	1,304	683	821	948	1,076	1,191
부산	165	14.7	219	266	309	352	392	216	258	296	331	360
대구	72	6.0	175	211	245	280	312	172	206	235	263	286
인천	155	11.2	243	297	351	407	461	240	289	336	383	424
광주	32	4.9	142	172	201	232	262	140	168	193	218	241
대전	35	4.4	131	160	187	219	250	129	155	179	205	228
울산	41	6.9	105	128	149	171	191	103	124	143	161	176
세종	16	10.1	43	57	72	84	95	42	56	70	79	88
경기	660	10.8	1,191	1,468	1,738	2,019	2,292	1,174	1,429	1,665	1,899	2,111
강원	90	13.6	122	148	174	201	228	120	145	167	190	210
충북	60	7.7	150	184	218	253	288	148	179	208	238	266
충남	84	5.9	213	264	314	367	419	210	257	302	346	387
전북	58	6.0	158	191	223	256	288	156	186	214	241	265
전남	101	9.5	158	191	222	253	281	156	186	213	239	261
경북	140	8.2	212	257	300	342	382	209	250	287	322	353
경남	145	8.9	310	377	441	503	561	306	368	423	474	519
제주	29	7.1	84	104	125	145	166	83	102	120	137	154

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표 II-2-4>를 참고함.
 17개 시도를 합산한 결과는 전국 산출 결과와 상이함.
 중위 또는 저위 가정은 장래 영유아 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7 보육통계. p.6.

저위 가정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규모는 2018년 4,286개소, 2019년 5,177개소, 2020년 5,996개소, 2021년 6,796개소, 2022년 7,513개소이다(표 VI-2-7 참조).

(2) 시나리오 2(35%)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35%로 목표를 하향 조정하여 연차별 공급 규모를 추정하였다. 산출방식은 시나리오 1과 동일하다.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에는 3,262개소, 2019년 4,257개소, 2020년 5,218개소, 2021년 6,198개소, 2022년 7,145개소가 공급되어야 한다. 시도별로는 경기도는 2,006개소로 공급 규모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 491개소, 인천 404개소, 충남 366개소, 부산 343개소, 경북 335개소 순이다(표 VI-2-8 참조).

▣ 표 VI-2-8 ▣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규모: 시나리오 2(35%)

단위: 개소, %

구분	기준선 (2017년)		중위가정					저위가정				
	국공립 이용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5%	20%	25%	30%	35%	15%	20%	25%	30%	35%
전국	3,157	12.9	3,262	4,257	5,218	6,198	7,145	3,215	4,142	4,996	5,825	6,574
서울	1,274	31.5	521	678	829	987	1,141	513	657	790	922	1,042
부산	165	14.7	164	212	257	302	343	162	207	247	284	315
대구	72	6.0	131	169	205	240	273	129	164	196	225	251
인천	155	11.2	182	238	292	349	404	180	231	280	328	371
광주	32	4.9	106	138	168	199	229	105	134	161	187	211
대전	35	4.4	98	128	156	188	218	97	124	149	176	200
울산	41	6.9	78	102	124	146	167	77	99	119	138	154
세종	16	10.1	32	46	60	72	83	31	45	58	68	77
경기	660	10.8	893	1,174	1,448	1,730	2,006	881	1,143	1,387	1,627	1,847
강원	90	13.6	91	119	145	172	199	90	116	139	163	184
충북	60	7.7	113	147	181	217	252	111	143	174	204	232
충남	84	5.9	160	211	262	314	366	158	206	251	296	339
전북	58	6.0	118	153	186	219	252	117	149	178	207	232
전남	101	9.5	118	153	185	217	246	117	149	178	205	228
경북	140	8.2	159	206	250	294	335	156	200	240	276	309
경남	145	8.9	233	302	367	431	491	230	294	353	406	454
제주	29	7.1	63	83	104	124	145	62	81	100	118	135

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표 II-2-4>를 참고함.
17개 시도를 합산한 결과는 전국 산출 결과와 상이함.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7 보육통계. p.6.

저위가정 기준으로 연차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규모를 산출하면, 2018년에는 3,215개소, 2019년 4,142개소, 2020년 4,996개소, 2021년 5,825개소, 2022년 6,574개소이다(표 VI-2-8 참조).

(3) 시나리오 3(30%)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달성 목표를 국정과제보다 10%p 낮은 30%로 하향 조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규모를 추계하였다.



중위가정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규모를 산출하면, 2018년 3,262개소, 2019년 4,257개소, 2020년 4,801개소, 2021년 5,371개소, 2022년 6,125개소가 공급되어야 한다. 시도별로는 2022년까지 경기도는 1,719개소, 경남 421개소, 인천 346개소, 충남 314개소가 공급되어야 한다(표 VI-2-9 참조).

저위가정 기준으로는 연차별로 2018년 3,215개소, 2019년 4,142개소, 2020년 4,597개소, 2021년 5,049개소, 2022년 5,635개소가 공급되어야 한다(표 VI-2-9 참조).

▣ 표 VI-2-9 ▣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규모: 시나리오 3(30%)

단위: 개소, %

구분	기준선 (2017년)		중위가정					저위가정				
	국공립	이용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5%	20%	23%	26%	30%	15%	20%	23%	26%	30%
전국	3,157	12.9	3,262	4,257	4,801	5,371	6,125	3,215	4,142	4,597	5,049	5,635
서울	1,274	31.5	521	678	763	856	978	513	657	727	799	893
부산	165	14.7	164	212	237	261	294	162	207	227	246	270
대구	72	6.0	131	169	188	208	234	129	164	180	195	215
인천	155	11.2	182	238	269	302	346	180	231	257	284	318
광주	32	4.9	106	138	154	172	196	105	134	148	162	181
대전	35	4.4	98	128	144	163	187	97	124	137	152	171
울산	41	6.9	78	102	114	127	144	77	99	110	120	132
세종	16	10.1	32	46	55	62	71	31	45	53	59	66
경기	660	10.8	893	1,174	1,332	1,500	1,719	881	1,143	1,276	1,410	1,583
강원	90	13.6	91	119	134	149	171	90	116	128	141	158
충북	60	7.7	113	147	167	188	216	111	143	160	177	199
충남	84	5.9	160	211	241	272	314	158	206	231	257	290
전북	58	6.0	118	153	171	190	216	117	149	164	179	199
전남	101	9.5	118	153	170	188	211	117	149	164	177	196
경북	140	8.2	159	206	230	254	287	156	200	220	239	264
경남	145	8.9	233	302	338	373	421	230	294	324	352	389
제주	29	7.1	63	83	96	108	124	62	81	92	102	115

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표 II-2-4>를 참고함.
17개 시도를 합산한 결과는 전국 산출 결과와 상이함.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7 보육통계. p.6.

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2017년 말 기준 3,157개소로(보건복지부, 2018: 6), 시나리오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규모를 기준으로 추가 확충 규모를 산출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40%를 목표로 설정한 시나리오 1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1,000개소 정도씩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 확충하여야 한다.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 1,192개소, 2019년 972개소, 2020년 941개소, 2021년 969개소, 2022년 935개소이고, 저위가정 기준으로는 각각 1,129개소, 891개소, 819개소, 800개소, 717개소이다(표 VI-2-10 참조).

시나리오 1보다 5%p 정도 목표를 낮춘 시나리오 2의 추가 확충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은 105개소로 확충 규모가 적고, 2019년부터는 매년 900~1,000개소씩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야 한다. 저위가정 기준으로는 2018년에는 58개소로 적지만, 2019년 927개소, 2020년 854개소, 2021년 829개소, 2022년 749개소이다(표 VI-2-10 참조).

표 VI-2-10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확충 규모

단위: 개소

구분	중위가정					저위가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나리오 1(40%)	1,192	972	941	969	935	1,129	891	819	800	717
시나리오 2(35%)	105	995	961	980	947	58	927	854	829	749
시나리오 3(30%)	105	995	544	570	754	58	927	455	452	586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30%로 설정한 시나리오 3은 시나리오 2와 2018년, 2019년은 규모가 동일하고 2020년부터는 다르다. 중위가정 기준으로 2020년은 544개소, 2021년 570개소, 2022년 754개소이고, 저위가정 기준으로는 각각 455개소, 452개소, 586개소를 추가 확충하여야 한다(표 VI-2-10 참조).

다. 유치원 수요 추계

1) 산출기준

공립유치원 수요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도 및 연령별 장래인구추계 자료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17년 교육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2) 유치원 이용 유아 수

가) 장래 유아 인구 수

유치원 이용 유아 수 추정에 앞서 시도별 장래 유아 수를 가정별로 정리하였다. 장래 유아 수는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9년까지 130만명 선을 유지하다가 2020년 130만명 이하로 떨어지고 2022년에는 1,235,220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도별로는 2022년 기준으로 경기도는 350,927명, 서울 191,435명, 경남 84,413명, 인천 73,321명 순이다(표 VI-2-11 참조).

저위가정으로 장래 유아 수를 살펴보면, 2018년 1,363,294명에서 2020년 1,287,594명으로 줄어들고, 2022년에는 120명 이하인 1,189,792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도별로도 2022년 기준으로 경기도는 338,149명, 서울 183,719명, 경남 81,408명, 인천 70,614명 순이다(표 VI-2-11 참조).

표 VI-2-11 시도별 장래 유아 인구 수: 2018~2022년

단위: 명

구분	중위가정					저위가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1,364,885	1,332,566	1,291,758	1,265,877	1,235,220	1,363,294	1,329,843	1,287,594	1,246,917	1,189,792
서울	215,560	209,177	200,373	196,183	191,435	215,297	208,734	199,705	192,932	183,719
부산	79,977	78,654	76,503	74,055	70,293	79,884	78,492	76,253	72,967	67,726
대구	62,357	60,835	59,122	57,445	54,748	62,286	60,709	58,927	56,607	52,756
인천	80,654	78,809	76,343	74,958	73,321	80,561	78,651	76,100	73,838	70,614
광주	42,495	40,842	39,385	38,572	37,762	42,445	40,754	39,251	37,990	36,371
대전	41,294	40,054	38,771	38,302	37,556	41,244	39,970	38,639	37,706	36,121
울산	35,136	34,603	33,826	32,917	31,795	35,096	34,535	33,717	32,432	30,649
세종	14,466	15,710	16,694	16,576	16,383	14,450	15,678	16,644	16,368	15,865
경기	379,845	372,705	362,198	356,916	350,927	379,403	371,962	361,064	351,671	338,149
강원	35,635	34,338	33,023	32,358	31,719	35,594	34,268	32,916	31,885	30,591
충북	42,162	40,791	39,822	39,475	39,159	42,113	40,705	39,695	38,885	37,741
충남	60,077	58,774	57,765	57,497	57,266	60,008	58,657	57,583	56,658	55,254
전북	46,690	45,008	42,893	41,680	40,493	46,637	44,915	42,753	41,070	39,040
전남	46,339	44,725	42,522	41,093	39,607	46,286	44,633	42,383	40,500	38,217
경북	66,347	64,692	62,946	61,323	59,191	66,268	64,556	62,739	60,406	57,049
경남	95,617	92,967	89,982	87,199	84,413	95,507	92,779	89,694	85,934	81,408
제주	20,234	19,882	19,590	19,328	19,152	20,215	19,845	19,531	19,068	18,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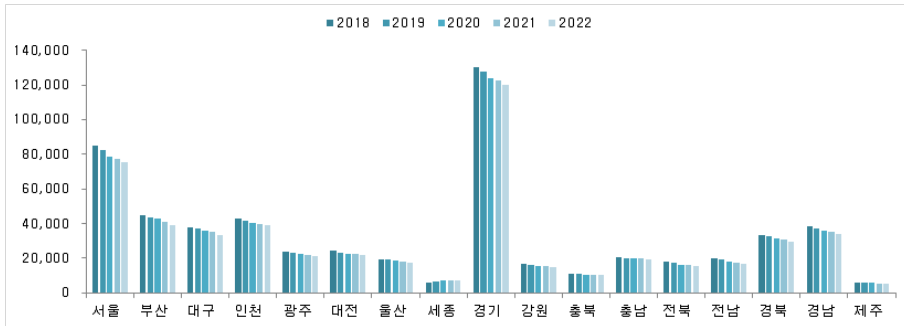
주: 시도별로 4~6세 영유아 인구를 합산한 결과임.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2018.10.12. 인출).

나) 장래 유치원 이용 아동 수

제2장 <표 II-2-9>에 정리한 2017년 기준 시도별 유치원 이용률을 이용하여 장래 유치원 이용 유아 수를 가정별로 산출하였다.

중위가정 기준으로 장래 유치원 이용 유아 수는 2018년 614,198명에서 2019년 60만명 이하로 떨어지고 2022년에는 555,849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시도별로는 세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영유아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2018년 130,287명에서 2022년 120,368명으로 2만명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도 2018년 84,931명에서 2020년 78,947명, 2022년 75,425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표 VI-2-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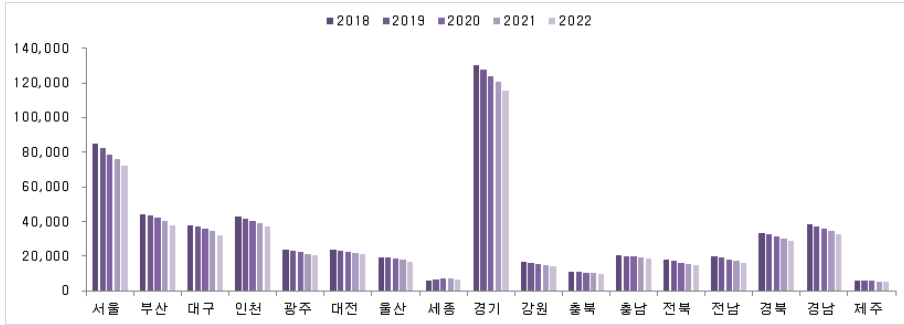
■ 그림 VI-2-3 ■ 장래 시도별 유치원 이용 아동 수: 중위가정



자료: <표 VI-2-12>의 중위가정 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냄.

한편, 저위가정 기준으로 장래 유치원 이용 유아 수를 추정하면, 2018년은 613,482명에서 2019년 60만명 이하로 떨어져 598,429명에 이르고, 2022년에는 535,406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는 2018년 130,135명에서 2019년 12만명 선으로 줄고 2022년에는 115,985명까지 감소하며, 서울은 2018년 84,827명에서 2020년 78,684명, 2022년에는 72,385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표 VI-2-12 참조).

▮ 그림 VI-2-4 ▮ 장래 시도별 유치원 이용 아동 수: 저위가정



자료: <표 VI-2-12>의 중위가정 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냄.

▮ 표 VI-2-12 ▮ 장래 유치원 이용 유아 수: 2018~2022년

단위: 명

구분	중위가정					저위가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국	614,198	599,655	581,291	569,645	555,849	613,482	598,429	579,417	561,113	535,406
서울	84,931	82,416	78,947	77,296	75,425	84,827	82,241	78,684	76,015	72,385
부산	44,547	43,810	42,612	41,249	39,153	44,495	43,720	42,473	40,643	37,723
대구	38,038	37,109	36,064	35,041	33,396	37,994	37,032	35,945	34,530	32,181
인천	42,827	41,848	40,538	39,803	38,933	42,778	41,764	40,409	39,208	37,496
광주	24,052	23,117	22,292	21,832	21,373	24,024	23,067	22,216	21,502	20,586
대전	24,116	23,392	22,642	22,368	21,933	24,086	23,342	22,565	22,020	21,095
울산	19,360	19,066	18,638	18,137	17,519	19,338	19,029	18,578	17,870	16,888
세종	6,191	6,724	7,145	7,095	7,012	6,185	6,710	7,124	7,006	6,790
경기	130,287	127,838	124,234	122,422	120,368	130,135	127,583	123,845	120,623	115,985
강원	16,713	16,105	15,488	15,176	14,876	16,694	16,072	15,438	14,954	14,347
충북	11,131	10,769	10,513	10,421	10,338	11,118	10,746	10,479	10,266	9,964
충남	20,546	20,101	19,756	19,664	19,585	20,523	20,061	19,693	19,377	18,897
전북	17,882	17,238	16,428	15,963	15,509	17,862	17,202	16,374	15,730	14,952
전남	19,926	19,232	18,284	17,670	17,031	19,903	19,192	18,225	17,415	16,433
경북	33,439	32,605	31,725	30,907	29,832	33,399	32,536	31,620	30,445	28,753
경남	38,438	37,373	36,173	35,054	33,934	38,394	37,297	36,057	34,545	32,726
제주	5,807	5,706	5,622	5,547	5,497	5,802	5,696	5,605	5,473	5,316

주: 장래 유치원 이용 아동 수=장래 유아 인구 수*유치원 이용률/100.

전체 장래 유치원 이용 아동 수는 시도 합계와 다소 상이함.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2018.10.12. 인출).

다) 유치원 적정 공급 규모

유치원의 학급 당 편성 기준은 <표 III-1-7>에 제시하였다. 유치원 적정 공급 규모는 학급 당 유아 수를 20명으로 동일 적용하여 적정 공급 규모를 시나리오별

로 추정하였다. 단, 정원충족률은 고려하지 않았다.

먼저 중위가정 기준으로, 장래 유아 인구와 유치원 이용률, 학급 편성기준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유치원 학급 수는 2018년 30,170학급이다. 2017년 기준 총 학급 수가 36,470학급으로 6,500학급이 과잉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에는 29,983학급, 2020년 29,065학급, 2021년 28,482학급, 2022년 27,792학급이 적정 규모이다. 시도별로는 부산, 울산, 제주 등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현재 유치원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표 VI-2-13 참조).

한편, 저위가정 기준으로는 2018년 30,674학급이 적정 규모이다. 2017년 편성 학급 수와 비교하면 중위가정과 유사한 규모로 과잉 공급되고 있다. 연차별로 보면, 2019년 29,921학급, 2020년 28,971학급, 2021년 28,056학급, 2022년 26,770학급 정도가 적정 수준이다(표 VI-2-13 참조).

표 VI-2-13 | 유치원 적정 공급 규모: 2018~2022년

단위: 학급

구분	기준선 (2017년)	중위가정					저위가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국	36,470	30,710	29,983	29,065	28,482	27,792	30,674	29,921	28,971	28,056	26,770
서울	4,360	4,247	4,121	3,947	3,865	3,771	4,241	4,112	3,934	3,801	3,619
부산	2,085	2,227	2,191	2,131	2,062	1,958	2,225	2,186	2,124	2,032	1,886
대구	1,935	1,902	1,855	1,803	1,752	1,670	1,900	1,852	1,797	1,727	1,609
인천	2,117	2,141	2,092	2,027	1,990	1,947	2,139	2,088	2,020	1,960	1,875
광주	1,279	1,203	1,156	1,115	1,092	1,069	1,201	1,153	1,111	1,075	1,029
대전	1,275	1,206	1,170	1,132	1,118	1,097	1,204	1,167	1,128	1,101	1,055
울산	879	968	953	932	907	876	967	951	929	894	844
세종	334	310	336	357	355	351	309	336	356	350	340
경기	10,677	6,514	6,392	6,212	6,121	6,018	6,507	6,379	6,192	6,031	5,799
강원	988	836	805	774	759	744	835	804	772	748	717
충북	1,059	557	538	526	521	517	556	537	524	513	498
충남	1,570	1,027	1,005	988	983	979	1,026	1,003	985	969	945
전북	1,622	894	862	821	798	775	893	860	819	786	748
전남	1,411	996	962	914	883	852	995	960	911	871	822
경북	2,113	1,672	1,630	1,586	1,545	1,492	1,670	1,627	1,581	1,522	1,438
경남	2,508	1,922	1,869	1,809	1,753	1,697	1,920	1,865	1,803	1,727	1,636
제주	258	290	285	281	277	275	290	285	280	274	266

주: 장래 유치원 이용 아동 수를 학급 당 유아(20명)으로 나눈 결과임. 정원충족률은 미반영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7).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018.7.16. 인출).



라) 공립유치원 공급 규모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이용률 40%, 50%를 달성한다는 가정 하에 연차별 달성 목표를 <표 VI-2-14>와 같이 설정하였다.

▣ 표 VI-2-14 ▣ 연차별 공립유치원 이용률 달성 목표

단위: %

구분	기준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나리오 1(40%)	32.3	35	36	37	38	40
시나리오 2(50%)	32.3	35	40	43	46	50

주: 기준선은 2017년 말 기준 국공립유치원 <표 II-2-9> 참조.

공립유치원 이용률은 2017년 기준 32.3%로 목표 달성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50%를 추가 설정하였다.

(1) 시나리오 1(40%)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를 달성한다는 가정 하에 연차별 공립유치원 규모를 추정하였다. 연차별 공립유치원 규모는 장래 유치원 이용 유아 수를 이용하여 장래 공립유치원 이용 유아 수를 산출하고, 이를 다시 학급 편성 기준(20명)으로 나누어 공급 규모를 추정하였다.

▣ 표 VI-2-15 ▣ 공립유치원 공급 규모: 시나리오 1(40%)

단위: 학급

구분	기준선 (2017년)	중위가정					저위가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국	10,395	10,748	10,794	10,754	10,823	11,117	9,202	10,772	10,719	10,661	10,708
서울	788	1,486	1,483	1,461	1,469	1,509	1,272	1,480	1,456	1,444	1,448
부산	341	780	789	788	784	783	667	787	786	772	754
대구	311	666	668	667	666	668	570	667	665	656	644
인천	491	749	753	750	756	779	642	752	748	745	750
광주	239	421	416	412	415	427	360	415	411	409	412
대전	256	422	421	419	425	439	361	420	417	418	422
울산	196	339	343	345	345	350	290	343	344	340	338
세종	321	108	121	132	135	140	93	121	132	133	136
경기	2,831	2,280	2,301	2,298	2,326	2,407	1,952	2,296	2,291	2,292	2,320
강원	448	292	290	287	288	298	250	289	286	284	287

(표 VI-2-15 계속)

구분	기준선 (2017년)	중위가정					저위가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충북	546	195	194	194	198	207	167	193	194	195	199
충남	646	360	362	365	374	392	308	361	364	368	378
전북	602	313	310	304	303	310	268	310	303	299	299
전남	788	349	346	338	336	341	299	345	337	331	329
경북	712	585	587	587	587	597	501	586	585	578	575
경남	737	673	673	669	666	679	576	671	667	656	655
제주	142	102	103	104	105	110	87	103	104	104	106

주: 장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장래 영유아 인구 수*최근 3년간 어린이집 이용률/100.
 전체 장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시도 합계와 다소 상이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7).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018.7.16. 인출).

중위가정 기준으로 공립유치원 이용률 40%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공급 규모를 산출하면, 2018년은 10,748학급, 2019년 10,794학급, 2020년 10,754학급, 2021년 10,823학급, 2022년 11,117학급이 공급되어야 한다. 시도별로는 현재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한 세종 등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은 2022년까지 1,509학급, 부산은 783학급, 대구 668학급, 인천 779학급 등이 공급되어야 한다.

저위가정 기준으로는 공립유치원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2018년 9,202학급, 2019년 10,772학급, 2020년 10,719학급, 2021년 10,661학급, 2022년 10,708학급이 공급되어야 한다. 시도별로는 서울은 2022년까지 1,448학급, 부산 754학급, 대구 644학급 등이 공급되어야 한다(표 VI-2-14 참조).

(2) 시나리오 1(50%)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50%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연차별 공급 규모를 추계하였다. 산출방식은 시나리오 1과 동일하다.

표 VI-2-16 공공유치원 공급 규모: 시나리오 2(50%)

단위: 학급

구분	기준선 (2017년)	중위가정					저위가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국	10,395	10,748	11,993	12,498	13,102	13,896	10,736	11,969	12,457	12,906	13,385
서울	788	1,486	1,648	1,697	1,778	1,886	1,484	1,645	1,692	1,748	1,810
부산	341	780	876	916	949	979	779	874	913	935	943
대구	311	666	742	775	806	835	665	741	773	794	805
인천	491	749	837	872	915	973	749	835	869	902	937
광주	239	421	462	479	502	534	420	461	478	495	515
대전	256	422	468	487	514	548	422	467	485	506	527
울산	196	339	381	401	417	438	338	381	399	411	422
세종	321	108	134	154	163	175	108	134	153	161	170
경기	2,831	2,280	2,557	2,671	2,816	3,009	2,277	2,552	2,663	2,774	2,900
강원	448	292	322	333	349	372	292	321	332	344	359
충북	546	195	215	226	240	258	195	215	225	236	249
충남	646	360	402	425	452	490	359	401	423	446	472
전북	602	313	345	353	367	388	313	344	352	362	374
전남	788	349	385	393	406	426	348	384	392	401	411
경북	712	585	652	682	711	746	584	651	680	700	719
경남	737	673	747	778	806	848	672	746	775	795	818
제주	142	102	114	121	128	137	102	114	121	126	133

주: 장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장래 영유아 인구 수*최근 3년간 어린이집 이용률/100.
 전체 장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시도 합계와 다소 상이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7).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018.7.16. 인출).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 10,748학급, 2019년 11,993학급, 2020년 12,498학급, 2021년 13,102학급, 2022년 13,896학급이 공급되어야 한다. 시도별로는 서울은 2022년까지 1,886학급, 부산 979학급, 대구 835학급, 인천 973학급이 증설되어야 한다(표 VI-2-16 참조).

저위가정 기준으로는 연차별로 2018년 10,736학급, 2019년 11,969학급, 2020년 12,457학급, 2021년 12,906학급, 2022년 13,385학급이 필요하다. 시도별로는 서울 1,810학급, 부산 943학급, 대구 805학급 등이 공급되어야 한다(표 VI-2-16 참조).

라) 공립유치원 확충 규모

공립유치원 학급 수는 2017년 기준 10,395학급으로(한국교개발원, 2017), 시나리오별 공립유치원 공급 규모를 기준으로 추가 확충이 필요한 학급 수를 산출하였다.

공립유치원 이용률 40%를 목표로 설정한 시나리오 1 달성을 위해서는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에는 353학급, 2019년 46학급, 2021년 69학급, 2022년 294학급 증설이 필요하다. 저위가정으로는 현재 과잉 공급 수준이다(표 VI-2-17 참조).

시나리오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 353학급, 2019년 1,245학급, 2020년 505학급, 2021년 604학급, 2022년 794학급이 증설되어야 한다. 저위가정으로는 2020년까지 중위가정과 큰 차이는 없으나 2021년은 449학급, 2022년 479학급으로 추가 증설 학급 수가 줄어든다(표 VI-2-17 참조).

표 VI-2-17 | 공립유치원 추가 확충 규모

단위: 학급

구분	중위가정					저위가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나리오 1(40%)	353	46	-40	69	294	-1,193	1,570	-53	-58	47
시나리오 2(50%)	353	1,245	505	604	794	341	1,233	488	449	479

주: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가정한 경우 추가 확충 규모를 의미함.

3 소결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영유아 인구 및 합계출산율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활용하여 향후 5년(2018~2022) 간의 어린이집·유치원 수요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적정 규모 등을 추정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래 합계출산율은 2022년 중위가정 기준으로 1.26명, 저위가정으로 1.09명으로 2017년 말 합계출산율 1.05명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후 장래 영유아 수는 통계청의 추정치보다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래 영유아 인구는 중위

가정 기준으로 2018년 3,045,740명에서 2022년에는 2,859,325명까지 줄어들고, 저위가정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동안 3,001,533명에서 2,630,728명이다.

둘째, 장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 1,413,511명에서 2019년에는 138만명까지 줄고, 2020년에는 135만명, 2022년에는 1,326,997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저위가정 기준으로는 2018년 1,392,995명에서 2020년에는 130만명 이하로 떨어지고, 2022년에는 1,220,906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적정 어린이집 수는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 34,902개소로 2017년 40,238개소와 비교하여 5,336개소 정도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 2019년에는 34,160개소, 2020년에는 33,500개소, 2021년에는 33,157개소, 2022년에는 32,765개소가 적정 규모이다. 저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에는 34,495개소 정도가 적정 규모이나, 2017년 말 기준 40,238개소가 공급되고 있어 5,843개소 정도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22년에는 30,146개소가 적정 규모이다.

넷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달성 목표를 40%, 35%, 30%로 설정하고 추가 확충 규모를 추정하면, 국공립어린이집 40%를 목표로 설정한 시나리오 1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 1,192개소, 2019년 972개소, 2020년 941개소, 2021년 969개소, 2022년 935개소이고, 저위가정 기준으로는 각각 1,129개소, 891개소, 819개소, 800개소, 717개소이다. 시나리오 2의 추가 확충 규모는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은 105개소로 확충 규모가 적고, 2019년부터는 매년 900~1,000개소씩 추가 확충 규모가 늘어난다. 저위가정 기준으로는 2018년에는 58개소로 적지만, 2019년 927개소, 2020년 854개소, 2021년 829개소, 2022년 749개소이다. 시나리오 3 달성을 위해서는 시나리오 2와 2018년, 2019년은 규모가 동일하고 2020년부터는 다르다. 중위가정 기준으로 2020년은 544개소, 2021년 570개소, 2022년 754개소이고, 저위가정 기준으로는 각각 455개소, 452개소, 586개소를 추가 확충하여야 한다.

다섯째, 장래 유치원 이용 유아 수는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 614,198명에서 2019년 60만명 이하로 떨어지고 2022년에는 555,849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저위가정 기준으로는 2018년은 613,482명에서 2019년 60만명 이하로 떨어져 598,429명에 이르고, 2022년에는 535,406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섯째, 적정 유치원 학급 수는 중위가정으로 2018년 기준 30,170학급으로 2017년 기준 36,470학급과 비교하여 6,500학급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 2019년에는 29,983학급, 2020년 29,065학급, 2021년 28,482학급, 2022년 27,792학급으로 줄어야 한다. 저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 30,674학급이 적정 규모이고, 2017년 편성 학급 수와 비교하면 중위가정과 유사한 규모로 과잉 공급되고 있다.

일곱째, 공립유치원 이용률 40%를 목표로 설정한 시나리오 1 달성을 위해 중위가정으로 2018년 353학급, 2019년 46학급, 2021년 69학급, 2022년 294학급 증설이 필요하고, 저위가정으로는 연차별로 과잉 공급 수준이다.

시나리오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 353학급, 2019년 1,245학급, 2020년 505학급, 2021년 604학급, 2022년 794학급이 증설되어야 한다. 저위가정으로는 2020년까지 중위가정과 큰 차이는 없으나 2021년은 449학급, 2022년 479학급으로 추가 증설 학급 수가 줄어든다.

VII

정책 제언

1.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방향
2.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구조 개선
3. 맺는 말



VII. 정책 제언

제6장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추진 현황과 공급 정책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향후 저출산에 대비한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체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우선 설치지역을 선정하고 적정 공급 규모를 추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정책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방향

가.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 확충 정책 추진

첫째,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 확충 정책과 함께 민간 부문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의 질 개선 정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보육은 인프라 확충보다는 비용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인프라 확충은 국가가 직접 설치하기보다 민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여 왔다. 그 결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은 비용 지원 확대와 발맞춰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2017년 말 기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33,701개소(보건복지부, 2018a: 2)이고, 유치원은 4,282개원(한국교육개발원, 2017)에 이른다. 그러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내에서는 아동학대 및 부실급식,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사회문제로 이슈화되어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현상 고착화로 국가 존립을 위협받고 있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공급 과잉으로 어린이집 특히, 규모가 작은 가정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중심으로 폐쇄(폐원)가 확산되고 있다. 새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 공급 확대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민간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 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부문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의 질 개선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 확충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민간 부문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 질 개선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

둘째,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확충한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의 대규모 확충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폐쇄(폐원)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매입 및 무상임대, 장기임차 등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 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본 연구 조사에서도 민간 31.9%, 가정 42.1%가 인건비 등의 재정 지원이나 영유아 모집 등의 이점 등으로 향후 5년 이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었고, 이들 중 38.6%는 장기임차, 35.1%는 무상임대, 24.6%는 매입을 통한 전환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전환 시기는 2018년 10.5%, 2019년 49.1%, 2020년 28.9%로 과반수 이상이 향후 3년 안에 국공립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민간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장기임차 및 무상임대 등에 의한 전환 시설 대상의 보육서비스 질 체계를 마련한다. 장기임차 및 전환 시설 원장 및 보육교사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질 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셋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차등적으로 설정한다.

새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 40% 달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 확충 목표 달성률을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설정해 놓고 있어 지방정부들이 앞 다투어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을 확충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서초구는 2017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고, 세종,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일부 시도는 공립유치원 이용률이 50%를 상회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과잉 공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증가하기보다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 조사에서도 출생아 수 감소와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 확충 등으로 어린이집 87.2%와 유치원 65.1%에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고, 특히 어린이집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심각하였다. 또한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로 재원 영유아 수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32.8% 정도이고, 그 규모는 정원 대비 10.2%이었다.

따라서 40% 목표 달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공립유치원 확충 정책 추진보다는 지역 특성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정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을 설치한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 확충 목표는 출생아 수, 유입·유출 인구, 민간어린이집 폐쇄 및 사립유치원 폐원 추이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매년 조정해 나간다. 본 연구에서 어린이집 원장 중 90% 가까이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목표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하였고, 이보다 낮은 27.3%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어 지역 특성이나 보육 수요에 기반한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을 확충해 나간다.

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어린이집·유치원 수급 정책 추진

첫째,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시도 및 시군구의 보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어린이집 인가 여부를 관리·감독한다.

보육수급계획을 수립한 시군구는 2018년 기준 전국 228개 중 135개 지역으로 59.2% 정도이다. 즉, 민간어린이집의 인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육수급계획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어린이집 인가가 결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육수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보육수급계획 미수립은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수급 정책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보육실태조사 시 보육수요율 산출을 정례화한다.

중앙정부는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보육수급 산정방식을 안내해 왔고, 보육수급 산정 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육수요율은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왔다. 즉, 2015년까지는 2004년과 2009년,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반면,

2016년부터는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보육수요율을 활용한 산출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산출방식 자체를 변경하여 안내하고 있다. 2015년 보육실태조사에서 보육수요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보육수요율을 산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개발 등으로 인구이동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3년 단위의 보육수요율 산출은 정확성 및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육수요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및 공표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이를 활용하여 보육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보육수요율 산출방식 개선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셋째, 유치원 취학 수용조사의 지침을 정교화한다.

교육부의 유치원 취학수용조사 지침에 따르면 조사 시기는 3년이고, 지역적 범위는 취학권역을 기준으로 한다. 조사대상은 만 0~5세, 조사항목은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와 취학 희망 유치원 유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 목적으로 시도교육청별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자료 취합이 어려웠으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 시기나 지역적 범위, 조사표본 등에서 교육청 간의 차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의 유아수용조사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시도 교육청간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유치원 취학수요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도를 높인다.

넷째, 보육수급계획 및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시도 및 시군구와 시도교육청이 상호 조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례적으로 논의한다.

일부 시군구는 보육수급계획 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및 원아 수 등의 통계자료를 제공받고 있었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도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시도청에서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은 부처 간의 이해관계로 정보제공이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시도 및 시군구청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보육수급계획 또는 유아수용계획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와 유아교육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다.

2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구조 개선

가. 어린이집 진입 장벽 강화

보육료 지원 확대 외에 어린이집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로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어린이집은 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표자가 어린이집 여러 개를 동시해 운영할 수 있으며, 권리금을 받고 어린이집 사고팔 수 있는 구조이다. 민간어린이집 중 자가는 2017년 말 기준 52.1%, 월세 43.7%, 전세 4.2%이고, 가정은 자가가 66.0%, 월세 28.2%, 전세 5.8%이다(사회보장정보원, 2017). 어린이집 설치 시 자기자본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이고, 대표자가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 수를 제한하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대표자 자격을 강화한다.

나. 민간·가정 어린이집 퇴출 구조 마련

첫째, 어린이집 폐쇄 기준을 마련한다.

2017년 말 기준 원장 혼자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131개소, 영유아 1명만 돌보는 어린이집은 39개소, 1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180개소에 이른다(사회보장정보원, 2017). 모든 영유아가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 일정 규모의 영유아 또는 반 수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 폐쇄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어린이집 폐쇄기준 도입 관련 조사 결과, 어린이집 원장 중 60% 가까이가 이에 대해 동의하였고, 동의정도는 4점 평균 2.5점이었다.

본 연구 조사에서 어린이집 폐쇄기준으로 정원충족률 25.5%, 정원충족률 지속 기간은 평균 8.7개월, 원장 1인 운영기간 평균 7.4개월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기임차 사전 적격심사 시설영역 8개 세부기준 중 장기근속 보육교사 평균 2년, 보육 3년 장기근속 교사 비율 평균 34.1%, 1급 보육교사 비율 45.7%, 국공립 1호봉 이상 비율은 46.8%, 정원충족률은 59.1%, 대기 아동 수 정원의 22.7%, 유아 반 수 1.6개 반을 제안하였다. 어린이집 폐쇄 조건으로 정원충족률 30% 미만이 9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또는 원장 1인이 12개월 이상 운영하거나 평가인증 미참여 상태인 경우 폐쇄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안한다. 단,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평

가제로 전환된 이후에는 D등급 1년 이상 유지 어린이집 등으로 변경한다.

둘째,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퇴출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인가 및 폐쇄는 어린이집이 신청하고, 시군구청장이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퇴출 관련 법이나 기준이 별도 마련되어야 한다. 폐쇄 대상 어린이집에게는 폐쇄 대상 시설 확정 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폐쇄 예정신고서를 전달하고,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인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사후조치 기간을 둔다.

다.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 확충 방안

첫째, 출산율 및 민간 부문 어린이집 및 유치원 폐원 추이를 검토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 확충 규모를 조정해 나간다.

2017년 출생아 수가 2016년보다도 4만 여명이 줄었고,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추계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친다.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영유아 수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 수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 공급 규모나 지역 등을 매년 검토하여 추가 수요가 발생한 지역에 적정 규모로 확충한다. 본 연구에서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에 대해 7.9%, 유치원 30%만 적절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출산율 및 민간 부문 어린이집 및 유치원 폐원 추이를 살펴 공급 규모를 조정해 나간다.

둘째, 장기임차 선정시 적용하는 사전적격심사 기준과 재위탁 기준을 개정한다.

본 연구에서 장기임차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 계약기간 10년에 대해 33.6%가 적절하다고 답하였고, 적정기간으로 13.6년을 제한하였다. 또한 장기임차 전환 시 시설개보수비 1억 1천만원 및 기자재비 1천만원 지원에 대해 전자는 26.2%, 후자는 22.1%만 적절하다고 답하였고, 적정 지원수준으로 시설개보수비는 1,577.2만원, 기자재비는 1,488만원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장기임차 사전적격심사 세부기준 13개 항목에 대해 대기 아동 수, 유아반 3개반 이상, 특별활동 부담 기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각각 24.5%, 23.1%, 23.5%로 낮았다. 누리과정 지원 이후 유아의 유치원 이동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유아반 3개반 이상 기준은 2개반으로 하향 조정하고, 특별활동 부담은 시군구 상한선 기준에 준수하는 경우 등으로 조정한다. 특별활동 운영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후 운영 기준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외에 장기임차 선정 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결과 점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장기임차는 신규 위탁에 해당하므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위탁 심사결과 점수기준을 적용한다.

셋째, 매립형 유치원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매립형 유치원 선정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매립형 유치원은 고용 승계 등의 문제로 쉽게 도입하기가 어려우므로, 교육의 질이나 교사의 전문성이 높은 유치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상 조건, 선정기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한다. 본 연구에서 매립형 도입을 위한 조건에 대해 원장들은 매립 대상 유치원 선정기준 마련, 객관적인 매립 대상 유치원 선정기준 마련, 민간위탁 운영의 공공성 확보 위한 운영기준 마련 순으로 요구가 높았다.

라. 공영형유치원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모델 기준 강화

서울시교육청에서 2017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유치원 선정기준은 질 높은 유치원을 선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선정기준 중 위원회 구성에 따라 평가 결과 차이가 클 수 있는 기준이 대부분으로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등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향후 공영형유치원 확대에 대비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조기에 차단한다.

본 연구에서 서울 이외 사립유치원 중 20.2%만 참여 의향이 있었고, 50인 이하 소규모 유치원이거나 읍면지역에서 참여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로, 공영형유치원 선정 이후 정기 종합평가 부담감, 사학기관 재무회계 준수 및 카드 거래 등 회계 운영의 부담감, 예산 지원기준이 기대에 못 미쳐서 순으로 들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공영형유치원 모델의 지원수준, 운영기준, 컨설팅 및 장학, 평가 등의 개선사항으로 운영기준,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예산 지원수준, 컨설팅 및 장학, 평가 등을 꼽았다. 특히 예산 지원기준에서는 교직원 인건비 기준, 학교기본운영비 등의 개선 요구가 높았다. 교직원의 전문성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공공성을 높인다.

3 맺는 말

본 보고서는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추진 현황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급 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저출산에 대비한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우선 설치지역을 선정하고 적정 공급 규모를 추정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관련 법 및 제도, 관련 선행연구 등과 중앙정부와 시도 및 시군구의 어린이집 수급계획,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수용계획을 검토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수급 현황과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방법의 적절성,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퇴출기준, 공영형 사립유치원 및 매입형 유치원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시도 및 시군구별 어린이집·유치원 수급 현황을 살펴보고, 어린이집·유치원의 수요를 예측하여 적정 공급 규모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적정 공급 수준을 추정하고, 운영이 어려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퇴출 구조를 마련하며,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방향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민간 부문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의 질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목표를 설정한다. 시도 및 시군구가 보육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중앙 정부 차원에서 관리감독하고, 보육실태조사 시 보육수요율 산출을 정례화한다. 유치원 취학 수용조사의 지침을 정교화하고, 보육수급계획 및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시도 및 시군구와 시도교육청이 상호 조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퇴출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공영형유치원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모델의 기준 구체화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 확충 규모는 출산율 및 민간 부문 어린이집 및 유치원 폐원 추이를 검토하여 적정 수준을 조정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을 확충해 나간다.

우리나라는 인프라 확충보다는 비용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에게 의존하여 왔다. 그 결과로, 어린이집 및 유

지원에서는 아동학대 및 부실급식,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국공립 확충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수준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재정 확보 등의 문제로 확충이 쉽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과잉 공급 상태이다.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 확충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17개 시도교육청(2018). 유치원 학급편성기준.
- 강원도청(201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내부자료.
- 경기도(201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내부자료.
- 교육부(2018). 공립유치원 신설 건축비 등 내부자료.
- 교육부과학기술부(2013). 유아수용계획 수립 지침-유치원 취학수요조사 포함- 내부자료.
- 광주광역시(201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내부자료.
- 김대성·신동훈(2016). 지방소멸 가능성에 따른 지역공공서비스 개선방안 :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광주전남연구원.
- 김미정·우수정·박진아·신용연(2014). 경기도 보육 수급전망 및 정책 방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송이·이혜숙(2014). 양육수당 도입 이후 보육수요 실태 및 보육인프라 다각화 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은설·유해미·최은영·배운진·양미선·김정민(2016).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정·유재연(2013). 보육서비스 공급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진(2007). 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현황: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 김진영(2014). GIS를 활용한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최적지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2006). 영유아 보육재정 지출방식: 기본보조금에 대한 검토. 재정포럼, 9.
- 김현철(2009). 보육과 유아교육의 수요규모 예측과 시사점. 교육문제연구, 35, 117-139.
- 나정·장명림·이은주(1994). 공립유치원 모형 개발 연구. 유아교육연구, 14(1), 5-27.

- 노수래(2004). GIS 기법을 활용한 국공립보육시설의 입지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
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구광역시교육청(2018). 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구 개방형 사립유치원 운영 계획.
- 대전광역시(201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내부자료.
- 대한민국정부(2017).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 박성철·조진일·최형주·임성근·엄정애(2014). 공립유치원 신설 소요경비 연구. 한
국교육개발원.
- 박세경·이정은·신구민·양난주(2013).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
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진아·도남희·조혜주(2015). 지역별·유형별 어린이집 수급 현황 분석 및 전망.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가족부(2010). 2009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1994).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1995).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00). 2000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03). 2003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06). 2006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0). 2010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1). 2010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2). 2011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3a). 2012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3b).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4a). 2013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4b).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5a). 2014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5b).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6a). 2015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6b).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7a). 2016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7b).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8a). 2017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8b).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사회부(1991). 보육사업안내.
- 보건사회부(1992). 보육사업안내.
- 보건사회부(1995). 보육사업안내.
-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2018).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설명회. 내부자료.
- 부산광역시(2018). 초등학교 여유교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내부자료.
- 백선희(2011).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회보장정보원(2018). 어린이집 일람 현황 내부자료(2017년 12월 말 기준).
- 서문희(2002). 보육시설 설치의 지역 차이 및 형평성 제고 방안. 보건복지포럼, 66, 1-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이옥·백화중·박지혜·최진원(2005). 2004년 보육·교육 실태조사 총괄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신나리·유은영(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서울: 여성가족부.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울특별시(2014).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
- 서울특별시(2016).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6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2017).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7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2018).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8 추진계획.
- 서원석·강호제·김성연·양광식·서석원(2007). GIS를 활용한 영유아보육시설의 공간적 입지적정성 평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4).
- 송희정(1996). 서울시 공공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공간적 분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나리·이정원·송신영·이은경(2009). 취약지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모델 정립 방안.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양미선·이규림·정지운·김정민(2016). 공보육·교육 공급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이규림·최윤경(2017). 어린이집 수급정책 및 발전 방안. 서초구·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임지희(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유재연(2014). 지역사회 영유아 지원서비스가 어린이집 충족률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4(4), 123-152.
- 이상호(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고용동향 브리프. 2018. 7월호.
- 인천광역시청(2018). 내부자료.
- 정현주·김민우(2017). 어린이집 개원과 폐원의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보장정보원.
- 정홍원·강지원·김보영·이민경(2015). 지역단위 복지서비스 수요·공급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은영·황성운·황우상(2012). 공립유치원 설치·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박창현·송신영(2015).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 도입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이정원·김진미(2015).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격차에 따른 지역 유형화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교육개발원(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교육통계.

한지원(2005). 서울시 보육시설의 수요와 공급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
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행정안전부(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주민등록인구통계.

〈신문기사〉

SBS CNBC(2016.1.21.). 202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 2.5배 늘린다…직장어린이집 430곳 추가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79033>
(2018.6.20. 인출).

경향신문(2016.3.8.). 서울시, 초·중·고 빈 교실에 어린이집 만든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82219435&code=940401 (2018.6.18. 인출).

교육부(2018.2.12.). 5년간 2,600학급 이상 신설로 국공립유치원 40% 달성. 보
도자료.

교육부(2018.12.6.).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및 서비스 개선.
보도자료.

뉴스후+(2018.11.28.). 출산율 1.0명 선 붕괴…인구 유지 빨간불?
http://www.newshoplu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1265 (2018.11.30. 인출)

뉴스시스(2013.2.21.). [새 정부 국정목표] ②맞춤형 고용 복지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30221_0011860262
(2018.6.20. 인출).

동아일보(2015.1.17.). 아동학대 어린이집 폐쇄 5년 전 재탕
<http://news.donga.com/3/all/20150117/69132893/1>
(2018.6.20. 인출).

머니투데이(2018.4.16.). 서울교육청·서울시, 4차 산업혁명 이끌 미래교육에 4년
간 총 1조889억원 투입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41321173763472>
(2018.6.18. 인출).

머니S(2017.4.5.). 서울시, 초등돌봄교실 2022년까지 500실 증설…희망학생 모

두 수용 가능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8040509448036412&outlink=1> (2018.10.18. 인출).

머니투데이(2018.4.16.). 서울교육청·서울시, 4차 산업혁명 이끌 미래교육에 4년간 총 1조889억원 투입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41321173763472>
(2018.6.20. 인출).

문화일보(2018.7.25.). 저출산 그늘... 어린이집 줄폐업 고착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2501071103016001> (2018.10.18. 인출).

베이비뉴스(2018.12.26.). '저출생 심각'...올해 출생아 수, 35만명 선도 무너진다.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792>
(2018.12.27. 인출).

서울특별시교육청(2017.11.28.). [논평]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통과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논평

<http://enews.sen.go.kr/news/view.do?bbsSn=150024&step1=3&step2=1> (2018.6.18. 인출).

세계일보(2018.6.10.).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해남군 출산율 쑥~

<http://www.segye.com/newsView/20180610003470> (2018.6.20. 인출).

시민일보(2016.9.26.). 용산구, 29일 전국 최초 성심여고에 '비용절감형' 구립어린이집 개원.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8722>
(2018.6.18. 인출).

연합뉴스 TV(2018.6.27.). 출생아수 2만명대 추락...4년뒤부터 인구감소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627017200038/>
(2018.10.26. 인출).

연합뉴스(2018.3.23.). 초등학교 빈교실 활용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반응 엇갈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323019500038/?did=1825m> (2018.6.6. 인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지사 당선인 공약, 박원순, 5대 공약

<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List.do> (2018.6.18. 인출).

헤럴드경제(2018.2.28.). 지난해 출생아수 35만명, 심리적 마지노선 무너져...역대 최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228000571>
(2018.6.20. 인출).

〈참고 사이트〉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합계출산율(2018.6.20. 인출)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영유아 인구 수, 장래합계출산율, 장래 인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1641&efYd=20180209#0000>) (2018.7.15.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201083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J7D1J2X1A4O1R7B0E2V1O9J7Y3W5

한국보육진흥원(<https://www.kcpi.or.kr/>) 보육통계 (2018.10.5.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http://27.101.213.4/> (2018.7.16. 인출).

〈법령〉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Abstract

A Study on the Conversion of the Supply System and the Mid-to-Long Term Appropriate Level of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to Address the Issue of Low Fertility

Mi Sun Yang · Dong Hoon Kim · Yoon Kyoung Choi

This study diagnoses the supply status of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and the supply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presents the direction on the supply system for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to address the future low fertility issue. Moreover, the study selects areas to first establish public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and projects the appropriate supply scale. For the research method, this study examined and collected related laws, systems, supply and demand plans, and previous researches on the supply of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utilized materials such as the ofregistered MinistryoftheInterior,byKOSTAT, and the current and total number of children in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and the demand for childcare to estimate the demand and appropriate supply for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for the next 5 years. Furthermore,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public childcare centers, kindergartens expansion cases that are being promoted by the local government by considering aspects such as the region's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conditions that are being conducted separately from the plan to expand public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by the central government. At the same time, an online survey with 491 public child

care centers, private and home childcare centers and 443 public and private kindergartens was hel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recommend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cy to expand public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should be promoted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The number of public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should be increased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and a system to manage the service quality of centers converting to public-type child care centers should be established such as providing long-term leases or free leases. Second, an expansion target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policy should be executed accordingly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n order to minimize side effects such as the decrease of the enrollment ratio and the competition between public child care centers due to the oversupply of public centers. Third, provincial and municipal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a plan for the provision of childcare and the management and the supervision should be done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conduct the analysis of childcare supply and demand. The government should regularly carry out child care demand surveys considering the rapid increase of population migration due to recent urban development and etc. Fifth, the sample collection, the survey method, and the survey period for each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re very different depending on the region. Therefore,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enhance the guideline of the kindergarten acceptance survey, build and operate a council comprising of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o minimize the gap betwee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regions. Sixth, when establishing the child care supply plan and the children acceptance plan, a council should be established to discuss matters that require coordination betwee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and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Seventh, a legal basis for the eviction of private home child care centers should be established. A standard to automatically close a childcare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event that the center does not meet

a certain criteria, such as having an enrollment ratio of less than 30% for more than 9 months, or a center being operated solely by a director for more than 12 months. Eighth, a detail standard to strengthen the publicness of private kindergartens such as public-type kindergartens and kindergartens purchased by the government should be specified. Ninth, the expansion scale of public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should be adjusted accordingly following the review of the fertility rate and the closure rate of private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Tenth, in order to meet the goal of increasing the number of public child care centers to 40%, it is necessary to expand a total of 7,777 centers that can enroll 70 children (the average number of total students in public child care centers as of the end of 2017) by 2022. In addition,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increasing the number of public kindergartens to 40%, 10,588 classes are needed by applying the average value of the class placement standard based on 2018.

Keyword: Childcare Center, Kindergarten, Appropriate Level, Supply System



부록

- 부록 1. 부록 표
- 부록 2. 조사표

부록 1. 부록 표

▣ 부록 표 II-1-1 ▣ 시도별 출생아 수: 2008-2017

단위 :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465,892	444,849	470,171	471,265	484,550	436,455	435,435	438,420	406,243	357,771
서울	94,736	89,594	93,266	91,526	93,914	84,066	83,711	83,005	75,536	65,389
부산	26,670	25,110	27,415	27,759	28,673	25,831	26,190	26,645	24,906	21,480
대구	20,562	19,399	20,557	20,758	21,472	19,340	19,361	19,438	18,298	15,946
인천	25,365	24,379	25,752	26,118	27,781	25,560	25,786	25,491	23,609	20,445
광주	13,890	13,101	13,979	13,916	14,392	12,729	12,729	12,441	11,580	10,120
대전	14,856	13,915	14,314	14,808	15,279	14,099	13,962	13,774	12,436	10,851
울산	11,365	11,033	11,432	11,542	12,160	11,330	11,556	11,732	10,910	9,381
세종	-	-	-	-	1,054	1,111	1,344	2,708	3,297	3,504
경기	119,397	113,692	121,753	122,027	124,746	112,129	112,169	113,495	105,643	94,088
강원	12,373	12,112	12,477	12,408	12,426	10,980	10,662	10,929	10,058	8,958
충북	14,064	13,903	14,670	14,804	15,139	13,658	13,366	13,563	12,742	11,394
충남	19,749	19,257	20,242	20,398	20,448	18,628	18,200	18,604	17,302	15,670
전북	15,878	15,233	16,100	16,175	16,238	14,555	14,231	14,087	12,698	11,348
전남	16,363	15,995	16,654	16,612	16,990	15,401	14,817	15,061	13,980	12,354
경북	23,538	22,373	23,700	24,250	24,635	22,206	22,062	22,310	20,616	17,957
경남	31,493	30,320	32,203	32,536	33,211	29,504	29,763	29,537	27,138	23,849
제주	5,593	5,433	5,657	5,628	5,992	5,328	5,526	5,600	5,494	5,037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출생아 수(2018.10.20. 인출).

▮ 부록 표 II-1-2 ▮ 정원총족률·이용률·시군구별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급률

단위: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국공립		전체	국공립	전체	국공립	전체	국공립		전체		국공립		전체	국공립	전체	국공립		
	공급률	이용률	공급률	이용률	정원총족률	정원총족률	이용률	이용률	공급률	이용률		공급률	이용률	정원총족률	정원총족률	이용률	이용률				
서울	53.1	46.5	30.4	31.5	87.6	90.8	39.4	16.9	강원	68.1	52.3	12.6	13.6	76.7	83.3	46.9	38.0				
도봉	63.9	54.6	22.1	24.3	85.4	94.2	40.0	6.0	양구	63.2	52.0	11.0	12.5	82.3	93.9	24.3	100.0				
노원	51.4	45.2	26.8	28.2	88.0	92.6	55.0	9.9	속초	73.1	63.3	8.5	8.3	86.6	85.0	29.7	60.6				
강동	57.6	51.2	26.5	27.3	88.8	91.6	43.2	11.6	철원	83.6	57.2	7.4	10.2	68.4	94.8	31.3	69.0				
강서	50.1	44.7	23.9	24.6	89.4	92.0	39.5	12.8	황성	82.6	54.5	8.7	9.5	66.0	72.2	35.7	43.5				
광진	54.4	47.0	25.5	26.3	86.4	89.3	42.5	12.8	태백	67.1	60.0	47.6	45.9	89.4	86.4	37.6	65.4				
동작	47.2	42.9	37.7	39.0	90.8	94.0	40.1	13.4	강릉	73.3	55.9	3.6	3.9	76.3	81.1	40.2	38.5				
강북	63.0	54.5	26.2	28.0	86.6	92.5	29.3	13.8	고성	69.2	52.9	57.8	60.8	76.4	80.4	43.6	78.1				
용산	51.3	43.9	34.7	34.3	85.6	84.7	34.5	13.9	평창	63.6	46.9	16.5	17.8	73.7	79.2	45.2	87.5				
영등포	61.1	52.8	27.6	27.3	86.5	85.5	46.9	14.4	춘천	65.1	53.7	9.5	10.7	82.5	93.6	46.2	20.6				
송파	44.2	40.3	23.6	24.6	91.2	95.3	36.8	14.9	홍천	70.8	50.7	7.5	7.6	71.6	72.5	47.4	55.1				
종로	77.5	62.4	41.6	43.5	80.5	84.2	46.9	15.1	인제	63.6	43.8	27.1	30.9	68.9	78.5	49.5	75.2				
관악	56.3	49.4	34.3	36.0	87.7	91.8	45.9	17.1	양양	59.8	46.9	23.2	24.6	78.4	83.1	49.7	46.5				
은평	59.0	50.5	15.6	16.8	85.5	92.0	38.3	17.4	영월	65.5	46.2	11.7	15.6	70.7	93.9	51.2	64.2				
서대문	48.4	43.0	38.1	39.2	88.7	91.3	39.9	17.7	정선	72.6	44.4	35.2	45.1	61.2	78.4	51.6	76.7				
중랑	59.4	52.4	26.1	27.2	88.2	92.0	38.2	18.1	화천	61.3	47.8	34.6	34.7	78.0	78.3	52.8	91.2				
양천	54.4	47.8	32.7	33.0	87.9	88.8	43.9	18.4	동해	60.7	49.8	5.1	5.6	82.0	89.4	53.3	20.2				
동대문	57.0	49.5	33.0	33.8	86.8	88.9	44.2	18.7	원주	69.0	50.1	11.4	12.6	72.6	80.2	55.2	27.4				
성북	51.1	44.1	31.1	32.1	86.3	89.0	47.7	20.7	삼척	57.0	45.2	26.4	26.3	79.3	78.9	57.8	38.8				
마포	46.5	40.5	43.5	44.6	87.1	89.2	34.6	20.8	충북	41.6	33.2	7.2	7.7	79.7	86.1	26.4	46.3				
금천	75.3	64.1	30.1	32.0	85.2	90.6	37.4	23.0	증평	62.3	55.3	5.8	6.4	88.8	97.1	23.0	60.0				
중구	74.0	60.6	45.2	48.4	82.0	87.9	47.4	23.0	단양	103.1	64.2	27.8	38.5	62.3	86.1	30.9	100.0				
서초	39.6	34.4	39.5	40.9	87.1	90.3	24.6	24.4	진천	73.9	59.9	10.7	12.4	81.2	94.0	32.9	81.4				
강남	42.3	36.4	38.7	41.1	86.0	91.3	31.5	24.9	청주	66.5	53.3	3.7	4.1	80.1	87.9	41.3	37.6				
성동	48.1	42.3	50.6	51.8	88.1	90.1	36.9	26.6	충주	68.1	53.6	7.5	6.7	78.7	70.9	42.8	50.0				
구로	56.9	52.2	27.2	28.0	91.8	94.6	30.4	26.7	음성	68.7	56.0	14.0	15.8	81.5	92.1	44.6	63.5				
부산	49.4	41.6	13.9	14.7	84.2	88.6	55.7	15.1	괴산	86.9	55.8	15.0	18.3	64.2	78.5	45.5	78.1				
사상	50.6	42.7	16.7	16.5	84.4	83.6	66.0	5.6	영동	59.0	45.6	10.7	13.3	77.2	96.6	48.9	75.5				
동래	46.4	40.2	11.5	12.6	86.6	94.4	61.2	6.3	보은	46.9	41.5	16.8	18.8	88.5	99.0	50.1	78.5				
시하	56.6	48.2	16.1	16.9	85.2	89.6	53.7	7.5	제천	58.0	46.5	18.2	17.5	80.1	77.3	54.4	45.4				
해운대	47.7	39.1	10.2	10.6	82.0	85.0	48.9	7.5	옥천	63.0	46.5	16.8	22.8	73.7	100.0	57.5	50.6				
금정	52.2	43.0	12.5	13.5	82.3	89.4	58.9	9.7	충남	48.9	39.0	5.6	5.9	79.8	84.4	34.2	35.8				
남구	51.2	42.3	18.3	20.7	82.6	93.2	47.8	10.6	논산	85.8	66.6	6.7	6.6	77.6	77.2	25.8	63.2				
부산진	41.6	36.2	18.5	18.8	87.0	88.6	67.8	12.1	서천	90.3	59.3	12.7	17.2	65.6	88.8	29.3	97.4				
북구	53.1	43.3	5.4	6.3	81.5	94.0	63.9	14.0	당진	73.9	60.0	5.3	5.8	81.2	89.1	30.1	56.5				
서구	51.9	43.5	35.3	37.5	83.8	89.0	55.7	14.8	태안	68.7	55.0	3.3	4.0	80.1	96.4	34.0	80.6				
수영	46.6	41.3	9.2	9.3	88.7	89.9	60.1	15.5	금산	78.9	55.3	17.3	20.6	70.1	83.3	36.7	69.3				
연제	43.6	38.8	9.0	9.1	89.0	90.4	34.5	21.1	서산	67.9	54.1	1.3	1.6	79.7	99.0	38.9	43.6				
영도	64.0	50.8	32.4	34.4	79.4	84.1	45.8	22.9	아산	70.0	56.5	3.3	3.5	80.7	84.3	45.3	28.6				
중구	74.0	66.0	36.2	35.0	89.2	86.1	32.4	30.2	부여	77.6	51.1	2.7	3.3	65.9	79.6	48.6	56.2				
동구	70.9	53.5	25.3	27.7	75.5	82.5	58.7	34.4	보령	67.0	51.0	7.8	8.8	76.2	86.5	50.0	54.9				
기정군	51.9	44.1	9.8	10.2	84.8	88.9	54.8	36.6	천안	56.6	46.6	5.8	6.1	82.4	86.4	51.8	18.7				

(부록 표 II-1-2 계속)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국공립		전체	국공립	전체	국공립	구분	전체		국공립		전체	국공립	전체	국공립				
	공급 률	이용 률	공급 률	이용 률	정원 충족 률	정원 충족 률	이용 률	이용 률		공급 률		이용 률	공급 률	이용 률	정원 충족 률	정원 충족 률	이용 률	이용 률			
강서	37.5	31.8	6.8	7.2	84.8	89.6	56.3	38.7	계통	56.5	47.3	3.4	4.0	83.8	100.0	51.9	23.1				
대구	54.2	42.5	5.3	6.0	78.4	87.8	61.0	16.5	예산	63.2	49.1	4.4	2.9	77.7	51.3	52.5	57.3				
수성	51.1	38.9	3.9	5.0	76.2	96.8	59.6	10.1	홍성	54.1	45.3	10.1	9.9	83.8	82.0	53.9	59.5				
북구	55.7	42.4	3.7	4.5	76.0	92.6	61.9	11.1	청양	60.8	45.8	18.5	13.7	75.4	55.8	56.3	61.7				
중구	47.2	38.0	7.8	9.7	80.5	99.4	45.4	16.3	공주	76.9	55.6	11.5	13.3	72.3	83.8	60.5	55.8				
달서	52.9	43.3	4.3	4.8	81.8	91.7	65.4	12.2	전북	49.5	37.1	5.4	6.0	74.8	83.6	38.3	32.6				
남구	67.6	49.9	3.1	3.4	73.8	81.2	64.8	12.6	남원	87.9	64.5	1.8	1.1	73.4	42.6	31.7	84.1				
서구	88.2	66.6	6.0	7.3	75.5	92.0	42.8	22.3	고창	65.2	51.9	10.1	10.7	79.6	84.0	40.0	67.1				
동구	56.9	42.6	6.9	7.5	74.8	80.7	60.0	21.1	장수	58.6	45.5	32.3	32.8	77.7	79.0	40.3	100.0				
달성	41.5	36.2	9.6	8.9	87.1	80.8	63.5	33.3	임실	58.5	35.2	0.0	0.0	60.2	-	40.9	100.0				
인천	52.6	45.3	10.6	11.2	86.1	90.5	53.1	22.9	순창	57.3	34.8	22.0	19.5	60.7	53.9	41.9	100.0				
남구	53.0	46.9	10.7	10.8	88.5	89.4	48.4	10.1	무주	74.3	50.6	35.2	33.0	68.1	63.9	46.8	100.0				
부평	54.3	47.3	7.5	7.8	87.2	90.5	48.8	19.3	정읍	75.9	55.7	8.2	9.9	73.3	87.7	48.1	39.6				
계양	68.5	54.0	6.8	8.1	78.9	93.7	47.6	20.1	진안	45.2	27.1	27.9	37.8	59.9	81.3	48.6	100.0				
연수	42.4	39.3	13.1	13.4	92.8	94.7	51.7	21.4	완주	62.2	47.1	6.8	7.8	75.7	86.6	49.3	50.2				
남동	49.3	42.4	10.7	11.6	86.0	93.7	60.5	19.1	군산	68.2	53.2	7.0	7.7	78.0	86.2	49.6	30.0				
동구	65.3	51.1	27.8	28.2	78.3	79.7	59.0	25.3	부안	68.2	46.5	4.6	6.3	68.3	92.5	50.0	65.4				
서구	51.3	44.1	7.3	7.8	85.8	91.5	54.7	30.9	김제	69.8	51.6	9.3	10.2	74.0	81.3	52.7	51.3				
웅진	57.3	39.5	54.9	56.9	68.9	71.3	39.4	59.6	익산	66.5	49.6	5.7	6.8	74.7	89.1	57.4	26.3				
중구	54.5	48.9	19.1	19.7	89.7	92.7	56.8	41.6	전주	69.8	52.4	1.7	2.2	75.1	96.4	58.6	19.3				
강화	47.7	38.8	41.8	42.9	81.4	83.5	52.8	60.5	전남	67.9	52.0	8.6	9.5	76.5	84.5	43.0	51.5				
광주	69.1	51.0	4.4	4.9	73.9	82.6	56.6	17.8	강진	69.5	50.0	0.0	0.0	72.0	-	23.8	100.0				
서구	62.9	47.5	8.1	9.4	75.6	87.9	56.5	14.1	함평	74.0	44.7	6.9	10.0	60.4	87.7	24.5	88.3				
광산	76.7	54.5	2.5	2.5	71.0	71.5	56.1	15.5	보성	53.9	39.4	36.2	41.4	73.0	83.5	30.2	71.0				
동구	72.4	52.7	3.4	2.9	72.8	61.5	42.8	24.6	고흥	82.1	52.8	2.9	4.1	64.3	89.1	32.0	71.6				
북구	67.7	50.8	5.4	6.2	75.0	86.0	54.9	19.6	무안	54.0	41.8	7.9	6.9	77.3	67.1	32.3	62.0				
남구	60.5	47.3	3.6	4.0	78.3	86.0	65.7	22.5	광양	75.9	60.7	12.8	13.7	80.0	85.8	32.5	42.9				
대전	57.9	47.2	4.0	4.4	81.5	89.0	58.4	19.0	신안	59.4	32.3	25.8	30.7	54.4	64.8	36.1	100.0				
동구	70.0	53.6	3.6	4.2	76.5	90.1	46.5	20.8	영광	69.9	44.9	2.2	3.4	64.2	100.0	36.3	62.3				
유성	52.2	44.3	2.8	3.0	84.8	90.1	58.9	22.7	화순	97.6	62.5	2.5	1.9	64.0	50.8	37.8	56.1				
서구	53.6	45.4	3.6	4.0	84.7	93.8	59.1	17.5	진도	57.0	44.4	12.1	13.5	78.0	87.2	39.6	58.0				
대덕	69.5	52.9	8.8	9.9	76.1	85.6	63.0	15.0	영암	86.2	53.7	2.9	3.7	62.4	80.5	40.5	58.2				
중구	59.9	47.4	3.3	3.5	79.2	82.5	63.7	16.9	곡성	74.7	52.2	17.7	23.0	69.8	90.7	41.3	100.0				
울산	51.5	44.3	6.3	6.9	86.0	93.6	55.1	19.9	해남	51.3	37.1	2.6	1.8	72.2	49.0	41.5	59.5				
동구	52.0	48.0	8.5	8.5	92.2	91.8	49.6	18.1	구례	61.8	46.9	13.2	17.4	75.9	100.0	41.7	62.7				
중구	49.2	43.0	4.6	4.9	87.5	94.0	51.3	28.1	나주	58.8	45.6	12.1	14.1	77.6	90.7	42.2	74.0				
울주	57.2	44.6	7.2	8.4	77.9	90.6	53.5	25.5	장흥	62.3	52.4	19.3	22.8	84.1	99.4	43.7	66.2				
남구	51.3	44.8	7.5	8.2	87.2	95.2	55.3	19.0	여수	62.5	50.2	9.9	10.2	80.3	82.9	44.1	46.6				
북구	48.4	41.6	3.7	4.3	85.8	98.7	63.6	12.2	담양	44.1	33.3	0.0	0.0	75.6	-	45.1	85.0				
세종	52.7	45.3	9.2	10.1	85.8	94.6	42.8	95.3	순천	66.8	55.9	9.0	9.4	83.7	87.3	47.0	43.4				
세종	52.7	45.3	9.2	10.1	85.8	94.6	42.8	95.3	완도	51.2	42.9	18.9	18.2	83.8	81.0	53.7	88.1				

(부록 표 II-1-2 계속)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국공립		전체	국공립		전체		국공립		전체	국공립				
	공급 률	이용 률	공급 률	이용 률				정원 충족 률	정원 충족 률	공급 률	이용 률			정원 충족 률	정원 충족 률		
경기	39.7	33.6	10.2	10.8	84.7	90.1	34.3	23.8	목포	85.0	64.6	3.0	3.3	75.9	82.8	54.1	32.3
광주	66.9	56.6	6.5	7.3	84.6	95.1	24.6	24.4	장성	42.9	35.1	21.5	24.9	81.9	95.1	57.1	49.7
양평	64.1	53.5	22.1	25.2	83.5	95.2	25.7	71.9	경북	51.3	39.3	8.0	8.2	76.5	78.4	48.2	27.5
가평	69.9	55.9	15.5	17.9	79.9	92.5	29.4	71.7	예천	50.7	41.9	16.3	16.0	82.7	80.9	21.0	71.5
하남	45.2	41.7	7.8	7.5	92.2	89.3	30.9	58.2	울진	68.6	54.2	34.4	34.1	79.1	78.4	24.3	100.0
동두천	80.8	64.4	12.9	14.4	79.7	88.8	33.3	34.5	영덕	60.6	49.3	41.7	34.9	81.3	67.9	25.0	65.3
과천	93.7	78.5	24.3	26.5	83.7	91.1	35.0	20.5	고령	69.6	50.2	27.1	25.2	72.1	66.9	27.8	57.1
포천	83.4	63.8	16.1	15.4	76.5	73.1	36.9	24.9	의성	60.6	45.3	14.3	14.7	74.8	76.7	29.8	60.4
연천	53.7	46.4	26.6	27.7	86.4	90.1	41.6	48.0	성주	44.4	36.0	31.6	31.6	81.0	80.9	32.4	67.0
의왕	60.7	52.6	14.4	15.8	86.6	94.9	41.8	20.3	봉화	49.8	34.7	45.3	45.4	69.7	69.9	32.5	78.9
이천	70.6	55.3	8.2	8.5	78.4	81.7	42.5	25.0	영천	61.6	49.4	8.3	8.9	80.1	85.7	39.0	56.4
시흥	62.5	52.3	10.2	9.8	83.6	79.7	42.7	28.9	군위	57.4	36.0	4.2	5.9	62.7	86.7	40.7	100.0
성남	49.3	43.4	22.1	22.7	87.9	90.4	44.5	22.9	영양	43.7	32.0	61.5	63.4	73.2	75.5	44.0	80.0
광명	53.8	48.1	16.6	18.0	89.3	96.6	44.7	34.9	영주	63.4	51.0	11.8	12.7	80.4	86.9	48.6	43.3
양주	78.2	55.9	10.2	11.3	71.5	79.7	45.1	31.4	청도	51.2	39.6	35.2	36.6	77.3	80.6	51.4	41.6
의정부	66.2	53.5	7.0	7.7	80.9	89.4	45.8	23.3	철곡	74.7	59.3	5.4	6.3	79.3	92.9	51.5	32.6
여주	63.8	52.3	2.1	2.6	82.0	100.0	47.4	34.1	경주	67.8	50.5	4.3	5.0	74.5	86.6	56.8	37.0
구리	47.8	42.2	11.3	12.3	88.3	95.6	48.5	30.7	문경	50.8	43.3	14.4	13.8	85.2	81.6	58.9	43.1
군포	52.4	47.0	13.5	14.3	89.7	95.4	48.9	21.0	김천	61.0	45.4	8.4	8.7	74.4	77.0	59.0	34.7
남양주	60.4	49.1	8.7	9.7	81.3	89.8	49.0	25.3	안동	53.1	43.6	13.1	11.7	82.1	73.8	59.8	44.6
안성	85.0	62.0	8.2	9.8	73.0	86.6	49.4	29.0	포항	64.5	48.9	4.6	4.9	75.7	81.2	60.1	15.4
파주	54.4	45.8	5.4	5.5	84.3	85.3	51.6	26.9	창성	52.5	37.5	31.9	35.4	71.4	79.2	60.2	100.0
용인	56.2	47.3	5.2	6.0	84.1	97.5	51.8	17.0	경산	64.6	48.1	3.5	4.0	74.5	85.2	62.5	20.5
평택	56.7	47.0	7.0	7.9	82.9	93.4	52.5	19.2	구미	60.7	45.7	3.8	3.6	75.3	71.2	70.3	14.2
안산	65.6	54.9	8.7	8.9	83.8	86.4	52.7	13.6	상주	45.2	36.7	8.1	6.4	81.3	64.6	70.8	44.6
화성	45.8	38.7	7.5	7.9	84.6	89.3	52.7	26.4	울릉	37.8	22.7	72.0	97.3	60.0	81.1	74.1	40.2
고양	53.9	45.5	11.0	12.0	84.6	92.2	53.2	24.0	경남	45.8	37.6	8.2	8.9	82.1	89.3	40.2	22.6
부천	47.9	42.9	9.1	9.4	89.7	93.0	54.2	19.4	양산	50.8	44.2	3.2	3.5	87.0	93.3	59.8	14.1
수원	49.4	43.5	7.5	7.9	88.0	92.2	57.8	20.6	창원	58.7	48.2	8.0	8.9	82.2	91.4	58.0	17.3
김포	43.1	38.9	9.5	9.7	90.2	92.2	59.9	28.2	김해	60.6	48.3	6.3	7.3	79.7	92.0	55.3	17.4
오산	51.9	45.0	24.8	23.0	86.6	80.3	74.4	18.8	거제	48.5	43.9	5.9	5.7	90.5	88.5	51.9	19.9
									진주	73.5	58.4	8.7	8.7	79.4	80.2	42.6	24.4
									함안	58.0	47.8	8.3	9.5	82.5	94.8	56.4	27.2
									밀양	69.2	51.0	3.4	4.0	73.6	85.7	52.2	36.2
									통영	64.8	53.7	11.5	13.6	82.9	98.6	47.8	39.5
									사천	85.9	65.9	8.1	9.8	76.8	93.4	30.9	40.4
									창녕	56.2	44.1	15.4	18.7	78.5	95.3	46.5	47.8
									거창	65.4	53.0	16.0	17.0	81.1	86.0	41.1	55.8
									합천	49.3	40.9	34.7	33.3	82.9	79.7	44.0	72.0
									함양	58.7	44.9	30.1	29.8	76.5	75.7	49.8	78.7
									하동	71.8	52.2	13.7	13.0	72.7	69.1	23.6	100.0
									고성	70.9	60.8	13.8	15.0	85.7	93.6	25.7	100.0

(부록 표 II-1-2 계속)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국공립		전체	국공립		전체		국공립		전체	국공립		
	공급률	이용률	공급률	이용률				정원충족률	정원준족률	공급률	이용률			정원충족률	정원준족률
							남해	68.8	57.9	14.9	17.6	84.2	99.2	32.0	100.0
							산청	53.6	43.2	62.9	70.1	80.7	89.8	35.2	100.0
							의령	55.4	40.9	25.5	26.6	73.9	77.1	37.1	100.0
							제주	70.0	62.3	6.5	7.1	89.1	97.2	28.7	47.7
							제주	69.5	62.7	4.7	5.1	90.2	98.2	30.4	43.1
							서귀포	71.5	61.2	11.9	13.4	85.6	96.0	23.5	66.6

자료: 행정안전부(2017).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27.101.213.4/> 2018.7.16. 인출).

보건복지부(2017). 보육통계. pp.18-5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018.7.16. 인출).

▮ 부록 표 V-1-1 ▮ 장기임차 사전 적격심사 기준의 적절성 1

단위: %(명)

구분	현 어린이집 장기근속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현황		보육교사 처우		(수)
	적절	매우 적절	적절	매우 적절	적절	매우 적절	
전체	31.5	13.6	38.8	16.7	33.8	11.3	(485)
기관 유형							
국공립	40.1	14.6	49.0	16.1	48.4	13.0	(192)
민간	22.0	12.1	24.2	12.1	19.8	9.9	(91)
가정	27.7	13.4	35.6	19.3	26.2	10.4	(202)
현원규모							
20인 이하	30.3	12.1	36.8	19.0	27.3	11.7	(231)
21~39인 미만	33.8	13.5	44.6	12.2	35.1	8.1	(74)
40~79인 미만	30.8	16.7	35.8	17.5	42.5	13.3	(120)
80~90인 미만	27.5	15.0	37.5	15.0	37.5	15.0	(40)
100인 이상	50.0	10.0	60.0	5.0	45.0	-	(20)
지역규모							
대도시	33.9	12.8	39.4	15.6	34.2	10.8	(360)
중소도시	22.7	12.5	37.5	17.0	36.4	11.4	(88)
읍면지역	29.7	24.3	35.1	27.0	24.3	16.2	(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부록 표 V-1-2 ▮ 장기임차 사전 적격심사 기준의 적절성 2

단위: %(명)

구분	정원충족률		대기 아동수		유아반 편성 현황		(수)
	적절	매우 적절	적절	매우 적절	적절	매우 적절	
전체	34.2	11.8	19.6	4.9	15.3	7.8	(485)
기관 유형							
국공립	51.0	14.6	36.5	5.2	26.6	8.9	(192)
민간	20.9	4.4	8.8	-	7.7	2.2	(91)
가정	24.3	12.4	8.4	6.9	7.9	9.4	(202)
현원규모							
20인 이하	25.5	13.9	11.7	6.5	10.0	8.7	(231)
21~39인 미만	37.8	6.8	16.2	2.7	13.5	4.1	(74)
40~79인 미만	42.5	11.7	27.5	4.2	17.5	8.3	(120)
80~90인 미만	40.0	15.0	32.5	5.0	25.0	12.5	(40)
100인 이상	60.0	-	50.0	-	50.0	-	(20)
지역규모							
대도시	36.4	11.7	20.3	5.3	16.7	7.2	(360)
중소도시	28.4	8.0	19.3	1.1	10.2	8.0	(88)
읍면지역	27.0	21.6	13.5	10.8	13.5	13.5	(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부록 표 V-1-3 ▣ 장기임차 사전 적격심사 기준의 적절성 3

단위: %(명)

구분	특별활동 부담		설치인가 기준		집단민원 여부		(수)
	적절	매우 적절	적절	매우 적절	적절	매우 적절	
전체	16.5	7.0	36.9	27.6	38.1	28.7	(485)
기관 유형							
국공립	18.8	6.8	38.5	40.1	38.5	35.9	(192)
민간	14.3	-	38.5	11.0	40.7	16.5	(91)
가정	15.3	10.4	34.7	23.3	36.6	27.2	(202)
현원규모							
20인 이하	18.6	9.5	35.9	24.2	35.9	28.6	(231)
21~39인 미만	10.8	4.1	36.5	23.0	39.2	25.7	(74)
40~79인 미만	16.7	7.5	36.7	35.8	40.0	28.3	(120)
80~90인 미만	20.0	-	32.5	40.0	35.0	40.0	(40)
100인 이상	5.0	-	60.0	10.0	55.0	20.0	(20)
지역규모							
대도시	18.1	5.6	36.9	28.9	39.2	29.4	(360)
중소도시	9.1	8.0	39.8	19.3	34.1	21.6	(88)
읍면지역	18.9	18.9	29.7	35.1	37.8	37.8	(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부록 표 V-1-4 ▣ 장기임차 사전 적격심사 기준의 적절성 4

단위: %(명)

구분	지도점검 결과		부모 및 주민 만족도		친인척 근무 현황		(수)
	적절	매우 적절	적절	매우 적절	적절	매우 적절	
전체	36.9	26.8	45.4	23.3	26.0	34.2	(485)
기관 유형							
국공립	39.1	37.0	52.1	28.1	29.2	55.2	(192)
민간	37.4	11.0	44.0	13.2	19.8	8.8	(91)
가정	34.7	24.3	39.6	23.3	25.7	25.7	(202)
현원규모							
20인 이하	35.1	26.0	40.3	24.7	25.1	28.1	(231)
21~39인 미만	36.5	25.7	47.3	21.6	28.4	28.4	(74)
40~79인 미만	40.8	27.5	51.7	21.7	29.2	42.5	(120)
80~90인 미만	32.5	37.5	45.0	27.5	20.0	50.0	(40)
100인 이상	45.0	15.0	60.0	15.0	20.0	45.0	(20)
지역규모							
대도시	39.2	27.5	49.4	22.8	25.3	36.9	(360)
중소도시	30.7	19.3	35.2	19.3	29.5	25.0	(88)
읍면지역	29.7	37.8	29.7	37.8	24.3	29.7	(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부록 표 V-1-5 ■ 장기입차 사전 적격심사 기준의 적절성 5

단위: %(명)

구분	신청 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취약보육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여부		(수)
	적절	매우 적절	적절	매우 적절	적절	매우 적절	
전체	41.0	24.5	32.0	21.0	30.9	23.3	(485)
기관 유형							
국공립	44.3	43.2	38.5	29.2	40.6	40.1	(192)
민간	34.1	6.6	29.7	15.4	27.5	14.3	(91)
가정	41.1	14.9	26.7	15.8	23.3	11.4	(202)
현원규모							
20인 이하	42.4	16.5	27.3	16.0	25.5	13.0	(231)
21~39인 미만	36.5	24.3	28.4	18.9	37.8	18.9	(74)
40~79인 미만	42.5	33.3	38.3	25.8	33.3	35.8	(120)
80~90인 미만	35.0	42.5	35.0	37.5	35.0	45.0	(40)
100인 이상	45.0	30.0	55.0	25.0	45.0	40.0	(20)
지역규모							
대도시	43.1	25.0	33.3	20.6	33.3	24.2	(360)
중소도시	37.5	19.3	26.1	21.6	20.5	18.2	(88)
읍면지역	29.7	32.4	32.4	24.3	32.4	27.0	(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수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부록 표 V-2-1 ■ 제 특성별 공영형 사립유치원 미참여 이유: 1순위

단위: %(명)

구분	예산지원 수준 기대 못 미침	사학기관 재무회계 준수, 카드거래 통장 회계 운영 부담	운영기준 준수 부담감	교육과정 분야 컨설팅 및 장학지도 재정회계 운영 컨설팅부 담감	공영형 유치원 신청 이후 정기 종합 평가 부담감	유치원 수준 선정기준 미침	관련 정보 부족 및 인적 부족	기타	계(수)
전체	11.7	23.4	5.2	6.5	14.3	10.4	1.3	27.3	100.0(77)
현원규모									
50인 이하	-	40.0	-	-	40.0	20.0	-	-	100.0(5)
51~100인 미만	12.5	12.5	8.3	8.3	16.7	16.7	4.2	20.8	100.0(24)
100인 이상	12.5	27.1	4.2	6.3	10.4	6.3	-	33.3	100.0(48)
지역규모									
대도시	13.6	25.0	4.5	4.5	13.6	13.6	-	25.0	100.0(44)
중소도시	3.8	26.9	7.7	7.7	15.4	3.8	3.8	30.8	100.0(26)
읍면지역	28.6	-	-	14.3	14.3	14.3	-	28.6	100.0(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 부록 표 V-2-2 ■ 공영형 사립유치원 예산 지원기준의 적절성: 교직원

단위: %(명)

구분	교직원 인건비			초과근무 수당 정액분 지원			행정실 실장			계(수)
	하향 조정	적정	상향 조정	하향 조정	적정	상향 조정	하향 조정	적정	상향 조정	
전체	6.3	53.5	40.2	7.9	59.8	32.3	9.4	67.7	22.8	100.0(127)
현원규모										
50인 이하	6.3	68.8	25.0	12.5	56.3	31.3	18.8	62.5	18.8	100.0(16)
51~100인 미만	2.5	60.0	37.5	5.0	60.0	35.0	7.5	75.0	17.5	100.0(40)
100인 이상	8.5	46.5	45.1	8.5	60.6	31.0	8.5	64.8	26.8	100.0(71)
지역규모										
대도시	4.3	48.6	47.1	8.6	54.3	37.1	8.6	61.4	30.0	100.0(70)
중소도시	8.1	59.5	32.4	5.4	70.3	24.3	10.8	81.1	8.1	100.0(37)
읍면지역	10.0	60.0	30.0	10.0	60.0	30.0	10.0	65.0	25.0	100.0(2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 부록 표 V-2-3 ■ 공영형 사립유치원 예산 지원기준의 적절성: 운전원

단위: %(명)

구분	운전원 직영			운전원 리스			계(수)
	하향 조정	적정	상향 조정	하향 조정	적정	상향 조정	
전체	9.4	67.7	22.8	6.3	73.2	20.5	100.0(127)
현원규모							
50인 이하	12.5	75.0	12.5	6.3	81.3	12.5	100.0(16)
51~100인 미만	12.5	62.5	25.0	5.0	70.0	25.0	100.0(40)
100인 이상	7.0	69.0	23.9	7.0	73.2	19.7	100.0(71)
지역규모							
대도시	8.6	62.9	28.6	4.3	71.4	24.3	100.0(70)
중소도시	8.1	78.4	13.5	5.4	81.1	13.5	100.0(37)
읍면지역	15.0	65.0	20.0	15.0	65.0	20.0	100.0(2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 부록 표 V-2-4 ■ 공영형 사립유치원 예산 지원기준의 적절성: 학교기본운영비

단위: %(명)

구분	공동경상운영비			개별경상운영비			예비지원금			계(수)
	하향 조정	적정	상향 조정	하향 조정	적정	상향 조정	하향 조정	적정	상향 조정	
전체	5.5	54.3	40.2	5.5	53.5	40.9	5.5	46.5	48.0	100.0(127)
현원규모										
50인 이하	6.3	62.5	31.3	6.3	62.5	31.3	6.3	37.5	56.3	100.0(16)
51~100인 미만	2.5	55.0	42.5	2.5	50.0	47.5	2.5	42.5	55.0	100.0(40)
100인 이상	7.0	52.1	40.8	7.0	53.5	39.4	7.0	50.7	42.3	100.0(71)
지역규모										
대도시	4.3	50.0	45.7	4.3	48.6	47.1	4.3	38.6	57.1	100.0(70)
중소도시	5.4	59.5	35.1	5.4	56.8	37.8	5.4	54.1	40.5	100.0(37)
읍면지역	10.0	60.0	30.0	10.0	65.0	25.0	10.0	60.0	30.0	100.0(2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 부록 표 V-2-5 ■ 매입형 유치원 위탁운영체 선정기준 적절성 1

단위: %(명)

구분	누리과정 운영 계획			방과후과정,돌봄교실 운영 계획			방과후특성화활동 운영계획			(수)
	적절	매우 적절	평균	적절	매우 적절	평균	적절	매우 적절	평균	
전체	41.3	13.8	3.5	46.3	15.6	3.6	44.0	11.0	3.5	(218)
현원규모										
50인 이하	43.3	20.0	3.8	53.3	20.0	3.9	50.0	13.3	3.7	(30)
51~100인 미만	50.6	9.1	3.5	53.2	15.6	3.7	55.8	9.1	3.6	(77)
100인 이상	34.2	15.3	3.4	39.6	14.4	3.5	34.2	11.7	3.4	(111)
지역규모										
대도시	43.5	15.3	3.5	43.5	19.1	3.7	42.7	13.7	3.5	(131)
중소도시	33.9	13.6	3.4	45.8	11.9	3.6	44.1	8.5	3.5	(59)
읍면지역	46.4	7.1	3.4	60.7	7.1	3.6	50.0	3.6	3.4	(2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 부록 표 V-2-6 ■ 매입형 유치원 위탁운영체 선정기준 적절성 2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운영 및 관리			교직원 교육 및 지원계획			유치원 장학 및 평가계획			(수)
	적절	매우 적절	평균	적절	매우 적절	평균	적절	매우 적절	평균	
전체	43.6	25.2	3.9	43.6	24.3	3.8	43.1	17.9	3.7	(218)
현원규모										
50인 이하	46.7	33.3	4.1	40.0	36.7	4.1	43.3	20.0	3.8	(30)
51~100인 미만	44.2	28.6	3.9	49.4	24.7	3.9	49.4	16.9	3.7	(77)
100인 이상	42.3	20.7	3.7	40.5	20.7	3.7	38.7	18.0	3.6	(111)
지역규모										
대도시	37.4	29.8	3.9	39.7	28.2	3.9	40.5	21.4	3.7	(131)
중소도시	47.5	23.7	3.9	45.8	25.4	4.0	52.5	15.3	3.8	(59)
읍면지역	64.3	7.1	3.7	57.1	3.6	3.5	35.7	7.1	3.4	(2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 부록 표 V-2-7 ■ 매입형 유치원 위탁운영체 선정기준 적절성 3

단위: %(명)

구분	예산 편성			원장 유치원 평가참여 경력			원장의 유치원 운영 경력			(수)
	적절	매우 적절	평균	적절	매우 적절	평균	적절	매우 적절	평균	
전체	39.4	24.8	3.8	37.2	8.3	3.3	45.0	17.9	3.7	(218)
현원규모										
50인 이하	40.0	43.3	4.3	40.0	3.3	3.2	36.7	30.0	4.0	(30)
51~100인 미만	45.5	20.8	3.8	39.0	6.5	3.3	55.8	10.4	3.7	(77)
100인 이상	35.1	22.5	3.7	35.1	10.8	3.4	39.6	19.8	3.7	(111)
지역규모										
대도시	35.9	29.8	3.8	34.4	9.9	3.3	40.5	23.7	3.8	(131)
중소도시	44.1	18.6	3.8	35.6	8.5	3.4	47.5	11.9	3.6	(59)
읍면지역	46.4	14.3	3.7	53.6	-	3.4	60.7	3.6	3.6	(2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 부록 표 V-2-8 ■ 매입형 유치원 위탁운영체 선정기준 적절성 4

단위: %(명)

구분	원장의 운영관리 능력 및 의지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도덕적 법적 건전성			(수)
	적절	매우 적절	평균	적절	매우 적절	평균	적절	매우 적절	평균	
전체	43.1	28.4	3.9	41.7	22.0	3.8	43.1	28.0	3.9	(218)
현원규모										
50인 이하	33.3	43.3	4.2	43.3	23.3	3.8	43.3	33.3	4.1	(30)
51~100인 미만	51.9	24.7	3.9	45.5	18.2	3.7	48.1	26.0	3.9	(77)
100인 이상	39.6	27.0	3.8	38.7	24.3	3.8	39.6	27.9	3.8	(111)
지역규모										
대도시	41.2	31.3	3.9	40.5	24.4	3.8	40.5	29.8	3.9	(131)
중소도시	40.7	30.5	3.9	44.1	18.6	3.8	44.1	28.8	4.0	(59)
읍면지역	57.1	10.7	3.7	42.9	17.9	3.7	53.6	17.9	3.8	(2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 부록 표 V-2-9 ■ 매입형 유치원 위탁운영체 선정기준 적절성 5

단위: %(명)

구분	운영체의 지역사회 기여			운영체의 재정 능력			(수)
	적절	매우 적절	평균	적절	매우 적절	평균	
전체	40.8	15.1	3.6	37.2	14.7	3.5	(218)
현원규모							
50인 이하	43.3	20.0	3.8	43.3	20.0	3.7	(30)
51~100인 미만	49.4	9.1	3.6	36.4	11.7	3.4	(77)
100인 이상	34.2	18.0	3.6	36.0	15.3	3.5	(111)
지역규모							
대도시	39.7	17.6	3.6	35.1	17.6	3.5	(131)
중소도시	42.4	13.6	3.6	39.0	10.2	3.5	(59)
읍면지역	42.9	7.1	3.4	42.9	10.7	3.5	(2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수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유치원 조사」 결과임.

▮ 부록 표 VI-1-1 ▮ 장래 연령별 출산율: 2018~2022년

단위: 명

구분	중위가정			저위가정		
	2015	2020	2025	2015	2020	2025
전체	1.24	1.24	1.28	1.24	1.10	1.07
15세	0.00	0.00	0.00	0.00	0.00	0.00
16세	0.00	0.00	0.00	0.00	0.00	0.00
17세	0.00	0.00	0.00	0.00	0.00	0.00
18세	0.00	0.00	0.00	0.00	0.00	0.00
19세	0.00	0.00	0.00	0.00	0.00	0.00
20세	0.01	0.00	0.00	0.01	0.00	0.00
21세	0.01	0.01	0.01	0.01	0.00	0.00
22세	0.01	0.01	0.01	0.01	0.01	0.00
23세	0.02	0.01	0.01	0.02	0.01	0.01
24세	0.02	0.02	0.02	0.02	0.01	0.01
25세	0.03	0.03	0.03	0.03	0.02	0.02
26세	0.04	0.04	0.04	0.04	0.03	0.02
27세	0.06	0.05	0.05	0.06	0.04	0.03
28세	0.08	0.07	0.07	0.08	0.06	0.05
29세	0.10	0.09	0.08	0.10	0.07	0.06
30세	0.12	0.10	0.10	0.12	0.09	0.08
31세	0.13	0.12	0.11	0.13	0.10	0.09
32세	0.13	0.12	0.12	0.13	0.11	0.10
33세	0.12	0.12	0.12	0.12	0.11	0.11
34세	0.10	0.11	0.11	0.10	0.10	0.10
35세	0.08	0.09	0.10	0.08	0.09	0.09
36세	0.06	0.08	0.09	0.06	0.07	0.08
37세	0.04	0.06	0.07	0.04	0.06	0.06
38세	0.03	0.04	0.05	0.03	0.04	0.05
39세	0.02	0.03	0.03	0.02	0.03	0.03
40세	0.01	0.02	0.02	0.01	0.02	0.02
41세	0.01	0.01	0.01	0.01	0.01	0.01
42세	0.00	0.01	0.01	0.00	0.01	0.01
43세	0.00	0.00	0.00	0.00	0.00	0.00
44세	0.00	0.00	0.00	0.00	0.00	0.00
45세	0.00	0.00	0.00	0.00	0.00	0.00
46세	0.00	0.00	0.00	0.00	0.00	0.00
47세	0.00	0.00	0.00	0.00	0.00	0.00
48세	0.00	0.00	0.00	0.00	0.00	0.00
49세	0.00	0.00	0.00	0.00	0.00	0.00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8.6.25. 인출).

부록 2. 조사표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어린이집 수급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조사표 번호	-	시도	구시군 읍면동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는2018년도 기본과제로 「저출산에 대응한 어린이집 유치원 공급체계 전환과 적정수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원장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정부의 어린이집 수급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서관련 문의 : 최윤경 연구원(02-398-7761, yjj465@kicce.re.kr)
양미선 부연구위원(02-398-7780, msyang@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 판별 문항

1. 귀 어린이집의 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국공립 ② 사회복지법인(☞ 조사 중단) ③ 법인단체등 ④ 민간
⑤ 가정 ⑥ 직장(☞ 조사 중단) ⑦ 협동(☞ 조사 중단)

2. 귀 어린이집의 기관 고유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	--	--	--	--	--	--	--	--	--	--	--	--	--	--	--	--	--	--

※ 중복 응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 고유번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식별을 위한 문항이 아니므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3.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 40%를 목표로 세우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의 영유아 수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고려할 때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적절(☞ 문항 1-1로)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51.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응답한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로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

III.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및 공급 관련

※ 민간·가정 어린이집만 응답합니다.

1. 귀 어린이집은 향후 5년 이내에 매입, 장기임차, 무상 임대 등의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음(☞ 문항 1-1로) ② 없음(☞ 문항 1-2로) ③ 고민 중(☞ 문항 1-2로) ④ 잘 모르겠음(☞ 문항 1-2로)
- 1-1. ① 전환 의향 있음 응답한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원아 모집에 유리 ② 인건비(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등) 등 재정 지원
 ③ 환경개선비 지원 ④ 보육서비스 질 개선
 ⑤ 우수한 보육교사 채용 ⑥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⑦ 어린이집 이미지(또는 평판) 개선 ⑧ 기타()
- 1-1-1. ① 전환 의향 있음 응답한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면, 귀 어린이집이 가장 선호하는 전환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매입 ② 장기 임차 ③ 무상 임대 ④ 기타()
- 1-1-2. ① 전환 의향 있음 응답한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면, 언제쯤 전환할 계획이십니까?
 ① 2018년 ② 2019년 ③ 2020년 ④ 2021년 ⑤ 2022년 ⑥ 2023년 이후
- 1-2. ① 전환 의향 없음 또는 ③ 고민 중 ④ 잘 모르겠음 응답한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고민 중이거나, 잘 모르겠는 경우, 또는 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계약기간(10년) 불만족
 ② 계약기간 종료 후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해야 하는 부담감
 ③ 시설개보수비, 기자재비 등의 지원단가 불만족
 ④ 어린이집 운영 상태가 심사기준(예: 사전적격심사 또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사)에 미달
 ⑤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에 못 미침
 ⑥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재무회계, 감사 등)에 맞춰 운영해야 하는 부담감
 ⑦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어린이집들의 만족도가 낮다는 얘기를 들어서
 ⑧ 기타()
2. 우리나라는 저출산 장기화로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36만명이 태어났고, 2018년에는 출생아 수가 30만명 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매년 줄고 있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경영난으로 해마다 수천 개소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 어린이집은 향후 운영이 어떠한 것으로 볼니까?
 ① 전혀 어려움 없음 ② 어려움 없음 ③ 보통 ④ 어려움(☞ 문항 1-2로) ⑤ 매우 어려움(☞ 문항 1-2로)

※ 국공립어린이집만 응답합니다.

1. 귀 어린이집은 2010년 이후 민간 매입, 장기임차, 무상 임대 등의 방법으로 전환한 국공립어린이집입니까? 2010년 이전에 전환한 시설은 '전환 시설 아님'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전환 시설 아님(☞ 문항 1-1로) ② 전환 시설(☞ 문항 4-1로)

- 1-1. (② 전환 시설인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방법은?
 ① 민간 매입 ② 장기 임차 ③ 무상 임대
2.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간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대규모로 확충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증가하기보다(대기 아동 해소 등)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 어린이집도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 문항 I-1로) ② 없음 (☑ 문항 4-1로)
- 2-1. (② 전환 시설인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_____년
- 2-2. (① 경험 있는 경우) 지역 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로 재원 아동 수 변동이 있었습니까?
 ① 재원 아동 수 감소 ② 변동 없음 ③ 재원 아동 수 증가
- 2-3. (① 경험 있는 경우) 이전보다 어느 정도 감소 또는 증가하였습니까?
 감소한 경우: 명 증가한 경우: 명

※ 모든 어린이집이 응답합니다.

III-1. 장기임차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3. 다음은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관련 사항입니다. 다음의 조건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부적절 시 적정수준을 적어 주십시오
1) 계약기간 : 10년						
2-1) 지원비용: 시설개보수비 1억 1천만원						
2-2) 지원비용: 기자재비 1천만원						

4. 다음은 장기임차 사전 적격심사 기준입니다. 다음의 항목들이 세부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구분 (※ 괄호 안 기준은 항목별 최고점 기준임)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문항 *1로)	⑤ 매우 적절 (문항 *1로)	부적절 시 적정수준을 적어 주십시오
1.시설 환경						
1) 현 어린이집 장기근속 보육교사 현황(3년 이상 50% 이상)						1)-1
2) 1급 보육교사 현황(1급 보육교사 60% 이상)						2)-1
3) 보육교사 처우(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 50% 이상)						3)-1
4) 정원충족률(정원충족률 80% 이상)						4)-1
5) 대기 아동수(정원의 50% 이상)						5)-1
6) 유아반 편성 현황(유아반 3개반 이상)						6)-1
7) 특별활동 부담(부모 부담 없음)						7)-1
8) 설치인가 기준(설치인가 준수)						8)-1
2.운영						
1) 집단민원 여부(최근 3년 이내 민원 없는 시설)						
2) 지도점검 결과(최근 3년 이내 지적사항 없음)						
3) 부모 및 주민 만족도						
4) 친인척 근무 현황(친인척 근무 없음)						
3.운영계획 : 신청 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4.가점						
1) 취약보육 운영						
2)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여부						

IV. 인적사항

※ 다음은 응답자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세
2. 귀하의 성별은? ① 여자 ② 남자
3.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 ② 대학 졸(3년제 이하) ③ 4년제 대학졸 ④ 대학원 졸
4. 귀하의 교사 및 원장 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력이 없으면, '0' 기입)
(※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적어 주십시오.)

교사 경력: 총 년 개월	원장 경력: 총 년 개월
-------------------------------------	-------------------------------------

5. 귀하께서 현재 이 어린이집에서 재직하신 기간은? 보육교사로 재직하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 보육교사를 구분하여 재직 기간을 적어 주십시오. (※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적어 주십시오.)

원장: 년 개월	보육교사: 년 개월
--	--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유치원 공급 및 공립유치원 확충에 관한 조사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조사표 번호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전국 유치원 500기관을 대상으로 유치원 공급과 문제인 정부의 공립유치원 확충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정부의 유치원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유치원에 관한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설문내용 문의 :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 연구원(02-398-7763, yjy465@kicce.re.kr)
양미선 연구위원(02-398-7780, msyang@kicce.re.kr)

기관명	유치원		
기관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응답자 성명		조사일자	2018년 ____월 ____일

I. 유치원 일반 사항

1. 귀 유치원의 기관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공립 단설 ② 공립 병설 ③ 사립(법인) ④ 사립

2. 귀 유치원의 연령별 학급수와 현원(2018년 8월 말 기준)을 각각 기입해 주십시오.

(※ 해당 학급과 원아가 없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기입하지 마십시오.)

구분	전체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3-5세 혼합반
학급 수	반	반	반	반	반
원아 수	명	명	명	명	명

II. 유치원 운영

※ 다음은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표 하거나 응답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1. 귀 유치원은 최근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 ① 전혀 없음 ② 없음 ③ 어느 정도 있음(☞ 문항 1-1로) ④ 매우 많음(☞ 문항 1-1로)

1-1. (문항 1에서 ③, ④ 경험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귀 유치원이 원아 모집의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골라 순서대로 빈 칸에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번	2순위 ()번
-------------------------------	-------------------------------

- ① 출생아 수 감소 ② 지역 내 단설 공립유치원 증설
 ③ 지역 내 병설 공립유치원 증설 ④ 지역 내 사립유치원 신규 설립
 ⑤ 지역 내 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⑥ 지역 내 민간어린이집 신규 설치
 ⑦ 기타()

2. 귀 유치원은 최근 원아 수 감소를 체감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름 ② 모름 ③ 어느 정도 체감(☞ 문항 2-1로) ④ 매우 많이 체감(☞ 문항 2-1로)

2-1. 귀 유치원은 원아 수가 가장 많은 시점 대비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 정도 감소

2-2. (문항 1에서 ① 경험 있음 응답한 경우) 귀 유치원은 원아 수 감소로 유치원 재정 운영상의 어려움을 경 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문항 1-2-1로) ② 없음

2-2-1. (① 재정운영 상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귀 유치원은 재정 운영 상의 어려움을 극복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 중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표 해 주십시오.

- ① 전체 학급 수 줄임(☞ 문항 1-2-1-1로) ② 연령 단독반 구성 어려움으로 혼합반 구성
 ③ 보조인력(보조교사, 도우미 등) 수 줄임 ④ 유치원 운영 경비
 ⑤ 기타()

III. 사립유치원 관련 질문(1-1번 문항에서 ③사립(법인), ④사립 응답한 경우에만 응답)

III-1. 공영형 유치원 관련 질문

※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표 하거나 응답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1-2. (② 참여의향 없는 경우) 참여 의향이 없다면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가지를 골라 순서대로 빈 칸에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① 예산지원(인건비, 운영비 등) 수준이 기대에 못 미쳐서
- ② 사학기관 재무회계 준수, 카드거래 통장 등 회계 운영 부담
- ③ 운영기준(교육과정, 장학지도 및 평가, 방과후과정 운영 등)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 ④ 교육과정(방과후과정 포함) 분야 컨설팅 및 장학지도, 재정회계 운영 컨설팅(지도점검) 부담
- ⑤ 공영형 유치원 선정 이후 정기(분기, 연간) 및 종합 평가 부담감
- ⑥ 유치원 수준이 선정기준에 못 미쳐서
- ⑦ 관련 정보가 없어서(또는 몰라서)
- ⑧ 기타()

※ 2번 문항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응답합니다.

2.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공영형 유치원’ 모델에서 지원수준, 운영 기준, 컨설팅 및 장학, 평가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및 운영기준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표 해 주십시오.(중복 응답 가능)

- ①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예산 지원수준(☞ 문항 2-1로) ② 운영기준(회계, 교육과정 운영 등)(☞ 문항 2-2로)
- ③ 컨설팅 및 장학(☞ 문항 2-3으로) ④ 평가(☞ 문항 2-4로)
- ⑤ 기타()

2-1. (① 예산 지원) ‘공영형 유치원’ 예산지원 수준입니다. 다음의 지원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구분	① 하향 조정 (☞ 문항 2-1-1로)	② 적정	③ 상향조정 (☞ 문항 2-1-1로)
1. 교직원 인건비: 교육공무원 연봉의 80~100%			
2. 초과근무 수당 정액분 지원			
3. 행정실 실장: 일반직 7급 10호봉 상당액			
4. 운전원 직영: 통합차량 운영시 특별인부 기준 리스: 공립 거점버스 기준으로 하되 유치원 여건 따라 조정			
5-1. 학교기본운영비: 공통경상운영비- (9,724,000원×학급수) + 115,395,000원(유치원계수)			
5-2. 학교기본운영비: 개별경상운영비-학습자료구입/현장학습지원 및 특수학교 차량유지비 기준 (중형승합 10,000-15,000km 적용)			
5-3. 학교기본운영비: 예비지원금-유치원별 총 예산액 대비 20%(이후 약정 기간 동안에는 5%)			

2-1-1. (① 하향조정, ③ 상향조정 응답한 경우)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구분	개선사항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 교직원 인건비: 교육공무원 연봉의 80~100%	
2. 초과근무 수당 정액분 지원	
3. 행정실 실장: 일반직 7급 10호봉 상당액	
4. 운전원 직영: 통합차량 운영시 특별인부 기준 리스: 공립 거점버스 기준으로 하되 유치원 여건 따라 조정	
5-1. 학교기본운영비: 공통경상운영비- (9,724,000원×학급수) + 115,395,000원(유치원계수)	
5-2. 학교기본운영비: 개별경상운영비-학습자료구입/현장학습지원 및 특수학교 차량유지비 기준 (중형승합 10,000-15,000km 적용)	
5-3. 학교기본운영비: 예비지원금-유치원별 총 예산액 대비 20%(이후 약정 기간 동안에는 5%)	

2-2. (② 운영기준) 회계나 교육과정 운영 관련하여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구분	개선사항(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 사학기관 재무회계 준수, 카드거래 통상 등 회계 운영	
2.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등 운영	

2-3. (③ 컨설팅 및 장학) 컨설팅 및 장학 관련하여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2-4. (④ 평가) 정기(분기, 연간) 및 종합 평가 관련하여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3.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유치원’ 사업은 대상 유치원의 자격이나 선정기준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공영형 유치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유치원 자격이나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 외(2015) 공공형 사립유치원 선정지표(안)

영역	세부지표
1. 교원자격 및 관리	교원연수 참여 비율, 교원능력개발 평가 참여 여부, 교원 평균 근속연수, 학사학위 이상 소지 교사 비율, 교원 평균 경력
2. 교육과정 운영	누리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교육과정 운영, 방과후특성화 활동 운영 지침 준수
3. 재정운영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유치우너운영위원회 운영 여부, 유치원 정보공시 준수, 학부모 부담 비용 수준(시도/시군구 평균 대비), 원비 인상을 상한제 적용
4. 질 관리	교사(보조교사 포함) 대 유아비율, 유치원 평가 참여 여부 및 점수, 직무원수 및 컨설팅 지원 횟수(평균)

5. 귀하는 ‘공영형 유치원’이 부모, 교사, 유치원 운영 측면에서 다음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효과 없음 ② 효과 없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효과있음 ⑤ 매우 효과 있음				
	1. 부모	1) 학부모 유아학비 부담 경감			
	2) 유치원 이용 만족도 상승				
	3) 유치원 신뢰도 개선				
2. 교직원	1) 교직원 처우 개선(임금 및 수당 상승)				
	2) 교사 업무 경감				
	3) 교사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				
3. 유치원	1) 원아 모집의 수월성 제고				
	2) 교육서비스 질 개선				
	3) 교사 고용 및 수급 안정				
	4) 교육환경 개선				
	4)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III-2. 매입형 사립유치원 관련 질문

6. 정부는 단설 공립유치원 옹지 및 재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유치원을 설치하고, 민간 경영자에게 위탁·운영 하도록 하는 ‘위탁형’ 유치원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골라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번	2순위 ()번
----------	----------

- ① 객관적인 매입 대상 유치원 선정기준
- ② 매입대상 유치원 선정과정의 공정한 절차 마련
- ③ 위탁형 유치원 선정위원회 자격 및 구성 요건 마련
- ④ 위탁제 선정기준 마련
- ⑤ 민간 위탁운영의 공공성 확보 위한 운영기준 마련
- ⑥ 기타(무엇:)

7. 매입형 사립유치원 위탁운영체 선정기준으로 다음의 항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1. 누리과정 운영 계획					
2.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 계획					
3. 방과후특성화활동 운영 계획					
4. 유치원 운영 및 관리					
5. 교직원 교육 및 지원 계획					
6. 유치원 장학 및 평가 계획					
7. 예산 편성					
8. 원장의 유치원 평가 참여 경력					
9. 원장의 유치원 운영 경력					
10. 원장의 운영관리 능력 및 의지					
11. 운영체의 공신력					
12. 운영체의 도덕적 법적 건전성					
13. 운영체의 지역사회 기여					
14. 운영체의 재정 능력					

8. 귀 유치원은 향후 '매입형 사립유치원' 사업이 시행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참여 의향 없음 ② 매입조건 여부에 따라 참여 ③ 참여 의향 있음

9. 귀하는 정부로부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매입형 사립유치원'이 부모, 교사, 유치원 운영 측면에서 다음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효과 없음	② 효과 없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효과있음	⑤ 매우 효과 있음
1. 부모	1) 학부모 유아학비 부담 경감				
	2) 유치원 이용 만족도 상승				
	3) 유치원 신뢰도 개선				
2. 교직원	1) 교직원 처우 개선(임금 및 수당 상승)				
	2) 교사 업무 경감				
	3) 교사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				
3. 유치원	1) 원아 모집의 수월성 제고				
	2) 교육서비스 질 개선				
	3) 교사 고용 및 수급 안정				
	4) 교육환경 개선				
	4)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IV. 공급유치원 증설 계획 (1-1번 문항에서 ①~④ 모두 응답)

※ 다음은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표 하거나 응답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1. 귀하는 재직 중인 유치원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이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지역 내에 공립유치원 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 문항 1-1로) ② 대체로 부족한 편(☹ 문항 1-1로) ③ 적정함
 ④ 대체로 충분한 편임 ⑤ 매우 충분함

1-1. (①, ②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 현 수준보다 몇 % 정도 공립유치원 이용률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p 증설 필요

2. 귀하는 단설 및 병설유치원 설립 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급 수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공립 단설 ()학급 ② 공립 병설 ()학급

3. 귀하는 공립유치원이 주로 어떤 지역에 증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1가지 선택)

- ① 농산어촌 지역 ② 취약지역 ③ 저소득 밀집지역
 ④ 공립유치원 미설치 지역 ⑤ 도시 인구밀집지역 ⑥ 기타()

4. 공립유치원 확충 방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V. 유치원 수용계획

1.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시도별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유치원이 속한 교육청은 취학 수요조사를 근거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음(☞ 문항 1-1보) ② 그렇지 않음(☞ 문항 1-1보) ③ 그러함 ④ 매우 그러함

1-1.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근거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의 어려움 ② 예산 부족
 ③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신뢰성 확보 실패 ④ 기타()

2. 각 교육청마다 연령별 학급당 유아수를 정하고 있어 학급편성기준이 시도마다 상이합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한 학급편성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어느 정도 동의 ④ 매우 동의

VI. 인적사항

1.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세

2. 귀하의 성별은? ① 여자 ② 남자

3. 귀하의 학력은?
 ① 대학 졸(3년제 이하) ② 4년제 대학졸 ③ 대학원 졸

4. 귀하의 교직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 2018년 8월말 기준)

원장(원감) : 년 개월 교사 년 개월

5. 귀하의 현 유치원 재직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2018년 8월말 기준)

총 년 개월

6. 귀하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 ① 부장 교사 ② 원감 ③ 원장 ④ 기타()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출산에 대응한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체계 전환과 종장기 적정수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 791187 952718
ISBN 979-11-87952-71-8